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관련  
**국내 주요신문 기사집**

2002. 11



통 일 부  
(남북회담사무국)



일반 기사



# 김대통령 “核개발 불용”

## 정부, 내일 장관급회담서 문제 제기

### 평화적 해결책 마련 착수

정부는 17일 “북한의 핵개발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향후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오후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향후 대책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한·미·일간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어

떠난 경우에도 북한의 핵개발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임성준(任晟準)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전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어떠한 핵개발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온 점을 강조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제네바 합의, 핵비확산협정(NPT)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른 모든 의무를 계속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또 19일부터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제8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통해 북측에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9일쯤 제임스 웹리 미 대북 특사가 방문하면 구체적인 협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멕시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기간중인 26일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문제도 심도있게 다루기로 했다. 이어 11월 초 한·미·일 대북정책조각강독그룹(TOOG) 회의를 통해 대북 중간 집진을 할 계획이다. ●김수정

박복삼기자 crystal@dailycrystal.com

# 東亞日報

# 정부 “北, 核합의 의무 지켜야”

### 장관급회담 예정대로 추진

정부는 17일 이태식(李泰植) 외교 통상부 차관보가 발표한 ‘북한 핵문제 관련 우리 입장’이라는 공식 성명을 통해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미 제네바합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따른 모든 의무를 계속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 차관보는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준(任晟準) 대통령외교안보수석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개발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날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철기(金弼基) 통일부 차관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19일부터 평양에서 시작되는 8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간의 대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는 한편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열리는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26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 중앙일보

# 내일 평양서 南北장관급회담 정부 核우려 전달키로

정부는 19일부터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8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북한 측에 북 핵문제와 관련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도 강화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7일 오후 정세현 통일부 장

관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입장을 새우고, 오는 26일(현지시간)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집중 협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丁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협정과 제네바 기본합의뿐 아니라 남북 간 비핵화 공동선언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는 장관급 회담을 비롯해 진행 중인 대화 경로를 통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측이 모든 관련 의무를 계속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중 기자 yilee@joongang.co.kr

# “내일 남북장관회담서 ‘핵’ 거론”

## 정부 비핵화 준수 촉구 대화 통한 해결 방침

정부는 17일 북한이 비밀 핵무기 개발계획을 시인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핵 개발도 반대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제네바 합의, 핵확산금지조약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른 의무를 계속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와 동시에 내놓은 성명에서 이렇게 밝히고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앞으로 한-미-일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 오후 정

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19일 일일 여정인 제8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한-미-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이달 하순 멕시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에서 정상들 간에 심도있게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북쪽에 장관급 회담의 대표단 명단을 통보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 개발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17일 전했다. 임 수석은 “제임스 캐리 미국 특사가 북한을 다녀온 직후 곧바로 우리 정부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 사실을 통보했으며, 그 때부터 한-미-일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6일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10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 때 예정된 3국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출석해 “정부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장관급 회담을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대화경로를 통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쪽이 모든 관련된 의무를 계속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비밀 핵개발 프로그램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협정과 제네바 기본합의뿐 아니라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류재훈 기자 hoonie@hani.co.kr

# 서울경제

## 北에 핵폐기 직접 요구기로

### 정부, 남북장관급 회담등서... 전면사찰 수용도

#### ■ 北 핵개발 계획 시인관련 어제 국가안보회의

정부는 이날 19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제8차 남북 장관급 회담 등 일련의 남북 대화들 통해 북쪽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면 사찰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핵 폐기를 직접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후 정세현 통일부 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쪽의 핵개발 시인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북한의 모든 핵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온 점을 강조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제네바 합의, 핵비확산협정(NPT)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른 모든 의무를 계속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핵개발은 제네바 합의 이후 이뤄진

것으로 분명한 잘못”이라면서 “정부는 미·일 등과 협의해 북한의 핵개발을 비난하고 폐기조치를 압중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달 말 멕시코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 등 남북대화 경로를 통해 북한의 핵 사찰 수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성훈기자 shlee@sed.co.kr

경향신문

2002.10.18(금)

정부 “北核 대화로 해결”

NSC 긴급소집... 장관급회담은 예정대로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관련, 대화급 중에 북한에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임성준(任晟準)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은 17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개발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내주 예정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한 의제로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핵개발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은 제네바 합의, 핵확산금지협정(NPT),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른 모든 의무를 계속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 19일 평양에서 열릴 제8차 남북 장관급회담에 예정대로 참석하되 북한의 즉각적인 핵개발 중단을 촉구하기로 했다. 김형기(金炯基) 통일부 차관은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도 불구하고 19일로 예정된 제8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임스 켈리 대북특사는 19일 방한,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미간의 견조를 작업을 벌일 예정이며, 10월말~11월초에는 한·미·일 3국이 대북정책조정장관급그룹(TCOG)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중근·차세현기자 harubang@kyunghyang.com

世界日報

2002.10.18(금)

“核개발 즉각 중단해야”

정부, 美·日과 공조 대화해결 모색

내일 장관급회담 예정대로

정부는 17일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상부 이태식(李泰植) 차관보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은 제네바 합의와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른 모든 의무를 계속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앞으로 한·미·일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한·미·일 3국간 공조를 통해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3국간 실무적인 논의의 틀을 위해 다음달 초 한·미·일 대북정책조정장관급그룹(TCOG) 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19일 남북 장관급회담 등 남북대화를 일정대로 진행되도록 북한 핵개발 문제를 주요의제로 올려 북한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박희준기자 july1st@scgye.com

韓-美 北核관련 성명 전문



우리 정부는 미 특사 방북시 제기된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 관하여 통보받고 한미일 3국간에 이 문제에 관하여 협의할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핵개발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제네바 합의, 핵확산금지조약(NP

T)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른 모든 의무를 계속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앞으로 한미일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남북대화 경로를 통해 북측에 제기를 할 것이다. 이태식 외교부상부 차관보 발표



미국 고위 관계자들이 이날 초 판문점에서 한 안담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가 이른 특사단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 등과 같은 핵무기 협정을 위반하고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우라늄을 농축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최근 입수했다는 점을 북한에 전했다. 북한 관계자들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시인했다(acknowledged that they have such a program). 북한은 미국을 비난하려 했으며, 제네바 협정이 무효화한(nullified)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켈리 차관보는 북한이 수년 전 핵무기 개발 계획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적 조치를 제안하려 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미국은 이같이 접근법을 계속 추구할 수 없다.

북한의 비밀 핵무기 계획은 제네바합정과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합의, 남북 공동 한반도비핵화 선언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미 행정부는 의회 주요 인사들과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이틀 지속할 것이다. 존 볼턴 국무부 차관과 켈리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 핵무기 계획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우방과 동맹국들을 방문할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하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in a verifiable manner)으로 핵무기 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은 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북한 주변의 모든 국가들은 북한 핵무기 계획에 대해 이해관계들을 갖고 있고 어떤 평화적인 국가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원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북한 주변의 평화 애호국들이 북한의 핵무기 계획을 효과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 발표

북한 핵관련 일지

Table with 2 columns: Date and Event. Includes dates from 1974 to 2002 and events like IAEA inspections, NPT signing, and nuclear tests.

# 北 '核무기 수년째 개발' 시인

## 켈리 美특사 訪北때... 제네바합의도 무효화 밝혀 北 "더 강력한 무기도 있다"... 韓·美 "평화적 해결"

### 英, 北주재대사 부임 연기

북한이 지난 3~5일 발표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에게 수년 전부터 핵무기 개발 계획을 진행 시키지 않았음을 시인했다고 한 미 외교국 정부기 17일 동시 보도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은 핵 실험을 동결하기로 한 1994년의 북·미 제네바 합의 이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 관계측으로 한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고, 이 합의에 따른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남측과의 경로를 통해 북측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오는 26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때 이 문제를 집중 협의할 방침이어서 3국 정상회담이 북한 핵문제 해소와 한반도 정세변화의 중대교점이 될 전망이다.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내 성명에서 "켈리 차관보가 최근 수년 전부터 동측 우리측을 비롯한 핵 개발 계획을 진행시켜왔다고 지적하자 북한이 이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이에 대해 미국을 비난했으며, 제네바 합의가 무효화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은 제네바 합의, 핵확산금지조약

(NPT)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인 만큼 이에 제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뉴욕 타임스는 이와 관련, 반박했던 미 행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국 측이 지난 4일 북한의 핵 개발을 기본하자 북한은 이를 부인했다가 다음날 시인했으며, 더 강력한 무기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에 대한 우리로 조치 W 부시 대통령이 지난 여름 발한 과감한 대북 접근법을 계속 추구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측도 켈리 차관보에게 핵개발 문제를 대화할 문에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와 관련,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 문제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겨왔던 경우에도 북한의 핵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일침을 던졌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전했다.

외교장관은 이날 정부 임찰 발표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핵 개발에도 반대한다"며 "북한이 한반도 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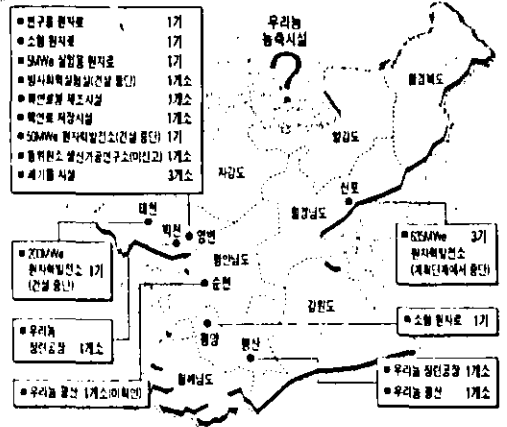
핵을 달성하기 위해 제네바 기본합의와 NPT,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모든 의무를 계속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방표문은 이어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반 영국 외무부는 이날 북한의 핵 개발 계획 진행에 따른 조치로 19일 평양에 부인할 예정이던 데이비드 스타인 초대 북한주재 대사의 부임을 발원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런던방로 보도했다.

워싱턴=김진 특파원, 서울=오영환 기자  
jinjin@joongang.co.kr

88. 북한의 핵 관련 시설 현황 (91년 6. 미 정보당서 특사기준)



# 北, 핵개발 계획 시인

### 켈리 방북때 밝혀... 백악관 "제네바합정 심각한 위반"

## 美 외교해결 방침... 정면충돌은 없을듯

북한이 이달 초 발표한 미국 특사 알 행에게 핵무기 개발계획을 추진중이라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밝혀져, 국제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라크와의 전쟁 검토로 인해 북한 핵무기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로 일단 방침을 정해 당분간 북한과 미국이 정면 충돌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미 국무부는 16일 밤(현지시간) 대변인 성명에서 이달 초 북한을 방문한 제임스 켈리 동아·대 차관보 일행이 북한측에 "핵합의를 위반하고 북한이 농축우라늄 개발을 추진중이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지적하자 북한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켈리 차관보를 수행했던 미 관리들은 "강석주(姜石柱)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시인했다"면서 "북한은 핵무기 개발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선 매고 맥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백경실명에서 북한의 새로운 핵무기 개발계획은 1994년 핵합의에 대한 "매우 심각한 위반"이라면서도 "제네바 핵합의 과거"라고 규정하지는 않았다. 그

러나 일부 관리들은 "제네바 핵합의가 족었다"고 밝히고 있어 미 행정부 내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북한은 핵합의가 무효화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면서 켈리 차관보는 북한에 핵개발이 수년동안 이루어져 있음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북한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 의무를 이행할 것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 제거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상황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면서 "평화를 사랑하는 이 지역 국가들이 효과적으로 이 도전을 처리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국무부 관리들은 "북한이 핵무기까지 개발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17일 북한의 갑작스런 핵개발 시인에 대해 미 행정부내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을 예상하는 부정적 시각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북한의 의도로 해석하는 긍정론의 두가지 평가가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 이승철특파원  
lsc@yunghyang.com

## 경향신문

2002.10.18(금)



# 북한 핵개발 계획 시인

## 켈리특사 방북당시 밝혀...미 “평화해결 모색”

### 켈리 금명 한·일 방문 대응책 협의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인정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 평화의 한 축을 유지했던 제네바 합의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 의지를 밝히고, 북한도 양국 현안의 일괄타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1994년과 같은 핵무기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17일(한국시간) 북한이 지난 몇 해 동안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계획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3~5일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북 때 이를 인정하고 제네바 협정이 무효화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발표했다. 손 대코텍 핵약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이는 핵합의에 대한 '실질적 위반'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3·4·5·7면

미국은 이날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켈리 차관보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우라늄 농축을 진행해 왔다는 최신 정보를 제시했으며, 북한은 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켈리 차관보와 북한의 회담에 동석했던 한 관리의 말을 따서 "그들은 더 강력한 것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성명에서 "그동안 대량살상무기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한 북

한 태도변화를 전제로 북한에 경제·정치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었지만, 이제 이런 접근방식을 추구할 수 없게 됐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잠재적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켈리 차관보한테, 한국과 일본에 틀러 북한 핵과 관련한 대응책을 협의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은 이어 "이 상황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하고 핵무기 개발계획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제거하도록 촉구했다. <시애틀 타임스>는 미국 행정부가 이번 일로 제네바 협정이 파기된 것으로 보고 의회 및 동맹국들과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핵약관 안보회의에서 일부는 전쟁으로 가자는 얘기를 했으나, 부시 대통령은 매우 침착하고 조용했으며, 또다른 위기물 원치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한 단국지는 "북한이 관련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를 제기할 수도 있고, 국제기구의 사찰을 받을 수도 있다"며 "미국은 북한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태도"라고 말했다.

워싱턴/윤국한 특파원, 류재훈 기자  
gookhan@hani.co.kr



다음주에 예정된 정색민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협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7일 베이징의 호텔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그는 이번 방문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 시인 이후의 대응책도 협의할 것으로 보이며 19일날 서울로 떠날 예정이다.

## 北, 공식반응 없어

### 총리기관지 '美서 정보 흘러'

북한은 17일 한미 양국의 '북한 핵개발 시인' 발표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이날 "미국이 (우리 나라가) '핵개발을 시인했다'고 정보를 흘리고 있다"며 "아직도 이 정보의 맥락은 확실하지 않고 정확한 시점은 시간이 지나야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소리 방송은 이날 "미

국의 핵개발 프로그램 주장에 대해 북한이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2~3일 안에 공식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에 앞서 15일 북-미관계와 관련해 "대화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며 "조-미관계 문제 해결 전망은 미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東亞日報

2002.10.18(금)

# 北, 올 7~8월 核 농축실험

## 美 정보기관 포착... 관련장비는 파키스탄서 구입

### 北, 美 특사에 '核개발 계획' 시인... "더 강력한 무기 있다" 美, KEDO 철수·重油 지원 중단 등 제네바 합의 폐기 검토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해 최근 몇년간 파키스탄으로부터 우라늄을 핵무기로 농축할 수 있는 가스 원심(离心机) 등의 장비와 구매해 왔고, 지난 7-8월에는 북한 내 한 비밀시설에서 농축우라늄 제조실험까지 했으며 이같은 사실이 미국 정보기관에 포착됐다고, 한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17일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같이 밝히면서 "제임스 켈리(Kelley) 특사가 이란 초 방문했을 때 이란 비밀 핵개발 프로그램의 증거로 제시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켈리 특사가 방북 첫날인 3일 김계관(金桂寬) 외무신 부상에 이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고, 김 부상은 일단 부인했으나, (일회) 김석주(姜錫柱) 외무성 제1 부상은 '자위적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핵개발 사실을 시인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에 들어간 우라늄 농축 장비의 양과 종류, 농축 실험의 구체적인 사항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국무부는 16일 밤 (한국시각 17일 오전) 상연을 통해 "제임스 켈리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대표단은 (이란 초 방북 때) 북한이 (1992년의 미·북) 제네바 합의와 다른 협정들을 위반하

면서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정보 및 미국이 최근 입수했음을 북한에 알렸다"면서, "북한은 그 같은 개발 계획을 시인했다"고 발표했다. 국무

부 성명은 또 "북한은 미국을 비난 하면서 제네바 합의가 무효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이 핵사찰을 전면 수

용하고 핵무기 개발계획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경수로와 중유 제공 등을 규정한 제네바 핵 합의를 폐기시키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서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시 행정부의 한 정통한 소식통이 17일 밝혔다. 특히 우선 경수로 1호기 건설 시까지 매년 50만(백) 배럴(중유) 한 중유(重油) 지원금 앞으로 중단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또 첩리 차관보와의 회담에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이외에 "더 강력한 무기들도 갖고 있다"고 밝히며, 다른 대량살상무기들도 개발했음을 시사했다고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가 17일 보도했다.

/워싱턴=朱慶中특파원  
mduwe@chosun.com  
기재부장기자 kb@chosun.com

## 한국일보

2002.10.18(금)

### "경제제재 해제땀 핵·미사일·減軍 해결"

# 北, 美와 대타협 시도했었다

## 美 "核은 협상대상 안돼" 先개발중단 요구로 결렬

북한은 10월 초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특사로 방북한 제임스 켈리 미국무부 동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미대표단과의 협상에서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등 미국의 '우려사항'과 북측의 요구 사항을 일괄 타결하는 대타협을 시도했던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북측의 김석주(姜錫柱) 외무성 제1 부상은 켈리 특사의 방북 마지막

날 가진 회담에서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과 경제제재 등을 철폐할 경우 현안인 핵·미사일·재래식 병력감축 등 '안보 관심사항'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시인이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에 대해 제네바 합의 이후 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은 명백한 제네바 핵 합의 위반으로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뒤 핵개발 중단 및 시설 제거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일괄 타결을 내세워 대화에 나서려 한 것 같다"며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 사실까지 시인한 데다 안보와 관련된 조건을 새롭게 내걸어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어떤 조건을 추가로 내 걸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북미대화가 재개하려면 미국이 요구한 핵개발 중단 및 시설 제거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동기자 jaydee@hk.co.kr

# 北, 핵개발 시인

## 美 “제네바 합의 위반”... 남북 北美관계 급랭 우려

### 농축우라늄 이용 추진 韓·美·日 26일정상회담 사찰촉구등 공조 논의

북한이 1994년 북·미 제네바 해협의 이후에도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을 극비리에 추진해온 사실이 새삼스럽게 확인됨에 따라 회해 국면으로 치닫던 한반도 주변 정세에 파장이 일고 있다.

정부는 17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데 이어 19일 밤한하는 제임스 커티 미국 대북특사와 협의, 26일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공조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비밀 핵무기 개발 계획을 제네바 합의를 위반한 심각한 상황으로 규정하고, 북한과의 개별접촉을 통해 북한에 즉각적인 핵개발 프로그램 폐기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수용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일부터 평양에서 열릴 제 8차 남북 정권급회담을 예정대로 개최할 예정이며,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도 29일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을 재개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3국은 또 대화할 통해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해소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 핵사찰 수용 등 의혹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북·미관계가 악화되면서 남북 및 북·일 관계까지 악영향을 미쳐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냉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공격 결의안 서명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6일 백악관에서 민주 및 공화당 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회가 이라크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승인한 결의안에 서명하고 있다. (기사 9면) 워싱턴=AP특

미 국무부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은 심경에서 "캘리 특사가 이담 초 방북했을 때 북한 관계자(강석주 제1외무부상)들에게 북한이 기본합의서 등 여러 합의를 위반하는 핵무기 개발 계획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정보들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북한은 핵개발 프로그램을 갖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손 매코맥 대변인은 "북한의 핵개발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제네바 기본합의서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 상황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이 지역의 누

구나 이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고, 어떤 국가도 북한이 핵으로 무장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미국과 미국의 맹방들은 북한에 핵확산금지조약(NPT)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침외대 임상준 외교안보수석은 "북한이 시인한 새로운 핵개발 의혹은 농축우라늄을 사용한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북한이 모든 핵 의혹과 관련해 IAEA의 사찰을 즉시 수용, 모든 문제들 해결하고 국제사회에 나오기를 기대한

다"고 밝혔다. 미국 민간자 USA부대이는 이와 관련, 미국이 북한이 핵개발 의혹으로 제시한 증거는 북한이 보통의 우라늄을 무기급으로 농축할 수 있는 가스원심분리기를 만들 수 있는 장비를 구입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CNN 인터넷판도 캘리 차관보가 이담 초 방북 당시 북한이 최소한 핵무기 2개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농축할 수 있는 핵개발 프로그램을 가졌다는 증거를 북한에 제시했다고 16일 보도했다.

김진홍 김외국기자 jhkim@kmib.co.kr  
관련기사 2·3·4·5·8·9·10·27면

# “北, 美와 核·경제제재 빅딜 시도”

### 정부 “核개발 不容… 장관회담 예정대로” 日 “국교정상화 不可”… 中 “非核化 지지” EU “경수로 재검토”… 北관영매체 침묵

정부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이 새로운 핵개발 프로그램을 시인한 문제점은, 북한의 어떠한 핵개발에도 반대하며, 새 핵개발 프로그램의 실체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폐기를 위해 미·일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 문제를 대화로 풀

이에 따라 우선 19일 평양에서 열리는 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는 한편, 멕시코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중인

26일의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개발 중단선언 ▲북한의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 폐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수용 등의 다각적인 해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북측의 강석주 제1부상이 헬리 특사 방북 마지막날 회담에서 ▲미국이 제시한 핵개발 의혹 및 미사일, 재래식 병력감축 문제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등 대북 적대정책 철회 등에 대한 ‘일괄타결’ 입장을 제시했다”면서 “이는 북측이 대화를 통해 문

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기자 baibai@chosun.com  
북한의 새로운 핵무기 개발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은 17일 “핵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일·북간) 국교 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東京=權大烈특파원 dykwon@chosun.com

중국 외교부의 장치웨이(章啓月) 대변인은 17일 정례 뉴스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개발 계획 시인과 관련,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한다”며 북한의 핵개발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北京=呂始東특파원 sdyeo@chosun.com

유럽연합(EU)의 엠마 우드윈 EU 집행위원회의 대변인은 17일 “EU는 북한의 비밀 핵개발 시인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만일 사실로 확인되면 이는 명백히 제네바 합의와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미래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북한 경수로 건설에 대한 재정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뤼셀=鄭勝

재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7일 미국 정부가 북한이 헬리 특사 방북 때 핵개발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미국이 (우리나라가) ‘핵개발을 시인했다’거나 ‘제네바합의 불이행’을 밝혔다고 정보를 흘리고 있다”며 “아직도 이 정보의 맥락은 확실하지 않고 정확한 사실은 시간이 지나야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의 관영매체들은 이날 밤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金仁기기자 ginko@chosun.com

## 경향신문

2002.10.18(금)

## 켈리 CIA 자료 들이대자 강석주 뜻밖 선선히 시인

북한이 비밀 핵개발 사실을 시인한 의도도 놓고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런 시인이 밝혀지게 된 것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일행은 지난 3일 북한을 방문하면서 비밀 보따리를 들고 갔다. 켈리 차관보는 방문 첫날 김계관(金桂寬) 외무성 부상과 외제 조율을 위한 예비회담을 하면서 미 중앙정보국(CIA)이 마련한 자료를 들이대며 북한의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계획에 대해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단 김부상은 부인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4일 본회담에서 사정은 달라졌다. 본회담 상대로 나온 북한 외교의 실세로 알려진 강석주(姜錫柱) 외무성 제1부상은 켈리 차관보 일행의 추궁에 비밀 핵무기 개발계획 추진 사실을 선선히 시인했다.

16일 CNN방송에 따르면 켈리 차관보가 북한의 시인에 놀라 감부상을 바라보자 그는 “당신의 대통령은 우리들 악의 축의 하나로 지목했다. 당신들 군대는 한반도에 배치돼 있다. 물론 우리는 핵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북한은 “더 강력한 것을 갖고 있다”고 말해 생화학무기 보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켈리 차관보를 수행했던 관리들은 덧붙였다. 한 관리들은 북한이 1994년 핵합의를 어긴 때 따른 ‘사과의’ 입장보다는 ‘호전적’이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이에 대해 북한은 이후 켈리 차관보가 “무례하고 오만했다”고 연일 비난했다. 한국 정부는 켈리 차관보가 방북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이같은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미국이 북한의 새로운 핵무기 개발계획에 대해 정보를 입수한 것은 지난 여름이라는 설과 올해 초라는 설이 양립하고 있다.

CIA가 지난 1월 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2001년) 후반기 동안 핵무기 개발에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상황이 다급해진 켈리 차관보 일행은 일정을 앞당겨 단일로 한국을 떠나 일본을 거쳐 귀국했다. 미국은 이후 수차례 국가안보회의(NSC) 회의를 통해 이 문제의 대응방향을 비밀리에 협의했다. 그 과정에서 남새를 담은 언론이 추적을 시작하자 부랴부랴 이남 밖 백악관의 배경설명과 국무부 설명을 통해 사실을 공개했다.

워싱턴 / 이승철특파원·차세현기자

● 北 핵개발 시인 경위  
“당신은 우리 악의 축 지목  
군대는 한반도에 배치  
우리 핵 프로그램 있다”

# 北 농축우라늄 핵 개발

## 美 “北, 켈리 방북때 비밀 프로그램 가동 시인”

### 美정부 “北, 제네바 합의 무효화 속셈”

### 켈리차관보 대책논의 韓·日 다시 방문

#### 백악관 “평화해결 모색”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키로 한 9년의 북-미간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방식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가동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북한은 새로운 핵개발 움직임과 함께 영변 방사화학실험실 등 과거 핵활동에 대한 사찰도 거부하고 있어 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야기된 ‘한반도 핵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 국무부와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미 대통령 특사로 3일부터 5일까지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측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발표했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밤 긴급성명을 통해 “켈리 차관보와 대표단은 북한이 제네바합의 및 관련 합의를 깨고 핵무기 제조용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정보를 우리가 최근에 입수했다고 북한측에 알렸다”며 “북한 관리들은 그 같은 프로그램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바우처 대변인은 또 “북한측은 미국을 비난하며 제네바합의가 무효화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스콧 매클레런 백악관 부대변인은 17일 “부시 대통령은 이 문제를 외교적 채널을 통해 다루기로 결정했다”며 “북한과 이라크는 명백히 다른 국가인 만큼 우리는 평화적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슌 매클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들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존 볼턴 국무차관과 켈리 차관보는 북한 핵문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17일(한국시간) 중국

베이징(北京)에 도착했다.

CNN방송은 미국이 고농축우라늄을 포함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지난 여름 입수했다면서, 이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제네바합의로부터 몇 년이 지난 90년대 말부터 핵개발을 재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6일 보도했다.

한편 구나르 바간트 유엔연합(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17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보도가 사실일 경우 경수로 건설 계약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한기홍특파원 [ehgius@donga.com](mailto:ehgius@donga.com)  
김영식기자 [soear@donga.com](mailto:soear@donga.com)

## 한겨레

2002.10.18(금)

### 일본, 대북 수교교섭 예정대로

【도쿄=오태규 특파원】 일본 정부는 17일 오는 29~30일 말레이시아 콰라룸푸르에서 열린 북-일 국교 정상화(수교) 교섭을 예정대로 열어 북한 핵 문제를 일본인 납치 문제와 함께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이날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지난달 17일 북-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평양선언에서 국제법을 준수하고 핵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도록 설득하는 대응을 해야 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것”이라면서 “북한 쪽에 설득하는 대응을 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ohitak@hani.co.kr](mailto:ohitak@hani.co.kr)

#### EU “경수로 지원 재검토”

유럽연합은 17일 북한의 핵 개발

계획 시인 발표와 관련해 북한 경수로 건설에 대한 재정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여마 우드윈 집행위 대변인이 밝혔다.

우드윈 대변인은 “유럽연합은 북한의 비밀 핵개발 시인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긴급하게 사태를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차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가 무핵화로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를 바라는 중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조선(북한)의 핵 문제는 반드시 대화와 협상을 거쳐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한성봉 특파원, 외신종합 [stba@hani.co.kr](mailto:stba@hani.co.kr)

## ■ 임성준 외교안보수석 문답

### “北 핵사찰 즉시 수용... 의혹 풀어야”



임성준(任晟準·사·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7일 오전 북한의 새로운 핵개발 의혹에 대해 심명한 뒤 기지와 일문일답을 가졌다.

●북한이 시인한 핵개발 내용은.

북한은 농축우라늄을 사용한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양은.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의 누가 시인했는가.

제임스 켈리 특사 방북시 대화 상대자로 알고 있다.

●오늘 발표하게 된 배경은.

지금 실명드리기 곤란하다. 특별한 배경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될 것이다.

●해결을 강조하는 뜻은.

북한의 핵의혹에 관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제네바 합의에도 분명히 나와 있다. 핵사찰을 즉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생각이다.

●다음 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하느냐.

멕시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그 기회에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이다.

●켈리 방북 후 지금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미국과는 얘기가 잘 되고 있다. 이번 주말 켈리 특사가 방한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다.

●미국이 켈리 특사 방북 직후 즉각 통보했는가.

방북 이후 즉각 통보했다.

●94년 이후의 새로운 핵 개발 의혹인가.

그런 것으로 안다. ●오명동기자

## ■ 美 볼튼차관·켈리차관보 한·중·일 급파

### 對北 초강수 주변국 협조 구하기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공식 발표한 16일(현지시간) 미국은 존 볼튼 국무부 차관과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를 한·중·일로 급파했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평화로운 해결을 원한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를 동맹국들과 협의하기 위해 켈리 차관보와 볼튼 차관을 동아시아로 급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갑작스러운 한·중·일 순방은 지난 15일 국가안보회의(NSC) 회의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보좌관들이 북한의 시인율 외 교재닐을 통해 해결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이라크는 상황이 다르며 이라크 군사공격 수순을 밟고 있던 미국은 이라크와

다불어 ‘악의 축’ 국가인 북한이 정면으로도 전대 오자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초강경 자세를 견명할 경우 2개의 전선을 구축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이보다는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17일 베이징에 도착한 볼튼 차관과 켈리 차관보는 중국 정부와 대책을 논의한 뒤 주말쯤 각각 스위스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와 서울·도쿄를 방문,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순방 결과는 이달 말 멕시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에서 공동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데 토대가 될 전망이다. ●김혜승기자 ifineday@kday.com

## 한국일보

2002.10.18(금)

# 북한, 핵개발계획 시인

### 우라늄 농축방식... 韓美 “제네바 합의 위반”

### 켈리에 “추출장비 구했다” 밝혀

### 美 “포기안하면 관계개선 없어”

### 北은 “제네바 합의 무효화 간주”

북한이 이 달 초 방북한 제임스 켈리 미 특사에게 우라늄 농축 방식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진정해 왔음을 시인한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한미 양국은 이에 대해 북한의 핵 동걸을 명시한 1994년의 제네바 협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핵개발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다. 한미 양국은 그러나 일단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2·3·4·5·8·12·31면

미국은 16일(현지 시간) 밤 백악관 대변인의 발표와 국무부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계획 시인 사실을 공표하고 북한이 이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북 지원을 비롯한 관계 개선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켈리 특사가 평양 회담에서 북한이 제네바 합의의 이후 종전과는 다른 기술로 핵무기를 개발해 온 증거를 제시하지 북한은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결국 이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미 언론들은 북한이 켈리 특사에게 “우리는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할 수 있는 장비를 구했다”며 “이보다 더 강력한 것도 갖고 있으며 제네바 합의가 무효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임성준(任晟準) 외교안보수석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즉시 수용해 모든 핵의혹을 해결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시인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j0101@hk.co.kr 이진동기자 jaylee@hk.co.kr

## “19일 장관급회담때 北核제기”

### ■ 정부 당국자들 문답

청와대 임성준(任晟準) 외교안보수석, 외교부 이태식(李泰植) 차관보 등 당국자들은 17일 “북한은 핵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면서 “모든 것은 북한에 달렸다”고 말했다. 당국자들은 그러면서도 “북한의 시인은 대화 해결의지를 의미하는 측면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다음은 당국자들과의 문답.

-북한이 시인한 내용은.

“북한은 농축우라늄을 사용한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했다.”

-북한의 누가 시인했는가.

“켈리 특사의 방북 시 상대자인 강석주(姜錫柱) 외교부 제1부상으로 알고 있다.”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일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하.

“심도 있게 다루어질 것이다.”

-미국이 켈리 특사 방북 직후 즉각 우리에게 통보했는가.

“방북 이후 즉각 통보했다.”

-94년 제네바 핵 합의 이후의 새로운 핵 개발 의혹인가.

“그렇다. 북한이 분명히 잘못했다. 미국과의 협상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 이 부분을 톺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왜 이 시점에 공개했나.

“미국도 불만이다. 보안유지에 신경을 많이 썼다. 미국도 비공개



청와대 임성준 외교안보수석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북한의 핵개발 시인 문제와 관련한 배경설명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켈리, 방북후 즉각 우리에게 통보  
美, 비공개로 北과 협상하려다  
언론보도 움직임에 서둘러 공개”

로 북한과 협상을 한 예정이었다. 범죄도 수사해 증거를 잡은 뒤에 공개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데 언론에 흘러나가 공개 시기가 빨라진 것이다.”

-미국이 협상을 안 한다고 했는데.

“주고 받기식으로 안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해결방법은.

“IAEA 사찰을 받든가, 핵을 폐기하거나, 핵개발 중단 선언을 해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된 뒤에야 향후 북미대화에든지 원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수로사업은 어떻게 되나.

“북한 태도에 달려 있다.”

-북한이 시인한 배

경은.

“북측에 물어봐야 한다. 우리가 알기로는 북측도 이 문제를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알고있다.”

-19일 평양에서 일리는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문제 제기를 하나.

“그렇 것이다.”

-북미 대화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일단 접었다고 보면 된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 “北 核개발 추진 시인”

## 켈리 방북때 ‘제네바합의 무효화’도 통보

### ‘농축우라늄 이용’ 비밀 프로그램 마련

### 美 국무부 발표... 백악관 “평화적 해결”

【워싱턴 백은일특파원 김수정기자】 북한이 1994년 미국과의 제네바 핵합의 이후에도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는 사실을 미국측에 시인한 것으로 밝혀져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북한은 이와 함께 핵무기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제네바 기본합의를 실질적으로 파기했음을 미국측에 통보, 한반도 평화공존의 한 동력으로 작용해 온 제네바 핵합의가 위기를 맞게 됐다.

미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성명은 “북한 관계자들은 켈리 특사가 방북했을 때 핵무기 개발계획을 시인했으며 제네바합의가 무효화된 것으로 간주했다.”면서 북한측이 먼저 제네바합의 파기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4·5면

북한은 농축우라늄을 사용한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은 또 “미 정부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개발·수출 문제 등에 대해 그동안의 행태들을 획기

적으로 바꿀 경우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정치적 지원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북측의 제네바 핵합의 위반으로 더 이상 이같은 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켈리 특사할 수행했던 미 국무부의 한 관리인 켈리 특사가 지난 4일 김성주(金聖柱)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만났을 때 강 부상이 켈리 특사에게 “당신의 대통령은 우리를 악의 축의 하나로 지목했다. 당신네 군대는 한반도에 배치돼 있다. 물론 우리는 핵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부상은 이와 함께 “우리는 더 강력한 것도 갖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 관리의 이 말이 “북한의 생화학무기 등 다른 대량파괴무기 보유 사실을 시사하는 것으로 들렸다.”고 말했다. 강 부상은 처음에는 핵무기개발계획을 부인하다 켈리 특사가 북한이 최소 핵무기 2기를 만드는 데 충분한 플루토늄을 확보했다는 핵실험 위반 증거를 제시하자 핵개발 계획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mp@kdaily.com  
2면으로▶

## 대한매일

2002.10.18(금)

### “北 核개발 추진 시인”

▶ 1면에서

손 대코맥 백악관 대변인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재개함에 따라 제네바 합의는 “사실상 파기(material breach)됐다.”고 밝히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일본 등 우방국은 집단 의회와 협의할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그러나 성명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혀 무력사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이날 존 험튼 미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보와 켈리 차관보를 중국, 한국, 일본에 보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요청했다.

# 北, 核개발계획 시인

## 서울경제

2002.10.18(금)

### 켈리 특사 訪北때 밝혀... 韓·美 “대화해결 희망”

북한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농축우라늄을 활용한 비밀 핵개발 프로그램이 있음을 시인했다고 한국과 미국 양국이 17일 오전(한국시간) 공식 발표했다. ★관련기사 3·4·5면

미 국무부는 17일 오전(한국 시간)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북한이 이달 초 제임스 켈리 특사의 방북시 핵무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희망한다고 밝히고, 북한은 핵개발계획 동결을 골자로 한 제네바 협정과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고 핵무기 개발계획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대코맥 백악

관 대변인도 북한의 핵개발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94년 제네바 기본합의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제임스 켈리 미 대통령 특사의 방북 직후 우리 정부는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았으며 그때부터 한·미·일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개발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태식 외교공상부 차관보는 “북한 핵문제 관련 우리 입장”이라는 정부 공식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문제 포함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남북간의 대화경로를 통해 북측에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새로운 핵개발 의혹을 시인한 것은 대화를 통해 해결할 의미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대화를 통해 북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시설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19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장관급회담과 이달 말 멕시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사찰 수용을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인익식기자 esahn@sed.co.kr



# 北, 美와 빅딜 시도했다

## 켈리訪北때 농축우라늄 핵개발 시인

核·체제보장·경제현안 일괄타결 요구  
제네바합의 폐기위기... KEDO 철수도  
켈리 내일 韓·日 잇따라 방문 대책 논의

북한이 처음으로 비밀 핵무기 개발계획을 추진중이라는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는 16일 밤(현지시간)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갖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밝히고 이는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무부는 이날 리처드 바우처 "인" 평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김스 켈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이달 초 부시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방북했을 때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성명은 이어 "북한은 기본합의서는 무효화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북한은 방북했던 제임스 켈리 미 대통령 특사에게 농

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의혹을 포함해 미국의 '우려사항'과 북측의 요구사항을 일괄 타결하는 '빅딜'을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북측의 감식주(黨報社) 외무성 제1부장은 켈리 특사의 방북 미지마남 가진 회담에서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과 경제제재 등을 철폐할 경우 현안인 핵 미사일 재래식 병력 감축 등 '안보 관심사'를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한 태도를 크게 바꾼다면 북한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정치적 조치를 제공할 용의가 있었으나 북한 핵무기 개발계획에 대한 우려로 이같은 과감한 접근법을 추구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성명은 또 "미국과 미국의 우방

은 북한에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준수하고 핵무기 개발계획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시인한 핵개발계획은 기존의 플루토늄 방식이 아닌 농축우라늄 방식이어서 미국의 대북 핵현안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외교 소식통들의 지적이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연변 핵시설 외에 새로운 핵개발 시설이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 계획 시인에 대해 "우리를 자아내는 동시에 냉정을 되찾게 하는 뉴스"라고 보고 있으며 외교를 통한 해결을 모색할 것이라고 스폿 락 칼럼니스트인 대변인이 17일 말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폐기하지 않으면 북측에 경수로 제공 등을 규정한 제네바 핵합의를 폐기하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서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관련 소식통들

이 전했다. 이와 관련, 17일 중국을 방문한 켈리 차관보가 19일 한국 일본을 잇따라 방문해 정부 당국과 북한 핵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미 CNN방송은 부시 행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 북한이 농축우라늄 방식의 핵개발 사실을 아나라 최소한 핵무기 2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워싱턴=박원규특파원  
wgpark@segye.com

世界日報

2002.10.18(금)

매일경제

2002.10.18(금)

# 北, 핵개발 계획 시인

## 韓·美·日정상 이달말 APEC서 대책 논의

### EU, 北 경수로 지원 취소 경고·

워싱턴=순천덕목파원

북한이 비밀 핵무기 개발 계획을 시인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공식 발표했다. ▶관련기사 3·4·5·8·19면  
국무부는 16일 밤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 평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음을 시인했다"며 "미국은 이러한 열려에 비춰볼 때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과감한 접근법을 추구할 수 없다"고 밝히 북·미 대화 경색은 물론 한반도 정세에도 냉기류가 감돌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 성명에 따르면 제임스 켈

리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특사 자격으로 이달 3일 북한을 방문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우라늄을 농축할 계획에 있다고 있는 정보를 제시하자 북한 관계자들은 핵무기 개발 계획을 시인했다.

이는 94년 체결된 제네바 합의가 무효화됐다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북한이 그 후 새로운 기술로 핵무기를 제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국무부는 "켈리 특사 방북시 북한은 미국을 비난하려 했으며 기본합의서는 무효화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새로운 핵개발 의혹을 시인한 것과 관련해 대화를 통해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수용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말 멕시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핵개발 의혹과 관련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 핵개발은 용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일침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이 전했다.

한편 제임스 켈리 차관보는 17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19일까지 머물면서 북한 핵 개발 사태와 APEC 정상회담에 앞서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중국 방문 이후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해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에 대해 협의한다.

유럽연합(EU)은 17일 북한이 경수로 건설 지원 대가로 핵무기 개발 계획을 중단키로 한 약속을 어기고 여전히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들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사실상 드러날 경우 경수로 건설 계약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ahn@mk.co.kr  
윤상환기자 shyoon@mk.co.kr

# 오늘부터 장관급회담... 김정일 면담 추진 정부, 핵포기 北에 강력촉구

## 켈리 오늘 訪韓... 崔외교와 조율 “제네바 합의 지속” 입장 전달키로

정부는 18일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대화로 풀기 위해 평안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 아래 19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제8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측에 핵개발 중단 및 시설 제거 등을 강력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면담을 추진, 북한의 진의를 타진하고 핵개발 시인이 사실일 경우 핵 시설 제거 등을 직접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이번 회

담 기간 김 위원장을 만나 진의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해서도 핵개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북한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4·5·8면 이와 관련,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이날 낮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 “북한의 핵개발 계획이 사실 단계인지, 구상인지, 무기 개발단계에 와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못내리고 있다”며 “북한이 어떤 의도에서 시인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19일 방한하는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를 최성중(崔成泓) 외교장관 및 임성준(任晟準)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면담,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제네바 핵합의가 지속되고 경수로 공사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멕시코 로스카보스에

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이 같은 기조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장관급회담에서는 핵문제 외에도 남북 교류협력 일정을 중간 점검하고 보안 대책 등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정 통일부장관 등 남북 대표단은 19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서해직항로를 통해 평양으로 간다. /이진동기자 jaydee@hk.co.kr

이동준기자 djlee@hk.co.kr

## 매일경제

2002.10.19(토)

# 美 “북한核 평화적 해결”

## 오늘 남북장관급회담서도 논의

워싱턴=손현덕특파원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하고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은 많은 우방들과 외교적 접촉에 본격 나섰다.

▶관련기사 2·3·4·6·7면  
부시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 존재를 시인한 것은 걱정스럽고 걱정이 번쩍 드는(troubli-

ing and sobering) 뉴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스콧 맥클레런 백악관 대변인이 전하면서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다음주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집중 기밀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존 밥슨 차관과 제임스 켈리 차관보가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을 잇달아 방문

해 의결 조율에 나선다.

클린 파월 국무장관도 이날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당장 북한을 상대로 무력을 행사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9일부터 3박4일 동안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8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어떤 경우에도 북한 핵개발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 방침을 북측에 전달하고 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ubsohn@mk.co.kr  
김대영·윤성환기자

# 北에 '核포기' 강력촉구

## 오늘부터 장관급회담...제네바합의 준수 집중설득

정부는 19일 평양에서 시작되는 제8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어떠한 핵개발에도 반대한다는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핵개발 계획 포기를 북측에 촉구할 방침이다. / 관련기사 4면

정부 당국자는 18일 "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강력히 제기할 방침"이라며 "북한이 신의주특구 지정 등을 통해 국제사회로 나오려는 마당에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집중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개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

명히 전달하고 북한이 제네바 합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도 높게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회담의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의 핵개발 계획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핵개발 계획이 시달단계인지, 구상인지, 무기개발단계까지 간 것인지 정확한 판단을 못내리고 있지만 북한이 순순히 시인한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장관급회담 전략기획

단 회의관 업고 평화적 해결방향을 확인하는 한편 미·일 등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강화해 북핵 개발 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해 철저히 규명키로 했다.

남측 대표단의 대변인인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정책실장은 기자회견담회를 갖고 "(핵문제에 아끼던) 안보위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남북간 기존의 합의사항 이행도 병행할 것"이라며 "악간의 상황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느낌을 갖고 가며, (회담 결과는) 직접 부딪쳐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용욱기자 woody@kyunghyang.com

## 世界日報

2002.10.19(토)

# 韓-美, 北核해결 공조모색

## 켈리訪韓 오늘 장관급회담서도 정식제기

부시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이달 초 방북한 제임스 켈리 미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19일 방한. 우리 외교당국과 연세접촉을 갖고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미 양국간 공동대처 방안을 협의한다. 양국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시인과 관련, 국제원자력기구

의 사찰 등을 통한 철저한 규명과 폐기를 촉구하는 한편 이를 위해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 정부는 또 북핵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입장을 미국측에 거듭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19일부터 3박4일동안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8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북측의 핵개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제네바 합의와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이행은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 박희준-김기동기자

## 한겨레

2002.10.19(토)

### 남북장관급회담 오늘 평양서

제8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19~22일 평양에서 열린다. 장세현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남측 대표단 48명(취재진 포함)은 19일 오전 10시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인천공항을 떠나 서해상 직항로를 거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18일 라디오 시사프로 그램에 출연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이 시달단계인지, 구상인지, 무기개발 단계까지 간 것인지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리고 있다"며 "이번 회담에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어떠한 핵 개발에도 반대하며, 새롭게 제기된 핵 개발 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폐기를 위해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조를 강화하고,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뜻을 거듭 확인하고, 장관급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기로 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 오늘 장관급회담 '北의 입' 세계가 주시

핵개발을 시인한 북한이 연이름 공식적인 반응에 앞장 보이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19일부터 예정된 남북장관급회담에 대해 "우리측 대표명단은 바뀐다"면서 세계대로 진행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핵과문으로 급격히 냉각된 한반도 경제의 미래는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우리측의 핵투명성 보장 요구에 대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참목에는 두가지 가능성이 모두 들어 있다. 하나는 대미 강경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요, 다른 하나는 갑자기 얼어붙은 대미·대남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 지 북한 지도부가 아직 고민만 거듭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 등 완화된 자세보다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다면 한반도 경제의 호전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되면 8차 장관급회담 역시 남과 북은 아무런 성과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측은 이미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전라회의를 거쳐 회담

## 核투명성 집중논의 北 기존입장 되풀이때 당분간 긴장 불가피

원칙을 정해놓고 있다. 다른 의제들 모두 제쳐놓고 북한 핵개발은 어떤 경우든 단한다는 핵투명성을 다시 한번 북한에 요구하고 이를 보장할 수단을 강구하라고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핵과 군사문제는 법적인 당사자인 미국과 풀어야 할 문제이므로 남한측과는 어떤 협상도 있을 수 없다"고 나올 것이 분명하다.

북한은 그동안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노동당 대변자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에 대한 자신의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 놓고 있다. 즉 동등한 주권 국가로서의 지위에 기초한 대화, 적대정책 포기, 북·미 기본합의문과 공동코리니케 합의사항 이행실천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도 여

전히 핵개발 프로그램을 시인했다는 미국 발표를 대북 압박용 선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기존 태도를 고집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반대로 북한 지도부가 핵개발 시인으로 인해 번진 위기를 돌파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라면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에 기존의 강경 입장을 버리고 새로운 유화제스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그 제스처는 핵개발 중지라는 "화력적인 형태는 아니겠지만 '미국이 이런 저런 것들을 해주면 우리도 상의를 보여겠다'는 식으로 넉넉히 던져질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합의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는 실익, 요컨대 쌀·비료 지원,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유로관광 실현,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은근노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걸음으로는 "핵문제와 별도로 기존 합의 사항은 그대로 추진한다"면서도 북측이 이번 회담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에 무척 신경을 쓰고 있다. 신창호기자 procol@kmb.co.kr

# 核개발시인 배경 파악에 역점

오늘 평양 장관급회담

## 北 "議題 아니다" 반발할 수도

19일 평양에서 시작되는 8차 장관급회담에선 '북한 핵 개발'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지게 됐다. 당초 우리 측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양측이 합의했던 현인들의 추진 현황을 총진검하는 자리로 준비해 왔으나 '북한 핵 개발'이 불거져 이 문제를 먼저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우리 측은 '핵 개발 반대' 입장을 전하고, 북한의 제네바 핵합의 준수를 촉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북한 핵 개발에 대한 정보가 전적으로 미국 정부가 준 것이란 점에서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 핵 개발의 실체와 북측의 시인 배경을 파악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깊은 우리'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최종 단계에서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측이 '의제 외 사안'이라거나 "우리(대남사업 부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무시하면서 우리측을 난처하게 만들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리 측은뿐만 아니라 국군포로와 남북자 문제도 재기해야 한다. 이

문제 역시 북측이 꺼리는 사안이라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일반 현안 중에선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금강산 유로관광 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논의된다.

북측이 막판에 DJ 정부의 입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또 다시 전력·식량 등의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송仁執기자 ginko@chosun.com

중앙일보

2002.10.19(토)

核문제·대화 분리해서 대응

정부, 장관급회담 전략

8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19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다.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진 직후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북핵 시안'의 미국 측 발표에 대한 북측의 첫 공식 반응이 나올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관계기사 5면>

정부는 18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정세현(丁世鉉·통일부 장관) 남측 수석대표 주제로 장관급 회담 전략회의를 열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정부의 우려와 국제 핵 문제 질서의 준수를 북측에 촉구하는 데 주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핵 문제 해결을 다른 의제들과 병행 논의하되 교류·협력사업과 대북 지원 등을 북한 핵과 연계시키

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대변인인 이봉조(李鳳朝)·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핵 문제를 논의하자는 제안에 북한이 어떻게 응할지는 미지수"라며 "그러나 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하므로 우리도 단자시안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내에서는 켈리 특사의 북핵 관련 언급 내용에 대한 북한 측의 진의 파악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신중한 견해가 대두하고 있어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간에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다. 또 미국 측이 제공한 북핵 관련 정보의 공유 문제를 놓고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응책 마련에 차질을 빚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연중 기자

yllee@joongang.co.kr

'제네바 핵합의' 북에 준수촉구

정부, 오늘 장관급회담

정부는 북한 핵개발 문제와 관련, 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8차 장관급회담 기간 중 북측에 제네바 핵합의의 준수를 촉구하고, 핵개발 프로그램의 실행과 북측이 서안선·배경 등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18일 말했다. >관련기사 A5면

이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 어떤 핵개발도 반대한다는 우리측의 분명한 입장을 전하고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제네바 핵합의를 준수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부가 가진 북한 핵개발과 관련된 정보가 모두 미국 측에서 전해준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정확한 상황부터 파악하는 데도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측 대표단은 19일 낮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방북한다.

정부는 또 이번 사태와 관계 없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북측 지역 공사에 사용될 자재 13개 품목과 장비 22개 품목 등 35개 품목(10억원어치)을 19일 오전 북한 측에 전달한다.

/김민기기자 ginko@chosun.com

한국경제

2002.10.19(토)

美, 北核해결 외교적 압박

장관급회담서 문제 제기

미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외교채널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강하고, 한국 일본 중국 등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력에 들어가는 한편 외교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관련기사 2,3,4,5,8면

이를 위해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18일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19일 한국을 방문해 최성환 외무장관과 북한 핵 폐기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프로그램 지속 여부 등을 협의한다.

이에 앞서 조지 W 미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의 존재를 시인한 것은 걱정되고 정상이 들게 하는 (troubling and sobering) 뉴스"라며 "다음주 열릴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

고 말했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한두 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이 정보파트의 평가이며 이를 믿는다"고 말했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핵개발 계획이 사실 건설 단계인지, 무기 개발 단계까지 간 것인지 판단을 못 내리고 있다"며 "19일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장관급 회담에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고광철 특파원·홍영식 기자 gwang@hankyung.com

# “北 증거잡히자 시인 좋은 징조로 못 봐”

## 럼즈펠드 美 국방 ‘강한 불신’

도널드 럼즈펠드(Dumsfeld) 미국 국방장관은 1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이과없이 드러냈다. 다음은 일본일담 요지.

—북한이 핵 개발 계획을 시인했는데, 북한은 미국의 신재광각 대상이 아닌가?  
“대통령과 의회, 국민들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 핵화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협정,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등 4개의 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미국은 동맹국과 사대의 신각심을 논의할 것이다.”

—북한에 핵 사찰 수용을 요구할 때가 아닌가?  
“사찰 방안은 해당 정부가 협력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북한은 관련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세계를 향해 공표하고 있는데, 무엇을 사찰한다는 말인가.”

—북한의 핵 개발 시인은 호진적(好戰的) 징조인가, 아니면 껌짓이 밝혔다는 점에서 좋은 신호인가?  
“우리가 증거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북한은 첫날에는 부인했다가 둘째 날에 야고백했는데, 누구도 이를 좋은 신호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예너지, 기근, 식량 등 수십억달러어치를 미국과 다

른 나라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핵 개발의) 꼬리가 잡히자 머침내 시인한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하는가?  
“우리는 독재적이고 억압적이며 난처

있는 국가를 상대로 하고 있다. 나쁠 포함한 누구도 북한의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보지 못했다. 하지만 중앙정보국(CIA)은 다양한 정보 수집을 통해 북한

### “北 핵협정위반 사실 세계 향해 공표하는데 사찰 수용하겠나”

이 1000년대 초 이후 1-2개의 핵무기를 개발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나는 북한이 소수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믿고 있다.”

—북한과 이라크의 차이가 무엇인가? 북한에 대해서도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체제 변화를 추구해야 하지 않는가?  
“의외 중언과 이 자리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두 나라의 차이를 설명했다. 그 두 나라는 여러 다양한 면에서 다르다.”

—북한과 이라크의 차이가 무엇인가? 북한에 대해서도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체제 변화를 추구해야 하지 않는가?  
“의외 중언과 이 자리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두 나라의 차이를 설명했다. 그 두 나라는 여러 다양한 면에서 다르다.”

/워싱턴=朱廣中특파원

# “북한에 식량 지원은 계속”

## 美 국무부 대변인 문답

### 美·北 뉴욕채널 유지

미국 국무부의 리처드 바우처(Richard Boucher)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관련 시찰에 관해 많은 문답을 주고받았다. 다음은 그 요지.

—북한이 핵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보유를 시인한 데 대한 미국의 정책은 무엇인가?  
“우리는 우방과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것이다. 우리는 또 북한이 우리가 요구한 대로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핵 프로그램을 제거할지 여부를 주의깊게 지켜볼 것이다.”

—제네바 합의는 무효화됐는가?  
“북한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결정할 것이다. 동맹국들과 다음 단계 조치에 대해 협의 중이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보유를 시인한 이후 북한과 접촉이 있었는가?  
“뉴욕 채널을 통한 접촉이 있었다. 그것은 계속된다.”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은 논의하지 않았는가?  
“어젯밤 설명에서 밝혔듯, 우리는 이 상황과 관련해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한다.”

—북한이 이라크보다 핵무기 개발에 앞서는가에 상황에서 북한과 이라크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라크는 유엔결의안을 거듭 위반해 국제사회의 요구를 거부해왔을 뿐 아니라 테러와의 연계, 대량살상무기 개발, 인접국과 자국민에 대한 독가스 사용 등 적극적인 위협 움직임을 보여왔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은 계속되는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지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일 뿐, 다른 문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은 계속되는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지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일 뿐, 다른 문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은 계속되는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지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일 뿐, 다른 문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워싱턴=姜仁仙특파원 insun@chosun.com

## 대한매일

2002.10.19(토)

19일 남북장관급회담 전망

# 北 직접해명 이뤄질까

### 남북자문제도 거론키로

3박4일간의 일정으로 19일 밤에서 개최되는 제8차 남북장관급 회담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을 시인한 의도와 핵개발 실태를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시찰 이번 회담은 남북한이 지난 8월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 연결, 이산가족 상봉 등 큰 틀의 합의달 하고, 이후 합의를 착실하게 이행해왔다는 점에서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했다. 남북 교류·협력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 17일 북한이 려리 미 특사에 게 핵개발 프로그램을 시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을 단장으로 한 남측 대표단은 북측에 대해 핵개발 프로그램 중단 및 북측에 제네바합의, 핵비확산조약(NPT) 및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이행을 재촉하면서 핵시설을 시인한 의도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는 것을 회담의 1차 순위로 올렸다.

아직까지 북측이 공식채널을 통해 입장

을 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있는 설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관심사는 6·25전쟁 당시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대한 생사확인사업" 문제에 대한 북한측 반응 여부다. 우리 측은 핵 문제와 함께 남북자문제도 새 의제로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18일 북·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를 시인하고 최근 남북자 4명을 일본에 일시 귀환시킨 조치와 관련, 남북도 남북자 문제를 회담 의제에 반드시 올려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북측의 최근 경제개혁 조치 움직임으로 볼 때 일본인 납치 문제처리도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완전히 외면할 수도 있다.

또 지난달 초 금강산에서 열린 총재급 적십자회담에서 6·25전쟁 행방자의 생사·주소 확인 문제를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차기 적십자회담으로 떠날길 풍산도 있다.

남북한은 국방장관 회담 여부,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특구 지정 및 육로관, 임남남(금강산남) 공동조사 등의 시안도 다를 것으로 관측된다.

◆김수정기자

# 남북 대면서 '北반응' 주목

## ■ 오늘부터 평양서 장관급회담

북한의 핵 개발 시인 때문으로 격앙에 휩싸인 한반도 정세는 19~22일 평양서 열리는 제8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첫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남측은 이 자리에서 북한 핵 개발 문제를 공식 제기할 태세이고, 북측도 어떤 식으로든 대

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정세의 핵심변수로 등장한 핵 문제에 대해 북측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이번 회담의 성패는 물론이고, 향후 남북 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이 자리는 핵문제 제기 터진 직후 북한이 외부와 갖는 첫 고위급 접촉이어서 주목된다.

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을 통해 각종 합의사항의 이행을 총점검하려 했으나, 핵 때문에 불허버린 것 같다"면서 "핵을 둘러싼 실랑이로 개성공단 등 다른 의제는 논의 자체가 안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북측이 이번 회담에서 속 시원하게 핵 의혹을 해명할 것 같지도 않아 더욱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핵 등 군사 문제에 관한 한 북미간 현안이 라고 주장해온 북측의 태도를

한국일보

2002.10.19(토)

## 丁통일, 의혹시설 제거 요구키로

## 회담 성패가 한반도정세 분수령

남측은 정공법을 택했다. 북한이 핵각 무조건적으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선행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남측의 확고한 입장이다.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18일 "북한에 모든 핵 관련 의무를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히며 의혹 시설 제거를 요구할 방침을 시사했다

정부는 일단 경의·동해선 연결 등 합의사항을 예정대로 이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경제협력 등을 핵 문제와 연계해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

감인하면, 핵 문제를 아예 의제에서 제외하려고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북측의 핵 개발 시인은 9년 발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도 위배된다"면서 "북측이 이 문제를 비켜나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반응을 보이지더라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시설 수용 등 완화된 자체보다는 핵 개발 자체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북측은 한반도 나가 대북 적대시 정책 등을 펴고 있는 미국에 대한 남측의 태도, 한미일 공조의 부당성 등을 지적하면서 주한미군, 국가보안법, 주적(主敵) 문제 등으로 맞불을 놓을 공산도 있다.

이 경우 DJ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고위급 접촉으로 간주돼 온 이번 회담은 9~11 테러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사각치로 걸릴원 6차 장관급 회담의 전철을 밟게 된다.

물론 북측이 핵 개발 시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해결 의지를 보이면 남북관계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 정 장관은 "미국이 의혹을 제기하자 북한이 순순히 시인한 점을 주목한다"면서 북측의 전향적 입장 개진을 은근히 기대했다.

/이동준기자  
dilee@hk.co.kr

## 서울경제

2002.10.19(토)

# 정부, 핵포기 北에 강력촉구키로

## 오늘부터 장관급회담

정부는 19일부터 3박4일간 평양에서 열리는 제8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통해 핵개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 아래 북측에 핵개발계획의 포기 및 핵사찰 수용을 촉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서울 삼정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열린 전략기획단회의를 통해 이 같은 공식입장을 결정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측의 핵개발계획 추진 및 시인배경 등에 대한 진의를 확인하고 북측이 핵개발에 대해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해명하지 못할 경우 남북 교류협력 사업 및 대북 경수로지원 사

업, 신의주 경제특구 등의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함을 집중적으로 설득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핵개발계획이 시달단계인지, 구상인지, 무기개발 단계까지 간 것인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이 어떤 의도에서 시인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북 양측은 핵개발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지난 8월 제7차 장관급회담과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이후 추진 중인 남북 교류·협력 일정을 중간 점검하는 한편 보완책 등도 협의할 예정이다. 또 정부

는 6·25전쟁 당시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대한 생사확인사업 등도 북측에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봉조 통일부 정책실장은 "상황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느낌을 가지고 간다"며 "남북간 합의사항은 합의사항대로, 현안은 현안대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나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한편 도널드 량스펠트 미국 국방장관은 17일 "북한이 '소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추가적인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경림기자 klsin@sed.co.kr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 매일경제

2002.10.19(토)

## 世界日報

2002.10.19(토)

### 北 '核개발' 쇼크

#### 장관급회담 정부대책 관심집중

북한의 비밀 핵개발계획이 드러나면서 19~22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8차 남북장관급 회담에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의 북한 핵개발 '시인' 발표 이후 북한과는 첫 접촉이기 때문에 핵문제가 거론될 것은 자명하다. 정부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번 회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확인하는 정도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전 길에 이번 기회에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문제 등을 논의할 남북 국방장관회담 일정을 잡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남북자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뜨겁게 다루질 것으로 보인다. 북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일방적인 납지

#### 핵개발 시인후 첫 접촉... 국내외 시선집중 국제사회 우려 전달... 대화해결 타진할듯 6·25행불자등 남북자문제도 '뜨거운감자'

담에서 북한 핵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핵문제는 장관급회담의 '달걀의제'로 등장하게 된 셈이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은 18일 "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의 핵개발계획에 대해 문제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이해당사자로서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약속 파기를 문제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장관급회담 성격상 북한 핵문제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보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접근, 북측의

문제를 공식적인, 남한인 납지사건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공식의제로 거론할 계획이다. 북한도 이미 9월초 적십자회담에서 제안한 '6·25 행방 불명자' 찾기 등을 제기한 적이 있어 협의의 가능성을 충분히 본다. 이번 장관급회담은 이래저래 남북한의 장래가 걸려있는 중요한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핵문제에서부터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도 연결사업, 금강산 육로관광 문제 등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현안이 널려 있기 때문이다. /김기동기자 kidong@segye.com

####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무슨 얘기 할까

남측 입장	외제	북측 입장
- 핵개발 포기 실효	북한 핵개발	- 무반응 또는 강력 반발 예상
- 핵개발 불용 방침 전달	남북자 문제	- 남북자 사실 인정 여부 불투명
- 남북자 생사확인 요청	남북 경제	- 군대 동원해 철도 도로 연결추진
- 경의선-동해선 연결 상황 점검	인도적 대북 지원	- 개성공단 특구 관리 지원
- 개성공단 특구 지정 촉구		- 금강산 관광 대가를 남북 정부 보장 요구
- 금강산 관광 활성화 협의		
- 인도적 지원 대북지원 지속 방합 촉구		
- 북 동진육 문제 제기 -투명성 보장 촉구		

#### 오늘 남북장관급 회담

## 남북관계 '核암초' 北 포기 강력촉구

19일 시작되는 8차 남북장관급회담은 북한 핵개발 문제 해결의 첫 시험대다. 정부는 이번 회담을 북한의 핵포기를 촉박하는 장으로 삼을 계획이지만 북측측의 반응은 미지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미-일 3국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 ■ 북한 실효성과 미지수

장관급 회담 남북 수석대표인 김세현 통일부 장관은 "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의 핵개발 계획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메가톤급 동맹변수인 북한 핵문제에 걸리지 않고서는 남북관계의 순환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불용"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등 기존 방침을 북측에 과잉히 전달하면서 예상할 수용 및 핵개발 포기 등을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의주 특구 지정 등 북한의 개혁과 개방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핵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방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내정간섭 등을 이유로 반발하거나 군부 문제라고 회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북한 반응에 따라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한 진의 파악에도 나심 계획이다.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포기 실효와 함께 남북자문제 해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남북자 생사확인요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단계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뿐만 이번 회담은 12월 대선을 앞둔 국민의 정부 대북포용정책을 마무리하는 장이다. 지난 2개월 간 진행해온 경의선-동해선 연결공사,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특구 지정 및 육로관광,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등 남북한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특히 10월 하순에 백곡히 들어선 남북간 협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자 촉구할 방침이다. 남북대표단은 김세현 장관을 비롯해 윤진식 재건부·박문선 문관부 차관, 이병조 통일부 정책실장, 서영

#### 한반도 관련 주요 일정

- 10월 19일 제임스 캐리 미 국무부 차관보 서울 방문
- 10월 19-22일 8차 남북장관급회담(평양)
- 10월 23-26일 북한 태권도 시범단 서울 방문
- 10월 25-27일 남북 개성공단 건설실무협의회 개최(개성)
- 북한 경제시찰단 서울 방문
- 10월 26일 APEC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멕시코)
- 10월 29일 북일 수교교섭(말레이시아)
- 10월 29-30일 남북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개성)
- 11월 6-9일 남북 경협추진위원회 3차회의(평양)
- 11월 10-12일 풀린 파월 미 국무장관 2차 민주주의공동체(CD)회의 참석차 서울 방문
- 11월 초 한-미-일 대북정책조정장동맹국회의의 예정

#### 피랍한국인 문제 비중 금강산·경의선도 논의

교 통일부 국장 등 5명이다. 북측대표단은 김립신 내각 해임참사를 단장으로, 조상방 내각 사무국 차사, 최창익 조광훈 시가국 국장, 김원길 단화산 국장 등 5명이다.

#### ■ 한-미-일 3국 공조

외교부는 제임스 캐리 미 국무부 차관보의 19일 방한을 계기로 한-미-일 공조체제 강화 등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만을 조장하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일본에 대해서도 오는 20일 말레이시아 칼라캄푸스에서 열리는 북-일수교교섭에서 북한에 대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도록 요청하는 등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협의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11월 10-1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민주주의공동체(CD)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풀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무장관회담을 열어 공조를 더욱 다진다.

윤성환기자 shyoon@mk.co.kr



# 한·미 ‘北核 프로그램 단계’

## “핵무기 개발까진 안갔다” 판단...‘평화해결’ 재확인

### 崔외교 “우라늄核개발 지난8월 알았다” 美 켈리 오늘 방한 공동대처 방안 논의

한·미 양국은 북 핵개발 의혹과 관련,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관련기사 2·3·4면  
정부 고위당국자는 “미국은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도 같은 생각”이라며 “미국은 우라늄 실험부터 핵무기 완성까지 10년 정도 걸린다고 설명해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북핵 의혹을 설명하면서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란 표현을 사용한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은 핵무기 보유 여부가 아닌 비말 핵개발계획을 기적하는 점을 심각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성홍(崔成泓)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국회 통일외위에서 의혹의 신체를 묻는 의원들 질문에 “핵개발 프

그램 단계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이용,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초기 단계의 정보수준에서 알고 있다”가 구체적인 내용을 접하게 된 것은 8월 이후”라면서 “핵개발 사실을 알고 도 대북사업을 계속 추진한 것은 남북 문제의 다면적인 상황을 고려했고 장관급 회담도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라

고 설명했다.

국방위에서 이준(李俊) 국방장관은 “한·미 정보당국은 제네바 핵합의에 의해 일단 봉쇄된 플루토늄 생산 관련 시설 이외에 우라늄 농축방법을 이용한 핵개발 관련정보에 주목해 왔으며, 이와 관련해 최근 긴밀한 정보협력력을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이러한 상황판단에 근거,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핵문제 해결 원칙을 고수할 방침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날 경제 5단체장 오찬간담회에서 “다정히 미국

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고 북한도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의 관측이 있어 자그마한 희망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미 백악관 선 매코맥 부대변인은 이날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외교 창구를 통한 해결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19일 방한, 한·미 양국간 공동대처 방안을 협의한다.

워싱턴 / 이송철특파원·이중근·차세현 기자 lsc@kyunghyang.com

경향신문

2002.10.19(토)

대한매일

2002.10.19(토)

# 한·미 “北核 대화 해결”

## 美 “북핵은 초보단계”...“北도 일괄타결 희망”

## 北 포기않을때 경수로중단 포함 다각 대응

정부는 미국·일본 등 주변국과 공동,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되 북한이 핵개발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대북 경수로 지원 일시중단 등을 다각의 대응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미국 부시 행정부도 이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19일 방한하는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이 문제를 집중 조율한다. ▶관련기사 3·4·5면

정부는 이와함께 19일부터 평양에서

34일 일정으로 열리는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핵에 대해 핵개발 중단과 함께 한반도비핵화선언 준수, 제네바합의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미국 뉴욕의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 관계자도 언론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미국이 우려하는 안보상 문제들을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총체적으로 안보상 우려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지난번 켈리 특사의 방북시 북한은 체제보장, 경제지원, 평화체제 진한 등을 핵문제와 맞물려 협상하는, 이른바 ‘평화패키지’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kdaily.com  
2면으로

다른 정부 당국자는 “한·미를 중심으로 일본·중국·러시아·유럽연합(EU) 등이 북한의 핵개발포기 전략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미·일은 오는 26일(현지시간)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3국 정상회담에서 이 방안을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당국자는 전했다.

한편 미국은 우리 정부에 북한이 시인한 고농축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과 관련, 연구소 수준의 초보단계라는 설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를 아직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로 볼때 핵무기 완성에 이르기까지 수년에서 10년은 걸릴 정도의 수준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성홍(崔成泓)외교장관도 국회 통일외위에서 “북한 핵개발은 프로그램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 북 “대화로 일괄타결”

## 북 대표부 “핵계획 시인은 사실”...미 “이라크완 다르다”

### 북-미, 핵 시인뒤에도 접촉 계속

미국 뉴욕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7일(현지시간) 핵무기 개발 계획을 시인했다는 미국의 전담 발표를 '기정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핵 등 각종 현안을 대화를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한다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 등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총체적으로 대화를 통해 다

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것은 안 하고 어떤 것은 나중에 하고 하는 입은 없을 것"이라고 일괄타결 뜻을 내비쳤다. 그는 또 북한과 미국은 제임스 캐피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이담 초 방북 이후에도 뉴욕에서 실무접촉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 등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2·3·4·5면 미국은 이날도 전담과 마찬가지로

로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이 "각정스럽고 정신이 들게 하는" 소식이지만 이를 외교를 통해 해결할 방침이라고 스폿 매클레린 백악관 대변인은 밝혔다.

클린 파월 국무장관도 뉴욕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현재로는 북한을 상대로 군사행동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에이비시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은 군사적 대응이 필요한 이라크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량스켈드 국방장관 역시 북한이 "소량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도 북한과 이라크의 차이점을 인정했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미 제네바 합의가 무효화한 것인지 여부는 북한의 행동을 지켜본 뒤 결정할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 개발 계획 시인과는 관계없이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처드 아미타지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미국은 일정이 오는 29~30일 재개될 북-일 수교 교섭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다룰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윤국한 특파원  
gookhan@hani.co.kr

## 매일경제

2002.10.19(토)

기자 24시

### 북한核 당당하게 따지자

윤상환



제8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하루 앞둔 18일 정무총합청사 풍납부에는 강한 적막감이 감돌았다. 북한 핵개발과 관련해 쏟아지는 각종 관세에 당국자들은 한결같이 "말씀드릴 것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 동안 일정직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심화하던 당국자들의 모습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사실 당국자들은 참만 내면 북한의 아시아개입 감축 등 인이온 남북간 교류행사를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라고 홍보하고 다녔다. 또 신의주 특구 지정 등 북한의 개혁과 개방정책은 지속적인 대북 포용정책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은 사정없이 뒤뚱수름 때렸다. 남북간의 화해 부드러운 명개로 비발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 것이다.

한민족 모두를 위협하는 핵개발 계획조차 숨겨오다 사실 자체를 인정한 것으로 실절적 동반자인 우리들 무시한 셈이다.

결국 북한의 대남 유화전술이 우리의 경계심을 스스로 약화시킨 꼴이다.

북한 핵개발 문제의 심미리도 풍일부가 찾아야 한다. 풍일부 장관 등 풍일부 핵심 라인은 19일 오전 시해 직할로로 방북해 평양

고려호텔에서 북한측과 장관급회담을 한다.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한 후 첫 남북회담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북한측에 대해 핵개발 의혹 해소와 사찰 등 국제적인 의무 준수할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회담 성과에 대해선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당국자는 "북한이 그 동안 군사문제에 대해 우리측과 대화를 회피해왔다"면서 "우리측이 핵문제를 제기해도 '우리는 모른다' 등으로 외면할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다른 당국자는 "북한이 최대 협상 카드인 핵문제를 우리와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말잔치만 밥이다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실망이다.

핵개발 자체가 우리의 안위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위협이다. 북한 핵 문제는 더 이상 미국이나 국제핵사찰기구에만 맡길 수 없다.

풍일부는 북한측에 핵개발의 실체를 당당하게 따지고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 핵개발 포기를 요구해야 한다. 특히 북한 핵문제의 대화파트너는 미국이 아니고 직접 당사자인 우리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정치부/shyoon@mk.co.kr

# 美 “北核해결 외교적 압박”

## 부시, 中·러에 對北교역제한 요구키로

### 佛국방 “국제사회 공동대응책 곧 마련” 北 “核등 현안 대화통해 일괄타결 희망”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7일 북한의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 시인으로 빚어진 위기를 막기 위해 외교적인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8일 보도했다.

▶관련기사 A2-3·4·5면  
백악관의 스콧 매클렐린(McClellan)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걱정스럽고 정신이 들게 하는(troubling and sobering) 소식이라고 말했다”고 진화하면서 “북핵 문제는 한 단계에서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 해결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의 한 관리는 부시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대북(對北) 교역을 제한하는 방법 등 몇몇 ‘직접적인 수단’을 행사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오는 24~25일 텍사스의 부시 목장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가 주요 안건이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18일 보도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프랑스의 미셸 알리오 마리(Alliot-Marie) 국방장관은 18일, 유럽1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수주일 내로 우리는 국제사회가 가능한 한 최대의 만장일치 방식으로 북한이 이런

무기 개발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는 방법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리오 마리 장관은 또 “미국과 프랑스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로 협박을 하거나 이들 무기를 테러범들에게 팔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럼즈펠드(Dumsfeld) 미국 국방장관은 1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부인하면서도, “북한이 소수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워싱턴=朱廣中특파원 mdwa@jhsun.com  
북한은 핵 개발 계획 시인으로 잘 거진 파문에 대해 다른 현안과 함께 대화를 통해 일괄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미국 뉴욕의 유연 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 관계자가 17일 밝혔다. 이 북한 대표부 관계자는 일부 한

국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철회하면 미국이 우려하는 안보상 문제들을 대화로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화로 해결할 현안에 대해 “총체적으로 안보상 우려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입장은 핵문제는 물론 미사일과 재래식 군사력 배치 등 모든 안보 현안들을 일괄해 의제에 올려놓고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등과 인계해 논의하자는 희망을 피리한 것으로 관측된다. /뉴욕=협

## 서울경제

2002.10.19(토)

## 중앙일보

2002.10.19(토)

## 北 우라늄 농축 실험 장소

# ‘평성 국가과학원’ 유력

### 美, 양강도·자강도 등 정부에 알려줘... “아직 연구단계”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과 관련, 우라늄 농축 실험을 해온 장소로 세곳을 제시하면서 평양 인근의 평성 과학기술 단지의 ‘국가과학원’ 실험실이 가장 유력하다고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국가과학원이 핵 개발 의혹 시설로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3~5일의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방북 며칠 뒤 서울에 관계자를 보내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실험을 해온 장소로 국가과학원, 양강도 인제동, 자강도 하강의 세곳을 제시하고 이 가운데 국가과학원을 가장 가능성이 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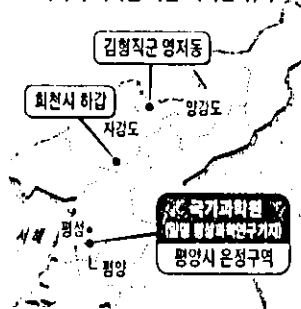
곳으로 후보했다고 정보 소식통이 18일 밝혔다. 평성 국가과학원의 우라늄 농축 실험실은 약 2백평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우라늄 농축 관련 시설의 검증 가능한 폐기를 요구하고 있어 이 과학원은 앞으로 국제적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계기사 2, 3, 4, 5, 12면)

미국은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은 아직 연구 단계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외교 소식통들은 “켈리 차관보는 방북 당시 파키스탄에서 받은 정보를 토대로 북측에 핵 개발 계획을 추궁해 북측의 시인을 받아냈다”며 “미국

미국이 지목한 북한 핵시설 위치



정부는 지난 10일께 서울에서 한국 정부에 북한 핵 개발 계획을 상세히 알려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파키스탄은 지난해 미국의 대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급속히 가까워지면서 자국이 북한에 제공한 핵무기 개발 기술에 관한 정보를 미국 측에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이어 “북한은 우라늄 농축과 관련, 우라늄에 레이저를 쏘아 고농축 우라늄을 분리해 내는 레이저 분리법과 가스 원심분리 방식을 함께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들은 또 “한·미 양국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제조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평화적 해감을 강조하면서 대화의 여지를 남긴 것도 이와 맞물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김민석·오영환 기자  
kimseok@joongang.co.kr

# “北에 따져야 하는데...”

## 난감한 정부

## 북한 핵 퍼문

19일 평양에서 시작된 남북 장관급 회담에 임하는 대표단의 분위기는 무겁다.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 수석대표는 1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회담을 앞두고 심정이 착잡하다”고 털어냈고, 외남 대변인 이봉조(李鳳朝· 통일정책실장) 대표는 “한번 부닥쳐 보겠다”고 했다.

북한 핵이란 엄청난 북병이 회담 진영을 가늠할 수 없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이번 회담을 강연진(姜演鎭)·도로연결을 포함한 그동안의 남북 간의 이행을 정리하는 자리로 생각했다.

정부는 일단 평양에서 열린 8차 장관급 회담에서 북한 핵문제를 따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다. 이 자리가 북핵 문제를 공식 의제로 올려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측이 꺼어들 문제가 아니다”거나 한·미·일의 대북 공동 문제를 들어 오히려 우리쪽의 입장표명을 요구한다면 꼬일 수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나 메시지를 보내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박관에 없던 일로 한 것도 이런 참부명한 상황 때문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자칫 북핵 파동이 번질 경우 핵발전 정책 자체를 뒤엎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국회에서 최성훈(崔成勳) 외교부 상무 장관은 “핵무기 개발 사실을 북한이

북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대북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인데도 “대북 지원과 연계시키지 않고 병행해 나가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해서는 실독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미답지 않다. 이미 진행 중인 쌀·비료 지원의 지속은 물론 19일 철도·도로 연결에 필요한 대북 지원 자재·장비 1차분인 35개 품목 10억 여원을치를 북한측에 예정대로 보내기로 했다.

또 경수로(輕水爐) 발전소의 건설을 추진 중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EDO)의 집행이

### 장관급 회담서 공식의제 아니라 추궁 한계

### 확고한 입장없이 대북지원 계속에 비난 여론

시인하기 이전부터 알았다”고 했다. 7차 장관급 회담(8일·서울)을 고려해 핵개발을 알고도 대북시업을 추진했다고도 말했다.

이런 언급들은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 사실을 숨겨주면서 회화·협력과 대북 지원을 추진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단 북한 핵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국인 유럽연합(EU)이 자금지원 중단 검토까지 내비쳤지만 정부는 “이 정도로는 중단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애써 태연해하고 있다.

4천억원 대북 비밀지원 의혹이 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한순으로 대북지원에 손을 벌리고 다른 쪽으로는 불래 핵을 개발해온 북한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상당 감정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 때문이다.

이영종 기자  
yilee@joongang.co.kr

## 대한매일

2002.10.19(토)

### ■ 럽즈펠드 미국방 문답

### “한국등 동맹국과 협의의 北核 대책 마련할 것”

【워싱턴 핵문일특파원】 도널드 럽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17일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다음은 문답 요약.

●북한이 핵계획을 공개 시인했다. 북한이 미국의 선제공격 대상이 아니라면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것은 대동맹이나 의회에 물어야 할 시안으로 생각된다. 미국은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유럽연합(EU), 중국, 러시아와 협의할 통해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위해 북한에 사찰단 검증을 요구할 때가 아닌가.

북한은 관련 핵협정 위반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 사찰단 검증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북한의 핵계획 시인 뒤 주한미군의 전투태세에 변화는 없는가.

우리는 현재 군사력 배치나 변화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 않다.

●북한의 핵계획 시인을 호전적 징조로 보느냐 아니면 핵타결을 위한 좋은 신호로 간주하는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통해 추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4개의 핵관련 합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나왔는데 어떻게 이탈 좋은 신호로 얘기할 수 있겠는가.

●북한이 추가 핵무기에 대해 언급했는데.

추가 핵무기에 대해 분명히 얘기했다. 미국은 1990년대 초 이후 북한이 1~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평가해 왔다. 나는 북한이 소수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믿는다.

●사담 후세인과 북한 김정일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왜 북한에 대해서는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체제 교체 정책을 취하지 않는가.

두 나라는 모두 테러지원국가 명단에 포함돼 있지만 두 나라는 그 방법에서 다양하게 다룰 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본인이 의회에서 증언한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 “北은 이라크와 달라 대화 통한 해결 기대”

## ■ 바우처 美국무부 대변인

리처드 바우처(사진) 미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이라크와 다르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시인했다는 사실은 기본합의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위반 및 의회와 합의한 뒤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북한이 우리가 요구한 것처럼 규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는지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은 계속되는가.

“우리는 인도주의적인 면에서 곤궁한 북한 주민들을 도움 용의가 있고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 식량 지원은 다른 고려사항에 근거해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수로 건설 등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EDO)의 활동은 계속되는가.

“아직 결정한 것이 없다. 동맹국들과 협의 중이다.”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은 논의하지 않고 있는가.

“이제 상병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우리는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

-핵 프로그램을 안 이후에 북



한과 접촉이 있었다.

“뉴욕 채널을 통한 접촉이 있었다. 접촉은 계속되고 있다.”

-제네바 기본합의서는 무효화한 것인가.

“북한은 비난을 우리에게 돌리고 합의서가 무효화했다고 밝혔

것을 부인하다가 다음날 놀란게도 시인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우리가 북한에 대해 추구하던 경제적·정치적 접근법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를 북한측에 말했다.”

-그렇다면 켈리 특사는 북한 핵개발의 증거를 들이대기 위해 평양에 간 것인가.

“그의 주요 목적은 북한과 진지한 논의를 하고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또한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과 과거 약속 위반에 대한 지적도 방문 목적의 하나였다.”

-북한이 이라크보다 핵무기 개발에서 앞서 가고 있는데 북한과 이라크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라크는 국제사회에 도전했을 뿐만 아니라 테러리즘과의 연계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과거 인접국과 자국민에 대한 독가스 사용 등으로 볼 때 적극적인 위협이다.”

-북한은 이라크로부터의 위협보다 더 압박한 것인가 아니면 덜 압박한 것인가.

“모든 상황에 맞는 한가지 정책은 없다. 각 상황은 그 상황에 따라 다뤄져야 한다. 우리는 북한과 관련한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 核프로그램 안 이후에도 뉴욕채널 통해 北과 접촉 인도적 식량지원은 계속

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핵 프로그램을 정당화하려 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결전의 문제다.”

-미국은 북한이 배치가능한 핵무기를 지금 갖고 있다고 믿는가.

“이른바 721보고서(CIA 보고서)를 얘기해야겠다. 최근의 보고서는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때도 우리는 북한이 1~2개의 핵무기를 만드는 데 충분한 물질과 플루토늄을 갖고 있다고 보고했다.”

-제임스 켈리 특사는 북한의 이 프로그램을 알고 평양에 갔나.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 관해 알고 있었다. 북한은 처음에는 그

# “北 자강도 하갑서 核개발”

## WP紙보도... 부시, 中-러에 對北교역제한 요구키로

### NYT “파키스탄 北에 핵심장비 제공” USA투데이 “北 1년뒤 核양산 가능” 정부 “우라늄 고농축 실험 아직 못한듯”

미국은 17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북한에 핵 프로그램 폐기를 요구하는 한편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방부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90년대 초 이후 1.2개의 핵무기를 생산했을 수 있다는 중앙정보국(CIA) 등의 평가를 인용해 “나는 그들이 적은 수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AFP통신과 영국의 일간 데일리 텔레그래프도 이날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한 관리가 “북한이 94년(제네바 기본합의) 이전에 핵무기 1, 2개를 제조하기에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을 생산했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이며 북한은 핵무기 2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북한이 핵 계획을 시인하고 4개의 핵 합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한 상황에서 사찰과 검증은 아무런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말해 사찰 단계를 건너뛰어 핵 프로그램의 즉각적인 폐기를 북한측에 요구하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뉴욕타임스는 18일자에서 “미 정보관계자들은 북한이 최근 시인한 핵 프로그램의 핵심 장비를 제공한 주공급자는 파키스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무기화할 수 있는 등급의 우라늄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가스원심분리기 등이 포함된 이들 장비는 90년대 말에 시작된 북한-파키스탄간 물물교환의 일환으로 북한이 파키스탄에 미사일을 주고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정보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자강도 하갑이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 장소로 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USA투데이는 18일 “부시 행정부는 1년 뒤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대량 생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북한의 생산능력

은 초기엔 1년에 6개 정도지만 북한을 세계 8번째의 핵보유국으로 만드는 데 충분하다”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17일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시인한 것은 “걱정되고 정신이 들게 하는 (troubling and sobering)” 뉴스”라면서 다음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스콧 매클레런 백악관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외교공로를 통해서 다루기로 결정했다”면서 “우리는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의 한 관리의 부시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대북교역을 제한하는 방법 등 몇 가지 “직접적인 수단”을 행사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의 한 정보소식통은 18일 “미국은 북한이 94년 제네바 기본합의 체결 이후 서너 차례에 걸쳐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다는 증거를 포착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이 95년 5000만달러를 들여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플루토늄 원재품을 구입하려는 계획을 포착한 뒤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아직 핵무기 개



우라늄 농축시설의혹 장소  
반로 직감되는 고농축 실험을 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한기홍특파원 elgius@donga.com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 A2·3·4·5·8·10면에 관련기사

## 정부, 北核 8월에 알았다

### 崔외교 “美와 정보교류... 구체내용 공개못해”

### 北 핵기술 파키스탄서 취득

최성룡 외교부장은 18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이용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 강석주 제1부상이 시인하기 전에 알고 있었다”면서 “초기 단계의 정보수준에서 알고 있었다가 구체적인 내용을 접하게 된 것은 8월 이후”라고 밝혔다.

최장관은 이어 “구체적 내용은 한·미간 정보교류 시안에서 공개할 수 없으며, 한·미간에 긴밀히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준 국방장관도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의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미 한·미 양국이 협의해 온 시안”이라면서 “북한이 파키스탄으로부터 기술과 자재를 도입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추적이 있었고, 이에 관한 자료도 상당부분 축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 고위 정보소식통은 “노벨상 수상자로 파키스탄의 우라늄

해폭탄 개발을 주도한 압둘 카데르 칸 박사가 1998년 이후 최근까지 북한을 수차례 방문했다는 첩보가 있다”면서 “북한은 파키스탄으로부터 원심분리기 등 농축 우라늄 시설을 구입하면서 칸 박사에게서 기술도 함께 전수받았으며, 그 대가로 미사일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칸 박사 방북 이외에도 플루토늄 원재품을 일본으로부터 5000만달러를 주고 말반입하려던 계획을 포착했으며, 98년 이후 원심분리기 핵심부품 반입 움직임을 최소 2번 이상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나라당 조동규 의원에 따르면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9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과학자들이 91년 옛 소련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동북과 러시아의 핵 및 미사일 과학자들이 94년 이후 북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러시아군 관계자들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창호 남도영기자 procol@kmbi.co.kr

## 국민일보

2002.10.19(토)

# 켈리 “北核 해결안되면 협상 없다”

## “北 체제인정 요구는 본말 바뀐것 한국 관계개선 조치 바람직 안해”

“(북한과 핵 협상에 나섰던) 93년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19일 방한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이날 최성훈(崔成勳) 외교통상부장관, 임동원(林東源) 대통령실외교안보특별보좌관 등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들을 잇따라 만나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 지지방안을 협의한 뒤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 대사관 공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또 “북한의 농축우라늄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과의 협상은 없을 것이다. 방북 당시 북한 관리들에게 93년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켈리 차관보가 다시 방한한 것은 26일 한국 미국 일본 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준비 때문. 정부의 한 고

위관계자는 “북한이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26일 3국 정상회담에서는 켈리 차관보의 말보다 더욱 강도 높은 경고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주요 문답.

-북한이 체제인정 등 3가지 사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북한이 핵문제를 인정하고 유사한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것은 아니었다. 농축우라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논의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같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북한이 현안의 일괄타결을 요청했나.

“일괄타결 제안은 없었다. 또 북한의 대화의지를 평가하는 것은 혼란스럽다. 북한이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켈리 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이미 합의한 남북교류 및 회담 일정은 계속하되 새로운 대북 관계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전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 北 ‘핵폐기 3대조건’은

북한은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방북(3~5일)시 미국의 선제공격 중단 약속, 북-미 평화조약 체결, 미국의 경제제재 중단 등을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워싱턴발로 19일 보도했다.

북한은 특히 이 같은 3대 조건을 미국이 수용할 경우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통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켈리 차관보는 19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구체적 요구사항을 내걸었다고 볼 수 없다”며 “북한이 핵문제를 인정하고 유사한 내용들을 언급하기는 했다”고 말했다.

## ① 美선제공격 포기 약속

## ② 북-미 평화조약 체결

## ③ 對北 경제제재 중단

미국은 북한의 3대 조건이 북-미 협상테이블에서 늘 주장해온 것이라는 점을 들어 북한의 실감적인 현상의 지름 의심을 갖는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 “北, 매우 거친 태도로 핵 인정”

## 국민일보

2002.10.21(월)

### 켈리가 전한 당시 상황

이달 초 북한을 방문했던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 19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새로운 핵무기 개발 계획의 존재를 인정했을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했다.

그의 설명을 종합하면 북한은 미국이 제시한 우라늄 농축 계획에 대한 각종 정보를 첫 만남에선 부인했으나 두번째는 관바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켈리 차관보는 이런 북한의 태도에 대해 “매우 거친 태도였다”고 표현했다.

켈리 차관보는 방북 첫날인 지난 3일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의 회담에서 미국의 강책을 설명하고 우라늄 개발 계획에 관한 증거를 제시했다. 이외항게 북한이 일련의 현안에 대해 극적으로 태도를 바꾼다면 미국은 이를 돕기 위한

경제지, 외교적 증대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부상은 켈리 차관보가 제시한 정보엔 부인했으나 다음날 회담에 나온 김석주 제1부상은 이 사실을 인정했다.

김 제1부상은 이어 “북한이 (제네바)기본합의의 무효화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미국의 감시강제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핵농축 계획은 수년 전부터 있었던 만큼 이런 주장은 잘못됐다고 대응해 논쟁을 벌였다고 켈리 차관보가 전했다.

한편 켈리 차관보는 북한이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으며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체제를 인정해 달라는 등 3가지 요구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대해 “대체적으로 유사한 방향의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면서 “북한은 이런 것들이 이뤄지면 비밀 핵계획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의규기자



대동강변의 두 대표 제8차 남북 장관급회담 남북 정세현 수석대표(오른쪽)와 김경성 북측 단장이 20일 낮 평양 육류관에서 오찬 후 얘기를 나누고 있다. 평양 / 사진공동취재단

# 北核·남북자 문제제기

## 남북 장관급회담서 공식거론

20일 평양 인민문화공전에서 열린 제8차 장관급회담 전체회의에서 남측 대표단은 북측에 핵개발계획을 폐기하고 국제사회와 맺은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북측은 이같은 남측의 요구에 분명한 입장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일러졌다. / 관련기사 2·3면

남측은 21일 오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북측 고위인사를 만날 예정이다. 핵문제와 관련한 통과 마련 여

부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북측 고위인사는 김영남(金永南) 최고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남측은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 기초 발언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핵무기를 실험·생산하지 않고 핵 재처리 시설 등을 갖지 않도록 한 한반도 비핵화선언(1992년 2월)과 제네바합의(94년 10월)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북측 단장인 김경성 내각책임 참사는 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시하지는 않은 채 남측의 문제제기를 경정했다.

남측 관계자는 "전체회의 분위기가 무거워 최근 회담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공동보도문 초안을 교환하지 못했다"면서 "핵문제에 대해 북한의 입장 정리가 아직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남측은 최근 국내에서 정점으로 떠오른 6·25 전쟁 이후 한반도 분단 문제에 대해서도 북측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평양 / 공동취재단·이용욱기자

## 朝鮮日報

2002.10.21(월)

# 北에 핵합의 이행요구

## 8차 南北장관급 회담 北, 아무런 반응없어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우리측 대표단은 20일 첫 전체회의와 실무대표 접촉 등을 통해 북한 핵개발 반대 입장을 전하고, 제네바 핵합의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으나 북측은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우리측 대표단은 21일 오전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金

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거듭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A5면

우리측 정세현 수석대표는 이날 전체회의의 기초연설에서 "북측이 남한이나 국제사회와 맺은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유관국이나 국제사회와 즉각 대화에 임하고 남측 할 만한 조치들 취하라"고 요구했다고 이봉조(李鳳朝) 우리 측 회담 대변인이 전했다. /평양=공동취재단 /張一斌기자 ihjang@chosun.com





# 중앙일보

2002.10.21(월)

제8차 남북 장관급 회담 남측 수석대표 정세현(왼쪽 두번째)과 북측 수석대표 김영남 내각책임총리가 20일 평양 대동강변 육류관에서 오찬을 마친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침울한 남북 20일 오전 평양 인민문화공전에서 열린 제8차 남북 장관급회담 첫 전체회의에서 남측 대표단의 정세현(왼쪽 두번째) 통일부장관이 발언하는 동안 북측 대표단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한국일보

2002.10.21(월)

## 南, 北에 核합의 이행 요구

평양 장관급회담... 오늘 北김영남 면담가능성 주목

제8차 장관급 회담 남측 대표단은 20일 오전 10시 평양 인민문화공전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생겨진 북한의 비밀 핵개발 때문, 남북차 문제, 철도·도로 연결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관련기사 3·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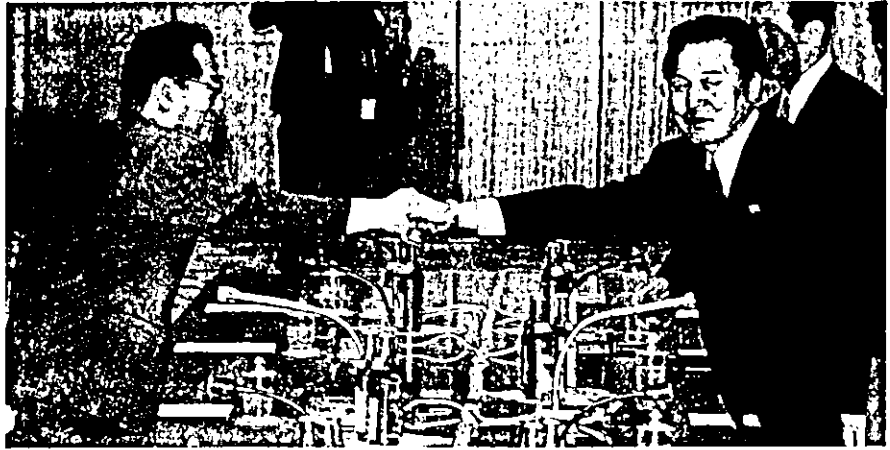
남측 대표단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개발 계획에 대해 북측이 남측이나 국제사회와 맺은 모든 의

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국가 및 국제 사회와 적극 대화하며 남북합작 민간 조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남측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핵무기 개발 실현, 성장하지 않고 핵 제거 시설 등을 갖지 않기로 한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히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북측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21일 오전 고위인사가 정세현(丁世鉉) 남측 수석대표 등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고, 남측의 한 회담 관계자는 "북측이 평양 민수대 의사당에서 고위 인사가 우리 대표단을 만날 것이라고 공보해왔다"고 밝혔다. 북측 고위 인사는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 것으로 보인다.

·평양=공동취재단·이진동기자



20일 평양 인민문화공전에서 열린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 경제협동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북측 김경성 내각책임참사 회의 시작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한겨레

2002.10.21(월)

# “북 핵개발 반대” 공식제기

장관급회담 첫 전체회의  
남북자 문제도 거론  
북측 구체적 언급없어

제8차 장관급회담 남측 대표단은 20일 오전 평양 인민문화공전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불거진 북한의 핵 개발 계획 파문과 한국전쟁 이후 남북자 문제 등 현안과 협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육로 연결 등 합의사항 이행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관련기사 3면

남측은 특히 “북측의 어떠한 핵 개발에도 반대한다”며 “북한이 남북간 국제사회와 맺은 모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즉각 대화하고 남북합 단한 조

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이봉조 남측 회담 대변인이 밝혔다. 북측은 “구체적이고 분명한 언급 없이 듣기만 했다”고 회담 관계자가 전했다.

남측 대표단은 21일 오전 단수대 의사당에서 ‘북측 고위 인사들 만날 예정이다. 경부 고위 관계자는 “누군지 통보받은 바 없으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 핵 파문과 관련한 언급이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남측은 또 남북자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전달하고, 특히 전쟁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 문제를 제기했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남측은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육로 연결 등 기존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관련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담 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교류협력국장과 개성공단 건설사업 주제인 토지공사 관계자가 회담 대표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관련 실무협의를 이뤄질 전망이다.

김경성 북측 단장은 “쌍방이 6·15 공동선언 정신에 맞춰 협력하지는 의지가 강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회담 전망을 낙관했으나 북한 핵 파문에 대해선 언급을 회피했다. 남북은 육류관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뒤 동명호텔을 참관했고, 일부 회담 대표들은 오후에 실무대표 접촉을 벌였다. 평양/공동취재단, 이재호기자

nomad@hani.co.kr

## 대한매일

2002.10.21(월)



심각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중인 정세현(오른쪽) 통일부장관이 20일 낮 평양 육류관에서 오찬을 마친 뒤 북측 수석대표인 김경성 내각책임참사와 대동강을 내려다보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평양/순천전자 angle@daily.com



무거운 표정의 南北대표 남북 장관급회담 남북 수석대표의 정세현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북측 대표단장인 김영성 내각 책임장사가 20일 대동강변 목포관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한 뒤 밖으로 나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南대표 오늘 고위급인사 면담 北核해결 돌파구 마련 주목

## 평양 남북장관급회담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석 중인 우리측 대표단이 21일 오전 평양 만수대의사에서 북측 고위인사를 만나기로 해 북측의 해개방 시인 파문과 관련,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우리측 회담 관계자는 20일 "북측 인사가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알지 못

하지만 면담하기로 돼 있다"고 밝혔다. 이 고위인사는 북한 내각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대표단은 오전에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첫 전체회의를 갖고 북한의 해개방 파문과 남북자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남북 정세현 수석대표는 기존선설의 60% 이상을 핵문제에 할애, 북측이 국제사회의 맺은 모든 의무를 성실

히 이행하는 등 남북합 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장대표는 특히 북한의 해개방이 핵무기를 실험하거나 생산하지 않고 핵 재처리시설을 갖지 않기로 한 한반도비핵화선언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1994년 10월 제네바 북-미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시종일관 남측의 문제제기를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 대표단 대변인인 이봉조 통일부 정책실장은 "회담이 시종일관 어두운 분위기에 진행됐다"면서 "남북간에 새로 제기된 의제는 없었고 북한의 의중은 추가 논의할 거처야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북측 김영성 대표단장은 전체회의 직후 우리측 기자들의 질문에 "방향이 6-15 공동선언 정신에 맞춰 협력하자는 의지가 강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도 핵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남측은 또 남북자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전담하면서 지금까지 논의하지 않았던 6-25 전쟁이후 핵비확산문제에 대해서도 북측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남북은 또 침도·도로 연결 문제와 금강산 관광 육로 연결, 기성공단 건설 등 기존 합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신창호기자·평양=공동취재단

## 대한매일

2002.10.21(월)

# 北核·남북자 해결책 촉구

## 장관급회담 전체회의 北, 분명한 입장 밝힘

남북은 20일 오전 10시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제8차 장관급회담 첫 전체회의를 갖고 북한의 해개방 계획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 남북자 문제, 침도·도로 연결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관련기사 3-4면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남측 대표단은 첫날 회의에 들어가 앞서 북한의 해개방 계획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북측이 남북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 맺은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국가와 독자 대화하며 남북합 만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남측 대표단은 특히 북한의 해개방 계획은 핵무기를 실험, 생산하지 않고

핵 재처리시설 등을 갖지 않기로 한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제비미 합의, 핵확산금지조약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다. 반면 북측 대표단 단장인 김영성 내각 총리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시하지 않은 채 듣기만 했다고 우리측 대표단은 전했다. ●평양 공동취재단  
북측참지사 youngtan@kdaily.com  
2면으로 다

## 北核·남북자 해결책 촉구

1면에서... 그러나 남측 대표단은 21일 오전 평양 만수대의사에서 북측 고위인사를 만날 예정이어서 북측의 비명 해개방 의혹과 관련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측은 또한 6-25 전쟁 이후 핵 방위문제에 대해서도 북측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남측 회담 대변인인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정책실장은 "오늘 회의에서 남북간에 새로 제기된 의제는 없었고, 북측의 의중은 추가 논의할 거처야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측도 핵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 北, 핵개발 입장표명 회피

## 평양 남북장관급 회담

북한은 2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핵문제와 관련한 북측의 입장 표명을 회피했다.

이에 따라 남북 당국간 대화 채널을 통해 '북한 핵개발 사인' 피문 해건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던 정부의 구상이 난관에 봉착했다.

남북한은 이날 오전 평양 인민문화공전에서 8차 장관급 회담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남측의 선(先)핵문제 논의의 입장과 북측의 교류·협력 사안 집중 협의의 입장이 맞지 집점을 찾지 못했다.

회담 대변인인 이영조(李榮朝)대표

는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정세현(丁世鉉·통일부 장관)수석대표는 기초연설의 60% 가량을 할애해 북측의 어떠한 핵 개발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특히 핵 개발이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지않는 유감스런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남측은 또 북측이 관련국과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고 6·15 공동선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 것으로 수대표는 전했다.

그러나 북측 김영성(金靈成·내각 책임장관)단장은 이에 대한 아무런 입장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을 마친 뒤 수단장은 "쌍방이 6·15

공동선언 정신에 맞춰 협력하자는 의지가 강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으나 핵 파문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6·25와 전후 남북자 문제 해결▶철도·도로인건▶금강산 육로관광▶개성공단 건설 문제 등 전반에 대해서도 서로의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丁수석대표를 비롯한 남측 대표단은 21일 평양 만수대의 사당에서 북측 고위 인사와 만날 예정인데,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평양=공동취재단, 이영준 기자 yilee@joongang.co.kr

# 世界日報

# 丁통일, 北核 강력항의

## 오늘 고위급 면담... 北입장 타진

### 남북 장관급회담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로 평양을 방문중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 등 남측대표단은 21일 오전 9시30분 북한의 '고위인사'를 면담할 예정이어서 북한의 비밀 핵개발과 관련, 돌파구 마련 여부가 주목된다.

우리측 회담관계자는 20일 오후 브리핑에서 "북측이 21일 오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우리 고위인사와 면담하자고 제의해왔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북측의 고위인사는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가능성이 높아, 최소한 핵파문에 대한 북측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정세현 장관은 이날 오전 인민문화공전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의 기초발언을 통해, "최근 제기된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과 제네바합의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핵개발에 반대한다"는 강경 입장을 전달했다. 정 장관은 이어 "국제사회와 맺은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국가 및 국제 사회와 즉각 대화하고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북측에 요구했다.

남측은 또 '6·25 전쟁 이후 핵 방출명자(남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북측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평양=공동취재단 김준모기자

jmkim@scgye.com

# 東亞日報

# 北核문제 공식 거론

## 장관급회담-北, 입장 안밝혀

20일 평양 인민문화공전에서 열린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첫 전체회의에서 남측 대표단은 최근 밝혀진 북한의 비밀 핵개발 파문과 남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남측 입장을 제시했다. ▶A5면에 관련기사

이에 대해 북측은 남측의 문제 제기를 경청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측은 이날 밤 남측 대표단에 "21일 오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우리측(북측) 고위인사와 면담할 것"이라고 통보해왔다.

평양=공동취재단

“北 핵관련 구제언급 안해”

• 이봉조대변인 문답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제8차 남북 장관급회담에 참석중인 이봉조(李鳳朝) 남측 대변인은 20일 첫 전체회의를 마친 뒤 우리측의 입장과 회담 분위기 등을 전했다.

이대변인은 “우리측은 북의 어떠한 핵개발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북한의 핵개발은 핵무기를 실험·생산하지 않으며 핵재처리 시

설과 농축우라늄 시설을 갖지 않는다는 한반도비핵화선언, 핵비확산조약, 북·미 제네바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측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북측이 남측 및 국제사회와 맺은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북측이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즉각 대화하고 남북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분위기는 어땠나.  
“전반적으로 좀 무거웠고 진지한

분위기에 진행됐다”  
-핵문제 제기 대한 북측 반응은.  
“우리의 문제제기에 대해 북측은 듣기만 했다.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측의 인식 일부할 알 수 있는 쌍방 수석대표간의 의견교환이 있었다. 북측은 우선 들었고 구체적이고 분명한 언급은 없었다. 앞으로 남은 회담과정중 통해 좀더 분명한 입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북측이 새롭게 제기한 의제는 있었나.  
“새로운 것은 전혀 없었다. 쌍방이 협의해 온 문제를 다뤘다. 물론 조금 더 논의해야 할 수 있다”

-남북자 문제는 제기했나.  
“남북자 문제에 대해 기본적인 입장을 전달했고, 특히 전쟁 이후 소식이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전반적인 회담 전망은.  
“오늘은 양측이 기본적인 방향만 제기했고 앞으로 실무접촉, 2차 전체회의를 거쳐야 할 수 있을 것이다”  
평양 / 공동취재단

■ 이봉조 南대변인 문답



남측 회담 대변인인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정책실장은 20일 첫 전체회의를 가진 후 남측 입장과 회담 분위기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일문일답은 다음과 같다.

◇ 회담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좀 무거웠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 우리측은 핵개발 문제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한 북측 반응을 어땠나.

“우리측은 북측의 어떠한 핵개발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측의 핵개발은 핵무기를 실험·생산하지 않으며 핵재처리시설과 농축우라늄 시설을 갖지 않는다는 한반도비핵화선언, 핵비확산조약,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전조치협정, 북·미 제네바협정 위반이란 점

을 지적했다. 6·15공동선언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의 이같은 문제제기에 북측은 듣기만 했다.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측의 인식 일부할 알 수 있는 쌍방 수석대표간의 의견교환이 있었다. 북측은 우선 들었고 구체적이고 분명한 언급은 없었다.

회담 과정을 통해 좀더 분명한 입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북측이 새롭게 제기한 의제는 있었나.

새로운 것은 전혀 없었다. 쌍방이 협의해 온 문제를 다뤘다. 물론 조금 더 논의해야 할 수 있다.

◇ 남북자 문제는 제기했나.

남북자 문제에 대해 기본적인 입장을 전달했고, 특히 전쟁 이후 소식이 없게 된 사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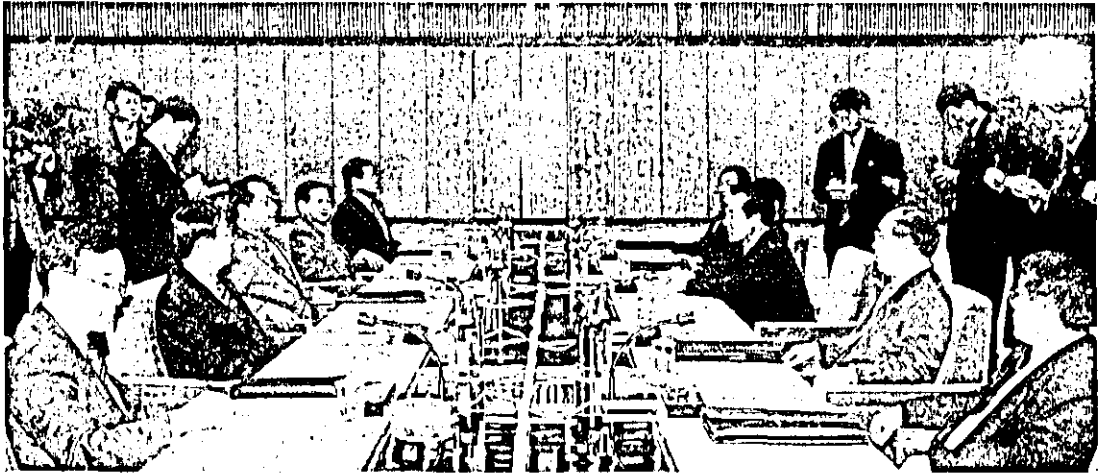
◇ 전반적 전망은.

오늘은 양측이 기본적 방향만 제기했고 앞으로 실무접촉, 2차 전체회의를 거쳐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평양 / 공동취재단

“회담 분위기 무거워

北 새의제 제기안해”



정세현 통일부 장관(왼쪽 좌석 가운데)과 북쪽 김령성 내각책임참사(오른쪽 좌석 세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오전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전체회담이 열리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핵-남북자·경협 분리 논의

### 북, 꺾끄러 현안 에둘러가기... '개성공단'은 진전 예상

#### ■ 남북 장관급회담 기류

"전반적으로 좀 무겁고 진지했다." 이봉조 남쪽 회담 대변인이 전한 8차 남북장관급 회담 첫 전체회의 분위기다. 17일 열린 북한의 '핵 개발 계획' 시인의 과장 탓이다. 그러나 북핵 논란이 이번 회담을 난파시킬 가능성은 아직은 그리 높지 않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현안은 현안대로, 합의사항은 합의사항대로 풀어나갈 것"이라며 핵 논란을 다른 사안에 연계하지는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북쪽도 남쪽의 핵 문제 제기에도 대해 극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북 핵 개발계획 논란= 정세현 남쪽 수석대표는 첫 전체회의 기초반안 분량의 60% 남짓을 북한 핵개발 반대와 북쪽의 책임있는 조처 촉구 등 남쪽의 입장을 강조하는 데 썼다. 6·15공동선언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했다. 북쪽은 그저 듣기만 했다. 다만 김령성 북쪽 단장은 첫 전체회의에 앞선 머리 발언에서 북쪽의

의중을 한자라 내비쳤다. 그는 "우리는 지금까지 바깥 난쟁이가 어쩔든, 서풍이 날든 비가 오든 간 길을 갔다"라며 "우리 민족끼리 손을 더 굳게 잡고 해결해나간다면 그런 우려가 다 가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 핵 프로그램'으로 논란을 벌이지 말고 에둘러 가자는 것이다.

정부는 회담에 앞서 북쪽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을 세갈래로 추론했다. '중상모략'이라며 맞받아치기, 별다른 언급없이 에둘러 가기, 북쪽 입장을 설명하며 나름의 성의 보이기 등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단 북쪽 반응이 최악은 아니다"라며 "북쪽이 성의 있는 조처를 취할지 좀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남쪽 대표단이 21일 오전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예상되는 '북쪽 고위인사'를 만날 예정이다. 핵 관련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남북자 문제와 남북 합의사항=남쪽은 '(한국)전쟁 이후 소식이 끊

긴 사람(전후 남북자)문제에 대한 북쪽의 책임있는 조처를 촉구했다. 장관급회담에서는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련된 남치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한 뒤 비등하고 있는 국내 여론을 고려한 것이다. 북쪽은 전체회의 기반발언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회담 기간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남북은 4차 적십자회담에서 '전쟁 당시 행방불명자의 생사·주소확인 문제 협의·해결'에 합의한 바 있다.

일반적 합의사항과 관련해서 개성공단 건설 문제에서 '진전이 예상된다.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담 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교류협력국장과 도지공사 관계자가 회담 대표단에 포함된 것은 이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장관급회담 틀 안에서 실무협의를 벌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 서울경제

2002.10.21(월)

## 東亞日報

2002.10.21(월)

### 北 核사찰 수용측구 남북장관급회담

제8차 장관급 회담 남북 대표단은 20일 오전 평양 안민문화공전에서 첫 전체 회의를 열고 북한 핵개발과 남북자 문제 등에 대한 협의를 받았으나 북측이 핵문제에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앞으로 회담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요 예보했다.

남측 대표단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는 등 남북한 민간 조처를 취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북측은 구체적이고 분명한 언급없이 남측의 의견을 듣는 데 치중했다고 우리측 이봉조 회담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남측 대표단은 21일 오전 평양 민수대의사당에서 북측 고위인사를 만날 예정이어서 북측의 비밀 핵개발 의혹과 관련한 돌파구 마련 여부가 주목된다.

/평양=공동취재단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 北 “우리 같길 간다” 南 “하늘 내려앉아”

## 北 核개발계획 파문

남북장관급회담 날새 빛대며 신경전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은 20일 오전 평양 안민문화공전에서 개최된 첫 전체회의에서 기조발언의 핵심을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가 북측의 입장 표현을 유도했다.

정 장관은 최근 제기된 북한의 핵 개발계획에 대한 의도적인 공세였다. 핵 실험 개한 것인지, 아니면 대화권을 각오한 것인지에 따라 사태수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정 장관이 이번 평양 장관급회담에서 완수해야 할 최대 임무는 바로 북한의 ‘진짜 속셈’을 파악하는 일이다.

## 南측 ‘北진짜 속셈’ 파악 발언집중 北, 핵언급않고 민족공조만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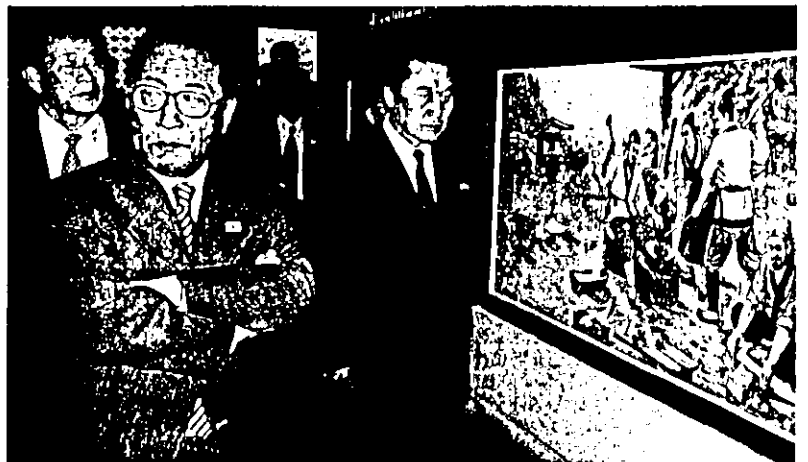
## 오늘 김영남위원장 면담 가능성

남측 대표단은 핵무기를 실험, 생산하지 않고 핵 개발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에 북한이 동의할 때까지 협상을 유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북한 민간 조처를 취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한편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기조발언과 함께 “우리는 지금까지 바깥에 있어 핵개발을 할 수 있는” 정 장관의 기조발언이 있는 뒤에도 핵 문제가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북측 수석대표인 김영성(金榮成) 내각총리 겸 외무장관은 미국의 압박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등 현 상황을 남측에 맞대어 속내를 짐작하게 했다.

그럼 대표=바깥 압박이 어떻든지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야 한다. 북측은 ‘위협’을 할 수 있는’ 정 장관의 기조발언이 있는 뒤에도 핵 문제가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북측 수석대표인 김영성(金榮成) 내각총리 겸 외무장관은 미국의 압박을 ‘바깥 압박’으로 표현하는 등 현 상황을 남측에 맞대어 속내를 짐작하게 했다.



무거운 표정

20일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1차 전체회의를 마친 정세현(남측 수석대표 통일부장관·앞)과 김영성(북측 수석대표·오른쪽)가 동명왕릉을 둘러보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표정이 무겁다.

그럼 대표=우리는 지금까지 바깥에 있어 핵개발을 할 수 있는’ 정 장관의 기조발언이 있는 뒤에도 핵 문제가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북측 수석대표인 김영성(金榮成) 내각총리 겸 외무장관은 미국의 압박을 ‘바깥 압박’으로 표현하는 등 현 상황을 남측에 맞대어 속내를 짐작하게 했다.

그럼 대표=우리는 지금까지 바깥에 있어 핵개발을 할 수 있는’ 정 장관의 기조발언이 있는 뒤에도 핵 문제가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북측 수석대표인 김영성(金榮成) 내각총리 겸 외무장관은 미국의 압박을 ‘바깥 압박’으로 표현하는 등 현 상황을 남측에 맞대어 속내를 짐작하게 했다.

그럼 대표=우리는 지금까지 바깥에 있어 핵개발을 할 수 있는’ 정 장관의 기조발언이 있는 뒤에도 핵 문제가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북측 수석대표인 김영성(金榮成) 내각총리 겸 외무장관은 미국의 압박을 ‘바깥 압박’으로 표현하는 등 현 상황을 남측에 맞대어 속내를 짐작하게 했다.

그럼 대표=우리는 지금까지 바깥에 있어 핵개발을 할 수 있는’ 정 장관의 기조발언이 있는 뒤에도 핵 문제가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북측 수석대표인 김영성(金榮成) 내각총리 겸 외무장관은 미국의 압박을 ‘바깥 압박’으로 표현하는 등 현 상황을 남측에 맞대어 속내를 짐작하게 했다.

# 美 해법은 '北 경제고립'

워싱턴 백문일북파원 | 북한을 압박하는 미국의 수단이 점차 단호해지고 있다. 부시 행정부내 온건파인 폴린 피월 국무장관은 20일 미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네바 협정이 파기된 것이라고 밝히고 동맹국들과 함께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제협상과 강경대응을 놓고 저울질하던 백악관이 결국 '제책' 쪽에 기울 것으로 보인다. 전쟁은 아니지만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방안이 강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 존 폼페 차관과 제임스 켈리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중국·러시아·한국·일본을 차례대로 방문하는 것도 북한을 옥죄려는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다.

이에 앞서 뉴욕타임스는 20일 부시 행정부가 1994년 북·미간 핵합의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고위 소식통은 북한이 핵 개발을 시인한 것은 대화할 허지면서 미국과 직접 드잡이할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1994년 당시와 같은 협상을 거당했다면 부시 행정부 앞 끝부터 핵 개발의 반대축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깨낼 수 있는 첫 번째 키드는 중유 공급의 중단이다. 핵 합의가 무효화되면 미국이 북한의 전력난 해소를 위해 경수로 건설이 끝날 때까지 50만 톤 지원하기로 한 중유를 보낼 이유가 없다. 피월 장관은 이날 중유공급 중단에 대해 동맹국들과의

## 中·러·韓·日 연쇄협의...反核공감대 확보 중유공급 단절→ 경수로 건설 중단 가능성

협의 아래 신중하고 현명한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지만 "대응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해 유려한 제재수단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이에 맞서 플루토늄을 수출하는

원자로와 연료봉을 재기동할 수 있다. 국제 원자력기구(AEA)의 감독을 받고 있는 플루토늄까지 재처리, 노골적으로 핵무기 생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시 행정부가 우려하는 바이기도 하다. 때문에

미국은 북한이 맞대응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로 중국을 통해 전달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미국은 경수로 지원의 중단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비탄을 낚는다는 한국과 일본·유럽 등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핵문제'를 추구하는 서울의 반발이 가장 크다. 경수로 지원은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게 한국과 일본의 생각이다. 미국은 북·일 협상에 핵 문제를 제대로 거론하지 못한 일본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경수로 지원중단에 대한 논의할 구하려 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에게 핵 개발 정보를 미리 알리겠다는데도 일본의 관심 사항만 다른 점을 문제삼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북한이 완벽 한 핵 사찰을 수용하도록 압박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 북한의 핵 무기 개발에 지지 않은 도움을 줬다는 것을 은연중 강조한다. 그러면서 미국은 9·11 테러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가 좋어진 것처럼 이번 사건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자렛대'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중국도 역대 세력권에서 무너지는 것을 바라지 않아 미국에 협조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한·미간 협상을 함원하려 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진압위 압박을 오래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mc@kdaily.com



핵의혹 못둔 장관급회담 20일 오전 평양 인민회공전에서 열린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1차회의가 1시간여 만에 끝난 가운데 북한 핵문제 제기한 남북 수석대표인 정세현(왼쪽) 통일부장관이 무거운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반면 북측 수석대표인 김영성 내각책임장사는 희미이 잡힐 것이라고 일고 있다. ●평양 순원천기자 angle@kdaily.com

## 南 "왜"

북한은 20일 열린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첫 회의에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우리측 중추 핵무기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남측 대표단이 핵개발 프로그램 포기 등을 촉구한 데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21일 2차 회의에서 북한이 이에 대한 답변이나 반응을 대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와 간부자들은 어떤 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이 핵문제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핵개발 프로그램을 무인화하지도 않음으로써 적절할 시기에 미국 등과 '일괄타결' 협상을 시작하려는 속내를 가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남측 대표단은 관측소리를 일관했다. 북측이 남측에 핵개발 프로그램 추진을 포기 하겠다는 공식 언급을 받아오지 않는다면 어떤 성과나 거두고 돌아오더라도 남측의 비등한 비탄 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

## 北 "..."

근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게다가 북핵을 둘러싼 남측의 비탄 여론이 비등하고 남측 정부와 회담의 현역 정책이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에 따라 핵문제 대신 다른 '선물'을 남측에 줄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00년 9월 3차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제주도 방문'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등을 약속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김근식(金根植) 교수는 "북측이 핵개발과 관련해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 관급회담에서 이에 대한 언급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면서 "그대신 최근 상황을 관측소려워하는 남측에 지속적 남북 교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선물은 준비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복삼기자 youngtan@kdaily.com

## 北 핵개발 의도등,안밝혀...美와 일팔타결 속셈 "걱정 다 털어주겠다"...핵외 '선물' 준비한듯

문이다. 하지만 핵개발 및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와 경제개혁 해체, 북 체제보장 등을 묶어서 미국과 일괄 타결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북측이 남측에 그러한 약속을 해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

하지만 북측 김영성 단장이 회담 첫날부터 밝힌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타결해 나가도록 하자. 정 선생(정세현 남측 단장)

까지 우려하는 것을 다 물어버리도록 해드 리겠다."고 말한 것처럼 남측을 배려한 '선물'을 준비했을까 기대를 품게 한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지난 1994년 '서울 불바다' 당시와 다르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북한에 있어 미국과 남한은 동등한 직도 할 수 있었지만 6·15 광동선 이후 북한은 미국과 남한을 분리시켜 접





남북 장관급회담 남북 수석대표인 정세현(오른쪽) 통일부 장관이 20일 낮 평양 육류관에서 오찬을 마친 후 대동강변에 나와 북측 단장인 김형성 내각 책임장사가 담소를 나누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南 “안팎 온도차 크면 감기걸려” 北 “비가 와도 우리길 걸어왔다”

## ■ 첫날 장관급회담 표정

20일(수) 2개3일간 평양에서 열린 제8차 남북 장관급 회담은 북한 핵 개발 계획 시연의 파장을 막기 위해 가까스로 열린 분위기 속에 시작됐다. 남북 수석대표인 정세현(世鉉) 통일부 장관은 관내에 핵 개발 계획 폐기를 요구했지만 북측 김형성 단장은 별다른 불응에 의지할 방법이 없어 첫날 회담은 결렬됐다.

평양 인민문화회관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5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전례회의는 시달린 남북관으로 일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기초장문의 60% 정도를 핵 관련 발언에 쓰여 핵 개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북측은 우리 측 주장을 듣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남측이 제기한 5·25 이후 핵 개발금지 문제에 대해서도 별 반응이 없었다는 부분이다. 최근 시달린 관행이 원 관행으로도 초안 교원도 이뤄지지 않았다. 회의 후 정 장관은 “말뭉치가 좀 두꺼웠다며 북측의 주대응에 답답해 했다고 남측 관게자가 전했다.

정 장관이 “온도차가 심하면 감기에 걸린다. 비오는 다음 주술대 방안에 피우려면 안 된다”고 미국의 건강 기밀을 전하자 김 단장은 “남을 보지 말고 우리끼리 힘을 합쳐 다짐해 나가자”고 축담을 피웠다. 그러나 김 단장은 “한 신장이 우리라는 것만 다 넘어버려도 꼭 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남겼다.

## 南北, 날씨비대 빠이는 대화 시종 굳은분위기 회담걸돌아

남북 대표들은 모두 발언에서 핵무기 실험에 반대할 태도를 나타냈다. 정 장관은 “핵실험이 불안해 하는 일이 생기면 무기로 대응으로 왔다가는 것이 내려 앉은 것 같은 오늘 남북회담 마음이 무겁다”고 핵 문제 의제회담 대비했다. 김 단장은 “시종이 맑은 비가 오는 우리 길 걸어 갔다”며 “바람 날씨가 어떨지 만속까지 손을 얹어 잡고 해를 내 나가면 그런 우리가 다 가

을 앞둔다. 최근 시달린 관행이 원 관행으로도 초안 교원도 이뤄지지 않았다. 회의 후 정 장관은 “말뭉치가 좀 두꺼웠다며 북측의 주대응에 답답해 했다고 남측 관게자가 전했다.

남측 대표단 48명은 19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 고려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정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입을 아꼈고 평양학생소년궁전 참관에 참석했다. /평양·공동취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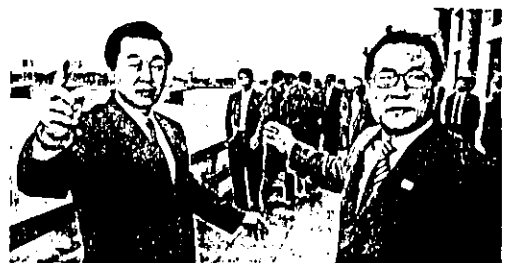
## 개성공단문제 협의위해 남대표단에 민간인사 참여

평양에서 일고 있는 제8차 장관급회담에 참가한 남북 대표단에 민간인 인사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회담 관계자는 20일 “남 대표단에 민간인사자 포함될

관계자 인사가 포함됐다”며 “회담기간 북측과 개성공업지구개발 협회하기 위해 대표단에 참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그동안 인대 이성과 함께 개성공단 조성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 관계자는 “조성사업에” 통일부 고위급 이국영과 김기동부 실무자도 개성공단 문제에 별도로도 일사시

의 실무적인 문제들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수석대표가 참가하는 전례회담 중에서는 핵문제 등 핵심사항을 논의하고 남측간 경험 실무 문제들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측은 경제협력사업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평양·공동취재단

## 南北 장관급회담 안팎



정세현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김형성 내각책임장사가 19일 대동강변 육류관에서 오찬을 마친 후 강변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北 묵묵부담...무거운 분위기

20일 평양에서 열린 제8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시종일관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남측은 북한 핵개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뒤 남북자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북측은 핵개발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었기 때문에 양측에 북한의 핵포기 성적이 만만찮을 것임을 예고했다. 양측은 회담 시작부터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입장을 평양의 초린 날씨에 빗대어 빠이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북측 단장인 김형성 내각 책임장사는 북측대표단의 부산, 아시안경기대회 참가로 고압된 남북관계 등을 강조한 뒤 “바람 날씨가 어쨌든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 문제를 풀어 나가자”고 주장하면서 “전족관 조”를 내세웠다.

그러나 김 단장은 남측의 핵 문제 제기에 제기를 막으려는 듯 “지금까지 미국 남측이 어쨌든, 시종이 맑은, 비가 오는 우리는 우리 길 걸어 갔다”고 말만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남측은 북한의 핵개발 포기 성적이 만만찮을 것임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특히 북한의 핵개발이 5·15남북공동선언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유감된 표정하면서 북측이 국제사회의 유감 내외하고 남북합을 위한 조치들 취하도록 촉구했다. 그러나 북측 대표단은 무반응으로 대응했다. 남측의 문제 제기를 받은 무사하다는 진각으로 해석된다. /윤성진기자 shyon@mk.co.kr

# 제8차 남북상금회담

주제 91(2002)년 10월 19일-22일 평양



손잡은 南北

평양/시진중동취사단

20일 오전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제8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양측 대표들이 악수하고 있다.

## 무거운 분위기속 '核 탐색전'

### • 남북 장관급회담 첫날 표정

남북이 최근 불거진 북한 핵문제 등 안안을 논의하기 위해 20일 협상대에입에 마주앉았다.

지난 17일 북한의 핵개발 추진 의결사항이 공개된 후 북한은 현재까지 미국의 각국에게 요구에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만큼 19일 시작된 제8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북한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다. 남북은 이날 평양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핵관련 의무이행 및 핵개발 포기 등을 요구했으나, 북측은 분명한 입장을 표시하지 않았다. 남측은 21일 오전 북측 고위인사와의 만남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영남(남측) 최고인민회의장 상임위원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날 만남에서 북한의 입장에 따라 문제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회담전으로 끝난 1차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연(丁世演) 통일부 장관과 북측 수석대표인 김경성 대외핵안감사는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남측을 빙세 핵문제 등과 관련한 바있는 발언을 주고받았다. 50분 동안의 회의 분위기는 "중 무거웠다"(정세연 대표)고 한다.

남측 정대표는 "최근 일어난 일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면서 "이렇게 남측을 보니까 허우적 내러왔었는데, 비가 오려는지 남측만기이나 마음이 무겁다"고 운을 뗐다. 그는 또 "23일 회담이 끝나는 날이 서리가 내리는 상강(霜降)"이라며 "서리가 내리면 한에 농사를 갈무리해야 하듯이 남북관계의 갈무리를 할때가 왔다"고 말했다. 북측 김대표는 "우리는 지금까지 비록 남측이 어중은, 서리가 내는 비가 오는 것 같을 왔으며 북한 경제도 마찬가지"라며 "비중남측이 어중은 간에 우리

민족끼리 손을 더 굳게 잡고 애국애국 나가면 그런 우리끼리 다 가진다"고 말했다. "비같은 너무 수중에 방언의 따뜻하면 강기에 강한다"는 정대표의 지적에, 김대표는 "남을 보지 말고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다같이 나가도록 하자"고 말했다.

남측 정대표는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기초발언의 60% 정도를 할애해 북한의 핵개발 파문을 집중 거론했다. 정대표는 북한의 어떠한 핵개발에도 반대한다는 남측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북측의 핵개발을 조처할 촉구했다. 북측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남측 회담 전망=양측은 본격회담 돌입에 앞서 북

남측 정대표는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기초발언의 60% 정도를 할애해 북한의 핵개발 파문을 집중 거론했다. 정대표는 북한의 어떠한 핵개발에도 반대한다는 남측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북측의 핵개발을 조처할 촉구했다. 북측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을 주고받는 모두발언에서부터 가시적인 반응을 주고받았다. 장수 화남전쟁의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회담 분위기가 워낙 무겁다보니 최근 남북회담의 관점으로 자리 잡은 공동보도본 초안도 교환하지 못했다. 남측 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측은 우리의 문제제기에 대해 듣기만 했으며, 구체적이고 분명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측 김대표가 "비중남측이 어중은..." "남을 보지 말고..."라고 언급한 점으로 미뤄,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남측 요구를 순순히 수용할 것 같지는 않다. 특히, 남측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셈이 되는 만큼 즉각 반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다만 북시 행정부의 '제네바 핵 기본합의' 파괴 위협 등으로 공지에 돌린 북 지도부가 논과구 마련을 위해 전향적 자세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측 김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돼 있다"면서 "정신성(貞善)이 우려되는 것임 다 알아배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여유를 남겼다.

이용욱기자 wood@kookilnews.com

## 한국일보

2002.10.21(월)

## 南의 문제제기에도 경청 核시인 일단 기정사실화

### ■ 北, 장관급회담 핵문제 반응

북한의 핵 개발 시인 피문 이수 처 음 열한 20일 제8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은 일단 관망 자세를 취했다. 남측은 북측에 핵 개발 계획 폐기 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북한은 이날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참석자는 "우리측 은 제네바 합의와 간반도 비핵화 선언을 위한 것"이라는 문제 제기와 폐기 등 남북합의안 조치가 촉각 이 쫓겨야 한다는 점을 중 심히 설명했다"면서 "북 안측은 논의할 회피한다 기보다 시종일관 경청하 는 자세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순에 들어간 점을 감안하면 북한은 회담 기간중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부분의 분석이다. 첫 전체회의가 끝난 뒤 김영성 북측 수석 대표는 기자들에게 "쌍방 이 6-15 공동선언 정신에 맞춰 협력 하지는 의지가 강해 좋은 결과가 나 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일단 '북 한의 핵 개발 시인'은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문제는 북한이 어떤 의도로 미국에 핵 개발 사실을 알렸 는지가 회담 기간중 드러나느냐는 것이다.

19일 발간한 제임스 켈리 미 국무 부 동이대담 차관보가 기자회견에 서 발한 10월 초 북미합의과정의 일 단을 보면 북한의 속셈을 유추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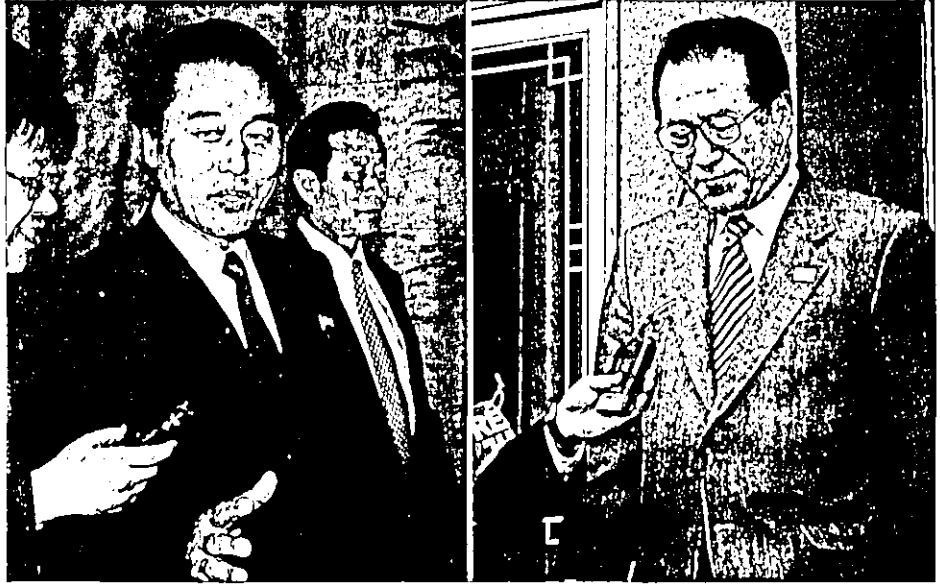
있다. 켈리 차관보는 북한이 핵 폐기 협 조건으로 선제공격을 하지 말 것 과 체제인정, 평화협정 체결 동등요 구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집문에 "유사 한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핵 개발 문제집 지렛대 심어 미국과 일관디결을 시도했다는 분석 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대내적 여건이 갈라진 상황에 놓여 있는 북 한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한 계 산이다. 제11년 조선인통일협회 기 관자인 조선신보가 이날 논평을 공

### 美와 대화의지 시사할지 주목 조선신보 "대결청산 시작해야"

해 "북한 핵 개발 피문을 대적이 아 닌 '대결 청산'의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미국의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분석 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진의가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면 북한은 이번 장관 급 회담에서 핵문제 해결 가능성을 보여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피력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미국에 대한 총력외압 이후 남북대화합 통해 보란하는 방식의 단계별 대미 접근방법을 추진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측이 군사 문제는 북미간 협안이라며 핵 문제와 교류협력의 진리를 주장하고 핵 문제에 대한 입 장 표명을 거부할 가능성도 전혀 배 재할 수는 없다.

/이진동기자



**南北 장관급회담** 20일 오전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남북 장관급회담을 마친 남북 수석대표의 표정이 엇갈린다.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오른쪽) 통일부 장관은 무거운 표정인 반면 북측 수석대표인 김령성(왼쪽) 내각책임총리는 "회담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평양=시진공동취재단

## 8차 남북장관급 회담 첫 전체회의

# 北에 核합의 이행요구

8차 장관급회담 남측 대표단은 20일 북한 핵개발 계획은 한반도 비핵화선언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제네바합정을 위반한 것이기에 대해 남북합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북측에 촉구했다.

남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평양에서 열린 1차 전체회의에서 북측은 핵개발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즉각 대화하고 국제사회와 맺은 모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분명한 입장을 표시하지 않고 시종일관 남측의 문제 제기를 경청했다고 남측의 회담 참석자가 전했다.

남측은 또 최근 국내에서 겹겹으로 떠오른 '6·25 전쟁 이후 행방 불명자(남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남측은 지난 4차 남북 직접 대화에서 전쟁 중 남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했지만 전쟁 이후 남

북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었다.

남측은 이와 함께 철도·도로 연결 문제의 급강산 육로 연결, 개선 관한 건설 등 기존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50여분간 열린 이날 전체회의는

### 남북자 성의있는 조치촉구

### 북 입장표명 없이 듣기만

시종일관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첫 전체회의가 끝난 뒤 이봉조 남측 회담 대변인(통일부 정책실장)은 "오늘 회의에서 남북간에 새로 제기된 의제는 없었고 북측의 의중은 추가 논의를 거쳐야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며 "(핵 문제 제기)에 대해) 북측은 우선 들었고 구체적이고 분명한 언급을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북측 김령성 대표단장은 전체회의가 끝난 뒤 "쌍방(남북)이 6·15 공동선언 정신에 맞춰 협력 하자는 의지가 강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북한 핵 개발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이는 핵문제는 남한이 아닌 미국과의 대화 의제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현 남측 수석대표와 김 단장은 이날 전체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북측 문제를 의식한 듯 "우리는 지금까지 비탈 난파가 아찔한 갈 길을 갔다"(김) "온도차가 심하면 감기에 걸린다"(정)는 등 심전을 주고받았다. 한편 김의선 철도·도로 연결에 필요한 대북 지원용 자재와 장비는 실은 선박이 이날 인천항에서 북측의 황해남도 해주항으로 출발했다.

평양=공동취재단/송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 북측, 핵문제만 나오면 단전

## 북한 핵 퍼문

### 평양 장관급회담 표정

평양 장관급 회담을 북한 핵문제를 따지는 자리로 만들려는 정부의 구상이 밖에 부닥쳤다.

북한이 20일 첫 진채회의부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문제를 풀어 나가자"며 남북 간에 이미 합의된 결합·교류 사업의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나왔기 때문이다. 핵문제로 팽팽히 맞선 김우 회담이 끝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민씨부터 나오고 있다.

◇**견해차 확인해진 핵문제**=정세현(丁世鉉·통일부 장관)남측 수석대표의 북핵 반대 입장 표명과 국제사회와의 약속 위반 지적에 대해 북측은 "분명한 입장표시를 하지 않고 시종일관 남측의 문제제기를 강경했다"(이병조 대변인)고 한다. 남북대화에서 당국자들이 '경청'이란 표현을 쓸 경우는 봉상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보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당초 정부는 핵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고 북측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丁

수석대표는 19일 환영만찬 담사에서 핵문제를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내외의 우리"라는 정도로 비껴갔다. 또 회담이외의 참관(관광)은 거부한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해 20일 오후 동명양관을 찾았다.

정부는 북 핵문제와 함께 철도연결이나 금강산 육로 관광·재성공단 건설 등 남북 간 결합사업을 병행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진례없이 회담 대표단에 개성공단 문제를 협의할 민간 인사(토지공사 간부)를 포함시켜 결합사업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 남측, 판 깨질까 제대로 못따져 北 "바깥 날씨 어떻게 힘 합쳐야"

우리 대표단의 이 같은 분위기는 북 핵문제에 우리가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과 이긋나는 대목이다. 말로는 핵문제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를 한다고 했지만 행동을 지켜보면 말만큼 단호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북측은 "장군님(김정일)의 현명한 영도 따라 모든 일이 잘되고 조국통일을 위한 내외정세도 좋아지고 있다"(홍성남 총리 만찬사)며 탄칭을 부렸다. 북측 김영성 단장은 나아가 '우리 민족끼리'를 유난히 내세웠다. 핵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문제제기를 "미 제국주의의 대북 압력에 동조한다"

는 식으로 돌아붙이려는 의도를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바깥날씨가 어떻든 북남 상급(相級·장관급)회담의 열차를 힘차게 몰아가자"며 당국 회담 테이블에 핵문제가 오르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우리 대표단의 어정쩡한 태도를 간파하고 있음이 느껴진다.

◇**남북 대표의 입씨름**=회담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가라앉아 있다. 양측 수석대표(단장)가 회담 모두발언에서 흐린 날씨와 최근 남북관계·북핵문제를 빗대 빈인 실진은 씩씩하게 느껴진다.

▶김영성 북측 단장="부산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선수와 응원단이 가서 남북인민들을 기쁘게 한 일을 비롯해 좋은 일이 많았다. 바깥날씨가 어떻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문제를 풀어가자."

▶정세현 남측 수석대표="최근 우리 국민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또 걱정할 일이 생겨났다. 무거운 마음으로 평양에 왔다. 바람직한 합의가 이뤄져 국민 불안이 안도로 바뀌어야 한다."

▶김단장="우리는 지금까지 바깥날씨가 어떻든 서풍이 불든 비가 오든 감을 갔다. 북남관계도 마찬가지다."

▶丁대표="온도차가 심하면 감기에 걸린다."

▶김단장="丁선생이 우려하는 것보다 털어버리도록 그렇게 헤드리겠다."

이영준 기자

## “핵개발 중단” 우리측 요구에 무대응 일관

# 北 ‘이례적 침묵’ 속셈은..

### 장관급회담 국내외 관심고조

북한은 20일 열린 남북장관급회담 1차 전체회의에서 핵개발 파문과 관련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핵개발 계획이 공적고 남북 양국자가 처음 대화하는 자리에서 북측 반응이 주목을 받았으나 일단은 ‘침묵’하는 자세를 보였다. 핵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우리측에 북측은 진상적인 해결의지도, 감강한 목소리로 내지 않은 채 그저 듣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한 지도부가 아직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한·미·일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조율 결과를 좀더 지켜보겠다는 시간빨기 작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지도부는 이번 회담을 핵개발 시인으로 조신현 한반도 장세의 긴장 정도를 가능할 수 있는 경(窓)으로 여기고 있는 듯 하다.

우리측 대표단은 19일 평양도라 지하부터 핵문제 해결 원칙을 강력히 전달하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들겠다고 각오를 다졌지만 북측 대표단은 장관급회담 기존 의제들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핵문제의 우선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 진척이 냉각될 것임을 잘 아는 북한이 무대응 전략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기존 태도와 사뭇 다르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의 요구와 주장을 겸허한 것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라는 뜻으로 우리 당국은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핵에 관련한 미국과 얘기할 문제이지, 남측과는 상관없다는 식

농사를 감부리해야 하듯 남북관계도 감부리를 감해야 한다”고 비꼬는 말로 대응했다. 김단장은 다시 “지금까지 비가 오든 서풍이 불든 비갈 날씨에 관계없이 우리는 갈 길을 갔다”면서 북한의 독자노선을 강조했다.

정장관은 이어 기초연산의 60%가량을 핵문제에 할애해 북측을 끌어세웠고 북측은 듣기만 했다. 무거운 회담 분위기 때

## “바깥 날씨 어떻든 내갈길” 기존 의제 집착 ‘해결의지 시사-南 배제의도’ 분석 엇갈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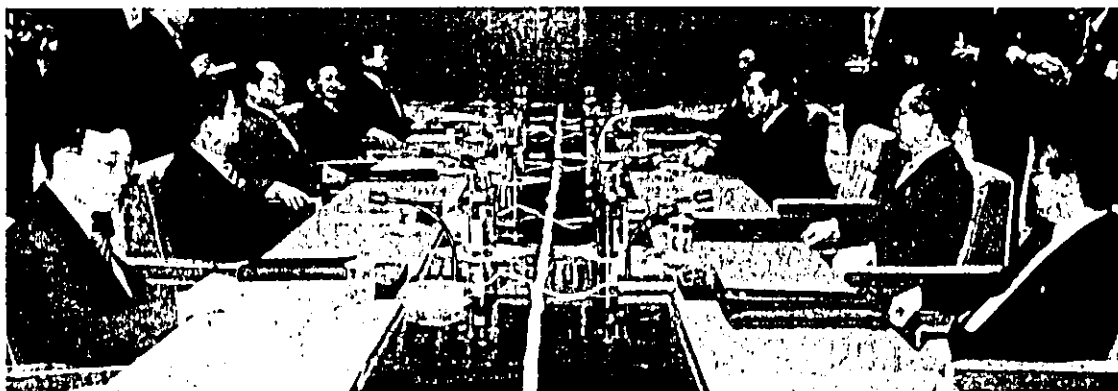
의 과거 태도를 고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핵문제에 대한 양측 대립을 완화하듯 우리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장관과 북측 대표단장인 김영성 내각참사는 회의 모두에서 날씨를 화제로 신경질을 보였다. 먼저 김단장은 김의선과 동해선 천도·도로 연결공사 착공 등 진전된 남북관계를 강조했다. 정장관은 “이런 날씨를 보니 하늘이 내리었고 날씨만큼 마음이 무거웠다”면서 “서리가 내리면 한해

분인지 양측은 회담 때마다 해왔던 공동보도문 초안 교환도 하지 않았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의 협상 전략은 다른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일관되게 핵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북측에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측은 심부름작이나 수석대표 단독 접촉 등을 통해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해결의지 표명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측 답변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신창호기자 procal@kmb.co.kr



가리앉은 만남

남북 장관급회담 양측 대표단이 20일 오전 평양 인민문화회관에서 1차 전체회의를 갖고 북한 핵개발 문제, 교류협력 사업 강화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核거론에 北 “우리끼리 손잡자”

## 南北韓 장관급회담 어떤말 오겠나

20일 열린 제8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우리측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제사회와 맺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반면,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핵문제를 분리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다.

정세현(丁世鉉) 수석대표는 이날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1차 전체회의에서 “(남한은) 북의 어떠한 핵 개발에도 반대한다”며 “핵 개발은 핵무기를 실험 생산하지 않으며 핵 제처리 시설과 농축 우라늄 시설을 갖지 않는다는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핵비확산조약,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전조치 협정, 북·미제네바협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우리측은 이날 오후 열린 실무대표접촉에서도 북한 핵개발 문제에 대한 북측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북측 대표단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이 문제를 이번 회담에서 떼어내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게 했다. 우리측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정책실장은 “우리의 문제제기에 대해 북측은 듣기만 했다”면서 “전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북측의 인식 일부를 알 수 있는 쌍방 수석대표 간의 모두발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북측 김영성 단장은 회의의 시작 전, 우리측 정세현 장관이 “최근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던 의도적으로 대화를 회피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남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문제와 금강산 육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등 기존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했지만, 50여분 동안 진행된 회의는 시종 이두운 분위기 속에서 일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북측은 새로운 제안 없이, 기존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자면서 특히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당초 합의된 완공 시기(내년 9월)보다 빨리 마무리 짓자고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정세현 수석대표는 북측 핵개발에 대한 남한 여론을 의식한 듯, 평양 도착 첫날인 19일 오후 평양학생소년궁전 참관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북측의 요청에 따라 20일 오후 동명왕릉을 참관했다.

평양 순안공원에서 고려호텔에 이르는 평양 시가지 곳곳에서 북한 주민들이 대규모로 동원돼 도로 봉쇄를 교체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평양=공동취재단  
/張一鉉기자 ihjang@chosun.com

“비·바람 불어도 우리, 갈길 갈 것” 北 단장  
“바깥·방안 온도차 나면 감기걸려” 丁 장관  
北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빨리 마무리” 주장

없는 걱정할 일이 생겨났다”고 하자, “우리는 지금까지 바깥 날씨가 어떻든 서풍이 불든, 비가 오든 감기를 갔다”면서 “바깥 날씨가 어떻든 간에 우리 민족끼리 손을 더 굳게 잡고 해결해 나간다면 그런 우리가 다 가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바깥은 너무 추운데 방안이 따뜻하면 안 된다”면서 “온도차가 심하면 감기가 걸린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북측 수행원들도 핵문제와 관

# “北 核개발 시인은 협상카드” 韓

## “對話의지로 결코 볼 수 없어” 美

### 韓·美 ‘北核’ 시각차 뚜렷

북한 핵무기 개발 문제 해결책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은 ‘반과반의 차이’ 이란 표현에만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한 의도와 이들 중에서도 현격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국은 19일 발표한 켈리(Kelly) 미 국무부 동아태 특사 차관 보외의 발언이 담긴 TV 발표자료의 차이를 보였다.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은 북한 핵개발을 결코 용인

할 수 없다”는 태연성을 같이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해결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있으나, 켈리 차관보는 “(제네바 합의의 폐기 등을 포함) 여러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또 북한이 왜 핵개발 시인을 사인했는지라는 의도 파악에서도 차이를 드러냈다. 우리 측은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김정일(金正日) 체제의 안정 보장 등을 요구하기 위해 핵개발을 일종의 ‘대화

북한	한국	미국
북한이 핵개발 시인하는	대통령 특사로 사인 의도	대통령 의도 여부
북한 핵개발 목적은	평화적 발전 가능성에 대한 논쟁	평화적 발전 가능성은 외교 정책적 입회
미·북 합의 할 용의가 여부	핵 개발 무조건 중단할 용의가	핵개발 중단에 대해 불가행
미·북 제네바 합의 폐기 여부	유지	폐기 검토
미국이 핵무기 보유나 대외적 핵 실험에 동의 여부	시원 중단 불가(핵무기 사용)	시원 중단 검토
남북 대화의 지속 여부	중립적 태도(핵무기 사용)	북측 태도 검토

카드’로 활용하려 핵개발 사인을 시인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반대한 언명과 재산을 상실할 수 있는 핵개발을 대외의 뜻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켈리 차관보는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 사인을 대외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국간 입장 차이는 북한의 핵개발을 어떻게 중단시킬 것이라는 대목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재가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외교적 압박(maximum international pressure)”을 시용하겠다는 뜻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국은 중유시원 중단과 경수로 건설입찰 지면을 통한 제네바 합의의 폐기→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탈퇴 등 단계별 수준을 이미 검토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제네바 합의가 파기될 경우 미·북 간의 중유시원 협상이 불가피라는 점에서, 미국이 북한 경수로 1호기가 완공될 때까지 매년 지원해야 하는 중유시원금의 계속 지원 등 기존의 제네바 합의의 불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 차이로 오는 20일 멕시코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은 물론, 앞으로 북한 핵무기 개발과 대내외적 돌이킬 한·미 양국의 조율과정이 쉽지 않을 것인 시국이다. /채홍기기자 skd@chosun.com

## 朝鮮日報

2002.10.21(월)

### 어떻게 풀어나가

韓 평화적 해결에 주력

美 高강도 외교압력 병행

### 제네바 합의의 존폐여부

韓 기존틀 계속 유지돼야

美 상황따라 폐기할 수도



◇평양 육류관사 점심식사  
 제1차 남북직관급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남북 수석대표 정세균 통일부 장관(왼쪽)이 20일 육류관사에서 김영성 북측 대표와 함께 점심식사로 평양냉면 등을 먹고 있다. /평양=AP

## “北, 先체제인정 요구... 본말 뒤바뀐 것”

### 켈리 차관보 일문일답

제임스 켈리(Kelly) 미 국무부 동아태 특사 차관보는 19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과의 협상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핵개발 프로그램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켈리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재개하는 대신 자국의 체제인정 등을 요구했다는데.

“북한은 협상에 대한 합의가 먼저 있는 뒤 동축 우라늄에 관한 사항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런 주장은 본말이 뒤바뀐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재차한 핵개발 정보는 원가?

“동축 우라늄을 이용해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중요한 정보를 지난 아

침에 입수했다.”

—미국은 제네바 합의를 유지할 것인가. 또 경수로 건설과 중유 공급은 계속할 예정인가?

“당시 대응위는 현 시장에서 제네바 합의의 폐기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는 않았다. 다만 우리의 동맹 및 우방과 협의하고 있다.”

—동축 우라늄 정보 출처를 입수 제네바합의 존폐 우방과 합의

—미국은 핵무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시한(deadline)이 있는가?

“시한은 없다. 그러나 가장 쉬운 해결방법은 북한이 즉각적이고 거시적으로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다. 제네바의 추진을 저지할 것이다.”

—한·미 협회에서 한국이 지속적인 경수로 원자로 미국의 대북 중유지

원을 요청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여러 대차반면에 대해 논의했고 계속 협의해 나가려고 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폐기할 뒤 북한과 협상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핵개발 해제를 위한 입찰에 나갈 용의가 있는 것인가?

“지금의 상황이 지난 93~94년 상황의 반복은 아니다. 북한에도 이번 핵개발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도 살피시었다. 북한과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과거의 핵 개발을 먼저 청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북한이 미·북 한인의 압력대응을 요청했는가?

“일관된 재안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은 대화의 의사가 없다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있어 순간스러운 면이 있다.” /채홍기기자

# “제네바합의 사실상 무효”

## 美 파월 국무 부장…제재는 韓·日등과 협의

워싱턴 = 손현덕특파원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이 20일 미 행정부 고위관료들은 처음으로 북미간 제네바 합의 파기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이날 미국 NBC방송의 '인본과의 만남' 프로그램에 출연한 파월 장관은 "미 당국은 2주 전 북한측이 우리들 농축우라늄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며 "이는 핵무기 개발 등에 대한 협정을 무효화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는 건널 뉴욕타임스가 "미국이 91년 북한과 맺은 제네바 기본합의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간접적 시인으로 해석된다.

그는 "북한은 처음에는 핵무기 개

발 사실을 부인했으나 나중에 이를 시인했다"며 "북한측의 시인으로 제네바 협정은 파기됐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파월 장관은 "두 당사자가 하나의 협정을 맺은 뒤 한쪽이 협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히면 그 협정은 파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네바 협정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동결하는 대신 김수로와 중유 등을 지원받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이다.

그러나 파월 장관은 중유 공급 중단 등에 대한 결정은 동맹국들과 협의의 아래 신중하고 현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미 당국은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 핵분체는 여러

나라가 관계해 있어 한국을 비롯해 일본 러시아 중국 등과 이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 뉴욕타임스는 미 행정부 고위관료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2주 전 핵무기 개발계획을 시인한 뒤 백악관과 행정부는 제네바 합의를 파기할지를 논의해 왔다"고 보도

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 신문은 "취임 당시부터 제네바 합의에 회의적이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시인은 제네바 합의가 처음부터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고 전했다.

ubsohn@mkk.co.kr

한예경기자 yeaky@mkk.co.kr

## 北에 核합의 준수 촉구

### 평양 장관급회담…오늘 김영남 만날듯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정세현 수석대표 등 남북대표단이 21일 오전 평양 만수대역에서 북측 고위인사를 만날 예정이다. 북한의 핵개발 파문과 관련해 해군의 김마리위를 찾을지 주목된다.

북측 고위인사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2면

남측은 20일 오전 장관급회담 1차 전체회의에 이어 오후 실무대표 접촉을 갖고 북한 핵개발 계획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맺은 모든 의무를 신실히 이행하고, 관련 국가 및 국제사회와의 즉각적인 대화와 남북합의한 조치를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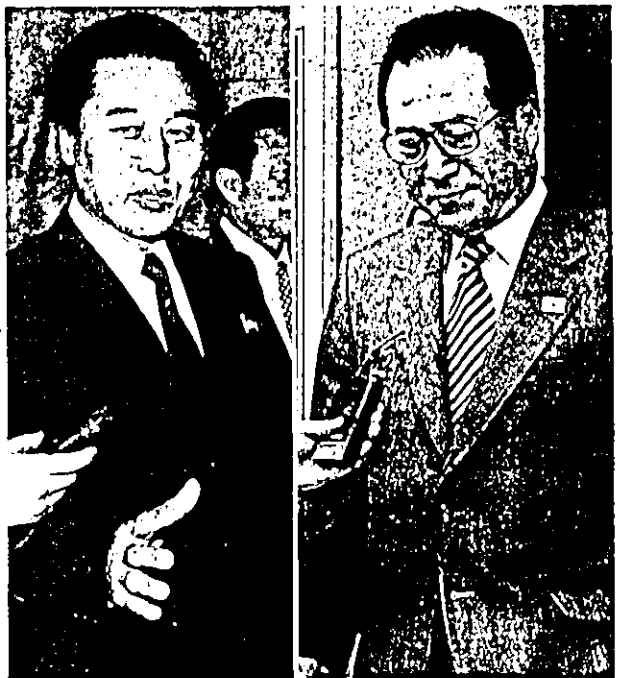
남측은 특히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핵무기를 실험·생산하지 않고 핵 재처리 시설 등을 갖지 않기로 한 한반도비핵화선언과 94년 10월 제네바 합의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히 문제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분명한 입장을 표시하지 않았다.

남측은 남북자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최근 국내에서 강경으로 떠오른 6·25 전쟁 이후 영남지방자(남북자) 문제에 대해 북측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남측은 또 참도·도로 연결 문제와 금강산 육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등 기존 합의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윤상한기자 shyoon@mkk.co.kr



20일 남북 수석대표 정세현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북측 수석대표 김영남 내각책임자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1차회의를 마친 후 회담장을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경제

2002.10.21(월)

## 경향신문

2002.10.21(월)

### 남북장관급회담 경험 향방 관심

#### 국내 경제

정치적인 하이슈가 잇달아 터져 나오며 경제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합산란' 출범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핵심 '현안'으로 등장했다. 이에 따라 주5일 근무제, 가스산업 개편안 등 주요 경제문제가 국회에서 계속 표류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주에 가장 큰 관심을 끄는 현안은 역시 남북장관급 회담이다. 정세현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우리 대표단은 19일 평양에 도착해 22일까지 정치 및 경제현안을 논의한다. 당초 의제는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금강산 육로관광 등 주로 경제적 문제였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 파문으로 핵 문제가 핵심 안건으로 등장하게 됐다. 북한측이 핵 무기 문제에 대해 상의 있는 답변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남북간 회담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시장은 최근의 안정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들어 증시가 빠른 반등세를 보인 탓에 일부에서는 조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증시가 기업실적 호진을 재료로 계속 상승커브를 그리고 있어 국내 증시도 다소 조정을 겪더라도 견조한 모습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한일도 박스권내에서 소폭의 등락을 되풀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의 달러강세에 따른 엔·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도 상승 요인을 안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주식 구매수요가 이어지고 있어 하락 요인도 병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서비스 시장의 3강 구도를 가늠할 수 있는 파워콤 매각 협상도 관심거리다. 한전은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하나로통신 컨소시엄과 협상을 벌이지 못하자 데이콤과 협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일단 한전은 11월말까지 데이콤 및 하나로통신과의 매각협상을 병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농산물과 서비스 시장의 개방문제를 다룰 '도하 개발 어젠다(DDA)협상'에 대한 대응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는 22일 대협상에서 DDA 민감협상포럼을 갖는다. 정부 및 민간 위원들은 이날 DDA 협상 동향 및 농업과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 “對北 뉴욕채널은 열려있다”



## 북한 핵개발 파문

• 캘리포니아 내·외신회견

“대화 원했다면 다른 방식도 있었을 것”  
‘先 핵폐기, 後 협상’ 원칙 분명히 밝혀



/김문석기자

미국의 제임스 켈리 대북특사는 지난 19일 방한, 서울 미 대사관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협상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이 비핵 핵무기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이라고 언급, ‘선 핵폐기, 후 협상’ 원칙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이 켈리 특사 방북시 선제공격 불가, 북·미 평화협정 체결, 북한체제 인정 등을 요구했나.

“핵 프로그램을 인정할 뒤 그런 제안을 했다”

-북한이 어느 수준까지 핵개발을 했다.  
“미국은 올 여름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심각한 프로그램이 진행중이라는 정보로 믿수 했다. 이미 북한 대로 우리는 대북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담한 접근법(bold approach)’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overriding)’ 우려사항이다”

-북·미 기본합의는 여전히 유효한가.  
“아직 결정된 게 없다. 다음 조치는 앞으로 미 의회 및 동맹국들과 협의해나갈 것이

다. 부시 대통령 역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구체적 시한이 있나.

“시한은 없다. 가장 쉬운 해결방법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신속하고도 가시적으로

해체(dismantle)하는 것이다”

-오늘 한·미회의에서 결수로사업 중단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없었나.

“우리는 한국과 다음 조처에 대한 논의를 막 시작했다”

-한국이 대북 포용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던.

“미국은 포용정책을 지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동시에 한국이 비밀 핵 프로그램은 미국과 동맹국에 중대한 우려사항이라는 점을 북에 분명히 전달하기를 희망한다”

-핵 프로그램 해체를 위해 북한과 협상할 용의가 있나.

“뉴욕채널은 열려 있다”

-핵 프로그램을 시인한 것은 대화의지를 표명할 것 아닌가.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과 대화를 원했다면 다른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중국과의 협의내용에 만족하나.

“우리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토대로 중국과 두차례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했다. 중국은 한반도내 핵무기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차세한기자 chs@k.yunghwang.com

# 美 “제네바합의 파기됐다”

## 파월 미국무 “重油 北지원 중단은 신중 검토”

뉴스위크 “北, 1년내 核彈 6개 제조능력”  
요미우리 “日, 경수로지원 일시동결 검토”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1994년에 북한의 핵 개발 동결을 대가로 경수로를 건설해주고 중유(重油)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북한과 체결했던 제네바 기본합의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

콜린 파월(Colin Powell) 국무장관은 이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두 당사자가 하나의 합의를 맺은 뒤 한 쪽이 합의를 파기했다고 밝히면 그 합정은 파기된 것”이라며 북한의 핵개발 시인으로 제네바 합정은 파기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네바 합의 파기 결정의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는 미국이 경수로 건설 때까지 매년 50만t씩 주기로 했던 중유 제공의 중단이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 수십억 달러 프로젝트인 경수로 건설을 파기하지는 않더라도 중지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타임스는 보도했다.

파월 장관은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대해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혔으며, 중유 공급 중단 등에 대한 긴장은 동맹국들과 협의해 신중하고 현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미국은 즉각적이고 경솔한 조치들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18일 인터넷판에서 “북한은 향후 12개월 이내에 연간 6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다”고 부시 행정부의 일부 관료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한편 일본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관련, KEDO의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 지원을 일시 동결할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9일 보도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는 이에 대해 “KEDO 문제는 한국·미국과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워싱턴=朱鳳中

특파원 midway@chosun.com

/도쿄=崔洽 특파원 pot@chosun.com

### 한겨레

2002.10.21(월)

# “미, 제네바협정 폐기 결정”

## 뉴욕타임스 보도...북에 중유지원 곧 중단

파월 “북 합의 어겨 사실상 폐기” 시인

미국은 북한과 1994년 체결한 제네바 핵합정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받아 이렇게 전하고, 이 결정의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은 미국이 내년에 북한에 제공되는 50만t의 중유 지원이 중단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 부시 행정부의 이런

결정은 북한에게 모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완전한 고립을 감수하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는 상징적 중요성이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부시 행정부는 그러나 동맹국들과 현안연선을 감안한 목적으로 협정 폐기 결정을 곧바로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

는 덧붙였다. ▶관련기사 2·3·4면  
이에 대해 20일 콜린 파월 미국무 장관은 “제네바협정은 두 당사자간의 합의인데, 한 쪽이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다른 쪽이 무슨 방도가 있었다고 말해 사실상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시인했다. 파월 장관은 이날 오션 《에이비시방송》의 연설과 의 만남이란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렇게 말하고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 세계 특히 북한의 이웃국들이 최대한(북한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네바 협정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동결하는 대신 경수로와 중유 등을 지원받는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것이다.  
19~20일 이틀간 한국을 방문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네바 합의의 목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른 핵무기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무효화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

고, 동맹국 및 우방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켈리 차관보의 방청으로 열린 양국협회에서 한·미 두나라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응책은 오는 26일 멕시코에서 열린 한·미·일 3국장신회담과 이후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디북) 회의 등을 통해 합의 결정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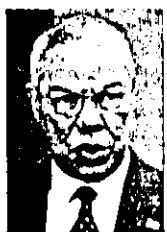
한편,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19일 북한의 핵개발 시인에 따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케도) 사업 일정에 대해 “한국, 미국과 일본 등 3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0일 보도했다. 유엔연합 관계자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대북 관계 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도쿄 베이징/중국한 모태규 최성봉 특파원 gookhan@hani.co.kr, 류재훈 기자 hoonie@hani.co.kr

# 美 “제네바核합의 파기 간주”

## 파월 국무 확인... “韓·日 등 관련국과 대처 협의”

### NYT “중유 50만톤 지원 중단 결정” 정부 “아직 공식통보 받은바 없어”

관련 파월 국무장관(사진) 등은 미국의 북·미 제네바 핵합의 파기 방침을 밝혔다. / 관련기사 3·4·10면  
파월 장관은 20일 NBC ABC 폭스뉴스 등 방송과의 일일대담 프로그램 출연해 미국의 합의 파기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이 북·미 제네바 합의에 대해 ‘무효화’를 발표했다”면서 “합의 당사자 중 한쪽이 무효화를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의 핵합의 파기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시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한 채 북한의 핵합의 위반은 “북·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국제사회와 대응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 이 말 시사상 시인했다.

그는 한국 일본 중국 등에게 북한과 접촉(engage)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면 여러 강도를 통해 노력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파월 장관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사안에 대해 “현재 테이블 위에 없다”고 말하면서 북한은 이라크와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콜롬비아 라이스 백악관 인보보좌관도 이날 CBS 방송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핵합의에 큰 구멍을 낸 것”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이 이미 무효화를 선언했다고 강조해 미국도 핵합의가 파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라이스 보좌관은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분명히 맞서야 할 기회”라면서 “국제사회에 의한 경제제정 조치와 고압

화”를 언급했다.

파월스는 이날 미 행정부 고위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핵개발 시인 후 백악관에서 제네바 합의의 파기에 따른 위안에 대한 성서간의 논의가 있었다면서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 인정은 제네바 합의가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파월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을 통보받은 것이 없다”며 “미국의 핵개발 파기 요구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지

키문 뒤 동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다음 조치를 논의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공통 인식”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제네바 합의 파기 여부나 오는 26일 아·태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 간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삼(鄭善燾) 경수로 기획단장은 “미국이 제네바 합의를 파기, 경수로 건설을 중단한다는 통보만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 이승철특파원·이승근기자  
ksc@kyunghyang.com

# 정부, 北核계획 99년에 포착

## 국방부 관계자 “농축우라늄 첩보 우리가 美에 알려줘”

### ‘3년간 비공개’ 배경 싸고 논란 예상

북한이 우라늄 농축 방식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추진해 왔다는 사실을 한국 정부가 99년 최초로 관련 첩보를 입수해 미국에 제공함으로써 추적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A2-3·4·5면에 관련기사  
미국은 이듬해 최초로 수년간 북한의 비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추적 작업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18일 국방부가 북

해 국방부에서 한 비공개보고를 통해 밝혀졌다.

이날 국방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농축우라늄에 대해 99년 우리가 먼저 관련 첩보를 입수해 미국 측에 통보했고 이후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인 첩보 입수 시기와 경위,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3년간이나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최신홍(崔成泓) 외교통상부 장관과 이준(李俊) 국방부 장관은 18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방위 청년에서 정부가 북한의 농축우라늄 개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8월부터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북한의 소위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해선 이미 한미 양국이 협의해 온 사항”이라며 “양국 정보당국은 99년 제네바 합의 이후 발생한 일부 우라늄 생산 관련 시점

이외에 우라늄 농축 방법을 이용한 북한의 핵개발 관련 첩보에 주목하고 최근 긴밀한 정보협력을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북한이 99년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핵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은 한미 양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계속 관심을 가져 왔던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원상호기자 ysh105@dongae.com

# “美, 제네바 핵합의 파기 결정” NYT 보도 “중유 北지원 중단될 것”

### 파월 “무효화 간주... 대책 아직 미정” 정부 “美서 결정된 것은 없다” 부인

미국 정부는 1994년 북한과 체결한 제네바 핵합의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 결정의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파급 효과는 미국이 북한에 경수로 2기를 건설할 때까지 매년 대체 에너지로 제공키로 약속한 중유 50만톤에 대한 지원중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경수로 건설 중지를 한국과 일본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관련기사 3·4·12면

이와 관련, 파월 파월 미 국무장관은 20일 ABC방송과의 회견에서 “제네바 핵합의의 한 당사자인 북한이 무효화했다고 했으면 그것은 무효화된 것이다”라며 “우리는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월 장관은 또 폭스 뉴스와의 회견에서 뉴욕 타임스의 중유지원 중단 보도에 대해 “대응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욕 타임스는 미 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 “백악관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시인한 후 제네바 핵합의를 파기할지 여부를 논의해 왔다”며 “취임 당시부터 핵합의에 회의적이었던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 시인을 핵합의가 처음부터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보도했다.

부시 행정부는 다만 동맹국과의 연대 형성을 위해 핵합의 파기 결정을 이르면 사일 내에는 공식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미 정부의 핵합의 파기 결정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 계속 포기와의 거의 전면적인 경제고립 직면 가운데 선택을 요구하는 분명한 메시지

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외무부 당국자를 인용, 미국은 알루미늄 다량 입수 등 북한의 우라늄-해개발에 대한 초보적 증거를 최소한 1년 전부터 갖고 있었으며 2001년 여름에 한국 정부에 이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j8101@hk.co.kr

정부는 20일 미국이 제네바 합의 파기와 대북 경수로 건설 사업 지원을 중단키로 결정했다는 뉴욕 타임스의 보도에 대해 “미국은 아무 것도 결정할 것이 없는 것으로 안

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경수로 건설중단은 미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이사국인 한·미·일·유럽연합(EU)이 함께 결정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방한했던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와 조율한 내용과 뉴욕 타임스 보도 내용은 전혀 다르다”면서 “제네바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진동기자 jaydlc@hk.co.kr

## 東亞日報

2002.10.21(월)

# “美, 제네바핵합의 파기 간주 重油 北지원 신중 재검토”

### 파월국무 “北, 핵무기 개발로 협정했다” 뉴스위크 “北 1년내 핵탄6개 제조 가능”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 동결을 규정된 북·미 제네바 합의가 파기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맹국들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을 협의할 것이라고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밝혔다.

파월 장관은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 남국은 2주 전 북한 측이 우라늄 농축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는 핵무기 개발 등에 대한 협정을 파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처음에는 핵무기 개발 사실을 부인했으나 나중에 이를 시인했다”며 “북한측의 시인으로 제네바합의는 파기됐다”고 밝혔다.

파월 장관은 “두 당사자가 하나의 합의를 맺은 뒤 한 쪽이 협정을 파기했다고 밝히면 그 협정은 파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월 장관은 또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평양에 매년 지원하고 있는 50만톤의 중유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는 뉴욕타임스 보도와 관

련해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파월 장관은 “중유 공급 중단 등에 대한 결정은 동맹국들과의 협의와 관련 신중하고 현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미 당국은 즉각적이고 겸손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키로 한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를 파기(serap)하기로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백악관 내에서 제네바 합의의 전면 파기에 따른 위험에 대한 오랜 논의가 있었다면서 “취임 때부터 제네바 합의에 대해 크게 회의적이었던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 시인이 제네바 합의가 결정적으로 잘못됐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부시 대통령 측근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은 “제네바 합의 파기 결정의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효과는 미국이 북한에 재공하는 연간 50만톤의 중유 공급의 중단”이라면서 “미국은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현대적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수 십억달러짜리 프로젝트(경수로 제공)를 종료 내지는 중단하도록 촉구할 것 같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시사주간 뉴스위크는 19일 인터넷판에서 “북한은 앞으로 12개월 내에 연간 6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다”고 부시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제네바 합의 파기에 관한 뉴욕타임스의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외교통상부 심윤조(沈允燾) 북미국장은 20일 “제네바 기본합의에 대한 미 정부의 공식입장은 제임스 켈리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방한듯이 현재로서는 어떠한 입장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일원인 미국도 KEDO 이사국들과 협의해야 하고 북한의 반응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 제네바 합의를 파기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한기홍특파원 elijus@donga.com  
김영식기자 sear@donga.com

# 美 “제네바 핵합의 파기 간주”

## 과월장관 밝혀… 對北 중유 지원 중단 방침 韓·日에 경수로 건설 잠정중단 요구할듯

[뉴욕=심상복 특파원, 서울=오영환 기자]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계획 파인으로 핵무기 개발계획 동결을 규정할 북·미 제네바 합의가 파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관련 과월 비 국무장관이 20일 밝혔다.

과월 장관은 이날 NBC 방송의 ‘인문과의 만남’(meet the press)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은 2주 전 북한 측이 무리남 농축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는 핵무기 개발 등에 대한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 4, 5면>

과월 장관은 이어 “북한은 처음에는 핵무기 개발 사실을 부인했으나 나중에

이를 시인했다”며 “북한 측의 시인으로 제네바 합의는 파기됐다”고 밝혔다. 과월 장관은 “두 당사자가 하나의 합의를 맺은 뒤 한 쪽이 이를 파기했다고 말하면 그 합의는 파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뉴욕 타임스는 20일 “미국이 1994년 북한과 맺은 제네바 기밀합의를 파기하기로 결심했다”고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미 행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 “북한이 2주 전 핵무기 개발계획을 시인한 뒤 백악관과 행정부는 제네바 합의를 파기할지 여부를 논의해 왔다”면서 “취임 당시부터 제네바 합의에 회의적이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시인은 제네바 합

의가 처음부터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고 전했다.

신문은 “제네바 합의 파기에 따라 나타나는 즉각적인 효과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중유 지원 중단”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경수로 건설 작업의 완전 포기는 아니더라도 일시

중단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네바 합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을 전제로 북한에 경수로 원전(1천 MW급) 2기를 지어주고, 건설기간 중 대체에너지로 중유 50만t을 매년 제공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또 다른 고위 관리도 “우리는 제네바 합의가 사실상 사문화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미 행정부의 합의 파기 결정은 북한에 모든 핵무기 계획의 포기와 전면적인 경제고립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이 관리자는 꼽아 했다. [simsb@joongang.co.kr](mailto:simsb@joongang.co.kr)

## 世界日報

2002.10.21(월)

# “핵폐기해야 北과 관계개선”

## 韓-美, 공조강화 합의… IAEA 사찰 촉구

### 26일 韓-美-日 정상회담서 구체대응책 논의

한국과 미국 양국은 20일 북한이 핵개발프로그램을 즉각적이고 가시적으로 폐기하지 않는 이상 북미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양국간 공조 및 국제사회 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이 거론한 가시적인 조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은 즉각 핵개발프로그램과 시설을 폐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 검증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3-4-5면>

전날 방한한 제임스 켈리 미국 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과 핵프로그램을 해체하기 위해 협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협상을 시작하는 최선의 방법은 북한이 과거 핵무기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켈리 차관보는 미국의 제네바합의 파기선언 여부와 관련, “현재로서는 제네바 합의 무효화 결정

을 내리지 않았으며 다음 단계에 대한 어떤 결정도 나지 않았다”면서도 “한국과의 협의에서 여러 대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최성홍(崔成泓) 외교부상부장관 등 우리측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켈리 차관보간 협의를 통해 북한 핵개발프로그램이 1994년 체결된 북미 제네바기본합의와 91년 한반도비핵화선언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공동인식을 확인하고 대북 경수로 사업의 중단 등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26일 멕시코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간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

/박희준기자  
[july1st@segyc.com](mailto:july1st@segyc.com)

# 美 “제네바 합의 파기”

## 파월 국무 “北 핵개발로 사실상 무효화”

우리정부 “결정된바 없다”  
26일 정상회담서 조율할듯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김수정기자】 미국은 핵무기 개발 계획 동결을 규정 한 북·미 제네바 협정이 파기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맹국들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파월 미 국무장관이 20일 밝혔다. ▶관련기사 3·4면

파월 장관은 이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 당국은 2주간 북한측이 우리들 농축우라늄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는 핵무기 개발 등에 대한 협정을 파기한 것이라고 밝혔다.”며 “북한측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 시인함으로써 제네바 협정은 파기됐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파월 장관은 “두 당사자가 하나의 협정을 맺은 뒤 한 쪽이 협정을 파기했다고 밝히면 그 협정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제네바 협정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동결하는 대신 경수로와 중유 등을 지원받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파월 장관은 또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평양에 매년 지원하고 있는 50만톤의 중유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는 뉴욕 타임스 보도와 관련,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세계수단을 강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파월 장관은 중유 공급 중단 등에 대한 결정은 동맹국들과 협의의 아래 신중하고 현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미

당국은 즉각적이고 견고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 핵문제에 여러 나라가 관계돼 있는 것이라며 “한국을 비롯해 일본·러시아·중국 등과 이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뉴욕 타임스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제네바 기본합의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2면으로 ▶

### 美 “제네바 합의 파기”

1면에서

이 신문은 미 행정부 고위관리의 발발 언급, 북한이 2주간 핵무기 개발계획 추진을 시인한 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보좌관들과 함께 제네바 기본합의 파기 여부를 논의해 왔으며 폐기하기로 최종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미국은 조만간 한국과 일본 정부에 북한의 경수로 건설 지원을 파기하거나 최소한 중단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이 관리는 밝혔다.

한편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이같은 보도에 대해 “미국은 아무 것도 결정할 것이 없다.”고 말한 바 있어 대북 재재방법과 수순을 둘러싸고 양국간의 인식차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오는 26일 멕시코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 美, 제네바核합의 ‘파기’

## 파월 “北 시인으로 불가피... 중유공급 중단등 대응”

켈리 “부시 결정안내려-北 핵계획 철회 최선”

미국은 핵무기 개발 계획 동결을 규정 한 북·미 제네바 협정이 파기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맹국들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파월 미 국무장관이 20일 밝혔다.

파월 장관은 이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 당국은 2주간 북한측이 우리들 농축우라늄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는 핵무기 개발 등에 대한 협정을 파기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5·10면)

파월 장관은 “북한은 처음에는 핵무기 개발 사실을 부인했으나 나중에 시인했다.”며 “북한측의 시인으로

제네바 협정은 파기됐다”고 밝혔다. 또 “두 당사자가 하나의 협정을 맺은 뒤 한 쪽이 협정을 파기했다고 밝히면 그 협정은 파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네바 협정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동결하는 대신 경수로와 중유 등을 지원받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이다.

파월 장관은 또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평양에 매년 지원하고 있는 50만톤의 중유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는 뉴욕 타임스 보도와 관련,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월 장관은 중유 공급 중단 등에 대한 결정은 동맹국들과 협의의 아래 신

중하고 현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미 당국은 즉각적이고 견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20일 인터넷판에서 북한이 제네바 핵합의를 무효로 규정함에 따라 미 정부도 이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타임스는 미 행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 추진을 시인한 후 핵합의는 제네바 합의를 폐기할지 여부를 논의해 왔다”면서 “이로 인해 미국이 경수로 완공시까지 대체 에너지로 매년 50만톤 북한에 제공해 온 중유 공급이 중단되고, 한국과 일본 정부에도 경수로 공사 중단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19일 서울에서 우리 정

부의 핵문제 해결방안을 협의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네바 합의의 무효화 결정에 대해서는 동맹국과 논의 중이며, 부시 미 대통령은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과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과거의 핵계획을 먼저 청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 확산을 포기하는데 국제적인 압력이 최대한 발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이전까지는 켈리 차관보의 말이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이라며 “파월 장관의 발언은 제네바 합의에 돌입이 생겼다는 의미일 뿐 미국이 나서서 협의를 파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영구 특필기자 egkim@kmb.co.kr

# “美, 제네바합의 파기 결정”

NYT 보도 對北 경수로-중유공급 중단예상

## 햇볕정책-北 日수교협상 타격불가피 청와대선 “사실무근...결정된것 없다”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시인함에 따라 1994년 북한과 맺은 제네바 핵합의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부시 행정부는 조만간 제네바 핵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기사 2-3-4-5-9면)

제네바 핵합의는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동결하는 대신 서방국가들이 북한에 대체 에너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제네바 핵합의는 한-미-일 3개국 대북 정책의 토대이기 때문에 이 합의의 공식 파기는 북-미 대화 재개는 물론 '햇볕정책'을 기조로 교류-협력을 넓혀온 남북관계와 북-일 수교 교섭 등 한반도 주변 정세의 경색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제네바 핵합의 파기에 따라 한국 일본 등의 주도로 추진되는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이 중단되고 경수로 완공 때까지 매년 50만 t

씩 지원되는 중유(重油) 공급도 끊길 것이라고 타임스는 밝혔다. 일본 정부도 대북 경수로사업을 일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클리퍼 미 국무장관은 이날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 작업을 하고 있다고 시인한 만큼 합의는 무효화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중유공급 중단 등을 언급한 타임스 보도와 관련, “즉각적인 단계는 밟지 않을 것”이라며 “동맹국들과 협의해서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시 행정부는 또 북한이 제네바 핵합의 파기를 빌미로 국제적 감시하에 있는 영변 핵시설에 보관된 핵물질을 꺼내려 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할 계획이다. 부시 행정부는 제네바 핵합의 파기 선언 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였으나 취임 초부터 이 합의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해온

부시 대통령이 파기를 선언하는 방향으로 결론내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제네바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선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도 외신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경수로 건설중단은 미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이사국인 한-미-일-유럽연합(EU)이 같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정승욱기자, 워싱턴=박원규특파원 jswook@segye.com

世界日報

2002.10.21(월)



경향신문

2002.10.21(월)

## 켈리 “北 핵폐기해야 협상”

訪韓회견...강석주 '평화패키지' 제안 일축

미국의 대북특사인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9일 서울 주미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먼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북한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본일담 4면

켈리 특사는 “핵개발 폐기를 위해 북한과 협상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이 생각하는) 협상을 시작하는 최선의 방법은 북한이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켈리 특사는 향후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최대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경수로 건설 중단 및 미국의 대북 중유공급 중단 가능성과 관련, “부시 대통령은 (현 단계

에서) 어떠한 결정도 내린 바가 없다”면서 “추후 조치는 미국의 핵 프로그램 폐기 요구에 대한 북한의 공식 반응을 확인한 뒤 미 의회 및 동맹국과 협의,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선제공격 포기, 체제보장, 평화협정 체결 등을 수용하면 미국의 대북 우려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는 강석주(姜錫柱) 외무성 제1부상의 '평화 패키지' 제안에 대해 켈리 특사는 “앞뒤가 완전히 바뀐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앞서 켈리 차관보와 북한 핵문제에 대한 협의를 갖고 북한의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핵개발 계획 포기를 촉구했다.

차세현기자  
csh@kyunghyang.com

# 서울경제

2002.10.21(월)

## “美, 對北 핵합의 파기결정”

### 50만톤 중유지원·경수로건설 중단 예상

#### 뉴욕타임스 보도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지난 94년 북한의 핵 동결을 조건으로 경수로 원자로건설 지원 등을 규정한 북미 제네바합의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관련기사 3면

신문은 미 행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 북한이 2주 전 핵무기개발계획 추진을 시인한 후 백악관은 제네바 핵기본합의 폐기 여부를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이 관리는 미국이 핵기본합의를 포기할 경우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결국 이번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시인함으로써 핵기본합의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우선 미국이 매년 북한에 제공해오던 50만톤의 중유 지원을 중단하는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미국은 또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에게도 현재 진행 중인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 중단을 요청할 계획으로 전해져 가뜩이나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의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제임스 벨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19일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미 공동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방한, '93~94년의 상황이 되풀이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개발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새로운 협상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초 방북한 미 특사단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북미 평화조약 체결 ▲북한의 경제체제 인정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지 않기로 하는 등 세 가지 조건을 수용할 경우 핵무기개발계획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 하는 등 세 가지 조건을 수용할 경우 핵무기개발계획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혜경기자 light@sed.co.kr

#### “핵합의 파기 사실 아니다”

##### 정부, 외신보도 부인

정부는 20일 미국이 제네바합의 파기를 결정하고 대북 경수로건설사업 및 중유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뉴욕타임스 등 외신보도에 대해 “미국은 아무 것도 결정한 게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제네바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인익식기자 esahn@sed.co.kr

# 한국경제

2002.10.21(월)

## “美 제네바 핵합의 파기 결정”

#### NYT紙 - 한국선 부인

미국 행정부는 지난 94년 북한과 체결한 제네바 핵기본합의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20일자로 보도했다.

▶관련기사 2,4면

뉴욕타임스는 미 행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 북한이 2주 전 핵무기

개발계획 추진을 시인한 후 백악관은 제네바 핵기본합의를 폐기할지 여부를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미 정부가 국제감시대에 있는 양반 핵시설에서 북한이 핵물질 이동을 시도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경고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이 제네바 핵기본합의를 폐기하기로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제네바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한·미·일 3국은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을 철폐시키기 위한 공동체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워싱턴=고광칠 특파원·홍영식 기자 gwang@hankyung.com



美서 북한 敵對정책 철회하면

# 北 “대화로 문제해결 용의”

## 김영남위원장, 정세현통일 단독면담 미국 “北核문제는 협상대상 아니다”

김영남(金永南)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21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용의가 있다면 대화로 통해 안보상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김상업위원장은 이날 오전 관공관수 대에서부터 8시 남북 장관급 회담에 참가 중인 정세현(鄭世顯) 통일부 장관(남측 수석대표)을 단독 면담한 자리에서 “(우리도) 최근 사태를 잘 지켜봐 오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북한의 권여자(權 여자) 국가수반직인 김상업위원장의 이날 언급은 지난 17일 미국 측의 ‘북한 핵개발 사인’ 발표 이후 북한 당국의 첫 공식 반응으로 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새로운 핵개발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북한의 화답대로 북-미 간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 4면>

7수석대표는 50명간의 만남에서 김상업위원장에 대해 불만을 표명한 방식으로 핵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 대변인인 이봉조(李鳳朝)대표는 브리핑에서 “북북한은 이 접촉에서 최근 제기된 문제를 대화로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우리가 핵 문제를 집중 제기했고 북측은 협상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 남측은 핵문제 외에 <북군포로·납북자 문제>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다음 2차 국장급간 회담 개최 문제를 집중 제기

했다. 양측은 방생 철도를 통해 22일 발표할 공동보도문을 작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핵 문제에 대한 북측의 직접 해명과 북-미 핵협의 준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보도문에 포함시키자는 우리 측 요구에 북측이 반발하고 있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회담 관계자는 전했다.

한반도 평양방송은 이날 “조-미 기본합의문은 그 핵심 사항인 경수로(輕水爐) 제장이 대폭 늦어진 것으로 해서 파기되느냐 미쁘느냐 하는 심각한 결정을 놓아 있다”며 대북 핵사찰 요구에 앞서 경수로공사 지연에 따른 북측의 진척상황을 보고 문제점을 먼저 북-미 간에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평양=공동취재단, 이영준 기자 yilee@joongang.co.kr

### 한겨레

2002.10.22(화)

# 남·북 “대화로 핵 조기해결”

## 정 통일·김영남 의견모아...북 고위층 첫 견해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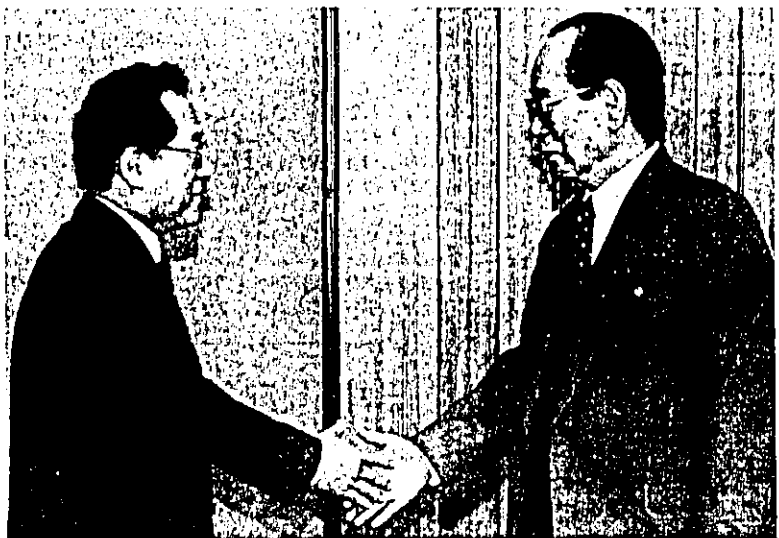
### 남북 장관급 회담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21일 정세현 남북 장관급 회담 수석대표와의 단독면담 자리에서 “미국이 조선(북측)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용의가 있다면 북도 대화로 통해 안보상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봉조 남북 회담 대변인이 전했다.

▶관련기사 3면

북한의 최고위 당국자가 지난 17일 북핵 파문 뒤 이와 관련한 견해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김상업위원장이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북-미 대화제동을 밝혔다. 이는 전에서 남북관계의 지속을 중시하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측은 또 최근 핵 파문과 관련한 (북측)영향을 받은 준비를 하고 있음을 강하게 비난하고 이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정세현 장관이 8차 장관급회담 시유제인 21일 오전 관공관수대에서부터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만나 최근 제기된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김수석대표는 이 자리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국민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이 문제로 한반도에서 안보상의 위기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측에 대해 조속한 시일 안에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최근 제기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위해 평양에 간 남북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왼쪽)이 21일 오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한 핵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근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발표대로 핵무기 개발 계획의 중재를 시인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북측은 이날 낮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 회담 뒤 발표할 공동보도문에 핵 파문에 대

한 북측의 직접적 해명과 제재나 합의 준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회담 관계자가 밝혔다. 그러나 북측은 회담 뒤 처음으로 핵개발계획 파문으로 야기된 국제 경제를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 이 문제를 둘러싼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2차 전체회의에서 북측 핵 문제 이외에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

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문제를 다뤄야 할 2차 국장급회담과 경험관련 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협의했다. 남북 대표단은 오후 들어 만수대장려사와 광양 지하정을 참관했으나 일부 회담 대표들은 참관에 나서지 않고 의견치를 좁히기 위한 실무대표 접촉을 벌였다.

평양/공동취재단,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 “美, 적대 철회맨 핵우려 해소”

## 北 김영남 위원장 “최근사태 심각하게 인식”

### 남북장관급회담 합의 도출 난항

美지원 중유 4만3천t 북송중

북한은 21일 핵개발 파문과 관련,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발언과 평양방송 보도를 통해 문제해결 의사를 밝히면서도 대북 적대정책을 먼저 철회할 것을 미국측에 요구해 북·미간 긴장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남측은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핵개발에 대한 북측 해명과 조치를 공동보도문에 명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측이 이를 거부,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관련기사 2·3·4·5면)

김영남 위원장은 만수대역사당에서 정세현 통일부 장관 등 장관급회담 남측 대표단과 가진 면담에서 “북한도 최근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미국이 우리에게 대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용의가 있다면 대화로 안보상 우리를 해소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핵개발 파문 이후 북측 고위 당국자가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장관관은 합동면담에 이어 김위원장과 약 50년간 북대할 해 두 시삽의 대화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측 대표단 대변인인 이봉조 통일부 정책실장은 “남북 양측은 면담에서 이번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면담의 전반적 분위기로 볼 때) 북측은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힐 준비를 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고 말했다.

평양방송은 제네바 합의문의 경우 북한과 미국이 세계에 선포한 공동의 약속임을 강조하면서 미국에 대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방송은 “미국은 합의문이 채택된 지



남북 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왼쪽)이 21일 오전 디톤 회담 대표들과 함께 평양 만수대역사당을 방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장관은 합동면담 후 김위원장과 50분간 독대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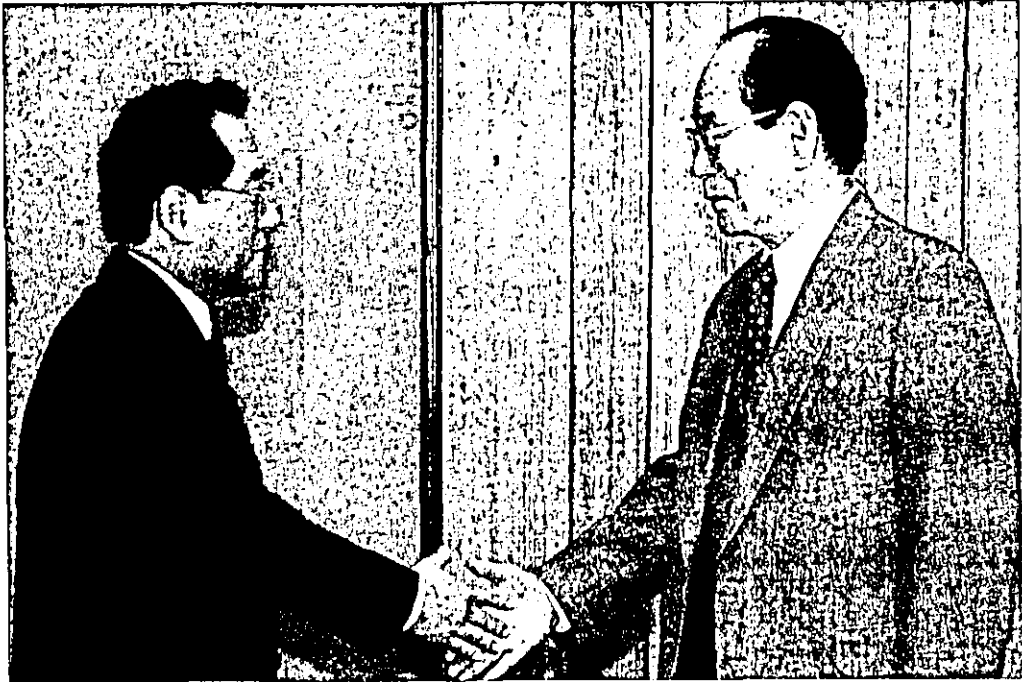
### 核실마리 풀릴까

8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출발선에서 맴돌고 있다”며 “지금 조·미 합의문은 그 핵심 사항인 경수로 제공이 대폭 늦어짐으로써 파기되느냐 마느냐하는 심각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남측 대표단은 인민문화궁전에서 북측과 2차 전체회의를 갖고 핵문제 해결과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제2차 국방장관회담 개최 문제 등을 중점 제기했다. 특히 남측은 핵개발에 대한 북측의 직접한 해명과 조치 약속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북측은 전전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관계자는 “제네바 합의에 따라 미국이 북한에 매년 지원하기로 한 중유 50만t 가운데 이날분 4만3000t을 실은 유조선이 지난 18일 황해남도 남포항을 향해 싱가포르를 출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7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연설을 통해 “안보에 대해 추후의 방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의 핵개발 등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위협은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창호기자 평양=공동취재단 protocol@kmb.co.kr



丁동일-김영남 악수 제8차 남북장관급 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왼쪽)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전 평양 민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北 “核문제 대화해결 용의”

## 김영남 언급... 美 대북적대정책 철회 요구

###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합의점 도출 난항

남북은 21일 평양에서 속개된 8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북측의 핵개발계획 폐문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난항을 겪었다.

남측은 이날 2차 전체회의와 실무대표 접촉을 잇따라 갖고 핵개발 파문에 대한 해명과 즉각적 조치를 북측에 요구하면서 이 문제를 공동보도문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북측은 이날 처음으로 핵 개발 파문으로 아끼던 국제 정세를 언급했으나, 진전된 입장을 개진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 관계자는 “우리 측은 공동보도문에 최근 핵 파문에 대한 북측의 직접적 해명과 제네바 합의 준수 등 구체적 사안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측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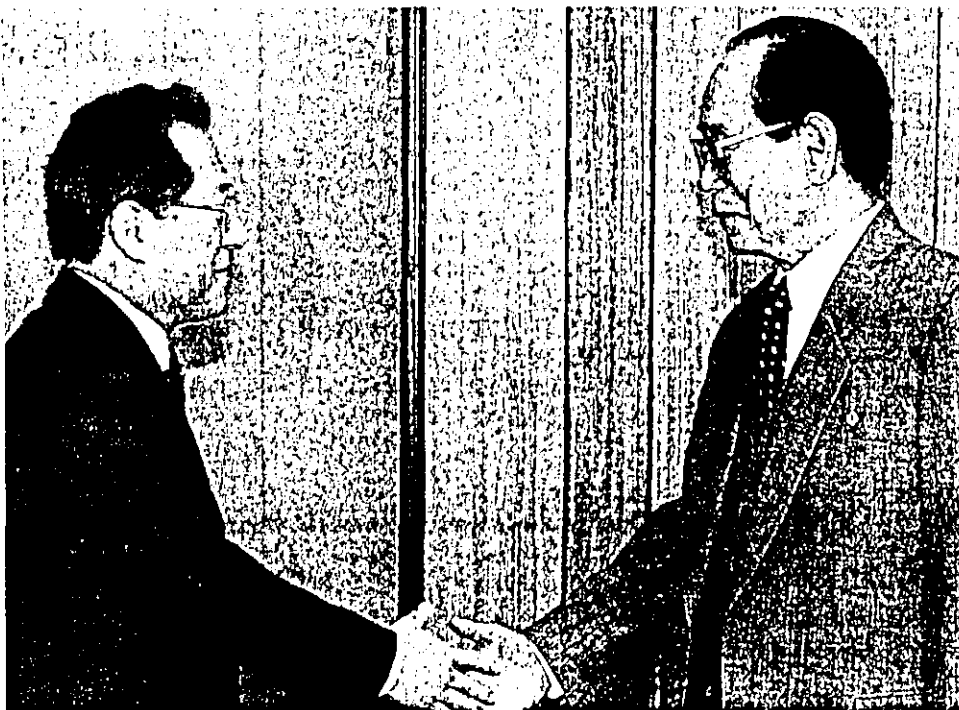
앞서 이날 오전 북한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민수대의사당에서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 등 남측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우리도 최근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미국이 우리에게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용의가 있다면 북도 대화를 통해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봉조(李鳳朝) 남측 회담 대변인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남측 대표단과 30여 분간 면담했으며 이어 정 장관과 김 위원장은 50여 분간 비공개 단독 면담을 가졌다.

정 장관은 면담에서 북한 핵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민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장관은 핵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남북 관계가 순조롭게 진전될 수 있다는 점을 김 위원장에게 집중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양 측은 이번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면담 전반적 분위기로 볼 때 북측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준비를 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남측은 김 위원장 면담 후 2차 전체회의를 속개했다. 회의에서 남측은 북한 핵 문제 외에도 국군포로와 남북자 문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외교축 문제를 다뤄야 할 2차 국안장관 회담 개최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평양=공동취재단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 중인 정세현 통일부장관(왼쪽)이 21일 오전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이날 만남은 예정에 없던 것이었다.

## “美 적대정책 철회해야 대화”

### 北 김영남 주장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의 남북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21일 오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金永南)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 북한의 새로운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진달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에서 안보상의 위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최근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정 장관은 이어 “어떻게 해야만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도 최근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

고 있다”며 “미국이 평화국에 대해 적대시 자세를 철회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도 대화를 통해 인보상의 우려 사항을 해소할 준비가 돼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북한 평양방송은 이날 제네바 기본합의문 서명 8주년을 즈음한 방송을 통해 “지금 조미 기본합의문은 그 핵심 사항인 경수로 제공이 대폭 늦어진 것으로 해서 파기되느냐 마느냐 하는 심각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평양=공동취재단

성동기기자 espril@donga.com

## 매일경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맨 오른쪽)이 21일 오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정세현 통일부 장관(맨 왼쪽) 등 남측 대표들과 만나 면담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北 “美 적대 포기뎌 대화”

## 김영남 첫 언급... 장관급회담 ‘核합의문’ 이견

北방송, 美 핵합의 이행 촉구

북한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21일 “미국이 북한에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동의가 있다면 대외를 통해 안보상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장은 이날 평양 만수대의 사당에서 제8차 장관급회담 남북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과 단독 면담을 갖고 김 장관의 북한에 대한 문제제기에 “북측도 최근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봉조(李秉弼) 남북대변인이 전했다. ▶관련기사 34면

김 위원장의 발언은 핵개발 프로그램 시인 파문 열세 만에 처음으로 나온 북측의 공식 행동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변인은 “양측은 이번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북측은 그러나 2차 전체회의와 실무대표 접촉에서 핵 파문에 대한 북측의 해명과 제네바 핵합의 준수 등 구체적인 시안을 공동보도문에 명시할 것을 제안하는 남북 요구에 대해 원만한 입장만 고수, 난항을 겪었다. 북측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합의문명사에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은 2차 전체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 외에도 국군포로와 남북사 문제, 군사적 긴장 완화 및 긴외구축 문제를 다뤄야 할 2차 국방장관회담 개최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반면 북측은 조속한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실시, 당국 차원의 개성공단 건설, 제수 인근 공해 정화문제를 포함한 남북 해운협정 체결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한 중앙방송은 이날 제네바 기본합의문을 북한과 미국이 세계에 발표한 공동의 약속임을 강조하며 미국에 대해 제네바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방송은 “미국은 합의문이 채택된 지 8년이 되는 오늘까지 아직까지 출범선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면서 “지금 조(北)·미 기본합의문은 그 험담 사정인 경우로 제동이 대북 늦어짐으로써 파기되는 나 마느냐하는 심각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평양 공동취재단·박복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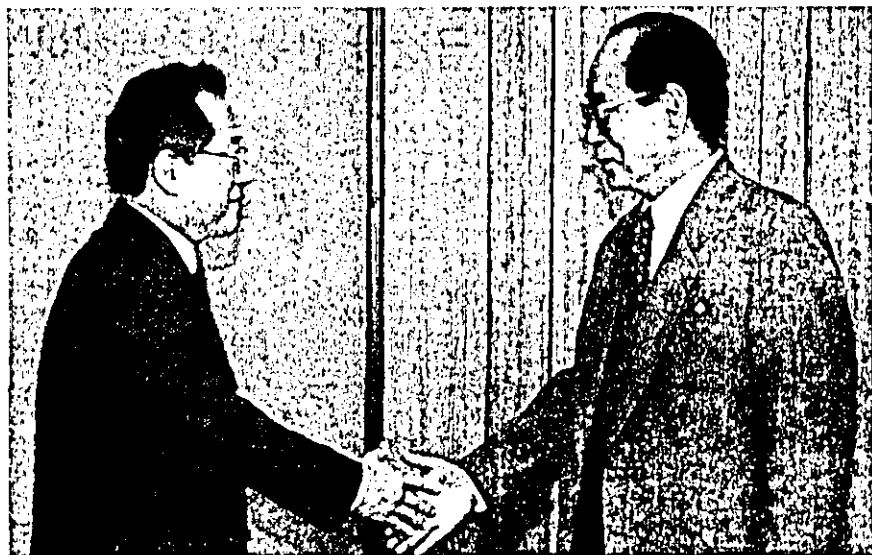
youngtan@kdaily.com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중인 남북 수석대표 정세현(왼쪽) 통일부장관이 21일 오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평양 순원진기자 angle@kdaily.com

### 朝鮮日報

2002.10.22(화)



◇丁봉일·김영남 면담

남북장관급회담을 위해 방북 중인 정세현 통일부장관이 21일 평양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北 “敵對 철회뎨 美와 대화”

## 김영남, 南대표에 밝혀... 최근사태 심각하게 인식

### 평양방송 “美가 합의 어기고 경수로 지연” 北, 장관회담 공동보도문에 核포함 거부

남북한은 21일 평양에서 속개된 8차 남북 장관급회담 2차 전체회의와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북한 핵개발 문제와 관련,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음에도 북측이 이를 공동보도문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 측은 최근 북한 핵 파동에 대한 북측의 직접적 해명과 재대미 합의 준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북측은 핵 문제가 궁극적으로 미국과 협상할 사항이라는 인식에 따라 공동보도문에 포함시키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력기자 A3·4·5면

이에 앞서 북한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우리 측 정세현(丁世鉉) 대표를 단독으로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 개발 문제와 관련,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용의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우리 측 이봉조(李鳳洵) 대변인이 전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이날 초 제임스 헬리 목사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 강시주(姜時柱) 외무상 제1부상이 말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우리측 단 개발과 이 계획의 시행을 미국에 대한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이 더욱 명확해졌다.

이봉조 대변인은 따르면 50분간에 걸친 단독면담에서 정세현 수석대표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와 국민의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로 인해 한반도에서 안보상의 위기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뒤 북측에 조속한 시일 내 대화를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최근 제기된 핵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이렇게 해야만 남북관계가 조속하게 진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근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미국이 북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용의가 있다면 북도 대화를 통해 안보상의 우리 사안을

해소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변인은 “양측은 이날 면담에서 최근 제기된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평양방송은 이날 재대미 합의 8주년(10.21)을 맞아 내보낸 보도에서 “미국이 경수로 공사 지연과 수리 등에 대한 적대시 정책 등으로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양=공동취재단 7張一益기자 ihwang@chosun.com

朝鮮日報

2002.10.22(화)

## 정세현-김영남 85분 회동 ‘核 해법’ 원론만 되풀이

### 남북장관급회담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인 21일에도 북측은 핵개발 비결과 관련된 남측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중립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날 오전 북한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중앙부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도 최근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해 북한이 평가 ‘대도표만’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기도 했다.

남측의 한 회담 관계자는 “불분명 감 상임위원장이 이날 ‘미국이 먼저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이라는 식으로 북한이 그동안 해온 주장을 되풀이하긴 했지만 북한 당국도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 전날 밤 ‘면담’ 전격통보

○...김 상임위원장은 이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상기시키며 정 장관에게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인사를 물었고 정 장관은 “매우 정력적으로 합동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은 당초 예정에 없었으나 전날 밤 북측이 남측 대표단에게 “내일 오전 만수대의사당에서 우리측(북측) 고위인사와 면담할 것”이라고 건기적으로 통보하면서 이뤄졌다. 속소인 고려호텔에서 만수대의사당까지 이동시간을 포함해 모두 30분이었던 면담

시간이 1시간25분으로 늘어나자 대표단과 취재기자단 사이에서는 언제 ‘원가 중요한 얘기가 오기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대두하기도 했다.

### 北방송 “美 협상전략 씨라”

○...북한 평양방송은 이날 낮 재대미 기념행의 8주년에 즈음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평양방송은 “우리 공화국은 지금까지 재대미 합의문에서 우리가 해야 할 비율 100% 이상 충실히 이행해 왔으나 미국은 합의문이 채택된 지 8년이 되는 오늘까지 아직도 출발선에서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은 또 “그런 처지에서 미국이 종착점에서 제기해야 할 핵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어찌구무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평양방송은 또 미국 언론의 기사를 인용하며 “레이건 이래 미국 대통령들은 외교적 흥정을 충분히 구사해왔다. 부시 대통령도 신임자들로부터 교훈을 찾고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을 향해 ‘협이 아닌 협상전략’을 구사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평양방송 보도는 17일 북한 핵개발 파문이 불거진 뒤 첫 번째 나온 북한 언론 보도이기도 하지만 중립 입장을 그대로 많은 수순에 불과해 북한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평양 = 공동취재단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 東亞日報

2002.10.22(화)



만수대창작사 방문

정세현 통일부장관(왼쪽) 등 제8차 장관급회담 남북 대표단이 21일 만수대창작사를 찾아 작품등을 감상하고 있다.

# 北 “대화로 핵우려 해소 용의”

## 김영남 위원장 밝혀...美 적대정책 철회 전제로

### 장관급회담 ‘핵과기’ 합의도출 못해

북한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21일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정책을 완화할 용의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이날 오전 만수대 의사당에서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 등 남북 대표단과 만남을 갖고 “북한도 최근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또 배석했던 남북 대변인인 이봉조(李鳳祖) 통일부 정책실장이 전했다.

북한 핵개발 때문 이후 북한 고위급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세관은 김위원장에 게 북한 핵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국민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관천기사 3-4면

또 핵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남북관계 안정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김위원장에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봉조 대변인은 “양측은 이날 만남에서 어떤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회담의 진반적 분위기로

미워질 때) 북측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준비를 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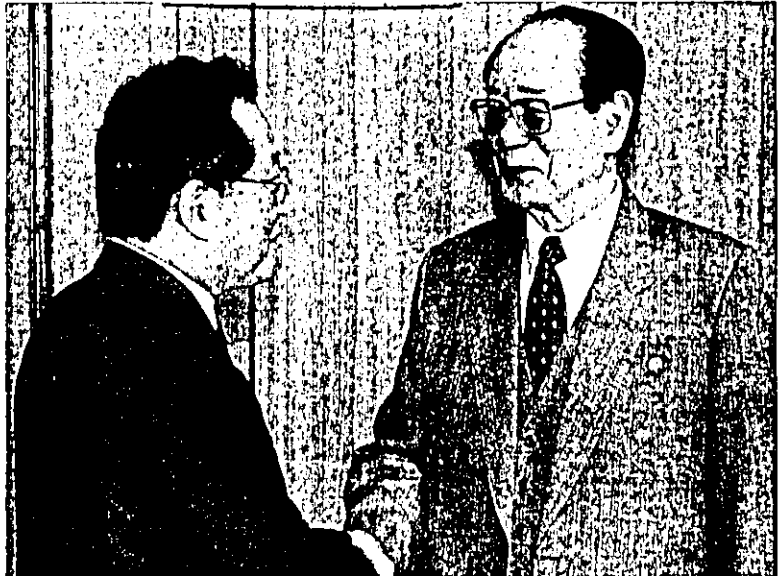
김위원장은 만남에 이어 평양 인민문화관에서 열린 남북 장관급회담 2차 전체회의에서 양측은 “최근 핵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과 제네바 합의 준수 등 구체적인 시안을 공동보도문에 명기하자”고 요구했다. 북측은 그러나 핵개발 때문으로 야기된 국제경제를 언급했지만 진정한 입장을 개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었다.

남북 대표단은 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합의점 도출을 위해 이날 밤 늦게까지 실무협상을 벌였다.

남측은 이와 함께 국군포로와 남북자 문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문제를 다룬 2차 국방장관회담 개최문 제 등을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북측은 김의 동생인 철도·도로의 조속한 연결공사 실시, 당국 차원의 개성공단 건설, 제주 인근 공해 문제 등 포함된 남북 해운협정 체결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 / 공동취재단·이흥욱기자  
www.ky@kyunghyang.com



남북 장관급회담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왼쪽)이 21일 오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평양 / 사진공동취재단

## 국민일보

2002.10.22(화)

### 정세현-김영남 50여분 ‘밀담’

#### 장관급회담 이틀째 이모저모 단독대좌 핵문제 깊숙이 논의 2차 전체회의 30분만에 끝나다

2차 남북 장관급회담 우리측 대표단은 회담 이틀째인 21일 아침부터 비편 발걸음을 계속했다. 우리측 대표단은 북측 내각 책임자인 김일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는데 이어 2차 전체회의에 참

석하느라 인민문화궁전과 만수대 의사당을 오갔다.

특히 회담대표인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김위원장과 오전 10시부터 50분간 꽤 긴 시간동안 예정에 없던 단독대좌를 하며 핵문제에 대해 깊숙이 논의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말담 내용은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이런 바람에 장관급회담 2차 전체회의는 오전 11시45분부터 열려 30분동안 간단하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끝났다.

대표단은 향후 한반도 경제의 가능성이 될 북한 핵개발문제에 대해 북한 최고위급 인사

와 논의한다는 부담감 때문인지 시종 어두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김위원장이 핵개발 시인으로 인해 야기된 국제경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내비치자 다소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장관급회담 2차 전체회의가 열린 인민문화궁전에서는 양측 대표단이 첫날에 비해 밝아진 얼굴로 서로를 맞았다. 정세관은 북측 김영삼 단장에게 “오늘은 어제 날씨보다 좋아졌는데 회담결과가 날씨를 따라갈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북측이 손님 대접을 해주느냐, 안해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빼앗는 농담을 건넸다. 이에 김단장은 “물어가실 때까지 대답을 잘해드릴 것”이라며 “날씨도 좋고 그래서 오늘 회담의 문을 더 크게 여는구나 생각했다”고 화답했다.

신정호기자·평양=공동취재단  
procol@kmb.co.kr

# “美서 北체제 보장하면 핵개발 중단 논의 가능”

## AFP, 北당국자 ‘대화해결’ 시사 보도 김영남도 “核문제 곧 입장표명” 밝혀

북한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21일 북한의 비밀 핵개발 파문과 관련, “핵무기 개발 파문을 대화로 풀겠으며 곧(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상임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25분부터 1시간 25분 동안 만수대의사당에서, 제8차 장관급회담 수석대표로 평양을 방문중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 등 남측 대표단과 단독 및 집단 면담 자리에서 “우리(북)도 최근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제기된 문제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면서 “미국이 북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용의가 있다면 북도 대화를 통해 ‘안보상 우려사항을 해소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3-4-5면)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북측의 핵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후 북측의 공식 입장표명이 나올 경우 핵파문은 돌파구를 찾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AFP는 이날 북한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은 미국이 체제유지를 보장해 준다면 그 대가로 핵무기 개발계획을 중단하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또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 계획 시인 사실을 공개한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대화를 통해 제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봉선은 강조했다.

평양방송도 이날 기본합의서 채택 8주년을 맞아 “제네바합의를 이행하며 조미 관계개선의 길로 나간다면 그것은 미국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되며 먼 훗날에 가서도 옳은 처사로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선 북측의 공식 입장표명 시기가 이르면 22일 회담 마지막날 있을 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봉조(李鳳朝) 남측 회담 대변인은 면담 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측에서는 핵문제를 또다시 집중 제기했고 김 상임위원장은 북측이 입장을 밝힐 준비를 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고 전했다.

/평양=공동취재단, 김준모·김수미기자 jnkim@sgt.co.kr



익수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로 평양을 방문중인 정세현 통일부장관(왼쪽)이 21일 오전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김영남 핵문제 발언 '진치' 남북 화해·협력 의지 담겨

### ■ 장관급회담 안팎

#### 핵과문 다른의제에 파장

#### 분위기 침체 전망 먹구름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1일 정세현 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를 만나 밝힌 핵 파문 관련 발언은 내용면에서는 새로운 게 없다. 그동안 북측 관영 매체들이 거듭 밝힌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면 대화를 통해 안보 현안을 해결할 용의가 있다'는 원론적 언급을 넘어서지 않았다.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관계자가 최근 밝힌 '일관타결' 방안 같은 나름의 '방안' 제시도 없었다. 그러나 남북 당국간 대화를 총괄 조정하는 중심협의체인 장관급회담의 와중에 남측 수석대표를 공식적으로 만나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비중은 다르다. 게다가 핵 문제에 관한 한 남측의 문제제기에 대해 '중상모략'이라며 맞받아치거나 모르쇠로 일관했던 과거와는 분명히 다르다.

김 수석대표와 김 위원장의 면담은 애초 30분 남짓으로 예정됐으나, 50분간의 단독 면담을 포함해 1시간 25분 동안 진행돼 자못 진지한 분위

기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핵 핵 파문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속도를 내왔던 남북 화해·협력관계의 분위기를 유지하겠다는 북측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이번 회담의 전망은 물론이고 남북관계의 앞날이 밝은 것은 아니다. 우선 남측은 회담 공동발표문에 최근 핵 파문에 대한 북측의 '직접적 해명과 제네바 합의 준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려고 하지만, 북측이 이런 남측 계획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북측은 최근의 핵 파문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던 1차 전체회의(20일) 때와 달리 2차 회의에서는 최근의 국제 경제를 언급하기는 했으나,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기존 자세를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난항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핵 파문의 여파로 다른 의제에서도 남북간 접근 방식에 차이가 엮였을 것이다. 남측은 전과 달리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2차 국방장관 회담의 필요성을 중점 제기했다. 악화된 어룡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측은 경제협력 과제에 초점을 맞췄다. 게다가 북측은 민간 사업으로 추진돼온 개성공단 건설 문제를 '당국 차원'에서 하자고 제의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남측은 핵 등 '안보현안'은 단기안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교류협력의 지속과 안보현안 해결이라는 병행 전략을 펼치려 하고 있고, 큰 틀에서 북측 역시 이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핵 파문의 먹구름으로 분위기는 매우 가라앉았고 회담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21일 제8차 남북 장관급회담 2차 전체회의를 마친 정세현 통일부장관(앞쪽 가운데)과 김영삼 북한 내각책임감사(앞줄 오른쪽) 등 남북 대표단이 민수대 창작사를 방문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丁통일·김영남 '50분 獨對'에 관심

## 南北 장관급 회담

남북한은 21일 북한의 핵 개발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이날 오전 우리 측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과 북한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시간55분 동안 확대 및 단독 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배석자 없이 이루어진 정세현·김영남 간 50분간의 단독 회담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 측 이봉조(李鳳祚) 회담 대변인을 통해 공개된 면담 내용은 김 위원장이 "최근의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대화를 통해 평화적 해결한다", "미국이 적대 정책을 포기하면 대화한다"는 게 고조이다. 양측 모두 철저하게 입을 다물고 있지만, 정 대표가 주로 이야기하고 김 위원장은 듣는 쪽이었다는 게 회담장 주변의 전언이다.

정 대표는 핵문제의 심각성에 대

해 강조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서라도 반드시 북측의 직접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북핵 문제는 미국과 협의할 사안이라는 인식 위에서 대화 여부는 미국에 달려 있다는 기조로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한은 이날 심야 접촉까지 계속했으나 북측이 핵 문제를 대화를

늘어났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언급에서 '핵'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최근 사태', '안보상의 우려 사항'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정 대표와 김 위원장의 면담이 예정보다 길어지자 남측 관계자와 취재진들 사이에는 "뭔가 중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기도 했다. 북측 내각 관계자들도 면담 과정과 결과 등을 수시로 상부에 보고하는 등 비관 모습을 보였다.

한편 남북 대표단은 남북한 간 합의 사항에 대한 논의를

## 丁통일 "核 심각성 강조... 北서 해명" 전언 北, 對話로 해결 원칙엔 공감... 문서화 반대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더엔 공감을 하면서도 이를 공동보도문에 담기를 꺼려해 문안 작업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우리 측 회담 관계자는 "첫째 의안(핵문제)에서 딱혀 다른 것들은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오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우리 측 정 대표와 김 위원장 간 면담은 북측이 전남(20일) 오후 전격적으로 요청해 이뤄졌고, 30분으로 예정된 면담시간도 55분 정도 더

계속했다. 우리 측 대표단은 북한 핵 문제 이외에도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문제를 다뤄야 할 2차 국방장관 회담 개최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제기했고, 북측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의 조속한 연결공사 실시, 당국 차원의 개성공단 건설, 제주 부근 공해 물과 문제 등을 포함한 해운협정 체결 문제 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평양=공동취재단 /張一柱기자 ihjang@chosun.com

# 매일경제

## "美 적대정책 먼저 철회를"

### 北 김영남위원장, 정세현 통일 단독면담

워싱턴 - 송현덕특파원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21일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공의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 안보상의 우려사항을 해소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의 우리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을 단독으로 만난 자리에서 "우리도 최근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우리측 이봉조 대변인이 전했다. >관련기사 4면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북측이 핵 프로그램 개발 사실을 사인한 후 첫 공식 발언이지만 중전 주장을 되찾아갈 수 있다.

이날 50분 간에 걸친 면담에서 정 장관은 북한 핵개발 계획으로 야기된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대화 개시 등 북측의 남측화 만한 조치를 촉구했다. 정 장관은 또 남측 정부와 국민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이 문제로 인해 한반도에서 안보상 위기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속한 대화를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 동향을 규명할 제네바 협정이 무효화한 것으로 보고 북측에 대한 경제적 압력 수단일 사정하했다는 주장을 분명히 했다. [ubsohn@mk.co.kr](mailto:ubsohn@mk.co.kr) [shyoon@mk.co.kr](mailto:shyoon@mk.co.kr)

# ‘北도 심각한 위기감 느낀듯’



## 북한 핵개발 파문

### • 김영남 발언으로 본 北입장

북한이 지난 17일 미국에 의해 북 핵개발 프로그램의 존재가 공개된 지 5일만에 처음 입을 열었다. 북한의 형식상 국가수반이자 권력서열 2위인 김영남(총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21일 “대화를 통해 안보상의 문제를 해결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 남측에 대화의지 설명은 큰 진전 구체 명시엔 난색...시간 필요할듯

핵이라는 단어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경관을 방문중인 제8차 남북 장관급회담 “제헌(丁世彦) 수석대표를 상대로 한 3인접을 감안할 때 사실상 공식 입장표명이라고 할 만하다. 경관방송도 이날 “핵사찰에 관한 문제는 조미 기본합의문(제네바 합의)이 이행되어 경수로 건설이 성과적으로 진척되면 그에 맞게 자연히 해결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영남 발언의 의미=김위원장은 이날 오전 반수에 의사당을 방문한 남측 장대표를 평안한 자리에서 “최근 사태에 대해 심각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용의가 있다면 대화를 통한 안보상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남측 장대표가 핵문제에 대해 한반도 안보상의 위기가 발생해서는 안되

며,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핵문제를 해결할 것을 북측에 촉구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북측은 이어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도 핵문제에 대해 “김위원장이 언급한 수준으로 이야기 했다”고 남측 이봉조(李奉勣) 대변인이 밝혔다. 이대변인은 또 “북측은 핵문제와 같은 의미로 ‘최근의 문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북측은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측 역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발언이다. 전문가들은 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북한의 위기 의식이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입을 모았다. 직접적으로 핵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제네바 합의 파기 및 핵개발 계획을 주장하며 일어붙고 있는 와중에 참



‘잡해봅시다’

21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남북 장관급회담 2차 전체회의에서 양측 대표단이 악수하고 있다.

촬영 / 사진공동취재단

북한 수반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측으로서도 또 대미(對美) 대화 장기가 단절된 만큼 남측측담을 통해 자신들의 뜻을 간접 전달하는 것도 염두에 두었을 법하다. <향후 북한의 태도=대화를 통한 해결의지를 내비쳤지만 북한이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파격적인 해법을 내놓을 것 같지는 않다. 북측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용의가 있으면”이라고

탄색을 밝혔다. 미국이 선(先) 핵제거를 주장하며, 사실상 문을 열어놓긴 한 상황을 감안하면 북측이 이런 단서를 붙인 것은 사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북측은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에 최근 핵과정에 대한 직접적 해결과 제네바 합의 준수 등 구체적 사안을 명시하자”는 남측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북한이 권력 2인자의 입을 빌려 대화의지를 표시한 것은 주

목할 만하다. 서종만(徐宗晩) 정치대교수는 “북측도 사안이 심각한 만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북측이 막연한 수준이라도 남측에 대화의지를 설명한 것은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서교수는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에 대한 본격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 내지는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윤복기자 yoonbok@knhg.hang.com



남북대표단 만수대 방문 제8차 장관급회담 2차 전체회의를 마친 남·북 대표단이 21일 평양 만수대 장군사관학교를 방문, 직공들을 격려했다. > 관련기사 2면 / 사진공동취재단

## 한국경제

2002.10.22(화)

# 北 “사태 심각하게 보고 있다”

## 북한 핵 파문

### 김영남 발언 의미

및 새 동맹 국제사회의 맞 이슈가 돼 있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평양 측이 21일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장관급 회담 남북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다. 평양방문도 비슷한 시간 북-미 기본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도를 했다. 북측이 대화에 무게가 실린 해법을 제시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제네바 합의 준수할 것이다”=소장인위원장은 “대화를 통해 안보상의 문제점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며 회해 제스처를 보였지만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포기”란 단서를 달았다. 언뜻 보면 이달 초 헬리콥터의 방북 때 강석주(姜錫柱)외무성 제1부장이 건넨 북측의 기본 입장과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 측이 기정사실화한 ‘핵 비밀개발’에 대해서는 ‘확인도 부인도 없는’(NCND) 입장을 취했다. 남북 회담 관계자도 ‘북한이 핵을 시인한 것으로 봐도 되나’는 기자 질문에 “말 그대로”며 확대 해석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소위원장은 또 “최근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발언해 핵개발 시인 발언이 가져온 파장에 대해 북측이 건장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결국 소장인장 발언은 핵가도의 효용성은 남겨둔 채 국제사회의 파장을 진정시키는 의변진원을 시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평양방송이 북-미 기본합의 8주년을 맞아 이날 “우리에게 미국의 위협이나 허세가 통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도 “합의를 1백% 이상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강조한 점도 깊은 맥락이다.

북측이 장관급 회담에 참석한 남북 대표단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한 것은 미국에 자신들의 진의(眞意)를 전래할 것을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해법 내놓을까=소장인위원장이 핵 파문을 지칭하지 않고 ‘안보상의 문제’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쓴 대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핵문제와 함께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 체제 보장과 관련된 의제를 집중시켜 큰 틀에서 해



제8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 중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右)이 2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북측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국제사회 파장 의외로 커지자 긴장 대화 모색하며 시간벌기 겨냥한 듯

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판단이 아직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김국 북측의 수습 노력은 1차적으로 미국측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영대(鄭永泰)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미국과의 구체적 협상이 이뤄지면 무라남 농축이 미국의 경수로 지연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주장하며 북-미 대화의 재개를 도모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이 시인한 핵개발 사실의 폐기 없이는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역시 현 단계에서 제네바 합의 폐기의 구체적 대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데서 핵문제에 관한 북한의 명확한 입장을 지켜보자는 자세가 엿보인다.

북-미 양측은 상당 기간 탐색을 거쳐 본격적인 대응 핵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영종 기자 yilee@joongang.co.kr

문제는 북측의 이같은 의도를 미국 측이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19일 평안남도 제암시 헬리콥터

### 장관급 회담 스케치

정세현 남북 수석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만수대의사당(남측의 회담에 해당) 2층 한 회의실에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북측 관계자는 “이 회의실은 이달 초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 제임스 헬리콥터 미 국무부 동유럽담당 차관보가 소위원장을 만났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면담은 단초 30분 정도로 잡혔

## 丁-金 면담시간 길어지자 ‘중대 논의’ 관측 나돌기도

지만 한 시간이 더 길어졌고, 면담장 주변에서는 ‘뭔가 중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면담이 길어지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관측이 무성하게 나돌았다.

북측 관계자들이 면담 도중 수시로 내용을 상부에 보고해 한때 면담장 주변이 긴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면담이 끝나고 오

전 11시 40분에 열린 남북 장관급 회담 2차 전체회의에서 양측은 전담과 미찬가지로 남북 얘기로 핵문제에 대한 예봉(銳鋒)을 비켜갔다.

대대표가 “어제보다 남씨가 좋아졌는데 회담결과가 날씨를 따라 갈 수 있을지 전적으로 북측 대표단이 손님대접을 어떻게 해주는가에 달려 있다”고

운을 때지 김영성(金榮成) 북측 단장은 “오늘 남씨가 좋은 길 보니 이번 회담에서 좋은 합의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늘이 미리 알려주는 것 같다”고 응수했다.

이날 회의에서 남측은 최근에 제기한 북측 핵문제와 함께 국군포로-남북자 문제, 2차 국방장관 회담 개최 문제 등을 제기했다.

이에 북측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개발 등을 의제로 제시해 핵문제를 예외로 피해갔다.

평양=공동취재단, 고수석 기자 sskom@joongang.co.kr

# 정부, 對北외교압박에 동참

## 北 핵개발 계획 충격

### 北核대응 입장변화 조짐

정부가 21일 제네바 합의의 실효를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으며 26일 역시로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북한 핵개발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지금까지 제네바 합의 실효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을 유보해 온 데 비춰보면 북한 핵 개발 문제에 대한 입장변화일 수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문제해결을 위한 북한의 전향적 태도여부가 전제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에서, 스스로의 전략적 태도변화를 추구하는 대북 메시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또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입장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제네바 합의의 실효 고수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미국에서 잇따라 합의 폐기설이 제기되자 이를 강력히 반박하며 제네바 합의 파기가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밝히는 데 주력해왔다.

20일에는 뉴욕타임스가 미 정부의 고위관리를 인용, "제네바 합의 폐기 경향을 보도한 데 대해 북·미·일 외교부의 고위관계자들이 즉각 나서 '단종의 주정반을 들고 온 모양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나도 압을 받았다. 불과 몇 시간 뒤 줄곧 바깥 미 국무장관이 방송에 출연, '합정의 두 당사자 중 한쪽이 무효화를 밝히면 합의는 파기된 것'이라고 언급한 뒤에도 최창익(崔成益)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서 "북한의 무효화에 따라 미국도 그와 관계에 볼 수 없다는 취지이지 폐기 입장을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

했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이날 오후 방한한 다카 키노시(田中) 일본 외무성 이주대평안국장과의 합의를 미룬 뒤 바뀌는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측과의 협의가 끝난 뒤 "20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는 제네바 합의의 존

폐나 보완책 마련을 포함한 대응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 키노시의 발언은 3국 정상회담을 앞둔 한일 양국 입장조율을 위한 것이었는데, 여기서 반드시 제네바 합의 유지에 얽매지 않겠다는 방향이 정해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남측은 "제네바 합의는 북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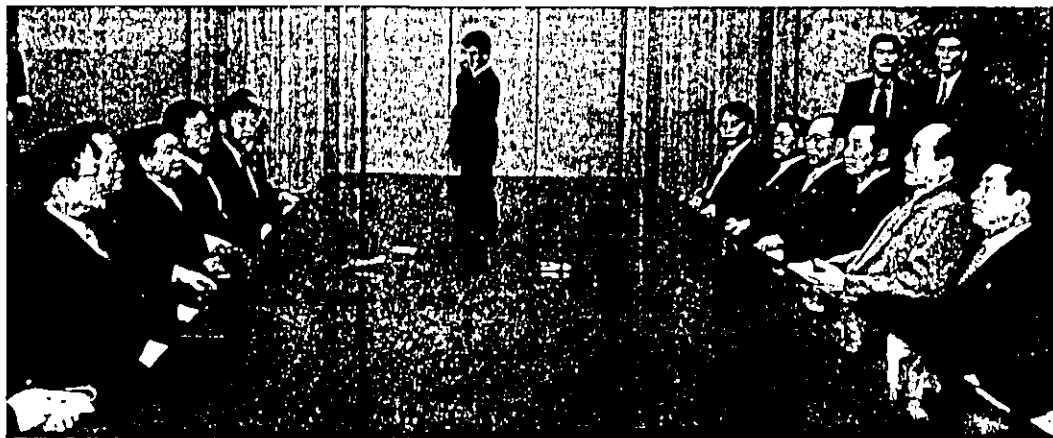
여 동경과 경수로 지원금 교원인 것으로 핵 동맹을 위한 상황에서 제네바 합의를 유지할 수만은 없는 것이냐"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제네바 합의의 실효를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쪽에 강조점을 둘 상태는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북한의 태도를 더 지켜봐 한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제네바 합의 처리 문제는 한·미·일 합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것만이 확실한 입장"이라며 "판단을 내리기까지는 아직 충분한 협의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이진동기자 jaydee@hk.co.kr

### 日과 합의후 "모든 가능성 열려"로 바뀌

### 26일 APEC 정상회담이 최대 고비될듯

### 정부 "核합의 폐기는 미정"… 北태도 주시



제네바 남북 장관급 회담 남측 대표단이 21일 오전 방한 인수대 의사당에서 김영남(오른쪽 두번째)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방안·사진공동취재단

# 北, 카드 안꺼내고 협상만 암시

## ■ 김영남 "대화용의" 발언

### 北, 위기감 느낀듯 "최근사태 심각"

### 美입장 강경… 대화할마리 불투명

북한은 21일 제네바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처음 핵 개발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위기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은 남측과의 직접대화를 통해 위기감의 완화를 모색하려는 분위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북·미·일 3국 정상회담 제네바 핵 합의의 실효가

속 불투명해졌다. 북한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날 정세현(丁世鉉) 남측 수석대표에게 "우리도 최근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미국이 적대적 강硬的 정의를 용의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 안보 상의 우려사항을 해소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남측이 북한에 개방 계획으로 이끈 위기 감소를 상정하고 제네바 합의 등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도록 강요의 촉구를 온 점을 감안하면 이날까지 북측의 반

응은 완화된 수준에 그친 것이다.

하지만 북측의 언급에서 안보 상의 위기감과 함께 대화의지가 감지되는 부분은 그러나 긍정적 측면으로 평가된다. 핵 개발 계획을 정면 부인하거나 미군 철수를 기존 입장을 회피하지 않은 상황도 북한의 추가 입장 표명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북측의 입장은 핵 개발 지향에 있어 미국과 대립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제네바 합의의 무효화를 선언함으로써 대외 대응 원칙을 밝힌 것은 이날 첫 발언을 발표한 제네바 회담이 국

무부 등이 태어난 차관보와의 협상에서 제네바와 평화협정 체결 등을 조건으로 일괄타결을 시도한 것과 상충하는 부분이다.

문제는 핵 개발 계획의 폐기가 선행되지 않으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이 워낙 확고하다는 데 있다. 여기에는 40년간 양 정부 패처럼 북한의 비핵화 공진에 맡겨둘지 않겠다는 부사 행정부의 대북 강경론이 자리잡고 있다. 북미 양측이 대외 대응 원칙에는 접근하고 있지만 당장 핵합 일타리를 찾기 힘들 것은 이 때문이다.

북한은 일단 관망자세를 취한 뒤 한·미·일의 대응책이 마련된 뒤에 구체적인 입장을 드러낼 공산이 크다. 결국 어떤 남북장관급 회담을 통해 중재자로 나선 정부측은 관측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이진동기자 jaydee@hk.co.kr

# 丁통일·김영남 50여분 獨對

## 장관급회담 이틀째 표정

제8차 남북장관급 회담 이틀째인 21일 회담장 주변을 남북 수석대표인 정세현(왼쪽) 통일부장관과 북측 김영남(金永南)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남북으로 만나 해 분계할 논의라는 등 분위기가 분위기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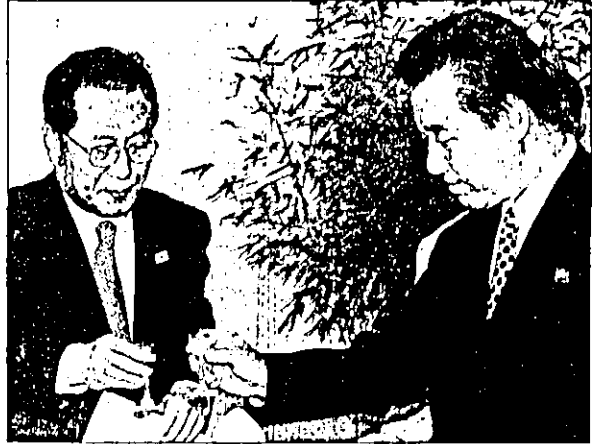
오후에는 남북이 모든 직장에 관하여 있다거나 북측이 권 국원급회담장 표정에 고집하는 분위기 등이 나타났지만, 장 장관은 면담에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과정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한다"고 강조해 말도 있는 분위기가 있었음을 내비쳤다.

## 北이 요청... 南 "분위기 진지" 환송만찬은 차분함속 진행

남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9시25분께 북측의 요청으로 민수대 의사당을 찾아 김 위원장을 만났다. 남측 30인 단원이 접혀 있어 '의례적 만남'이 예상됐지만 김 위원장은 1시간25분 동안 남측 대표단과 함께 했다. 특히 김 위원장과 장 장관의 비공개 면담이 50여분간 이어지자 남측 관계

자들은 "해 문제에 대한 중대 논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면담이 끝어진 뒤엔 20여분으로 줄어든 전체회의에서도 언급은 남쪽에 몇몇 국명을 건네며 직극적으로 회의를 내렸다. 장 장관이 "남측이 동의했다"고 말을 꺼내자 김 위원장은 "우리는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회답했다. 장 장관이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논의사항을 다발로 풀어내자"고 제의하자, 김 위원장은 한화방장(棉花方) 성이 화 민들이 한창 지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왼쪽) 통일부장관과 북측 김영남 단장이 21일 저녁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환송만찬에서 다소 굳은 표정으로 건배를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북한 핵 관련 일지

- 1991년 12월 31일 남북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 92년 1월 30일 북·KEDO 전연간조치협정
- 93년 2월 10일 IAEA, 미신고 시설 2곳 특별사찰 수용촉구
- 3월 12일 북, NPT 탈퇴 선언
- 94년 6월 15일 차이 카터 전 미대통령 방북
- 10월 21일 제네바 기본합의문
- 95년 3월 9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협정
- 12월 15일 북·KEDO 경수로공급 합성
- 97년 7월 28일 KEDO 금호사무소 개설, 부지공사 착수
- 99년 5월 18일 미국, 금정리 방문단 현장방문
- 2000년 2월 13일 경수로 본공사 시작
- 7월 12일 북·외우성 대변인, 전역손실 보상 촉구
- 2002년 6월 12일 합남 금호지구 경수로 콘크리트 기반 착공식
- 10월 3-5일 제삼자 없이 북사방북, 북 핵개발계획 시연

남어리는 말로 충성했다.

남측 관계자는 전체회의 후 북측 임의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남아 있지 않다"고 회답하며 회담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말해 회담 과정에서 모종의 메시지가 오가지 않았다. 이는 추측도 될 수 없었다.

속소안 코리도르에서 열린 환송만찬은 차분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일부 북측 관계자들은 남측 대표단을 맞아 "회담 진전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남측의 반응을 다진하기도 해 직장이 긴장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평양=공동취재단

## "국회만 가면 軍기밀 샌다" 국방부 곤혹

### 軍 "특단대책 세워야"

"국회만 가면 비밀이 풀릴 샌다" 국방부는 21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국방위에서의 보고 내용이 공개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협조내용이 '고 의적으로 간주'된 것 치밀 포장돼 언론에 유출됐기 때문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그런데도 의원에겐 비공개로 전체로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언론에 전달되고 전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동안 비공개로 국회에 보고했던 군 기밀이 언론에 새나간 것은 한 두 건이 아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의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한 기밀을 국회에서 유출하는 것은 일종의 범죄"라며 "이번 국회에 북측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평양=공동취재단

# “北도 南의 핵우려 잘알아”

## 이봉조 南대변인 단담

제8차 남북장관급 회담의 이봉조(李鳳朝) 남측 대변인은 21일 김영남(金永南)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면담결과를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북측도 핵 문제를 이번 회담의 의제로 보고 있지 않나.

“지금 남북간에 논의되고 있는 문제는 다 의제다. 제기된 문제는 양면 관심도 높고 양면 문제가 해결에 단념이 나타나지 않는 중요한 현안이다.”

—김영남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표현과 관계 없이 우리 측이 핵 개발 문제를 제기했고, 북측이 남

## “北·美간 핵입장정리 조금 더 시간 걸릴것”

을 하고 있는 것이 최근 국제 사회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북측의 반응이다. 북측은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다. 북측도 '핵 문제와 같은 최선의 문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자주는 아니지만 사용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은 어떤 의도로 보는가.

“핵 문제에 대해서 북미간 문제는 입장정리할 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돌아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평가할 수 있다.”

—핵문제에 대한 남측의 목표치는 무엇인가.

“북측이 제반 규정을 잘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남북한 평화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오늘 김영남 면담에서 대통령 친서나 구두 메시지가 전달됐는가.

“없다. 북에서 전달해 온 것도 없다.”

—김 위원장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해감해야 한다는 전체조건을 걸었다.

“북측의 원칙적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한다.”

—북측이 핵을 사인한 것으로 보면 된다.

“말 그대로다.”

/평양=공동취재단

# 北 '평화 해결 美와 담판' 의도

## ■ 남북장관급 회담 안팎

북한이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참석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남측 대표단에게 최근 국 재사회에 피장을 일으킨 '핵개발 피담'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일단 전진할 것으로 평가되지만 '핵포기' 의사를 즉각 밝히지는 않았다.

특히 장관급 회담 공동보도문에 핵 관련 부분을 놓치는 남측의 제언에 난색을 표지했다. 핵 문제는 북-미간 협상대상이라는 북측의 생각이 깔려 있다. 북한 핵문제가 대외로 해결되기까지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측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21일 정세현(丁世顯)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남측 대표단을 면담한 자리에서 옛세간의 침묵을 깨고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이라는 전제상 담판 했지만 대화 해결의 뜻을 밝혔다. 북한이 대화의 문

## 김영남위원장 美와 대화 의사 간접표명

### 北 선결조건 - 美 사찰요구 협상이 관건

한 평화적 해결의지를 미국 또는 중국이 아닌 남측 관계자들에게 먼저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핵문제 해결에 있어 남측을 미국과의 대화 불모지로 만들기 위한 협조자 또는 중재자로 인식하고 구체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남측의 의도에 따른다. 이번 면담이 20일 오후 북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는 사실은 이러한 관측에 무게를 실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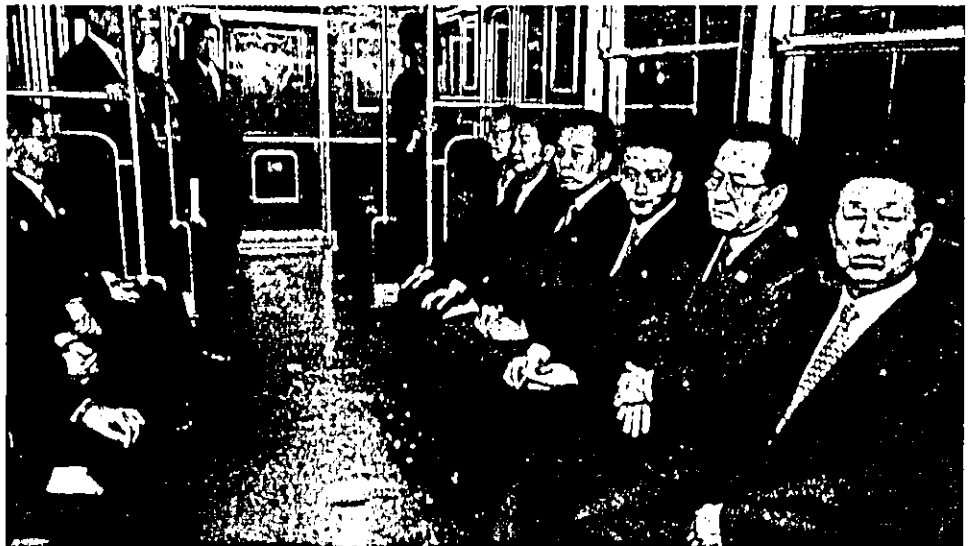
여기에 이날 평양방송도 미국측에 대해 제네바 핵합의 준수할 촉구했다. 미국측에서 제네바 핵합의 파기 또는 중유제품 중단 등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은 제네바 핵합의 파기가 북측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화를 위한 명분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북측이 ▲경제제재 해소 및 경제작 지원 ▲북한의 체제보장 등 미국 부사장

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울 경우 부조진적인 핵사찰 수용을 내거는 미국과 정면으로 충돌해 북-미 대화는 단기간 열리기 힘들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같은 맥락에서 남측이 핵개발과 관련해 북측의 직간접 대명과 제네바 합의 준수할 장관급 회담 공동보도문에 비교 낯지고 요구한 것은 북한측에는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강경반여기와 남측의 여론 등을 감안할 때 우리 대표단으로서도 강하게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핵문제로 남북장관급 회담 자체가 난항 형태로 가는 셈이다.

●박복삼기자 youngtan@kdaily.com



지하철 동승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중인 남측 수석대표 정세현(오른쪽 두번째)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대표단이 북측 대표단과 함께 21일 오후 평양 지하철역을 방문. 지하철을 타고 있다. ●평양 순원현기자 angler@kdaily.com

1993	3.12	북한 핵 실험금지조약(핵포기)발효 선언
	12.3	북-미 핵무기 폐기를 위한 비공식 접촉 시작
1994	6.15-17	고종실 차기 차관 파격내정 불허가 폐교 중단
	10.21	북-미 핵포기 관련 협상 발표
1995	1월	미국 대북 경제지원 일시
	12월	제9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서 서명
1996	4.7	미국과 인도네시아가 북한에 국제통화 기금
1998	8월	북한 당국자 10명 연이어 사임(대사단)
1999	5.25	남-북 핵포기 관련 협상 중단 발표
	8.25	▲대통령 김대중 취임식 당일 남북 정상회담
	8.24	북-미 핵포기 협상 시작(남측이 제안)
2000	8.13	남북 정상회담 합의서 서명
	10.8	조영태 차기 통일부 차장으로 임명(공화당) 발표
2001	2.21	북 핵무기 실험을 위해 핵 실험장 건설 계획 발표
	3.2	북 국무위원회 차기 대변인 임명(대사단) 발표
	3.3	북 국무위원회 차기 대변인 임명(대사단) 발표
2002	8.13	북 핵무기 실험 '핵실험장 폐기 합의서'
	8.16	도널드 럼즈펠드, '핵 포기를 보장' 발언
	10.2-5	북미 정상회담 및 제12차 남북 정상회담
	10.17	북측 핵 실험장 건설 중단 발표

## ■ 남북장관급회담 이모저모

### 김영남·정세현 50분 '독대'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2차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서도 김남과 미장관자료를 남북 수석대표간의 미묘한 신경전을 계속했다. 다만 첫날의 낯선 분위기는 많이 가라앉고 기대수준에 가까워져 있었다.

정세현(丁世顯) 남측 수석대표는 "남측은 어제보다 좋아졌는데 회담 결과와 남북 협상을 따라갈 수 있을지 북측이 손님 접대할 여망에 대해 우려가 있었다. '민심' '신분' '보따리' 등 장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영남 북측 수석대표는 "우리가 장 때까지 상대를 잘

해줄 것이다."고 김장 회답하면서 '평화방향(北北方向)'이라는 다소 엉뚱한 표현을 쓰며 회담이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심 방향'은 남방에 모인 생활의 자리라는 모양을 말한다.

●어제 앞서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만수대 의사당에서 남측 대표단에게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안부를 묻는 등 반갑게 맞아줬다. 이에 남 수석대표는 오는 20일부터 백지교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등 일

정을 알려주며 "매우 정력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날 김 상임위원장 면담에는 김영성 북측 수석대표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30분 단 체면담 뒤 진행된 정 장관과의 독대가 예초보다 길어져 50여분간 이어지자 로비에서 기다리던 남측 관계자들은 "뭔가 중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 짧은 길과 나오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남측 대표단의 김 상임위원장 면담 시간은 당초 30여분으로 예정됐으나 단체-단체 등 모두 1시간25분 동안 이뤄졌다. 남측 대표단은 북측 안대건의 설명을 들으며 만수대 의사당 대회의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남측 대표단은 이날 2차 전체회의를 미친

뒤 오후에는 만수대 참석사와 지하철 부흥역사 시설 등을 둘러봤다. 이들은 고려호텔 연회장에서 한송 반찬을 함께했다.

만수대참석사 주수영, 시장의 안대로 참작사와 전사관을 차례로 둘러본 정 장관을 비롯한 남측 대표단들은 도자기의 수북화 등을 구입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후 지하 150m 에스칼레이터 시설을 자랑하는 부흥역에서 영안역까지 한 구간을 지하철로 이동했다.

하지만 남측 대표단장 이봉조(李鳳朝) 대표와 서영교(徐永效) 대표는 정남치럼속소에 안에서 심무점점 및 공동보도문 분안 등을 준비했다.

●평양 공동취재단-박복삼기자 youngtan@kdaily.com

# “北 시인은 화해의 눈짓”

핵카드로 경제위기 극복·對美관계 개선 새 전략

## 워싱턴 포스트·NYT 분석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와 뉴욕 타임스가 최근 일제히 북한에 대해 시인들 '내화 눈짓'으로 대항해 한다는 분석을 내렸다. 두 신문은 경제적으로 강권 수호와 경제제재를 위한 대미관계 개선이 결합된 시정부터 북한의 화해시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관계는 오히려 악화되고 경제위기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미국 및 유엔 내외부로 끌어내게 되며 '내 카드'를 꺼내자는 것이다.

○제네바 협의는 미국이 먼저 어겼나? -워싱턴포스트는 북한 시가에서 한 때 제네바 협의를 미국이 먼저 어겼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평가했다. 한편 도에너시게발가구(이태희) 산스 카드만 시부족장은 "북한에게 제네바 협의의 이면이 담긴 백담은 대미 화해관계가 경제 위기로 촉박에서 정당화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들 북한이 미국에 대해 갖고 있는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공격했고, 대공포 공격을 남한에 주둔시켰으며, 김포대공포로 북한 대남 공격을 중단이 강제된 기간 강령을 적었다.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이같은 두려움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북한 정정체제를 도입했다고 이태희는 말했다.

그러나 부시 정부 출범 이후 유리라고 다음 시정을 지시하라고 재평가 받은 관계가 악화되자 북한은 미국에 대해

마음의 눈 어둠이 되고 있다. 북한이 이한 조 북-미회담에서 스마리아 북한에 대해 경제공격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고착된 강압을 인정하고 스마리아 권위 조약을 체결하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에서도 이같은 화해가 드러난다.

신장은 북한이 자국의 안전과 경제위기를 보충하기 위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고 '내 카드'를 꺼냈지만 이는 북한의 오만이라고 분석했다. 부시 행정부가 이한 수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의 새 전략은 '술직한 시인'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핵개발 계획 시인이 일방적 당시 시가과 같은 백담에서 나온 예외라고 판단했다. 1990년대 후반 초연공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되면서 북한은 경제 패스트로 있었다. 기부로 최대의 직인 미국은 유망 강대국이 됐으며 경제제재인 남한과도 경제 격차가 갈수록 벌어졌다.

우방을 잃은 상태에서 갈수록 갈수록 북한은 경제위기로 북한은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바로 '술직한 시인'이라고 신장은 평가했다. 경제위기를 위해 전심한 대외경제인 일본과 미국에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원을 재시함으로써 대외의 화해할 조건이라는 것. 국제관계 분석가인 윌리엄 로버트슨은 북한, 행동에 대해 "미국이 가장 큰 인연과 관계 정상화만 약속하면 핵무기 논쟁을 잠깐 중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태경출판사 wjlae@kmb.co.kr

# 국민일보

2002.10.22(화)

# 대한매일

2002.10.22(화)

제8차 장관급회담 남북 대변인의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정책실장은 21일 2차 전체회의가 끝난 뒤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면담 결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이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 ■ 이봉조 남북대변인 문답

●북측도 핵 문제를 외제로 보고 있다.

지금 남북간에 논의되고 있는 문제는 다 의제다. 제기된 문제는 국민 관심도 높고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현안이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구체적으로 '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표현과 관계없이 우리측이 핵 개발 문제할 제기했고, 북한이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이 최근 국제사회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북측의 반응이다. 북측은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다. 북측도 '핵 문제와 같은 최근의 문제로'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자

## “核문제 해결 시간 더 필요”

주는 아니지만 사용하고 있다. ○2차 전체회의에서 북측이 핵 문제에 대해 어떤 답을 했다.

조금 전 회의에서도 김영남 상임위원장 면담시에 언급한 수준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다.

○일괄타결 외지로 보나.

핵 문제에 대해서 북-미간 문제는 입장 차이를 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여기서 그 문제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돌아가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할 수 있다.

●핵 문제에 대한 북측의 목표치는 무엇인가.

북측이 제반 규정을 잘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납득할 만한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북시 오늘 김영남 위원장 면담에서 대통령 친서가 전달됐다.

없다. 북에서 전달해온 것도 없었다.

●김영남 위원장이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전체 조건을 걸었는데.

북측의 원칙적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북한이 핵을 시인한 것으로 보면 되나.

(확대해석하지 말라는 뜻으로) 맞 그대고다. ●중앙 공동취재단



남북장관급회담 부대표 대변인 이봉조(중) 통일부 정책실장(가운데)이 2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우리측 대변인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면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중앙=사진공동취재단

# 北-美 입장차 커 시간 걸릴듯

## 이봉조대변인 일문일답

면담에서 알려고 있는 남북장관급회담의 남측 대변인 대변인의 이봉조 통일부 정책실장은 21일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측과 대변인에게 대항해 한다는 분석"을 내었다. 이봉조는 "북측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것이 핵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관계는 오히려 악화되고 경제위기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미국 및 유엔 내외부로 끌어내게 되며 '내 카드'를 꺼내자는 것이다.

●북측도 핵 문제를 외제로 보고 있다.

지금 남북간에 논의되고 있는 문제는 다 의제다. 제기된 문제는 국민 관심도 높고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현안이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구체적으로 '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표현과 관계없이 우리측이 핵 개발

문제할 제기했고 북측이 답을 했다. 북측도 최근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북측이 최근의 문제라는 표현을 핵 문제와 같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김영남 위원장이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전체 조건을 걸었는데.

북측의 원칙적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북한이 핵을 시인한 것으로 보면 되나.

(확대해석하지 말라는 뜻으로) 맞 그대고다. ●중앙 공동취재단



# 제네바합의 폐기·개정 포함 정부, 北核 다각대책 검토

## 韓美日 곧 조율 “합의유지” 입장 변화조짐 주목

정부는 21일 북한 핵 개발 계획과 관련,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의 폐기 및 개정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한·미·일 3국간에 집중적인 조율을 펴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저녁 방한한 다니카 히토시(田中均) 일본 외무성 아후태평양국장과의 긴급회의를 마친 뒤 “제네바 합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한·미·일 3국은 제네바 합의의 유지, 폐기 및 보완여부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북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북한이 핵개발 문제에 대해 양수 일이나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3·4·5·12면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북한의 방화한 진의가 밝혀질 때까지 제네바

합의는 고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의 선례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에 따라 26일 멕시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APEC)와 한·미·일 정상회담과 이에 앞서 24일 개최되는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제네바 합의 존폐 여부를 포함한 다각적인 공동대응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진의가 파악될 때까지 제네바 합의 처리 방향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큰 변화는 없다”면서 “그러나 핵심 부분에 대한 위반이 발생한 만큼 합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한·미·일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다니카 국장은 “제네바 협정을 유지해야 원지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면서 “일본 정부는 경수로 공사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는 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측은 “29, 30일 북일 수교 정상에서 북한 핵 개발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했다.

/이진동기자 jaydl@hk.co.kr

# 경향신문

## 丁 통일·김영남 50분독대

### • 장관급회담 안락

방북 3일째를 맞은 8차 장관급회담 남북 대표단은 21일 평양에서 회의를 속개, 북측에 핵개발 중지를 거듭 요청했다. 북측은 완곡한 회답으로 핵문제에 대해 처음 입장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김영남 위원장 면담=장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 등 남북 대표단은 이날 오전 9시25분부터 만수대의사당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김영남(金永南) 상임위원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시간은 30분 예정이었지만 1시간 25분으로 늘어났다.

남측 대표단과 북측 배석자들간 30분간 면담이 있던 뒤 곧바로 장정관과 김위원장의 50분간 독대하는 순서로

### 면담 의사당 2층 회의실 캘리와 만났던 그 장소 金대통령 안부도 물어

진행됐다. 김위원장은 장정관 일행에게 “피곤하지 않느냐”며 안락이 우수할 나쁘고, 장정관은 “고려호텔측이 편의를 잘 보충해줘 별로 피곤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2000년 6·15 정상회담을 상기하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안부를 물었다. 장정관은 21일 의아-대검제헌리세(APEC) 등 김대통령의 향후 임정을 설명하며 “매우 신중하게 협동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정관과 김위원장이 면담한 의사당 2층의 한 회의실은 이날 초 박사 차적으로 방북했던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김위원장을 만났던 바로 그 장소라고 북한의 한 관계자가 말했다.

◇2차 전체회의 안락=남북 대표단

은 이날 오전 11시45분쯤부터 12시15분까지 2차 전체회의를 갖고 전날에 이어 핵개발 재기할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특히 남측은 최근의 북한 핵문제 외에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국군포로·남북지문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문제를 다음 2차 국장급 회담 개최에 대해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대변인인 이병조(李炳朝)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전했다.

북한측도 남북관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 함도·도요 연경, 개성공단 개발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회의가 끝난 뒤 이대변인은 북한 핵문제가 의제로 상정됐느냐는 질문에 “지금 남북간에 전체회의가 끝난 뒤 이대변인은 북한 핵문제가 의제로 상정됐느냐는 질문에 “지금 남북간에 논의되고 있는 문제는 다 의제”라면서 “제기할 문제는 국민 관심도 크고 안보문제가 때문에 중요한 현안이다”라고 말해 의제로 다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대변인은 김영남 위원장과 면담과 관련, “우리측이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제기했고, 북한이 답을 하고 있는 것이 최근 국제사회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북측의 반응”이라며 “북측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원하는 핵문제 해결방식에 대해 그는 “북측이 제반 규정을 잘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일보) 조지훈 기자

평양 / 공동취재단·이용욱기자

# 중앙일보

## 美 “제네바합의 파기 결정된 것 없다”

### 日 고이즈미 “유지 희망”

[워싱턴·도쿄=김진·오대영 특약원] 미국 국무부 당국자는 20일(현지시간) 북한이 비밀리에 핵을 개발함에 따라 미국도 북한과의 제네바 합의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는 이날자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관계기사 3, 4면)

이 당국자는 “합의 파기 국무장관과 관련 물러져 리아스 대카탈보 보좌관이 밝혔듯이 제네바 합의 이행 단계에는 미국만

관련된 것이 아니다”면서 “미국은 한국·일본·유럽연합(EU)은 물론 중국·러시아와도 합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 제공되는 중유(重油)도 돈은 미국이 하지만 공급 주체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서 이를 중단하리만 관련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는 이날 중의원에서 “제네바 합의와 KEDO는 북한의 핵 개발을 막는 현실적인 틀”이라며 “계속 유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jinjin@joongang.co.kr

# 외교압력 통해 北核해결

## 韓·日 “제네바 합의 틀 유지”...美와 이견해소 난제

정부는 북한 핵개발 확인 이후 불거지고 있는 제네바 합의 파기 논란과 관련, 당분간 제네바 기본합의 틀을 유지하되, 국제사회의 압력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한국과 일본은 이날 긴급 회동을 갖고 제네바 합의에 대해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이같은 방침은 미 의회 및 행정부 내에서 김수로 건설 및 중유 공급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는 분위기와 괴리가 있어 향후 한·미·일 3국 협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4면

최성홍(崔成泓)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네바 합의 파기 등 다음 수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또 미 행정부가 제네바 합의 파기했다는 외신보도에 대해 “그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 워싱턴에서 있었다”면서 이를 부인했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일 3국은 미국의 핵폐기 요구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제네바 합의를 유지할지, 아니면 일정 부분을 수정할지를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제네바 기본합의 파기로 인해 북한 핵개발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붕괴되는 안 된다는 게 한·미·일 3국의 공통인식”

이라고 말했다. 이태식(李泰植)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방한한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과 긴급 회동을 가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 부장관은 이날 제임스 캐리 대북 특사와의 면담 직후 “일본으로서 (제네바 기본합의)가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는 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능하도록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차세형기자

## 한국일보

2002.10.22(화) ▼

### “美 제네바 합의 이행해야”

北, 평양방송 통해 촉구

북한 평양방송은 21일 “조미 제네바 합의는 지금 파기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면서 “합의문은 조선과 미국이 세계에 선포한 공

통의 약속인 만큼 미국은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방송은 “조선은 지금까지 제네바 합의를 100% 이상 충실히 이행해 왔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합의문이 채택된 지 8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출발선에서 맴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 국민일보

2002.10.22(화)

# “北, 원심분리기 1000대 이상 조달”

## 日紙 “우라늄 농축장비”... 정부, 99년 첩보입수

북한이 시인한 새로운 핵개발 계획은 늦어도 1997년부터 시작됐으며, 우라늄 농축 필수장비인 원심분리기가 파키스탄 등으로부터 1000대 이상 조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도쿄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일본과 미국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은 원심분리기를 수백대 단위로 한 차례 이상 조달했

으며, 조달 총수가 1000대를 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그러나 “원심분리기는 가동된 흔적이 없으며, 따라서 현 시점에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제보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만일 북한이 앞으로 원심분리기를 가동한다고 하더라도 고농축 우라

늄을 사용한 핵무기의 완성에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국 정부가 99년 입수, 미국에 제공한 농축 우라늄 핵개발 첩보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위해 원심분리에 필요한 자재를 해외에서 구입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21일 “군은 99년에 북핵개발에 대해 의심을 갖고 계속 주시하던 중 그같은 첩보를 입수해 미국에 건넨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재기자·도쿄=합

# “北 원심분리 자재 해외구입 한국, 99년 미국에 알려줬다”

국방부 시인... 3년간 비공개 의혹 증폭

한국 정부가 99년 입수해 미국에 제공한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개발

정보는 '북한이 우리나라 농축에 필요한 원심분리기 자재를 해외에서 구입한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준(李俊) 국방부 장관은 21일 한국 정부가 99년 북한의 농축우라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미국에 제공했다는 본보 보도(21일자 A1·2면)를 공식 확인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A2·3·4·5·10면에 관련기사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회의가 열리기 직전 본보 기자와 만나 "99년에 입수해 미국에 건넨 첩보는 북한이 (우리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에 필요한 자재를 해외에서 구입한다는 것이었다"며 "국방부는 이후 의심을 갖고 계속 체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황의돈(黃義敦)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첩보를 입수해 미국에 제공했고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추적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한 정보 공조체제를 구축해 왔다"며 "유 8월 존 볼턴 미 국무부 군축 및 비확산담당 차관이 방한,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이용해 비밀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결정적 정보를 제공해 그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첩보의 구체적인 입수 시기는 99년 초"라고 덧붙였다.

공돌리자 리이스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20일(현지시간) CNN방송 대담프로에서 "단편적인 정보는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99년에 이르러서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핵개발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말해 '99년 초'에 이미 북한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가 입수됐음을 강력 시사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윤삼호기자 ysh1005@donga.com

東亞日報

2002.10.22(화)

경향신문

2002.10.22(화)

朝鮮日報

2002.10.22(화)

## 정부 北核단서 99년 포착

“첩보수준”...美측에 통보  
고의은폐여부 논란 일듯

우리 정부가 북한의 농축우라늄 공식 핵개발 계획 단서를 3년 전에 포착한 후 미국에 제공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관련기사 4면

이준 국방부 장관은 21일 "우리 정부가 북한이 농축우라늄과 관련한 원심분리 자재를 외국에서 구입하려고 시도한다는 첩보를 1999년 초 입수했다"며 "정부는 이를 미국측에 전달하면서 추가정보를 수집해서 양국이 공유하고자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황의돈 국방부 대변인(육군 준장)은 "지난 3년동안 우리측도 추가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8월 방한한 존 볼턴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으로부터

결정적 증거를 통보받고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황대변인은 또 "우리측이 입수한 북한 핵 관련사항들은 단순합분 수준으로 지난 8월 미국이 공식 통보해오기 전까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공식화하기 어려웠다"며 "우리 정부가 의도적으로 숨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 국방부 실무자는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이장관은 추가사항을 설명하는 등 중간부들간에도 혼선을 빚었다.

한편 정부가 지난 8월 미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이후에도 이같은 사실을 공문화하지 않은 배경과 관련, 일부에서 남북대화나 햇볕정책의 차질을 우려한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박성진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 “北 97년이전 핵개발 시작 원심분리기 1000대 넘어”

도쿄신문 보도

북한의 새로운 핵 개발은 늦어도 1997년부터 시작됐으며, 우리나라 농축에 필수적인 원심분리기는 파키스탄 등으로부터 1000대 이상 조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도쿄(東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 정보기관과 가까운 미·일 소식통을 인용해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비교적 빠른 단계에서 상당 규모의 계획이 추진

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북한은 원심분리기를 수백대 단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조달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의 경제전문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 "러시아 공급업자들이 수년 동안 북한에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폭탄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을 제공했다"고 미국 고위 관료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뉴욕=金龍鳳특파원 jaeho@chosun.com  
/東京=權大烈특파원

# 한·일 “제네바합의 유지 협력”

## 北核 평화적 해결 긴밀공조 재확인

켈리 “北·美합의 파기 안됐다”

### 한·미외무 24일 긴급회담

한·일 양국은 21일 서울에서 북한 핵개발 문제와 관련, 향후 대응 방안 등에 한 긴급 협의를 갖고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명확적인 해결책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제네바 핵합의의 기본 틀을 유지하도록 양국이 협력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석(李泰錫) 외교부 차관보와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일본 대외경제장관 동 한·일 외교 당국자들은 이날 서울에서 이같이 협의하고 오는 29,30일 말레이시아 팔라렝푸르에서 개최되는 북·일 수교협상에서 북한에 대해 스스로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하기로 했다.

장부 당국자는 “제네바 합의의 정례 및 대차방관과 관련, 한·일 양국의 동일한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향후 미국과 긴밀히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양측은 오는 26일 멕시코 아시안-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심도있는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장부는 오는 26일 한·미·일 3국 정상 회담에 앞서 APEC 각료회의 기간인 오는 24일 멕시코에서 최성훈(崔成勳) 외교장관과 켈리 파월 미 국무장관 간 긴급 한·미 외무회담을 갖고 제네바 핵합의 협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정기자 crystal@kdaily.com

【도쿄 통신기·워싱턴 특문·일본특파원】 일본을 방문중인 제임스 켈리(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미 국무부 차관보는 21일 미국이 지난 9년의 북·미 기본 협의를 파기할지 여부를 아직 최종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켈리 차관보는 이날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관방 부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미 기본 합의 파기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켈리 파월 미 국무장관은 20일 ABC방송의 시사토크 프로그램 출연, “합의는 무효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여 기본 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amary01@kdaily.com

# 정부, 北核계획 99년 포착

## 국방부 “우라늄농축 장비구입 첩보입수 美에 통보”

정부가 북한 핵개발 추진 첩보를 1999년에 포착하고도 3년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비공개’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북핵이 농축 우라늄 도입을 위해 원심분리기 자체를 도입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21일 “99년 초 북한이 우라늄 농축 관련 장비를 외국으로부터 구매하려고 시도했다는 첩보를 입수, 이 사실을 미국에 봉보한 적

이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이와 관련, 이종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첩보에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 자체를 파키스탄으로부터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미국이 우리가 전년 이같은 첩보를 바탕으로 북 핵 개발 관련 추적을 시작한 것은 아니며 미국의 경우 이미 89년부터 일부

증거를 포착, 북한의 핵개발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99년 1차 정상회담 전 북한 노동당비서와 함께 방미한 김덕중씨가 일본 시사주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농축우라늄 대신 우라늄을 이용해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발언 내용도 이같은 첩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진기자

# 일총리 “제네바합의 계속 유지” 강조

## 켈리 “폐기여부 최종판단 안내려”

### 한겨레

2002.10.22(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21일 제네바 합의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이날 의회에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케드)가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 현실적인 합의체이라는 내 인식은 바뀌지 않았다”며 “일본과 미국, 한국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케드를 활용하고 해결책을 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3·4·5면 그는 이어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북·일 정상회담에서 제기했고 김영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을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

다”며 “북·일 평양선언에서 밝힌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을 방문 중인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이날 미국이 1994년의 북·미 제네바 합의를 폐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며 “신중히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관방 부장관은 “일본으로서는 (이 합의가)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능하도록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켈리 차관보는 앞서 20일 후쿠다 이소오 일본 관방장관과 회담을 하고 두 나라가 북한에 핵무기 개발계획을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후쿠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오는 29~30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북·일 수교 협상에서 핵 문제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거론할 방침임을 확인했다.

또 일본의 (NHK텔레비전)은 이날 미국이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서둘러 줄 것을 켈리 차관보가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쿄/오태규 특파원 ohtaku@hmi.co.kr

# 남북 '核해법' 의견접근

## 장관회담 공동보도문 "대화해결" 원론적 합의

### 제네바 합의 준수문제 점점 못찾아 南대표단 귀환연기 심야까지 조율

남북은 제8차 장관회담 최종일인 22일 북한 핵개발 파문과 관련, 대화를 통한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적 입장이 포함된 공동보도문안을 타결할 가능성이 높았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이날 밤 평양 고리도방에서 회담 일정을 남거가며 수석대표들과 대표접촉을 잇따라 가진 끝에 이같은 원론적 수준의 합의를 갖고 반듯이까지 공동보도문 문안조율 작업을 마쳤다. / 관련기사 3-4면

남측 회담 관계자는 "공동보도문에 최근 핵 파문에 대한 북측의 해명과 제네바 합의 준수 등 구체적인 합의사항의 이행문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한다"면서 "그러나 북측은 대화를 통해 핵문제로 야기된 파문을 해결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동보도문에 핵파문으로 인해 존재 기로에 선 제네바 핵합의에 대한 북측의 이행약속 등은 명기하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

이 관계자는 "북측이 이번 회담에서 핵 파문에 대해 언급한 가장 직접적인 반응은 전남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美)철회 후 대화를 통한 단절해결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측이 얼마전 열린 미국 특사의와 회담에서 밝힌 핵개발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한반도 정세가 이 문제로 극도로 혼란해졌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남북 심무진은 자정을 넘겨서 공동보도문 문안을 다듬었다.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은 이날 3차례에 걸쳐 북측 단장인 김영성 대각 책임관과의 수석대표 접촉을 가

졌다. 남측은 23일 새벽이라도 서울로 귀환할 방침이나, 공동보도문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가 늦춰질 수 있어 회담이 하루 더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권은 두번째 접촉 뒤 "(양측 입장이)조금 비슷하게 돼 가지만, 서로 진전이 없으면 지연될 수 있어 언제 귀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명균(趙明均)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장은 별도 김족에서 북측이 개성공단 기본법 등을 11월 중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북측은 특히 개성공단의 출입·통관·관세·재산권 보호·특구내 활동 등을 신의주 특구 수준의 '자유경제지대'로 상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 / 공동취재단·이용욱기자  
woody@kyunghyang.com

## 東亞日報

2002.10.23(수)

### 北核문제 明文化 이견

### 장관급회담 막판 진통

### 공동보도문 "대화로 해결" 의견 접근

남북은 제8차 평양 장관회담 마지막날인 22일 수석대표 단독 및 실무대표 접촉을 잇따라 갖고 북한 핵 문제의 해결방안과 관련해 공동보도문에 핵 문제로 야기된 주민성세를 대화로 해결한다"는 문안을 남는 데 의견교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4면에 관련기사

남북은 이날 심야까지 이어진 막후접촉에서 핵 파문에 대한 북측의 구체적인 해명과 제네바 합의 준수 약속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이들 공동보도문에 명기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오후 3시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할 예정이던 남측 대표단의 서울 귀환을 23일 오후로 늦추었다. 양측은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갖고 공동보도문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김영성(金永成) 대각책임관에게 "북측의 전향적인 태도가 없을 경우 공동보도문 발표가 서울로 귀환하겠다"고 압박했으나 북측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대화가 가능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반복했다고 회담관계자들을 전했다.

북측은 대신 핵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없이 '주민성세로 야기된 문제에 대한 우리' 등 추상적 표현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평양에서 북측과 별도 접촉을 가진 조명균(趙明均)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장은 북측이 개성공단 기본법을 다음달 중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성동기기자 esprid@donga.com

# 남북 “핵문제 대화로 해결”

##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에 명시하기로 이산가족 추가상봉·개성공단법도 합의

남북한이 22일 북한 핵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간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날 평양에서 열린 8차 장관급회담 마지막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과 함께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 추진 계획 등을 담은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관계기사 3면>

이 당국자는 “남북 양측은 ‘6·15공동선언 정신에 입각해 최근 대두한 북한의 핵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기로 합의했다’는 데 합의하고 이를 공동보도문에

넣기로 했다”면서 “북한이 핵문제를 남북간 합의문에 넣기하는데 동의함으로써 문제 해결 의지를 대내외에 밝힌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또 “1992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북한이 준수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북한이 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한다는 데 합의한 것은 비핵화 선언을 준수하겠다는 뜻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조항(제3항)을 담고 있어 최근 불거진 북한

의 새 핵개발 계획을 폐기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호응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번 합의로 핵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진의(眞意)를 파악, 미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대화할 통한 문제 해결을 실행하려던 정부의 구상에 탄력이 붙게 됐다.

남북 양측은 당초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공동보도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북측이 남측의 핵 관련 국제적 합의 준수 등을 요구한데 대해 “북·미간 문제”라며 반발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북측은 핵개발 파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공동보도문에 담는 것은 곤란하다며 ‘주변정세로 야기된 문제’ 등 추상적 표현으로 하자는 입장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태의 발단이 미국의 대북(對北)적대시 정책 때문이란 점을 적시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한은 이날 오후 정세현(丁世鉉·통일부 장관)·수석대표와 김영성(金榮成·내각 책임장사) 단장간의 세차례 단독 접촉을 통해 합의 타결의 가닥을 잡았다. 양측은 또 ▶6·25전쟁 실종자와 전후 납북자 문제 해결 ▶연내 추가 이산상봉 실현 ▶11월 중 개성공업지구법(특구법) 발표 등에도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공동취재단, 이영종 기자  
yilee@joongang.co.kr

### 한겨레

2002.10.23(수)

# 남북 ‘핵 대화해결’ 보도문 합의

## 장관급회담 한밤접촉 문안조율

남북은 8차 장관급회담 나흘째인 22일 북한의 핵 개발 계획 파문과 관련해 공동보도문에 북측이 ‘대화를 통한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담기로 의견을 모음으로써 공동보도문 발표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문안작업이 들어갔다.

▶관계기사 3면

양측은 이날 밤늦게까지 수석대표 단독 접촉과 실무대표 접촉을 여러 차례 거듭해 ‘대화를 통한 해결’ 수준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공동보도문에 최근 핵 파문에 대한 북측의 해명과 제네바 합의 준수 등 구체적인 국

제적 합의사항 이행 문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안다”라며 “그러나 북측은 대화를 통해 핵 문제를 야기된 파문을 해결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이와 함께 북핵 파문에 따른 논란으로 뒤로 밀려났던 전후 남북자 문제, 2차 국방장관회담 등 다른 일반 의제에 관한 협의에도 속도를 내어 밤늦도록 절충을 거듭했다.

남측은 이에 앞서 공동발표문에 최근 불거진 핵개발계획 파문과 관련한 북측의 해명과 제네바합의 등 국제적 합의 준수 의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핵 파문에 대한 구체적 지적 없이 ‘주변 정세로 야기된 문제’에 대한 우려’ 등 추상적 표현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했으나, 오후 들어 두 차례 수석대표 단독접촉에서 협상이 가능한 수준의 진전된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은 한때 북측이 남측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공동보도문 발표 없이 예정대로 서울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풍보하며 북측을 압박하기도 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김영성 북측 단장과의 두번째 수석대표 접촉 뒤 “조금 비슷하게 돼 가지만 서로 접점이 없으면 지연될 수도 있고 예정대로 오늘 귀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해 일정 연장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회담 관계자는 “북측이 구체적인

로 미국과의 회담에서 밝힌 핵개발 계획 시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최근 한반도 정세가 이 문제로 극도로 혼탁해졌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회담 대표단의 일원으로 북한 조영균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은 별도 접촉에서 북측이 ‘개성공업지구법’(개성특구법)을 다음달 중 발표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북측은 특히 개성공단의 출입·통관·관세·재산권 보호, 특구 내 활동 등을 신의주 특구 수준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 대표단은 애초 22일 오후 3시 전세기로 귀환할 예정이었으나 늦어져 하루 늦은 23일 오전 귀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평양/공동취재단,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 南北 “北核 대화로 해결”

## 北 제네바합의 준수 언급안해 논란 예상

### 장관급회담 8개항 공동보도문 발표 적십자회담서 실종자 生死·주소 확인 개성공단 12월착공...南측사무소 설치

남북은 22일 새벽 평양 인민문화 궁전에서 8차 장관급회담 3차 진제회의를 열고 북한 핵개발 파문과 관련, "6·15 공동선언 정신에 맞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8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A3면

핵 문제와 관련된 공동보도문 내용은 우리측 기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은 자신들이 시안산 비밀 핵개발에 대한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고 제네바합의를 비롯한 국제적 약속을 지키겠다는 태도도 전혀 하지 않았다.

남북은 이 밤에 김의성과 동해선을 빨리 연결하며, 개성공단을 12월 중 착공하되, 실무협의를 통해 개성에 남측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양측은 해운협약서 체결을 위해 11월에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철도·도로 연결시기에 맞춰 북해협의

시를 채택하기로 했으며, 북측 어장에 시의 어업협력에도 합의했다.

양측은 또 적십자회담에서 실종자 생사·주소 확인 작업을 벌이기로 했으며, 9차 장관급회담을 내년 1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우리측 대표단은 23일 아침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서울로 돌아온다.

이에 앞서 우리측은 22일 새벽과 오후에 열린 수석대표 및 실무대표 접촉에서 북측의 핵개발 파문에 대

한 구체적인 해명과 제네바 합의의 준수 약속 등을 공동보도문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북측은 "주변정세로 야기된 문제에 대한 우려" 등으로 추상적인 표현을 고집해 난항이 계속됐었고, 대표단은 귀환시간을 늦춰가며 방선 협상을 계속했다.

/평양=공동취재단  
/金仁仇기자 ginko@chosun.com

### 대한매일

2002.10.23(수)

# 北核문제 대화로 해결 장관급회담 의견접근

## 남북 공동보도문 막판 조율

남북은 8차 장관급회담 마지막 날인 22일 밤 북한 핵개발 파문과 관련,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담은 공동보도문안에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양측이 극적 타결의 가능성을 높였다. ▶관련기사 3·4면

정세현(丁世炫) 남측 수석대표는 이날 오후 세 차례에 걸쳐 김영성 북측 수석대표와 접촉을 가진 끝에 원론적 수준의 감감을 찾고 방법론까지 실무접촉을 통해 공동보도문 본안을 조율했다.

정 대표는 "조금 비슷해지는데 서로 집착이 없으면 지양될 수 있다"고 밝히 회담이 23일까지 하루 더 연장될 것임을 시사했다.

회담 관계자는 "공동보도문에 최근

핵 파문에 대한 북측의 해명과 제네바 합의의 준수 등 국제적 합의사항의 이행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한다. "면서 "그러나 북측은 대화를 통해 핵문제로 야기된 파문을 해결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측이 이번 회담에서 핵파문에 대해 언급한 가장 최첨단적이고 구체적인 반응은 '선(先) 미국의 태핵 작대정책 철회-후(後) 대화 해결'이었다"고 지적했다.

남측 대표단은 북측과의 공동보도문 작성 조율이 마무리될 경우 전체회의를 갖고 이날 워싱턴 뒤 서울로 귀환할 예정이다.

회담 관계자는 "북측이 이번 장관

급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미국의 회담에서 밝힌 핵개발 프로그램 시안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한반도 정세가 이 문제로 극도로 혼란해졌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남측은 이날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북측의 진정성 태도가 없을 경우 공동보도문 발표없이 예정대로 오후 서울로 귀환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하는 등 북측을 강하게 압박했다.

한편 조명관(趙明官) 통일부 교섭협력국장은 별도 접촉에서 북측이 개성공단 기반법 등을 11월 중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북측은 개성공단을 출입·통관·관계·재산권 보호 등에 있어 선의주착구 수준으로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평양 공동취재단·북쪽심기자  
yoonstan@kdaily.com

# ‘北核문제’ 명문화 못해

## 北, 남측요구 거부... “대화로 해결” 원칙만 표명

공동보도문 절충 진통

장관급회담 일정 연장

남북은 제8차 장관급회담 마지막 날인 22일 북한 여개방 계획 문제를 담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기 위해 막바지 절충을 받았으나 북측의 소극적 태도로 반세 삼한 진통을 겪었다.

남북은 이에 따라 공동보도문에서 핵문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대화로 통해 해결해나간다는 원칙만을 표명하기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은 핵 개발 계획 파문에 대한 구체적 해명과 제네바 합의 등 국제협약의 이행에 대한 명시적 입장 표명을 요구했으나 북측은 이를 기결

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

남측의 회담 관계자는 “공동보도문에 북측의 핵 개발 계획 사실 자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한다”면서 “그러나 북측은 대화일 통해 피문을 해결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측이 제네바 합의에 대한 이행 의지는 물론 핵문제에 대한 직접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우리측 기대에 못미치는 것”이라며 “그러나 영측 협정에 다수결을 거쳐 발급 절충을 개시한 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남북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 30분간 장거리(于世法) 통일부 차장과 김정은 북측당장 간 수석대표 접촉을 개시한 뒤 이어

까지 실무대표 접촉을 계속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됐던 남측 대표단 귀환 일정은 하루 연기됐다.

### 개성특구 기본법 北 “내달중 발표”

원래 조병균(趙秉均)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발표 접촉에서 북측이 개성공단 기본법 등을 다음달 중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북측은 개성공단의 출입, 통관, 관세, 재산권 보호, 특구내 위생 등을 신의주 특구 수준으로 상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공동취재단

# ‘공동보도문’ 도출 밤늦도록 협상

이모저모

남북장관급회담 양측 대표단은 22일 차장이 남도핵 공식적인 전체회의를 미룬 채 공동보도문 합의 도출을 위한 절충을 계속했다. 양측은 수석대표간 단독 접촉 네번, 실무대표 접촉 다섯번을 번갈아 진행했다.

남북은 오전 일찍부터 실무대표 접촉을 시작했다. 그러나 분위기는 처음부터 매우 무거웠고 양측의 관은 생각보다 깊었다.

우리 대표단은 서울로 돌아갈 대한항공 전세기가 평양 운안공항에 기다리는 상황에서 협의가 안되면 곧바로 비행기에 오르겠다는 비관론 직진으로 북한을 압박했다. 북측은 핵개발 시인으로 인한 국제경제 폐문에 대한 우려와 대외 강요 등 원문적인 협정만 공동보도문에 명시하자고 버텼다.

반편한 대답은 오후 3시35분쯤 수석대표 단독접촉을 갖자는 북측 제의를 우리가 받아들

양측 수차례 상충부 훈령  
수석간 단독접촉만 네번  
자정까지 전체회의 못열어

이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회담장 주변은 관협이장이 나오는 게 아니냐며 술렁거렸다. 그러나 첫 수석대표 접촉은 7분만에 끝났다. 남측 정세현 수석대표와 북측 김영성 대표단장의 표정은 무척 어두워 보였다. 두 사람은 곧바로 숙소로 돌아가 대책을 숙의했다. 각기 상부 문명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번째 수석대표 접촉은 4시47분쯤 시작했다. 30분 뒤 북측 김단장은 굳은 표정으로 회담장 밖으로 나왔다. 김단장은 “회담일정이 연기되느냐”는 남측 취재진의 질문에 “귀족 단장에게 물어보라”며 북측 상원심로 마베 걸음을 옮겼다. 이 시각 평양 취재진은 두번째

회담이 길어진 것 같다고 서울로 타전했다.

그러나 10여분 뒤 김단장이 수행원을 대동하고 다시 회담장에 들어가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한참 뒤 접촉을 마친 김세현 대표는 “접점이 없어 얘기를 더 해줘야 한다”고 회담이 계속될 것임을 암시했다.

결국 양측은 곧바로 실무대표 접촉에 돌입, 공동보도문 문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남측 대표단은 서울로부터 여러 차례 훈령을 받았다. 민감한 문제여서인지 북측도 수시로 구수대책회의를 갖는 모습이었다.

오후 9시30분쯤 네번째 수석대표 접촉이 1시간 가량 이뤄졌고 곧이어 다시 실무접촉이 진행됐다. 이 즈음 우리측이 선 해포기의 의사를 밝히려는 입장을 북측에 양보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우리측 관계자가 “공동보도문에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 해명은 당기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시점이다. 신창호기자 procol@kmb.co.kr



# 北 “핵포기 명문화 못해”

## 장관급회담 ‘대화로 해결’선에서 심야 절충

“미국은 강권정책 버려라”... 강력 비난  
노동신문 “옥죄기 지속면 궁지 몰릴것”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원천 포기하라는 한국과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동시에 미국을 겨냥해 “오만한 강권정책을 버려야 한다”고 반발하는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해 북한에 파문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남북회담 22일 오전 평양에서 장관급회담 3차 전체회의를 갖고 주요 현안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한 뒤 회담을 종료한 개척이였다. 회의장을 찾지 못한 자진을 남기면서까지 협상을 계속했다.

북한은 핵개발에 대한 북측의 구체적인 해명과 핵개발 계획 포기, 제네바 합의의 즉각적 이행 등을 공동보도문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북측은 이를 거부했다.  
심야협상에서 북측은 ‘핵개발 시안’에 따른 국제정세 긴장을 우려하며, 모든 시대적 대외로 해결한다’는 수준의 표현을 보도문에 넣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었고, 남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불안 조동에 나섰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공동보도

문에 핵개발에 대한 북측 해명과 핵포기 의사 등 구체적인 언급은 되지 않을 것으로 한다”고 전했다.  
북측이 핵개발 계획 포기 등 진전된 입장을 밝히지 않는데도 남측이 공동보도문에 합의할 경우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비판을 받아가고 있어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는 남한내 보수층과 미국이 불만을 표시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남측 대표단이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북한 평양방송은 “북·미 대화는 1991년 제네바 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어느 일방이 상대방을 내리누르려는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며 대미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방송은 “미국은 오만한 강권정책을 버려야 한다”는 제

북의 보도물에서 “우리의 입장은 북·미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과 국제관계 발전 추세에 맞게 북·미 직대관계를 정상화하고 공평성, 평등의 원칙에서 해소해야 한다”면서 “북·미 대화는 북·미 기본합의문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양 노동신문도 사실을 통해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옥죄기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또 “미국이 현재 위협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기 감축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것은 소란을 합당한 것이 아니며 미국 스스로도 궁지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창호기자·평양=공동취재단  
procol@kmb.co.kr



# 北, 핵카드로 ‘빅딜’ 미련

### 남북장관급회담 진통

북한 핵개발 파문 해법에 대해 남북한은 한쪽 소리로 대화와 평화의 방식에 의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파문이 있어서는 강단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평양에서 열린 남북장관급회담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 때문이다.

공동보도문 같은 파장에 드러난 양측 입장이나 장제현 통일부장관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22일 면담내용, 북한 언론보도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남북회담은 이번 시대의 침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시대의 발전이 원 해 프로그램 시인 배경이아 이렇듯간에 북한도 이번 시대가 국제적으로 심각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자칫 한반도에 위기상황을 몰고올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또, 남북 양측은 우리 정부가 이미 미국 일본 등과 조율을 마친 ‘시대의 평화적 해결’이란 대안적에 공표하고 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미국이 강대국간의 권위를 경우 대화를 통해 해

결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남북한 공히 한반도에 더 이상 긴장이 조성해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는 예기다.

그러나 본론에 들어가면 남북한 사이에는 엄청난 의견차이가 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한 해법의 지양을 북한의 핵개발 계획 포기야 한다고 보는데 반해, 북한은 자신에 대한 미국의 적대정책 포기 등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은 새롭게 불거진 우리들 농

포기하는 게 현실적 해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기초를 바탕으로 북한은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검토과정에서 핵에 대한 구체적 해법이나 제네바 기본합의 준수 및 핵개발 포기 의지를 명시하지는 우리측 요구를 받아들이는 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남북장관급회담을 바라보는 기본 시각에서도 남북한은 차이를 보였다. 우리는 이번 회담이 북핵 문제를 푸는 시급적 이 될 수 있다고 본대 반해, 북한은 핵문제에 관한 한 기본적으로 미국과 논 의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어느정도 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미국과의 대화 중재할 수 있다고 믿어왔으나 북한은 이에 선택 호응하지 않았다.

남북한이 핵파문 이후 처음으로 공식대화를 했지만 이런 차이를 해소하지 못함에 따라 향후 남북, 북·미간 협상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북·미간 이견조율을 해보려는 우리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김의규기자 egkim@kmb.co.kr

## 北-美 관계정상화등 ‘포괄 타결’ 염두 남한과는 ‘전향적 태도’ 합의문 거부

를 통한 핵개발 계획 문제를 핵·미사일 및 제재식 군사력 문제 등 기존의 북·미 천안과 통합해 북·미 관계정상화 문제와 포괄적으로 다루기자는 ‘빅딜 전략’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핵개발 문제가 대화의 대상이 아니며, 본격적인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와 엇갈린다. 우리 정부도 핵개발 의사를 우선

# 南北 “대화로 핵해결”

##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에 명시 막판 타결

### 南측요구 ‘핵합의이행’은 언급않기로

북한이 핵개발 파문과 관련, “최근 (비밀 해개발) 야기된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제8차 남북 장관급회담 남측 대표단은 회담 마지막(21) 22일 귀국을 하루 이틀 전 북측과 23일 새벽까지 협상을 갖고 “공동보도문을 통해 핵 파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로 북한측과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남측의 한 관계자는 “북측이 공동보도문에서 핵 파문에 대해 ‘주변 정세로 야기된 문제에 대해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이 관계자는 그러나 “우리측이 요구한 △핵파문에 대한 북측 해명 △제네바협약 준수 등 구체적인 합의사항의 이행 문제는 직접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공동보도문은 북측이 대화를 통해 핵 문제로 야기된 파문을 해결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장관급회담을 통해 제네바협약 이행에 대한 북측의 명백한 약속은 받아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북한의 이같은 태도는 핵문제를 미국과 거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우리측 대표단은 이날 핵개발계획 파문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과 제네바 핵합의 등 국제적인 합의사항의 즉각 이행 등에 대한 명시적인 입장 표명을 공동보도문에 명문화할 것을 지속 요구했다.

한편 조명관(趙明官) 통일부 교섭협력국장은 발도 집회에서 북측

이 개성공단 기본법 등을 11월 중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북측은 특히 개성공단의 출입, 봉관, 관세, 재산권 보

호, 복구내 활동 등을 신의주 특구 수준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공동취재단, 김준모기자 jnkim@segye.com

世界日報

2002.10.23(수)

## 경향신문

2002.10.23(수)

# 부시 “北核 평화적 해결”

## 첫 공식언급...우방과 협력 ‘무장해제’ 유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1일 북핵문제에 대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로버트 스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주와 다음주에 있을 한·중·일·러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북핵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이번 위협(북핵문제)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국이 지난 15일 북한의 핵개발 시인을 밝힌 이후 공식적으로 처음 해결방향을 밝힌 것이다. /관련기사 4·1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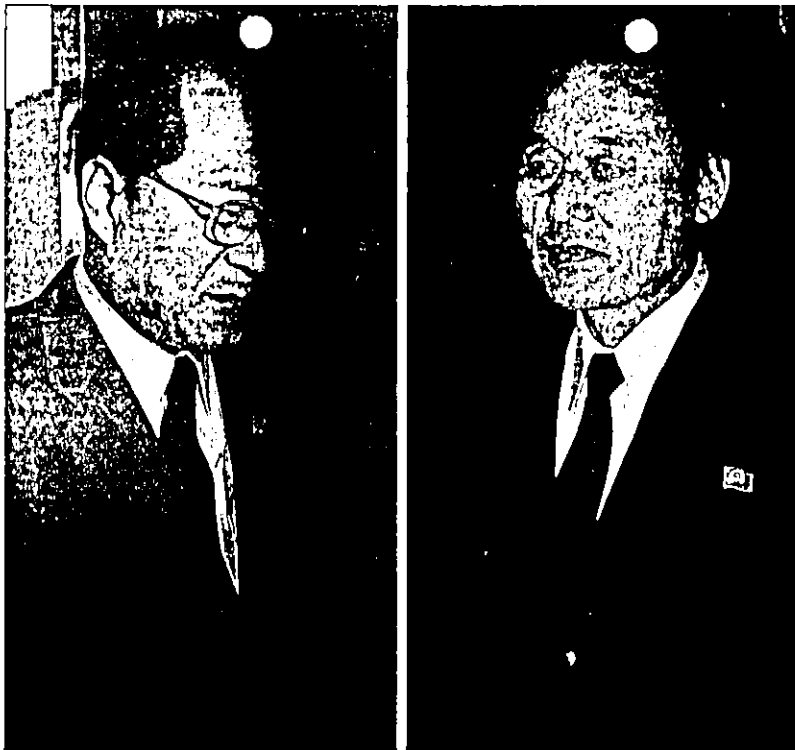
그는 북한의 핵개발을 “걱정스런 소식”이라고 진제하고 “지역 우방국 등과 함께 공동노력해 위험한 무기 확산을 저지하고 평화를 위해 무장해제를 해야 한다고 김정일 위원장에게 확신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본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의 핵개발 포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는 등 군사력 사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은 25일 텍사스주 크로퍼드에 있는 자신의 목장에서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는 데 이어 백악관의 로스 카보스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일본·러시아 정상들과 회담한다.

워싱턴 / 이승철특파원  
lsc@kyunghyang.com



싸늘한 南北대표 제8차 남북 장관급회담 마지막날인 22일 남북 대표단 소속인 고려호텔에서 심아 수석대표 접촉을 가진 정세현(왼쪽) 통일부장관과 북측 김형성 단장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를 나서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南 “核명기 안하면 그냥 가겠다”

## 남북장관급회담 인박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위해 평양에 계류 중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 등 남북 대표단은 마지막 날인 22일 서울 귀환 일정까지 이틀까지 해 파문의 물과구름 마련하려고 북측을 압박했으나 남북간의 “좋은 인식”이 자리잡지는 못했다.

남측은 수석대표 단북김복희와 실무대표 김복희를 변경하여 이어가며 강능보도장에 북한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적인 수준의 문언을 넣는데도 승낙 받고남가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 진행에 대한 부담을 느낀 북측은 이날 오후 수석대표 단북김복희를 개명했으며 양측은 밤늦게까지 남북 정세현 장관과 북측 김형성(金煥成) 내각책임장시간 수석대표 단북김복희와 실무대표 접촉을 잇달아 가진 끝에 일단 공동보도문 작성에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북 대표단은 핵 파문에 대한 북측의 태도와 제재와 합의의 이행 약속을 받아내려는 당초 입장에서 크게 물러서 북측의 태도기에 밀렸다는 평가도 있다.

○-북측 대표단은 신남 김영남(金永南)



무거운 표정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인 남측의 정세현 통일부장관(왼쪽)과 북측의 김형성 내각책임장사가 22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단독 접촉을 가진 뒤 회담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표정이 무겁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北 “美 적대정책 철회” 원칙론 거듭 주장 수석대표 밤늦도록 접촉 “점점 못찾았다”

결국 남북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남북 대표단의 당초 목표는 26일 백지화 조약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26일 백지화 조약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남측은 이날 오후부터 과거 북한의 “핵에 대해”로 북측의 “비핵화”에 비유하는 압박전략을 구사했다. 남 측은 이날 내무성이 되고 감시조각대, 남북간 교류 및 접촉자 권의 운영 등에 대해서도 “남측이 북측에 권고하는 대로”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인변회의 상임위원장이 밝힌 것처럼 “신(先)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후(後) 대화”라는 원칙에서 물러가지 않았다.

북측은 남측의 거듭된 핵 파동 우려, 남북한 민선 조치의 필요성 제기 등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외세를 배척하고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자”는 말만 되풀이하는가 하면 이에 화제를 반겼으로 풀리거나 잘 모른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남 북측 단장은 핵 문제에 관한 질문에 “당첨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합의해야 한다”는 신중담을 반복했다.

## 무거운 표정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인 남측의 정세현 통일부장관(왼쪽)과 북측의 김형성 내각책임장사가 22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단독 접촉을 가진 뒤 회담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표정이 무겁다.

한편 남측은 핵문제 외에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문제를 다룬 제2차 남북국방 장관 회담 개최 문제도 제기했으나 북측이 반대편 관심율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급회담이 난항을 겪는 것과는 관계없이 남북간에 이미 합의된 교류협력은 계속 추진할 전망이다. 북한 태권도시범단 4명이 23일 오전 평양내로 서해 직항로상 등에

입국하는 데 이어 26일 북한 경제시찰단이 남한 내 주요 산업시설을 둘러볼 예정이다. 정세현 장관은 “북측이 하루 전까지 변동사항을 통보해오지 않은 점을 보면 북한 태권도시범단이 예정대로 입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중 개성공단 건설실무협의회 1차회의와 입간간 수해방지 2차회의가 개성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평양=공동취재단·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 부시 “北 무장해제 설득할것”

## 우방과 협력...北核 평화적 대처

世界日報

2002.10.23(수)

### APEC서 韓-日-러정상과 집중협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1일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4-5-9-10면)

부시 대통령은 이날 조지 로버트는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새로운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협력해 북한에 대해 무장해제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 새로 나타난 위협에 대처할 기회”라며 “우리가 협력한다면 이 위협에 평화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지역의 우방국 및 여타 국가들과 협력해 증대한 무기의 확산을 막고 북한 김정일(국방위원장)에게 무장해제를 해야 한다는 것을 납득시킬 때라고 본다”며 “나

는 이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를 위해 크로퍼드에서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라며 “이번 주말 멕시코에서 한국-일본-러시아 정상과 만날 때 북한 핵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일 북한이 핵개발계획을 시인한 뒤 부시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워싱턴=박완규특파원  
wgpark@segye.com

## 한겨레

2002.10.23(수)

# ‘핵 파장’ 남 우려에 북 공감

### 장관급회담 보도문 합의 의미

## “핵 우회편 역풍” 귀환늦추며 북 압박 남, 평화해결 국제협조 발언권 강화

남북은 22일 8차 장관급회담에서 최근의 ‘북한 핵 개발 계획’ 파문과 관련해 막판 협상을 거듭해 결국 ‘대화할 통한 문제 해결’에서 점점을 찾았다.

양국은 이날 낮까지만 해도 ‘핵 파문’ 관련 내용을 공동보도문에 어떻게 담을지를 놓고 한 치 양보없는 줄다리기를 거듭했다. 남측은 ‘남북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회담이 결렬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썼다. 또 줄기차게 최근 발생한 ‘북한 핵개발 계획’ 파문에 대한 북측의 구체적인 해명 과 제재에 합의 등 한반도 비핵화 준수 의지를 공동보도문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야만 최근의 논란을 남북이 대화를 통해 잠재울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측은 ‘주변 강제로 야기된 문제에 대한 우려 등 정상적 표현으로 넘어가자는 입장으로 나왔다. 이런 정상적 표현은 오히려 남측 대부분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었다. 분위기는 오히려 양국이 이견의 무사재의 수석대표

남측측에서 반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은 미국에 의해 제기된 북핵 파문에 대한 북측의 구체적 해명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핵 파문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의지를 남측과의 합의 속에 담았다는 것은 아무리 높아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 핵으로 초래된 한반도의 안보위기에 대한 남북의 우려에 북한이 공감한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안보 문제에 관한 한 미국만 상대하려 해온 북측이 이를 남북관계의 총괄 조정창구인 장관급회담에서 다룬 것만으로도 9년 핵위기 때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남북이 ‘핵 파문’과 관련해 북측의 태도 표명을 줄기차게 요구한 것은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이 논의될 나라 안팎의 굵직한 일경과 무관하지 않다. 당장 23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과 5명의 주요 대신 후보들의 회담에 6자 회담, 멕시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 기간인 26일



8차 남북장관급 회담은 북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해결원칙을 공동보도문에 담은 문제를 놓고 난항을 거듭하다 22일 밤 정세현 남측 수석대표와 북측 김정성 민장의 단독 만남으로 반전의 계기를 맞았다. 회담을 마치고 나오는 두사람의 굳었던 표정도 다소 풀렸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엔 한-미-일 정상회담이 잡혀 있다. 김 대통령은 이 두 자리에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강조하며 국내적으로는 ‘초당적 대체’를, 국제적으로는 ‘국제적 협조’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 핵 문제를 우회한 채 교류·협력 관련 합의사항만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하면 역풍이 만만찮을 가능성이 높았다.

남북이 ‘대화를 통한 해결’에 뜻을 모음에 따라 북 핵 파문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조’를 얻어내는데 남측의 발언권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회담이 협의를 통한 공동보도문 발표쪽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북측의 태권도 시범단(서울 23일~), 개성공단건설 실무협의회(25~27일, 개성), 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28~30일, 개성), 북측 강제시찰단 방남(30일~) 등의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 北, 핵문제선 南韓입장 외면

## 북한 핵개발 계획 때문

### 장관급회담서 나타난 의도

장부는 이번 8차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기본 인식과 제대에 핵협의 등 국제적 합의 중 수립을 분명하게 보이내려 했었다. 북측의 원상환태도에 밀려 성공을 기대하지 못했다.

22일 오후 이번 회담의 공동보도문에는 북한 핵문제 부분과 관련, 북측이 대외로 높은 명목으로 제기한다는 원칙적 입장이 포함됐었다. 북측의 해명도 없었고 제대에 핵협의 등 국제합의 중 수립을 지지 못했다. 보도문 해명만 높은 명목, 두가 국제적 합의의 실현을 위한 것. 또 북측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것인지를 기대해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은 우리 측은 이번 회담 이전 친북한 핵문제에 공개적으로 따라 가온 인정을 먼저 놓고 이 문제에 대안이라 하는 부분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 핵개발이 명백하게 한 방향으로 해결과 제대에 핵협의를 위한 것. 이념을 분명하게 바로 잡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합의에만 집중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 대표단도 이념 의식한 것. 22일 임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을 예외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발언 역시, 핵개발을 중단한다는 국제적 합의를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 있지 않다.

공동보도문의 핵문제 부분이 담초기때에 못 미치게 한 이유는 북측이 기본적으로 핵문제를 남북간이 아니

라 미-북간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회담 첫날 김원성 북측 단장은 "미-남 양쪽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민족끼리 잘하자"며, 핵문제들 "민족 문제"라며

## ‘미국이 협상 상대’ 태도로 시종일관 北, 핵개발 해명조차 끝까지 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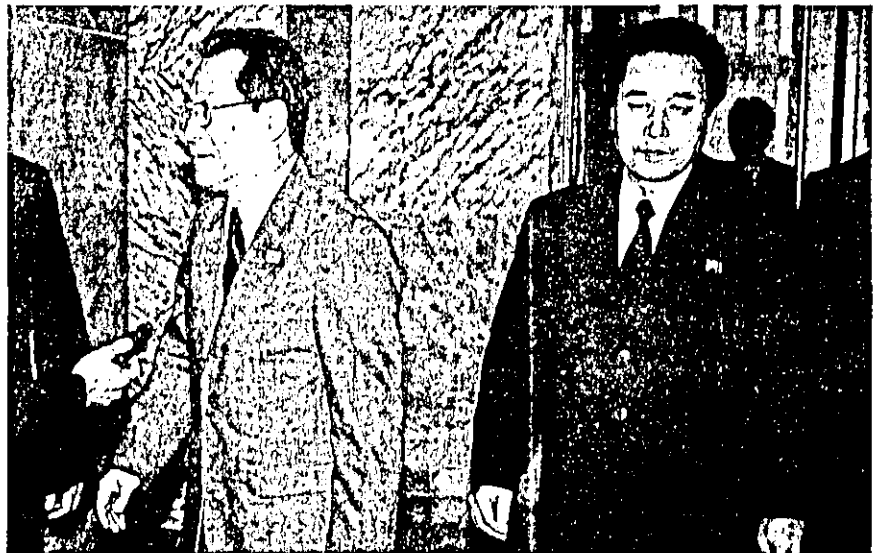
제' 범주에서 벗어내려 했다. 22일 우리 측 정세현(丁世鉉) 수석대표를 만류한 김원성(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서도 이번 핵무기 개발이 남북한이 지난 9년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란 인식은 거의 찾을 수 없었다.

북측은 또 핵 문제 해명과 관련,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자"면서도, "미국이 '안보상 우려사안'..."이란 표현을 사용해 미국이

협상 상대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공동보도문에 핵문제와 관련된 사안을 남지 않으려 했던 것 역시 미-북간 협상 전에 북측의 입장을 드러내기 싶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북한으로선 오는 22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본 뒤 입장을 드러내려 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담초 이번 회담은 남북한간 합의했던 사안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김의선과 동해선 공사 일정과 개성공단 등 각종 남북간 협안들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2차 국방장관회담 개최 문제 등이 중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송민기기자 jinkoo@chosun.com



◇허겨웠던 兪見조윤 22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측 정세현 통일부장관(시정원관)과 북측 김원성 수석대표가 북핵 관련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잠시 고려호텔의 회담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南, 귀환 늦춰가며 새벽까지 협상

## 공동보도문 타결 이모저모

### 수석대표 회동후

### "비슷해져 간다"

### 최종문안 전충

북한 핵문제에 공동보도문에 서는 문제로 사안을 제기한 8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협상을 하루 앞기 22일 재

미 타결했다.

양측은 우리측 대표단의 귀환 시간을 감안해 새벽 2시가 넘어 최고인민회의 고려호텔에서 인민문화회관 회담장으로 자리를 옮겨 3시간 길이의 날 밤에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이 타결 쪽으로 가다못한 것은 22일 오후 두 번째 수석대표 접촉에서였다. 오후 5시30분쯤 2차 접촉을 마치고 회의를 마친 우리측 정세현(丁世鉉) 수석대표가 "조금 비슷해져 가는데 어떻게 최종적으로 좀더 대표접촉을 시키고..."라며 이의를

남겨, 타결가능성을 내비쳤다. 북측이 상부의 훈령을 받고 된가 입장을 바꾼 것이란 관측이 회담장 주변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핵문제와 관련한 문안 조율 작업과 타결 안양을 논의하느라, 공동보도문 문안 협상은 결국 22일 밤을 넘겼다. 양측은 마라톤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23일 1시쯤 거의 공동보도문을 마무리짓고 양측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최종 확인을 기한 뒤 타결을 보았다. 이때가 새벽 1시40분쯤이었다.

회담 일정이 연장되면서 22일 오후 평양 순안비행장에 도착했던 대한항공 전세기 승무원들의 고려호텔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이번 회담이 난항을 거듭한 것은 북측이 핵문제에 공동보도문에 포함시키려는 것 자체를 거부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으로 비켜 가겠다는 입장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우리측은 북측에 "전면적으로 태도 담 매꾸지 않는다면 공동보도문 발표 없이 돌아갈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북측 대표단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야..."식의 원칙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한 김치저는 전했다.

/평양=공동취재단 /張一益기자 jiang@chosun.com

# 北 '美 압박 부담' 막판 타협

## 북한 핵피문

### 장관급회담 타결 배경

남북 양국이 22일 평양에서 열린 8차 장관급 회담에서 3대1로 북한 핵 문제 해결 원칙을 합의했다. 특히 북한이 대미 핵개발을 합의서에 넣는 데 동의한 것은 핵개발 금지조약(NPT) 탈퇴 등 1994년 핵 위기 때의 강경 조치를 회고하여서라고 평양을 대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 합의 타결 배경-북한은 일찌감치 합의서에 대미 방침을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성민(중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2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장관급회담 19일 자막에서 "대외장에 남북 양국에 문제가 해결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으로 남북 간 합의문에 핵무기 보유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북-미 간의 관계라고 주장해온 핵 문제를 남북간 합의문에 올리는 것은 개막식에 어울리지 않았다.

결국 북측은 핵 문제에 대한 남북의 단호한 의지를 확인하고 16-15 공동선언에 합의한 핵문제 해결로 남측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핵 미사일 문제와 핵 실험의 무기한 중지보다는 의도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일시 북한이 무언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핵 개발 계획으로 국제적 압력이 가중되는 여파로 남북 관계까지 악화시키려던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핵 실험이 취소될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핵 실험이 취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 정부도 핵 문제에 대한 협조를 관여하지 못하면 "핵 실험"을 더 거두고, 여기에 걸려 남북관계까지 꼬일 것



제3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열린 22일 남북 정상회담 수석대표(왼쪽)와 북측 김영성 단장(중)이 단독 회담을 한 후 밝게 고려호텔 회의를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北, 더 버티면 개혁·개방 좌초 판단 정부 '평화 해결' 원칙 힘받을 듯

으로 보고 핵무기의 진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평가와 전망-정부는 합의문에 북한 핵 문제 해결 원칙이 들어간 것은 "많은 성과"라는 평가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단호 핵 문제는 북-미 핵 문제이며 합의문에 넣는 데 반영한 점을 감안하면 합의 내용은 의미있는 진전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합의문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된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이 선언 내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제1차 회담 원리에 합의하는 데는 이 선언 합의 준수에 대한 북측의 동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선언에는 무리성 농축우라늄 보유 금지 조항이 들어있어 이 선언을 준수하겠다는 것은 곧 농축 우라늄을 통한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 선언 준수에 대한 평의장 입장 표명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진 핵 문제 관련 합의 사항은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이번 합의로 새롭게 꺼져진 북한 핵 개발 문제가 당장 회개될지라도 단적으로 되풀이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북측은 이번 합의가 "평화적 무장 해제"를 언급하고 있다고, 한반도 핵 개발이 수교로써 중단 방침을 들고 나왔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3차 회의 때만 치러지지 채서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핵 실험에 대한 북측의 구체적 해명과 재래 핵 실험 준수 약속 등이 북한 남북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무조건 돌지는 않다는 것이다. 북측의 "평"보다는 핵 개발 계획이 지연 폐기라는 "평화"를 국제사회는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자는 "이번 합의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이연종 기자  
yilje@joongang.co.kr

### 회담장 이모저모

22일 오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장회 상무대표 회담이 열리면서 3대1 회담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 회담은 남북 양국 대표가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담은 양국 대표가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담은 양국 대표가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22일 자막에서 22일째 회담이 계속되고 있다. 대미 핵 실험을 유보하며 핵무기를 합의했다.

정부는 대미 핵 실험을 유보하며 핵무기를 합의했다.

## 北, 한때 핵문제 명문화 꺼리자 정부 "대표단 귀환시키겠다"

시종일관 귀환시키겠다는 대한항공 전세기를 이날 낮 평양 순안공항에 보내 대기도 했다. 또 회담 관계자는 기자회견에 "공통보도문 없이 갈 수 있다"며 북측이 우리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세현 수석대표는 "예전대로 오늘 집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연장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날 회담의 가파른 세차레의 수석대표 단독 회담을 통해 밝혔다. 당초

오후 3시 30분 첫 회담이 7분 만에 끝나자 결연 분위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4시 47분부터 25분간 열린 2차 회담 중간에 김영성 북측 단장이 회담장을 나왔다가 10여분 뒤 들어가자 최고위층의 훈령이 내려온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북측 실무진도 무산하게 북측 상황실과 회담장을 오가며 메모를 전달했다.

북측 수석대표는 회담 뒤 기자들의 잇따른 질문에 "핵 실험장에 물어보시

오"라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또 "회담 지연 이유 등에 대해 '이제는 합의가 없다'며 입을 다물었다. 이후 양측이 두명의 대표를 내세워 마련한 실무 접촉을 벌인 뒤 9시 30분 또다시 수석대표 접촉에 양측 합의 타결을 위한 막바지 수순에 들어갔다는 회담 관계자들의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남북 간 합의 타결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 삼성동 남북회담 사무국의 상황실은 안도하는 분위기. 특히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과 대천 후보 간의 북핵 문제 논의를 수석대표가 합의 도출에 있어 공을 들여왔다는 설명이다.

평양=공동취재단,고수석 기자  
sskkm@joongang.co.kr

# '核명시' 거부한 北... 답답한 南

## 北 핵개발 계획 충격

### 장관급회담 진통 일정 연장

북한이 제8차 장관급회담 마지막 날인 22일을 넘기며 핵 개발 문제에 대한 변화관 입장 표명을 이끌어 내려는 난공의 요강을 시정할 거부했다. 이날 양측이 의견을 합성시킨 공동보도문 내용은 정상회담(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미국이 적대 정책을 취하며 핵 개발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해소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 원공적 수단을 탐지 못했다. 핵무기를 생산하고 제대에 임의 국제 협약 준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우리측 요구에 대해 북한은 어떠한 자세를 고수했다."

이번 회담에서 핵 개발 문제로 빚어진 한반도 위기 정세를 극복 상황까지 끌고 가지는 없었다는 북한의 의도가 엿보이기는 했지만 남한측의 기대에는 크게 못미친 셈이다. 이는 북한이 북미간 정상급 국가 박연상대에서 남북대과 협상을 직접적 유지해와 남측을 핵 문제 논의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전의 자세를 그대로 견지할 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제8차 장관급 회담이 북미회담 단 지관보에게 시인한 핵 개발 계획에 대해 남한측에는 해명하지 않은 점도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

특히 북한 평양방문이 이번 남북 접촉이 현행한 시간에 아예적으로 기대했던 특사의 위임직권 행동을 미국의 요인행동 "외세"라고

강도 높은 비난공세를 펼 것도 회담을 격려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드러냈다는 뜻이다.

북한이 회담에서 끝까지 "북미 적대시 정책의 철회"라는 조건을 고집하면서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음

**北 "核은 美가 상대" 경험과 분리전략  
국방장관회담도 외면... 南입지 좁아져  
韓美日, 대북외교압박 더 강화할듯**

에 따라 양측 정부는 북한 핵 문제 접근에서 양쪽의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핵 문제가 터지자 미국과 공동 보조를 맞추면서도 "무엇보다 북한의 진의 파악이 우선이다"며 관방사태에 머물렀다. 그러나 26일 단장 현미일 3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후속 대응 개입할 내용이 담차게 제기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전략해결기' 원칙에 이르지 않으니" "간

지해제에 따라 북한이 우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현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나온 대응 조치를 본 뒤 입장을 밝혀려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3국간 공동행동의 한 방안 설정이 갈수록 시시하는 동시에 양측 북한에 외교적 압박이 더욱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북측은 또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를 다룬 2차 국방장관 회담 개최 문제는 거론을 피한 채 개선공단 건설과 철도 도로 연경공사 지속방을 제기, 핵과 교류협력을 분리하겠다는 의도를 보였다. 하지만 핵개발 문제에 대한 진전된 태도 표명 없이 이 같은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 지는 의문이다.

/이진동기자 jaydee@hk.co.kr



제8차 남북장관급 회담 마지막 날인 22일 공동보도문 작성 등에 대한 이견으로 전체회의 개최가 지연되자 남북 실무진(오른쪽)과 북측 실무진이 멀리 떨어져 각각 얘기를 나누고 있다. /방양=사진공동취재단

## 중단... 재접촉... 밤늦도록 줄다리기

### ■ 회담 이모저모

南, 귀환비행기 대기시키고 압박

北 "외세배끼리... 민중끼리" 되풀이

남북 양측은 22일 평양에서 수 차례 회담 중단을 명령, 재접촉을 거듭하면서 밤새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이날 오전까지는 양측의 입장이 특별으로 양측은 회담에 공동 발표문 채택이 무산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북측의 수습태도 간 단적 접촉을 위해 회담 준비가 열

리는 듯했다.

오후 3시 30분에 시작된 정례회 동양부 장관과 김성령 단장간 접촉은 7분만에 결렬됐다. 양측 대표는 새로운 현상카드를 들고 1시간 후 재차 회담. 40여분간 발언을 이어갔다. 회담이 끝이 지나 회담장 주변은 다경의 기대로 술렁이기도 했다. 2차 접촉 도중 북측 김 단장이 붉은 표정으로 회의장 밖으로 나왔다 10분이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자 남북 관계자들이 모두 제각각을 읊어 대이기도 했다. 수석대표간의 합의를 오후 9시30분에

제8차 1시간여동안 계속했지만 끝내 구체적인 공동보도문 문안을 놓고 실무접촉이 벌어져 밤새 실랑이가 계속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서울을 향해 순안 공항을 이륙할 예정이었던 남북 대표단의 대한 항공 전세기에는 남측 환주료에서 대기해야 했다.

북측 대표들은 제8차 장관급 회담 첫날인 10일부터 시종일관 핵 문제에 대해 비키기는 자세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회담 관계자는 "사흘간 핵 문제에 대해 가장 직접적으로 담판한 것은 김일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의 상임위원장이 발언이었다"면서 "북측 회담 대표들은 김 상임위원장의 발언을 예외라 말하는 수준에서 반응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측 대표는 "북한 핵 개발 계획의 폐기와 체제비 합의 등 국제협약 문제를 거론하면 이에 화제를 돌리거나 잘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외세배 배격하고 우리 민중끼리 해결하자"는 원공적 입장만 되풀이했다는 것이다.

회담관계자는 "남측 대표들은 핵 문제에 대해 입장을 피력한 만한 위상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실 핵 문제는 북측의 대남 일문들의 권한 범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방양=공동취재단 인준희기자 dejavu@hk.co.kr

# 北 '美와 담판' 속내 드러내

## 南北장관급회담 타결 안팎

제8차 남북 장관급회담 마지막 날인 22일 남북은 공동보도문에 북한 핵문제를 언급하기로 합의, 핵문제 해결의 기초적인 토대는 마련됐지만 미흡하다는 평가다.

공동보도문 불구 요건 문제를 놓고 벌고 날카로운 기승전 역전은 결국 공동보도문에 '핵문제로 인해 야기된 주민생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미흡함을 담아 매듭을 지었다.

우리측이 담은 요구사항 △핵 과문에 대한 북측의 해명 △제네바 합의 추가 이행 등은 포함되지 않아 북핵 문제 해결의 결정적 근거를 마련하지는 못했다.

지난 21일 김영남 총리(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우리측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顯) 통일부장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우리(북측) 최근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면서 방한 "선(先) 미국의 적대적 태도 철회, 후(後) 대화를 통한 해결" 입장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어서 모기에 따리던 꿀 땅스럽기까지 하다.

북측이 이 두가지 핵심지안을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우리측에 선 물로 주시 않은 것은 미국과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측은 지난 17일 북전의 핵 비확산협약 이후 최 중요 북전의 김대중, 북측의 대외장관 문인 핵 해결 의지를 확인하는 단계에 도달해야 했다.

일부는 이날 남측 입장을 살펴볼 때까지 수석대표 및 실무장관 접촉을 갖고 대개말까지 회담에 따른 해명과 제네바 합의 추가 이행

을 해명이 포함된 공동보도문 작성 문제를 놓고 말까지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북측은 핵문제와 관련, 회담 기간 내에 '대화를 통한 해결'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 문제를 명문화하지는 우리측 요구에는 강한 거부감을 표명했다.

북측이 남측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었던 것은 '제네바합의 준수' 등을 명문화할 경우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믿지 어진 것으로

### 공동보도문 줄다리기를 끝 극적 합의 제네바합의 이행등 '核心'은 빠져 핵해결토대 마련했지만 미흡 지적



22일 남측 장관급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장관(왼쪽)과 북측 수석대표인 김영남 내각 책임장관이 의견 조율에 실패, 고려호텔에 마련된 임시회담장을 굳은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새벽서 심야까지 20시간 마라톤 협상

### 장관급회담 막판질풍 표정

제8차 남북 장관급회담 마지막 날인 22일 우리측 대표단의 숙소감 회담방안 관련 고려호텔은 중일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해방부터 시작된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밤이 깊어질수록 갈수록 갈수록 더 뜨겁게 달아올라 갔다. 양측의 요구사항이 크게 양립되지 않은 채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다.

이날 오전 실무접촉을 마친 우리측 관계자가 "이해 북측의 정

신만이 남았다"고 말하자 회담장 주변은 한때 "관 길은 이르는 것이 아니다"는 느긋한 분위기가 나뉘기도 했다. 하지만 오전 10시로 갈수록 마지막 전체 회의의 임정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일출 긴장감이 높았다.

특히 오전 중에 이미 두 차례나 기철 실무접촉이 오후를 거쳐 늦은 밤까지 계속 이어지기도 걸음을 못내자 "회담이 갈릴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져 나왔다.

우리측은 이날 오후 1시20분 서울로 타고 갈 대한항공 전세기를 평양 순안공항에 대기시켜 놓은 채 "우리의 입장이 북측에 반영되

### 남 "요구 거부면 즉시귀환" 비행기 대기 시킨채 배수진

지 않을 경우 관광 시용으로 귀환했다"는 배수진까지 했다. 하지만 양측은 결국 북측 주장이 많이 반영된 '대화를 통한 해

인식'이 우리측 측면도 없지 않다. 그렇게 되면 북측 스스로 핵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북측은 그동안 제네바 합의가 한 쪽은 미국이라는 일관된 주장을 견지해왔다. 양측은 전두 차례 더 많이 접촉을 갖고 최종 결정을 받아 공동보도문 작성에는 타결했으나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남측 내용이야 이행은 이번 장관급회담을 통해 남측이 북한 핵문제 해결의 한 당사자로 부상했다는 것은 반가울 만하다. /평양=공동취재단, 김준모기자 jnkim@sgt.co.kr

해야 했다. C...북측은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핵분해와 관련,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자"면서도 핵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하는 진술을 구사했다. 남북야 핵개발 과문의 진상과 사후 조치를 집중 제기하면 북측 대표단은 아예 회제를 둘러거나 "장 모은다"는 반응으로 일관했다.

한 관계자는 "북측의 가장 직접적인 당면은 지난 21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선(先)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 후(後) 대화를 통한 해결'이었다면 사 "장기 북측 파트너들은 감 상 임의결정의 발언을 예외로 말하는 수준에서 반응했다"고 말했다.

/평양=공동취재단, 김준모기자 jnkim@sgt.co.kr



# ‘核心빠진 접점’ 대화물꼬에 의미



## 북한 核개발 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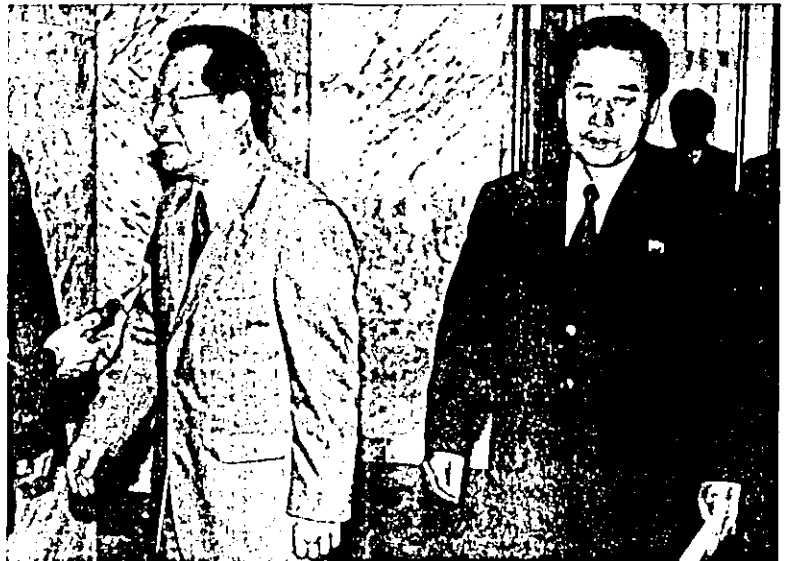
### • 장관급회담 의견접근 안팎

남북은 19~22일 동안 서울 열린 4차 차 장관급회담에서 북핵문제에 대해 대화를 해왔다는 인식을 도출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개발 의혹 해명과 제재의 합당 이행 등을 명거리는 데 가려진 끝까지 거부장을 표시. 핵개발이 한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북한이 '핵개발' 원칙에 합의한 것은 국제사회의 외교적 압력에 최소한의 양보를 보여준 것임이 시간과 함께 나왔다. 대외관계를 보다 중요시하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따라 APEC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관련국의 입장이 나온 뒤 남북 및 한·미간의 외교협상을 거쳐 제4차 장관급회담이 개최될 전망이다.

## 北 '최소한의 성의'로 시간벌기 '先핵포기' 美와 입장차 '협로'

○회담결과=북측은 회담을 위한 대화의 필요를 당파는 것이 회담의 가장 큰 성의다. 북한은 핵개발이 우선이고 그 일환으로 이번 회담기간 중 제재의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회담 내내 핵개발을 둘러싼 남북간의 입과 달리는 줄다리기와 긴장은 북한에 더도를 작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북한이 22일 대화를 통한 구상과 합의한 것이다. 양측간을 통한 "조·미 경제관계 정상화"와 동양 상주부의 원조에서 "우호성"과 "남한"의 접근은 그러나 핵개발에 걸리는 기동력이 약해 양측을 드러내 주고 있다. 북한의 권력수집 1인자인 김정은(총리)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최근 사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있다" "대화를 통해 안보상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대화와 견을 끌어낸다. 북한이 김위원장과 의 면담을 남북 대담단에 먼저 제외해 이같은 입장을 밝힌 점도 어시되지 않다. 남측 대표단을 통해 미국에 최근 사태해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것인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 신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1994년 핵위기 때 핵문제에 북·미 간 논의사항이었으며 남측을 제외했던 편측이 남한의 "복합"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북측은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상황을 미국으로 몰고가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전담=북측의 출장자세를 종합 보면 1차 북한의 회담시장은 미국의 대해 조조공방 포기, 제재의 기동력의 합력 이행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의 이같은 태도는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면 미국의 "우려사



합계준 조음 공영 /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장세현 통일부장관(왼쪽)과 북측 단장인 김영성 내각총리가 22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회담후 무거운 표정으로 회담장을 나서고 있다.

향인 핵과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을 대화로 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당국은 미국의 '선(先) 핵포기, 후(後) 협상' 원칙과 상치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북한이 한·미 양국의 요구대로 핵개발을 선천히 포기하고 그 다음 문지를 풀어가는 수순을 택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중앙방총은 "어느 일방이 상대방을 내의 누르려는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북측은 "합의"가 오면과 북한 입장에서 "비밀"이라는 것을 시사하면서 더이상 문제를 확산시키지 말고 남측과 대화로 실마리를 풀어가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회담 기간동안 보여준 북측 태도는 문제

를 동시에 풀어가는 '일괄적' 방식 을 원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선 핵포기' 원칙을 강조하

고 있는 미국과의 협상전도가 양난할 것임을 예고한다. 이윤욱기자 [yoonuk@kukinews.com](mailto:yoonuk@kukinews.com)

# 경향신문

2002.10.23(수)

## '결렬 막자' 밤샘 줄다리기

### • 평양회담 이모저모

남북은 잠편급회담 마지막날인 22일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놓고 지장을 넘겨지며 줄다리기를 벌였다.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는 무산됐으며, 남북은 이후 수석대표 단독 접촉·심무접촉 등을 번갈아가며 마지막 접점찾기를 시도했다.

○...남북 대표단은 이날 밤 평양 고려호텔에서 공동보도문안에 어떤 내용을, 어떤 수위로 담을지를 놓고 신경전을 계속했다.

핵과문에 대한 설명 및 제네바 협회의

준수할 보도문안에 명기하지는 남측 요구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견지하던 북측이 "대회를 통한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입장까지 물러서자, 양측은 공동보도문 작성을 위해 비공개 움직였다. 북측은 수시로 심무진이 회의실을 드나들며 상부의 훈령을 받느라 분주하게 움직였고, 남측 대표단 역시 서울쪽과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며 회담에 임했다.

남측 정세현(丁世鉉) 수석대표는 "조금 비슷하게 돼가지만, 서로 접점이 없으면 지연될 수 있고 예정대로 오늘 귀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별리 회담일정의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제 앞서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전체회의가 무산되는 바람에 남측 숙소인 고려호텔 앞에는 대표단을 회담장인 인민문화공전으로 태우고 간차량이 입렬로 늘어서 마냥 대기하기도 했다. 북측 관계자들도 긴장된 표정으로 호텔 2층 로비에 삼삼오오 모여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심무접촉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남측 기자단의 취재공세에 북측 관계자들이 방송 카메라와 사진기자들을 가로막고 삼삼오오

방어하는 등 한때 긴장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당초 남측 대표단이 타고 서문로 돌아갈 대안항

공 전세기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남측 대표단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출발시간을 넘겼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예전과 달리 최후통첩과 잡자기 등 '배려할 진술'을 구사하지 않았지만 고려호텔은 무거운 분위기가 역력했다. 남북 모두 회담의 결렬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는 듯한 분위기였다고 남측 회담 관계자는 전했다. 북측 관계자는 "국제 정세 때문에 천도·도로 연결, 부산·아산간 임진각 등으로 북한 관계가 고요된 상황을 살려지 못해서 곤란하다"고 말했다.

평양 / 공동취재단

南北 수시로 상부훈령  
北 막판에 한발 물러서

## 朝鮮日報

2002.10.23(수)

# 北 핵포기안하면 경수로 연기

## 韓·美·日, 당장 제네바합의 파기않기로 부시 "北 평화적 무장해제" 첫 공식언급

한국과 미국, 일본은 오는 26일 멕시코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 핵무기 개발을 계속 포기하지 않을 경우, 당장 제네바 합의의 파기를 선언하지는 않되 대북 경수로 공급을 연기하는 등의 조치부터 취하는 방안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관련기사 A3·4면

서울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한·미·일 3국은 최근 제임스 켈리(Kelly)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의 한·일 방문(10월 19~21일)

을 통해 당장 파국을 선언하지는 않고 경수로 건설 공정의 승인 등 단계적인 대응을 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한다"면서 "한·미·일 3국 정상은 26일 회담에서 이 같은 방안에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權稟編기자 kkb@chosun.com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1일 북한의 핵 개발 시인과 관련,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믿

는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조지 로버트슨(Robertson)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과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우방국 및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 우려되는 무기의 확산을 함께 막고 김정일(金正日)에게 무장해제해야 한다는 것을 납득시킬 기회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같은 북한에 대한 그의 언급은 지난 16일 국무부가 북한의 핵 개발 시인을 공식 발표한 이후 처음 나온 것이다.

/워싱턴=朱廣中특파원  
midway@chosun.com

# 北, 대화통한 核 해결 수용

## 문안조율 작업 - 공동보도문에 명시할 듯

### 남북 장관급 회담

남북한은 22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8차 장관급회담에서 북한 최대 발 핵과 미군과 관련된 북측과 대화 통한 방법으로서 이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공동보도문안에 하는데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한은 이날 북측 문건을 보도 문에 명시하는 문제에 대해 회담 일정을 넘겨가며 협의를 벌여 이같은 수준에서 접근을 찾고 방북작가 기 보도문안 조율 작업을 벌였다.

이에 앞서 남측은 북한의 핵 개발 추진 파문에 대한 해결과 제국과 합의의 즉각적인 이행을 보도문에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핵 파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없이 "구분경제로 다뤄야 된 게"에 대한 우리 등 추상적인 표현으로 대체하자고 주장, 난항을 겪었다.

남측은 이날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북측이 진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공동보도문 발표없이 예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남측대표인 정세현 통일부장관(왼쪽)과 북측대표 김형성 내각책임참사가 22일 대표접촉을 마친 뒤 회담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강대로 이날 오후 서울로 귀환하겠다는 입장을 참보하는 등 북측을 압박했다.

경부 단국대는 북한이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핵 문제의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관련, "북한은 핵문제를 남한과 대화해서 풀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남측과의 대화에서 북한의 기본적인 시각만 밝히고 공격적으로 미국과 마주 앉아 해결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한편 회담에 참가한 조명근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북측이 개성공단 기본법 등을 내급중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북측은 특히 개성공단의 출입·통관·관세·개산권보호 등을 신의주 특구 수준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일·공동취재단·홍영식 기자 ysheng@hankyung.com

# “핵 포기 선언해야 北·美대화 가능”

### 허버드 주한미국대사

도리스 허버드 주한 미국대사는 22일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먼저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버드 대사는 이날 롯데호텔에서 가진 세계경제연구원(원장 사종일) 초청간담회를 통해 북한의 핵

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면 대화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진 않다고 밝혀 왔다"고 북한의 주장을 반박한 뒤 "미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일방적인 해결을 바라지 않으며 한 국 등 동북아 우방들과 긴밀히 협의해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 경수료사업 중단여부

와 관련, "아직 결정될 바가 없다"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ENED)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재개발사업의 완전 파기된다고 생각하나.  
A-"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먼저 제재해방의가 무효화했다고 한 점을 지적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는 북한에 달려 있다."  
홍영식 기자 ysheng@hankyung.com

# “日, 北 핵포기해야 수교교섭”

### 北核관련 외신반응

Q-일본 니혼게이지신문은 22일 "한·미·일 정부가 오는 26일 멕시코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개발 즉각 종지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기 위해 검토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Q-요리우리신문은 "일본정부

는 오는 26일 개개되는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기를 경우 수교 교섭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견정했다"고 보도했다.

Q-BBC방송은 "미국은 북한 핵 문제를 이라크보다도 같은 방법으로 풀지는 못할 것"이라며 "핵시정에 대한 특별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외교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Q-라이프타임즈(LifeT)도 "미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 아직 협상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지 않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방안을 신중한다면 큰 진전은 없다는 평가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의 북한주적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무절하고 성공 가능성도 높일 것이라고 IT는 지적했다.

종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왼쪽) 통일부장관과 북측 수석대표인 김경성 내각책임참사가 22일 오전 예정됐던 남북장관급회담 전체회의를 열지 못한 채 고려호텔 임시회담장을 나서고 있다. ●평양 순보원기자 angle@kdaily.com

■ 남북장관급회담 이모저모

대한매일

2002.10.23(수)

“결렬땐 부담” 삼야담판

22일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은 오전 10시로 예정된 전체회의가 발목매이기 될 리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저녁 내내 남북 수석대표의 단독 접촉은 세 차례 갖고 실무접촉을 진행하며 막아지 타결의 기대감을 높였다. 남북 양측은 북한의 핵개발 계획과 관련해 입장 차이가 적지 않았지만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서로의 이해와 요구가 맞아 떨어지듯 늦게까지 합의 도출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

남한의 주된 요인은 공동보도문 초안 중 북한 핵개발 계획과 관련해 남북은 책임있는 해명과 제재가 합의 이행이라는 구체적 표현을 주장한 반면, 북측은 명시적 지적없이 추상적 표현만을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남북 양측 실무대표들은 공동보도문의 최종 문안을 확정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계속 조율했고 막판 정세현(丁世鉉) 남측 수석대표와 김영일

북측 수석대표가 세 차례에 걸친 단독접촉과 이후 실무접촉을 가하며 막아지 타결에 전력을 쏟았다.

오후 평양 순안공항 출발 열차를 떠난 채 오후 4시 15분쯤 정 대표와 북측 김 대표가 2차 실무접촉을 시작한 직후 회담장 주변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북측 실무진이 수시로 회의실을 드나들며 상부의 관망을 전달하기도 했다. 남북 모두 결렬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회담에 임하는 분위기였다. 북측 한 관계자는 “외세와 국제정세 때문에 청도 연결, 부산에서 연개입 참가 등으로 북남관계가 고요한 상황을 살피지 못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양측간에 짐장이 없으니 각 얘기를 다해보야 한다.”면서 회담을 삼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지에서 김세현 통일부장관 등 남측 대표단이 김

연남 최고인민회의 강연위원장을 만난 사실을 공개 언급했다. 노동신문은 김 장관의 김 위원장 면담 사실과 만수대 장자사 부원장 지휘실 참관 사실을 각각 2면과 4면에 실었으나 북의 핵개발 의혹과 관련된 김 장관의 주장 등은 보도하지 않았다.

●애초 남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갖고 공동보도문을 교환한 뒤 공동도출을 하고 오후 3시 평양 순안공항에서 대한항공 전세기출 이용, 서울로 돌아올 계획이었으나 밤늦게까지 지연됐다.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선후보 5인과 대통령의 회동 자리에서 장관급회담 진피를 설명해야하는 등 남측 대표로서는 하루를 더 남기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협상을 강연시키기도 힘들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평양 공동취재단-북측심기자 younglan@kdaily.com

■ 北 경수로관계자 표정

제재해 해빙의 하기 논란과, 남측은도 금호지구 신보에서 진행중인 경수로 건설사업 북측 관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지난 15일 등에 직경 3000mm 방목에 1백50일간 방목을 마쳤었던 경수로 기공식의 신정길(申正吉) 특보는 22일 “북측 관계자들도 경수로 건설사업에 치질이 벗어날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특보는 “북측 관계자들은 한마디로 충격과 감탄으로 어떤 사건을 내리

“차질 빛을라” 깊은 우려감

보고 있으며 국제사회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방목 사업에 북한 핵 파문 보도 이물 건이었기 때문에 북측 인사들로부터 핵 파문 소식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다는 김 특보는 “북측 당국이 경수로 건설과 관련한 북측 노동자들의 취업에도 직극

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북측은 경수로 건설현장인 함남 금호지구와 서울을 연결할 위선 동진명 구축업이 22일부터 다음날 평양을 방문하는 KEDO 대표단에 대해서도 비자불발로 방금해 왔다.

이 관계자는 “협상장 예상에 있는 협상이었기 때문에 비자 발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핵 파문이 떠들썩한 가운데서도 연장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 것은 북측의 처분한 대응이라는 메시지로 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kdaily.com

# 南北 '대화로 핵해결' 합의할듯

## 장관급회담 밤새 진통

남북은 8차 장관급회담 마지막 날인 22일 북한 핵개발 계획 폐문과 관련, 북측이 대화를 통한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포함한 공동보도문을 타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이날 회담 일정을 닫기 가미 일제대회를 가진 끝에 이 같은 원문적 수준의 진통을 갖고 밤늦게까지 공동보도문 문안 조율 작업을 벌였다. 남측 회담관계자는 "공동보도문에 구체적으로 최근 핵피문에 대한 북측의 해방과 제네바 합의 준수 등 구체적인 국제적 합의사항의 이행 문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북측은 대화와 함께 핵문제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남측이 숨기자제 요구했던 제네바 기밀합의에 대한 북측의 이행 약속 등은 공동보도문에 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북

한의 핵개발 포기를 심독하겠다는 남측의 압도 북측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남측은 북측에 대해 핵개발 폐문에 따른 최소한 정의있는 조처를 강력히 요구했다. 남측은 핵개발 문제에 대해 북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공동보도문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북측을 설득했다.

남측은 이 같은 조치가 있어야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고 미국과의 대화 분위기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북측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대화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원문적인 입장만 외쳤다. 북측은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를 맞은 자리에서 핵개발 프로그램은 시인했던 것에서 압수 있었듯이 핵문제를 남북간 논의 사항이 아닌 북-미간 의제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남북이 91년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나 북측이 91년 합의한 제네바 기밀합의를 위반했다는 인식도 없었다. 북측의 이 같은 인

식은 핵개발 폐문의 해결에 남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남북이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접근을 갖은 것은 모두 회담 일정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남측 회담관계자는 "양측은 이번 문제(핵개발 폐문)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남측대표단은 23일 김대중 대통령과 대담한 후보간 북한 핵개발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논의를 앞두고 있어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의 비난도 부담이 됐다. 북측 회담관계자도 "외세와 국제경제 때문에 침도 도로 일갈 등으로 북남관계가 교란된 상황을 삼리 지 못했던 곤란하다"고 말했다.

남북은 예상대로 이날 밤 간담 회의를 갖고 23일 새벽이라도 서울로 귀환할 방침이지만 공동보도문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가 늦춰질 수 있어 회담이 하루 더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상환기자 shyaon@mk.co.kr

# 서울경제

# 南北, 핵문제 대화해결 원칙합의

##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에 명시... '제네바 합의 준수'는 빠져

남북은 8차 장관급 회담 최종일인 22일 북한 핵 개발 계획 폐문과 관련, 북측이 대화를 통한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 이를 공동보도문에 명시했다.

그러나 제네바 핵 합의에 대한 북측의 이행 약속 등 실질적인 제재방안은 공동보도문에 담지 못해 이번 회담의 성과는 반감될 전망이다.

이날 회담에서 남북은 제네바 합의 화기호까지 대물리고 있는 한반도 위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북측에게 핵 합의의 남측준수를 촉구해 이같은 공동보도문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남

측 회담 관계자는 전했다.

★관련기사 5면

하지만 북측은 핵 개발 폐문과 관련한 구체적인 해방, 제네바 합의의 국제적 이행 등에 대한 명시적 입장 표명을 유보, 진통을 겪다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원칙적 합의만 공동보도문에 담기로 합의했다.

한편 조영준 통일부 교류 협력 국장은 이날 북측의 발도 접촉에서 북측이 다음달 중에 개성공단 기본법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북측은 특히 개성공단의 출장, 농

권, 관세, 재산권 보호, 공단 내 합동 등을 신의주 특구 수준으로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공동취재단 이성훈기자 shlee@sed.co.kr

## 부시 "北核 평화해결"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한국·중국·일본·러시아와의 협력 아래 북한을 평화적으로 무장해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21일 조지 로버트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강장일 국부위원장을 설득하겠다"며 "우리가 침략한다면 위험에 포함되므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장쩌민(江澤민) 중국 주석과의 회동 및 이시애네 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협조를 강조, 이번 일이 주변국과 공조해 "실각한 무기 확산을 막고 갑 위 환경에게 무장해제를 하도록 압력시킴 기회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미·일 정부는 오는 26일 멕시코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개발 즉각 종지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샤가 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신경림기자 klsin@sed.co.kr

핵 문제 깊은대화 나누듯

“北서 먼저 가시적 조치 취해야”

허버드 美대사 일문일답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국대사는 22일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북한 핵 개발에 대해 “북한이 대화의 단계를 되기는 기본합의를 어겼기 때문에 핵개발을 포기하는 등 가시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미국이 대화의 대안책을 포기하면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비밀리에 진행해온 핵개발 프로그램을 시인, 1991년 체결된 제네바 합의를 어겼음을 드러냈다. 미-북대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먼저 밝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라크와 달리 북한에 대해서는 경제교섭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은 북한에 평화적 해결을 미룬다고 여기고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제네바 합의가 위반 과거였다고 생각 하나.”

△핵의 경우간담은 북한이 먼저 기본 합의(제네바 합의)가 무효화됐다고 한 점을 지적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지는 북한에 달렸다. 북한은 뉴욕과 우리와 핵개발프로그램에 대해 가시적 조치를 하고 비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조치뿐 해야 한다.

“북핵으로 시국은 중단된 것인가. 스이적 권질만 바 없다.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KEDO) 자체에서 결정을 내린 문제다.”

“북핵시대를 다루는 데 있어 미 행정부 내 의견은 없다. 스이적 각 계층을 따른다는 데 이견이 없다.”

“북한은 ‘고대정치 외교’를 시도하는 듯한다. 그 의도가 뭐라고 본다. △북한은 일관된 남치는 시인하고 사과했지만, 핵무기를 핵무기에 대체시 는 상황에는 반적으로 고백한 것도 아니 고 사과한 것도 아니다. 김의욱기자

예상의 긴시간 추측 무성

정세현 총장부 장관과 북한 김연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2일 평양에서 50여분간 독대한 것과 관련, 평양 측은 예기된 내용을 지참 놓고 추측이 무성하다. 핵문제에 관한 양측 입장만 교환했다면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란 관측은 근거로 남북관계 발전에도 관계에 관해 깊숙한 대화가 나뉘는 관측이 유력하다.

남북장관회담 뒤로 관계지수는 정장관이 주로 예기된 했고, 김의욱장은 많이 투입했다고 전했다. 김의욱장 장관은 핵개발 개와 관계가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일으키는지를 생각해 설명한 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더 이상 대화 포용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결론을 전했다.

또 장사 이 행정부의 정책사 내 개발에 대해 기존의 초강경 입장을 누그러뜨리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생겨났다. 장사 내 미국을 비난하며 핵개발 포기여하를 묻게 할 것 등 제네바 합의는 사실상 무효화 될까 여부에 대한 관측도 유력하다. 장사 내 미국의 정책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관측도 생겨났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고점에서 김의욱장은 핵개발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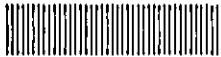
이후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도 강단했음 것으로 보인다.

김의욱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언급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이계남 개혁은 1999년부터 미국과 북한 장로교단에 의해 알려진 사실을 이번이 시인한 것인데 왜 어떻게 숨보려나 하는 부로 한의견을 수도 있다. 이번 말이 나오니만 김정일은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개발 강도를 정확히 모르고 때문이라며 신중성도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다.

두 사람은 핵문제 아니라 최근의 남북관계에 대한 이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특히 김의욱장은 최근 북한에서 전개되고 있는 100여억 내각자원의 배치를 통한 핵 개발을 시사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김의욱장은 12월 대선에 선거 결과에 따라 남북관계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도 김의욱장에게 질문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의욱장은 대북대응을 준비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보고했을 것으로 관측되며, 김의욱장 회가 직후 김대중에게 북한의 사태에 관해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창호기자

서울경제



‘제네바 합의 준수’ 빠져 알맹이 없는 타협 핵해결 韓·美·日 공조 속제로

■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합의

제2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양측간 평한 입장으로 단락을 겹다 결국 양측이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해 이틀 공동보도문에 담았다.

하지만 남측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핵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북한측 해명과 제네바 합의 준수 등의 문구는 공동보도문에 명시하지 못해 알맹이 없는 타협에 그치게 됐다. 그럼에도 남측은 평화적인 핵 문제 해결에 합의함으로써 대화기조를 어긋할 수 있는 도전을 피하려 했다. 특히 남측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핵이론 대가들을 동발 의제에 올려 남북 교류 협력 관련 사안들을 재대로 논의하지 못해 핵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 없이는 양측간 교류 협력도 치밀을 빛을 수밖에 없음을 확인했다.

△핵에 발목 잡힌 회담=남북 양측은 처음부터 입장이 엇갈렸다. 남측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논의에 앞서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한 남북합의한 해명과 조치를 요구한 반면 북측은 핵 문제를 미국과 일관 타 결하고 남측과는 경제협력 논의에 치중했다는 이원 전략으로 일관했다. 으뜸 의제였던 핵 문제에 이견이

너무 커 나머지 안건들은 실도 공은 논의할 수가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남측이 접근 지각한 남측자 차의 등 6.25 이후 평안북도 등지.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등의 안전과 북측의 주요 의제인 철도 도로 연결 공사 지속, 당국 학원의 개방등만 전진, 해운항정 제정 등의 사안은 별 정전 없이 각자 주장을 열거하는 선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하지만 북측은 개방등만 기 분법을 내달 중에 발표할 것과 자선공단의 출납, 통관, 관세, 재산권 보호, 특구 내 활동 등을 신의주 특구 수준으로 상충하고 있다고 밝혀 남북 경협에 대한 지지 않은 의지를 내보냈다.

△향후 전망=회담 성과가 미미한 만큼 속도가 많을 수밖에 없다. 당장 남측은 미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 제 이번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핵 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미-일 대륙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제네바 합의 파기로까지 추방하고 있는 한반도 핵 청국을 언복확약하기 위해 남북간 교류는 일장대로 진행하는 한편 북측으로부터 입찰 열리는 한-미 회담 회담과 26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후속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성훈기자 shlee@ed.com

# 北核 즉각포기 촉구

## 金대통령-대선후보 간담회...“核문제 초당적 대처”

### 국제공조 통한 평화적 해결 공감 核-對北지원 연계에는 일부 이견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 국민통합 21 정몽준(鄭夢準)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후보, 무소속 이한동(李漢東) 전 총리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23일 김의대에서 간담회를 갖고 북한의 핵 개발 문제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A3면에 관련기사

김 대통령과 5명의 대선 후보들은 이날 “6자 회담”에서 경제전(丁世鉉) 통일부장관과 임성준(任成準) 대통령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북핵 문제와 관련된 남북한 및 한미일 3국 간의 협의 대응을 보고 받고, “북한의 핵 개발은 민족의 생존에 관한 중대문제인 만큼 김대중(金大中) 수석으로 하여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남북간에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회담에서 이회창 후보는 “핵을 만드는 비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대북 현금지원은 동결해야 한다”며 북핵문제의 대북지원의 연계필요성을 제기했으나 노무현 후보는 “현금 지원 중단 등의 주장이 있으나 이럴 때일수록 대북 교류를 더욱 간담히 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김 대통령은 즉답을 하지 않았으나 이회창 후보는 “임동원(林東源) 대통령외교안보특별대표가 대북 지원과 핵문제를 연계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실명을 했다”고 진내 앞으로 논란이 빚어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 김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는 그 위험이 완전히 근원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며 “장관급 회담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도 모두 완감으로 돌아간다는 김을 북핵핵에 분명히 얘기했다”고 밝혔다.   
윤송모기자 ysmo@donga.com

## 北核문제 초당 대처

### 김대통령·대선후보 5인, 평화해결 공감

#### 대응방법에는 시각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3일 오전 김의대에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 국민통합 21 정몽준(鄭夢準)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후보, 이한동(李漢東) 의원 등 주요 대선 예비후보들과 간담회를 갖고 “북한 핵문제는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박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관련기사 2·3면

또 북한의 핵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한반도에서 전쟁 등 위기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데도 의견을 함께 했다. 그러나 이회창 후보는 핵개발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북 현금지원의 즉각 동결, 정몽준 의원은 “북한을 진정한 대화 상대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주문한 반면, 노무현 후보는 “이런 때일수록 대북 교류를 더욱 간담히 하고 남북대화 등으로 충분히 얻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해 시각차를 보였다. >윤송모 기자 ysmo@donga.com

김 대통령은 “어떤 일이 있어도 대량살상무기는 그 위험이 완전히 근원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도 모두 완감으로 돌아간다는 김을 북핵핵에 분명히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회창 후보는 “북한은 국제안보기구와 사찰을 수습해야 하며, 대북지원은 핵문제 해결과 직결하게 연계하는 전략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후보는 “대북지원 중단 주장이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대북 교류를 더 간담히 해나가야 한다.”면서 “북한 핵문제가 전쟁의 대상이 되거나 정략적으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몽준 의원은 “대북 경수로 사업은 여러 회원국과 의견을 나누기 전에 중단하느니 차는 많은 나오지 않아야 하며, 제네바협약 파기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영길 후보는 “북한의 핵개발은 포기되어야 하지만 미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매일

2002.10.24(목)

# “북핵 평화해결 초당 협력”

## 김대통령·후보 5인 회동...구체 대응책엔 시각차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노무현 민주당,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국민통합의 정몽준 의원, 이한동 의원(무소속)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23일 청와대에서 대북 정책 간담회를 열어 북한 대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대처한다는 뜻을 같이했다.

김 대통령과 대선 후보들은 특히 북한의 핵 개발을 절대 용납할 수 없지만,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한반도에서 전쟁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대북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금지원 중단 및 교육협력 속도조절 주장과, 긴장완화를 위한 교육협력 강화 등으로 대선 후보들 사이에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관련기사 3면

김 대통령은 “어떤 일이 있어도 대립상황 무기는 그 위험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도 모두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북한 쪽에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전쟁, 경제제재, 대외 등 세 가지가 있지만 전쟁은 기공을 단념 결과물 가져오고 경제제재는 대북기와 관련해 북한을 자유롭게 만들어 줄 가능성이 있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이회창 후보는 “핵문제와 대북지원의 직접적 연계하는 전략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력을 만드는 비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현금 지원은 동결해야 하며, 대북 지원도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후보는 “북-미 관계가 잘 안 풀릴수록 남북대화 분위기를 만들어야 위기가 고조돼도 문제해결의 심리마음을 갖을 수 있다”며 “어떤

때일수록 대북 교류를 더 긴밀히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길 후보는 “미국도 2003년 경수로 완공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과 북한이 동시에 신개공작 의사 철회와 핵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몽준 의원은 “제네바 합의 과거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고, 이한동 의원은 “한반도 문제의 일환 다짐을 위해 2차 정상 회담을 재개하고, 총리급 특사를 파견하는 등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몽준 의원은 이날 회담이 끝난 뒤 “미국이 제3국의 도움을 통해 (북핵 관련) 강보를 알았고, 그 나라의 이념을 밝히지 않아달라고 청와대에 쪽이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용성 기자 yskim@hani.co.kr

# “北核문제 초당적 대처”

## 김대통령·대선후보5인 회동 ‘정부 핵정보 은폐’는 비판

### 韓-美-日공조 평화적 해결모색 공감

### “北지원 중단” “긴밀협력” 대응책 차이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李會昌, 민주당 노무현 盧武鉉, 후보, 국민통합의 정몽준 鄭蒙準,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權英吉, 후보, 무소속 이한동 李漢東, 의원 등 대선 예비 후보들은 23일 청와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북한 핵개발 문제에 대해 초당적 대처를 합의했다.

(관련기사 3-4면)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문제 해결은 북한과 대화창구를 유지하면서 한-미-일 공조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후보들은 정부가 북한 핵정보를 미리 알고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비판하면서 대응방안과 시각에서 차이점을 보였다.

이회창 후보가 “핵개발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북 현금지원을 즉각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몽준 의원이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대담기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한 반면 노무현 후보는 “이런 상황은 남북교류가 더욱 긴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한 입동된 외교안보포용정책 보는 “북한핵에 관련된 정보를 경

의선 철폐의 착공식을 할 시점인 6월 말 미국에서 통보받았으며 미국도 제3국의 도움을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임 특보의 언급에 따르면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 사실을 알고도 경의선 착공 9월18일과 앞 등 대북경제 지원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간담회에서 이회창 후보는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수용해야 하며, 대북지원은 핵문제 해결과 적절하게 연계하는 전략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남북간 모든 대화채널을 열어놓고 북핵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후보는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진정상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북미 대화의 입장차가 커 잘 안 풀리고 있으므로 남북대화의 분위기를 더욱 열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몽준 의원은 “핵문제가 남북 대화에서 다뤄지는 것은 평가하지만 이번 문제를 계기로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상대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영길 후보는 “북한의 핵개발은 포기되어야 하지만 2003년 경수로 완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등 미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동 의원은 “총리급 특사를 파견하는 등 북한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대통령은 “어떤 일이 있어도 대립상황 무기는 그 위험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면 다른 문제도 모두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북한측에 분명히 얘기했다”고 밝혔다. /정승욱·허병구·김정중기자 jswook@seggye.com



# “北核해결 초당 대처”

## 김대통령·대선후보 간담...대화 유지 공감

### 對北정책등 구체해법엔 시각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 국민통합 21의 정몽준(鄭夢準)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후보, 무소속 이한동(李漢東) 의원 등 주요 대선후보 5명은 23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갖고 북한 핵개발 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김대통령과 대선후보들은 이날 정세현(丁世鉉)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제8차 남북 장관급회담 결과와 한·미·일 협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북한의 핵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 문제 해결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야 하고 ▲한반도에서 전쟁 등 위기 상황을 막기 위한 남북간 대화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 등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 권런기자 3·4면

김대통령은 “어떤 일이 있어도 대량 살상무기는 그 위험이 완전하게 근본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경제제재를 통해 제네바 협정을 파기하는 것은 핵무기와 관련해 북한을 자유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993년과 94년 북핵위기 당시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열어 소외되고, 북한과 미국만 대화를 하며 결과적으로 경수로 비용만 부담하는 경험을 할 바 있기 때문에 북한과 대화를 열어서는 안된다”며 “국민의 정부 임

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협동을 신중히 하고 있고 다음에 맡는 분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후보들은 그러나 구체적인 대북정책과 관련, 후보간 및 김대통령과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회창 후보는 “북한은 핵개발을 즉각 포기, 폐기하고 정부는 미·일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공간을 표시하면서도 “핵을 만드는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현금 지원은 동결되어야 하고, 대북지원도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회동 후 여의도 당사에서 “오늘 회동은 북한 핵개발 문제에 대해 단호한 태도로 대처하고 초당적 대응에 협력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이 이뤄졌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노후보는 “대북지원 중단 주장이 있지만 이합 패임수록 대북교류를 더 긴

밀히 해야 한다”면서 “북·미 관계가 잘 안될수록 남북대화 통로를 열어놓아야 위험이 고조돼도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핵문제가 남북대화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경기하지만 이번 논쟁을 계기로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상대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태도변화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후보는 “북한의 핵개발은 포기되어야 하지만 2003년까지 경수로를 완공하고 대북 금융·경제제재를 완화하겠다는 미국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동 의원은 “제8차 정상회담을 재의하고, 총리급 특사를 파견해 북한에 사대의 심각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종근기자 hauryang@jungghang.com

## 朝鮮日報

# “북한核 절대 용납못해”

## 金대통령·후보5명 공감... 저지방법엔 異見

金대통령 “美·日과 평화해결책 마련”

李會昌 “對北 현금지원 동결 필요”

盧武鉉 “개발 진행상황 밝혀져야”

鄭夢準 “제네바합의 파기 신중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후보, 무소속 이한동(李漢東) 의원 등 주요 대선 후보 5명과 만나 북한의 핵 개발 파문 대책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 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으나 북핵 개발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견해가 달랐다. ▶권런기자 A3·4면

김대통령은 “전쟁을 가중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고, 경제 제재를

통해 제네바 협정을 파기하는 것은 북한을 자유롭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면서 오는 26일 멕시코 APEC에서 부시 미 대통령,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 만나 평화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회창 후보는 “심각한 일이 발생했는데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핵을 만드는 비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대북) 현금 지원은 동결해야 하고, 대북 지원도 조절해야 하며 대북 첫 번째 의제가 핵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후보는 “북한 핵 개발은 용납되어서는 안되고 개발이 진행될 게 있다면 그 내용도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하고 “한·미·일이 인내를 갖고 대화로 북한을 설득해야 하며, 무력은 고려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몽준 의원은 “미·북 제네바 합의 파기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동 의원은 “금강산사업 등에 포함된 돈이 농축 우라늄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영길 후보는 “북한이 핵 개발은 포기해야 한다 2003년 경수로 완공 약속과 대북 금융경제 재개 완화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 등 미국에서 핵안이 있다는 것도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全民기자 baeta@chsun.com

# 김대통령-후보5명 北核 초당협력 합의 北지원-교류지속엔 시각차

## 임동원특보 “美, 북핵개발 정보 제3국통해 알아”

김대중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 국민통합의 정몽준 의원, 민주당 권영길 후보, 이회창 의원 등 5명의 대선 예비후보들은 21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갖고 북한의 핵개발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관련기사 2·3·4·5면>  
그러나 이회창 후보가 대북 현금지원 동결을 요구한 반면, 노무현 후보는 대북 교류협력을 더욱 진일보 추진해야 한다고 장문원 의원을 피력하는 등 대북 지원에 관해서는 후보별로 시

각차를 보였다.  
김대중은 “정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량살상무기는 그 위험이 완전히 근원적으로 제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다른 문제가 잡히더라도 원점으로 돌아가고, 잡힐 수 없다는 점을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에게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대중은 이어 “해결 방법은 전쟁, 경제제재, 대화 등 세 가지가 있지만 전쟁은 누구도 바라지 않고, 경제제재는 봉쇄제나 위정할 파기하는 것은 핵무기와 관련해 북한을 자유롭게 만들어주

는 길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쟁이나 제재가 아니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회창 후보는 “핵을 만드는 비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현금지원은 동결해야 하며, 핵문제 해결과 대북 지원을 걱정하든 안하든 하는 전략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후보는 “대북 현금지원을 동결하지거나 핵분열과 대북 지원을 연결하지는 주장이 있으나 이런 때일수록 교류협력을 다 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몽준 의원은 “핵문제를 계기로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상대인지의 의구심을 갖게 되며, 제대마 합의와 같은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문원 후보는 “대북 현금지원 및 경

수로 지원 중단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회창 의원은 “금강산 사업 등에 포함된 돈이 농축우리를 개발에 쓰이지 않으니 하는 의혹이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몽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임동원 외교안보특별특보는 간담회에서 미국도 북한 핵개발 관련 정보를 제3국 도움을 통해 알았다면서 제3국을 기망했으나 김석기들에게 제3국 이름을 망설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임특보는 또 “북한 핵개발 관련 정보가 해외에서 정보 수준으로 생산,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은 지난 8월 마지막 주”라고 말했다. 김진중기자 jhkim@kmb.co.kr

국민일보

2002.10.24(목)

## 美 “北 다음 조치 주시”

### 남북합의에 대한 입장

### “핵포기 보장돼야 협상”

핵 문제를 비롯한 남북간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기로 한 제3차 남북 장관급회담의 합의 내용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기본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을 비롯해 폴린 파워 미 국무장관 등 미국의 지도부는 이미 지난 21일을 전후해 공화적 해결 노선을 거듭 천명해 놓았다. 이라크에 대한 전쟁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미국이 두 개의 전선을 펼치기는 무리인데다, 북한 핵문제는 이라크 공격처럼 시급한 과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단 한국 일본 중국 등 이해를 같이하는 우방들과 대화 방안을 협의하면서 북한의 다음 조치를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대화나 협상은 북한이 최소한 핵개발을 포기할 것을 약속한 뒤에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핵문제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한 것은 부시 행정부의 단호한 분위기를 잘 나타내준다. 그는 “북한이 과거 협의를 하거나 국제적 의무가 위반하면서 핵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진행시킬 수 있느냐”며 공이 북한쪽으로 넘어가 있음을 강조했다.

반면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대의 축’에 포함시키고, 유력자로 복귀하는 ‘과대시 정책’

을 받아 삼아 우선 미국의 자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USA 투데이는 22일 워싱턴 포스트 동북아 지역국을 지낸 칼빈도 건문기 빌리그 해리스 국제정책센터아시아지역 소장의 기고문을 통해 해리스 소장은 최근 유엔주재 한성원 북한대사와의 대화대담을 소개했다.

해리스 소장은 “지난주 한대사와 2시간 동안 나는 대화를 통해 본 결과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인정한 의도가 분명해졌다”며 “중앙 당국은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대사가 오한 테이퍼에서 몸을 기울이며 “우리는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당신들은 대단히 고압적이며 이것, 저것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인 최후통첩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해리스 소장은 한대사가 “우리는 당신들이 우리 자신의 관심 철안을 다루기만 한다면 핵무기와 미사일 문제와 관련된 모든 철안을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구대만기 않고 특유의 비관적 외교를 보여 사태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경우 미국은 중유 공급 및 경수로 건설 중단 등 경제적 제재까지 단행할 수 있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단은 공화적 해결까지 이르러 고강의 미-중 정상회담과 11월 핵포기까지 걸리는 ‘대결대협’에 대해 이 장관급회담을 통해 우방들을 통한 간접 대화를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문필기자 norwa, skmb.co.kr

정세현 통일부 장관

청와대 6자회담 보고 요지

임성준 외교안보 수석

### “핵개발 중단 강력 촉구”

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에 핵 개발과 관련한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고, 핵 개발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 폐기해야 하며 이 문제는 반드시 대화를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수차례의 회담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면담을 통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설득을 했다. 예정된 입장을 넘기는 난항 끝에 핵문제 해결 노력에 합의했다. 북한 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당사자간에

#### 회담·면담서 끈질긴 설득

#### 일점성기며 해결노력 합의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북한은 과거의 협상態度와 달리 우리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경청하는 자세를 보였다. 경의선 통행선 합동 도로 연결공사 조기 추진, 개성공단 12월중 학공 및 철도에 우리측 사무소 설치, 통행합의서 리운합의서 체결, 차기 장관급회담 내년 1월 중순 개최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정부는 이러한 회담성과를 토대로 남북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계속 촉구하고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회담결과와 핵문제 해결과정 등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림으로써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적 공감대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

### “국제 공조로 평화해결”

올해 여름 미국측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진전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한국과 일본에 제공해준데 따라 한·미·일 3국은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에 착수했다.

한·미 양국 정부는 문제의 실제 및 해결방법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북한에 철저한 규명과 폐기를 요구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한반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평화적 해결 원칙 하에 국

#### 우리 정부가 능동적 역할

#### 식량등 인도적 지원 계속

제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에 주력하기로 했다. 미국의 경우 북한과 이라크는 차별되며 이라크와는 다른 접근법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한·미·일은 현재 중유개공 및 경수로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고, 3국간 및 여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회원국들과 협의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남북 및 북·일 대화 채널의 유지를 지지하면서 한일 양국이 북한에 핵 프로그램 폐기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1993.94년 핵위기때와는 달리 현재 남북대화 채널이 유지되는 점을 활용해 우리 정부가 문제 해결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능동적 역할을 해나갈 방침이다. 또 핵문제에도 불구하고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은 계속할 것이다.

# “北核문제 초당적 대처”

金대통령·대선후보들 회동 核개발계획 北포기 촉구

## 구체적 대응엔 강-온 시각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 국민통합 21 정몽준(鄭夢準)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후보, 이회창(李會昌) 전 총리 등 대선주자 5명은 23일 청와대에서 회동, 북한의 핵 개발계획 폐기를 촉구하고 이 문제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김 대령원과 대선주자들은 북한의 핵 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 문제 해결을 대외적

통에 평화적으로 해야 하며 한반도에서 전체 동맹 국가들이 연방제식 논의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이회창 후보는 대북 지원 자원의 동결, 대북지원에 핵 문제 해결을 주장한 반면 노무현, 권영길 후보는 대북교류를 더욱 진밀해 해야 한다고 강조해 구체적 안건에서의 시각차를 보였다. ★관련기사 3면

김 대령원은 “이번 일이 있어도 대량살상무기는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는 것이 강硬的 확고한 입장이

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도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북한측에 분명히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회창 후보는 “북한은 국제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수용해야 하며 대북지원은 핵 문제 해결과 연계하는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후보는 “대북지원조건 주장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대북교류를 더 진밀해 해야 위험이 고조돼도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몽준 의원은 “경수로 사업은 회원국들과의 협력이 나오기까지는 입

장표명을 하지 않아야 하고 제네바 합의 폐기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길 후보는 “북한의 핵 개발은 포기해야 하지만 미국이 2003년 경수로 완공, 금융·경제 제재완화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책임도 있다”면서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 협회의 북한 핵 포기까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회창 전 총리는 “2차 남북정상 회담을 제의하고 총리급 특사를 파견, 북한이 평화적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heys@hbk.co.kr



◇ 김문만은 丁東일 남북장관급회담을 마치고 23일 평양에서 돌아온 정세현 통일부장관이 남북대화사무국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朝鮮日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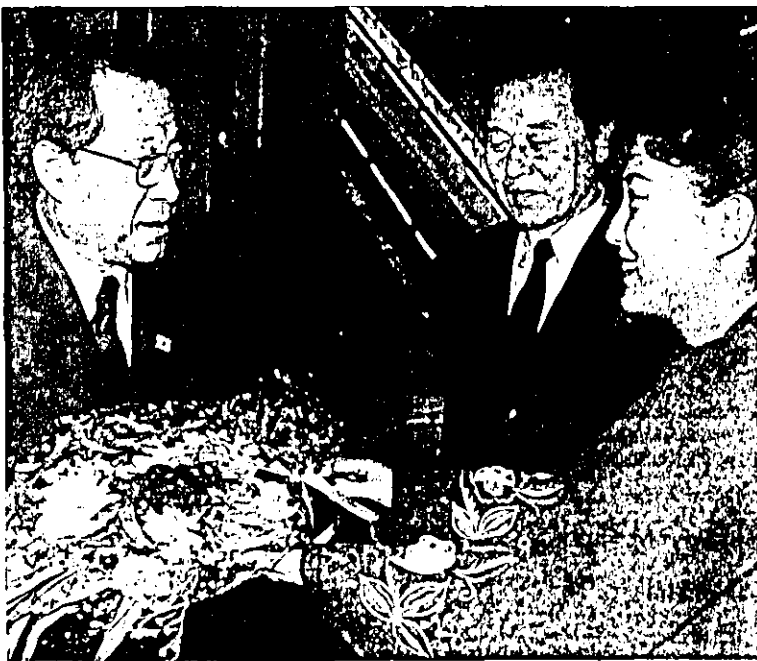
2002.10.24(목)

## 경향신문

2002.10.24(목)

## 중앙일보

2002.10.24(목)



제9차 남북 장관급 회담의 남북 대표단 정세현 수석대표가 23일 숙소인 고려호텔을 출발하기에 앞서 김연성 북측 단장이 자기보는 가운데 호텔 직원에게서 환송 꽃다발을 받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안보엔 너나없다’ 천명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주요 대선후보들이 23일 북핵문제에 대한 초당적 대처에는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 대선 경쟁을 벌이는 후보들 사이에 모처럼 조성된 '동맹'은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받을 만하다. 오는 27일 김대중연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간 3국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국내외 일치된 인식을 북핵외적으로 한기시켰다는 점에서 실증적인 효과도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후보들이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각군에서 보여준 이견은 초당적 대처와 대응을 미약한 수준으로 만들 수 없게 만든다. 각당의 정당·정책에 따른 사견·선언 현상이지만 대한국민의 유·불리에 따라 언제까지 공감대가 무너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는 "북한의 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핵을 만드는 비용으로 사들일 수도 있는 인공지원을 동원해야 하며 대북 지원도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측은 "핵문제 해결과 대북 지원을 적절히 연계하는 전략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 '키 보인 드'라고 부연설명했다.

### • 청와대 6자회담 의미 평화해결 공감대 국내외 환기시켜 각론엔 이견여전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는 "인공지원을 동원하지거나 핵문제와 해결과 대북지원을 연결하지는 주장도 있고, 반조하고 강경한 대북교류 중단 견해도 있다"면서 "그러나 이념 때임수록 교류·협력은 더 긴밀하게 해나가기 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회담 강조하면서 미국의 대도발에 대비해 한국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부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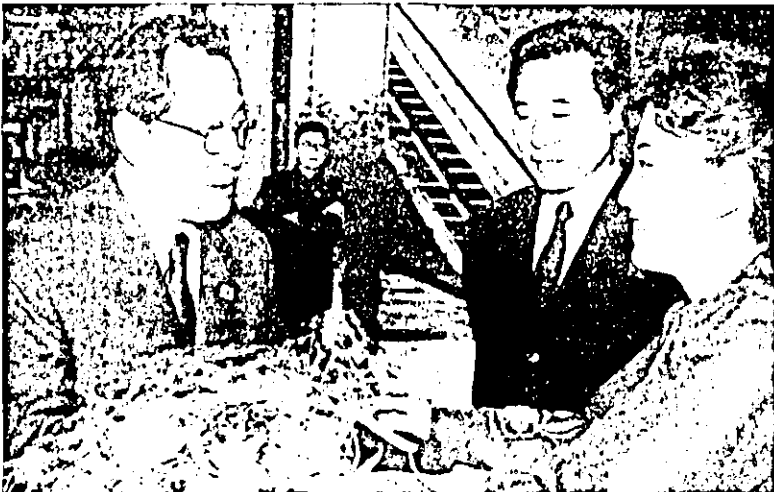
최근 금강산관광 재개도 등을 주장한 국민통합 21의 장봉준(張夢俊) 의원은 남북대화 재개의 유지 등을 강조하는 가운데 다소 강경한 내용을 주문하는 실용주의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반도에서 어떠한 종류의 무력충돌도 피해야 한다"면서 "핵문제가 남북대화에서 다루지는 것은 불가피지만 이번 문제를 계기로 북한에 선정한 대화의 상대인자 한 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후보는 "미국의 신핵군력 역사 철폐와 북한의 핵 포기는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미국도 북핵 협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압박 태도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헌동(李漢東) 의원은 정부의 정책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제2 정상회담을 제의하고 총리급 회담을 파견하는 등 북한에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홍근기자 hhw@donga.com

# ‘北 대화의지 공식화’ 소득



환승 꽃다발  
정세현 통일부 장관(왼쪽)이 23일 오전 서울 귀환을 위해 고려호텔을 떠나기 직전 호남 직원으로부터 환승 꽃다발을 받고 있다.

## “北, 對美 강한 불만 없었다 사전 준비한듯 의사 표현”

### · 정세현장관 일문일답

제8차 남북 장관급회담 남북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23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남(金永南)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핵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얘기할 때 상당히 진지했고, 사전 준비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장관급회담을 자기들의 의사표현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의 전 상황 인식은 어떤가.  
“북측은 모든 회의에서 우리 얘기를 진지하게 듣고 자기들이 할 얘기를 했다. 그 결과 (핵관련 내용이) 공동보도문 1항에 들어갔다. 김위원장이 자기 얘기만 하고 잘 안들을 수도 있었지만 진지하게 듣고 자기 얘기를 했다. 정리된 입장을 가지고 얘기했다. 대외로 쏟아나가는 입장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밝힌 것으로 본다”  
—50년간 김영남 위원장과 독대했는데 공개된 내용

이 발표였다.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거나 하지는 않더라. 공격성을 띠지 않고 진지했다”  
—핵개발을 왜 시인했는지는 얘기하지 않았다.  
“핵리(목사)가 고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핵사찰 포기할 계속 주장하고 있다. 북측 입장 차이 큰 것 같다.  
“처음에는 축인다고 했다가 조금씩 조금씩 쏘아주고, 그러면서 차이가 좁혀지는 것 아니냐. 미국이 압박과 대화 병행하지 않았다.”  
—향후 정부 대책은.  
“북측이 장관급회담에서 밝힌 입장을 평가해서 한·미 외무장관회담과 정상회담(26일) 등에서 논의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는 한·미·일 공조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이용욱기자  
wooky@kwanhyang.com

### 공동보도문 내용

①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② 경의선·동해선을 빨리 연결시킨다.  
③ 개성공단을 12월중 확충하면서 이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열어 남북 사무소를 설치한다.  
④ 해운협약서 채택을 위한 실무 접촉을 11월중 개최한다.

⑤ 통행합의서를 협도·도로 연결 시기에 맞춰 채택한다.  
⑥ 북측 동해어장의 남측 어민이 복을 위해 실무접촉을 갖는다.  
⑦ 실종자의 생사·주소 확인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⑧ 8차 장관급회담을 내년 1월 개최하기로 한다.

### · 남북 공동합의문 의미

평양에서 열린 제8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23일 새벽 가까스로 핵문제 등 8개항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도출했다. 북한의 ‘대화를 통한 해결의지’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핵문제로 인해 부각되지 못했지만 공동보도문은 남북 교류·협력을 확대·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공동보도문 채택 의미=회담의 남측 대변인인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정책실장은 “북한이 여러가지 국제적 의무(NPT, 제네바 합의 등)를 대화로 해결해나간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 가장 큰 업대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북측은 그러나 ‘핵문제에 대한 해명과 제네바 합의 준수 등을 공동보도문에 명기하자’는 남측의 요구는 거부했다. 북측의 구체적 조치를 약속받지 못한 채 선언적 합의만 이끌어낸 셈이다. 일각에서 “외교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절하가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교류·협력 차원에서는 한 단계 진전된 합의의 골이 났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개성공단 12월중 착공, 개성공단 실무협의회 개최, 공단내 남측 사무소 설치 등은 남북간 교류·협력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현만 된다면 남북경협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핵문제의 시의 채택은 남북 여건의 동해어장 공동이용을 가늠해 합선아 나라 서로교전과 같은 충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인 조치 명시 못해 ‘외교적수사 불과’ 지적도  
교류·협력은 상당한 진전 남북관계 가속도 붙을듯

다만 관상사 중 하나인 6·25 이후 남북자들의 생사확인 요구는 북측에 관철시키지 못한 채 ‘직접지시사업’ 적극 지원한다는 선에서 어물쩍 넘어갔다. 남북자 가족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 전망=남북관계는 가속도가 붙을 것 같다. 미국과의 대화 채널이 탄탄한 북측은 남측을 통해 핵문제 등과 관련된 메시지 전달 간접적으로 면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제8차 장관급회담을 내년 1월 서울에서 열기로 한 것도, 임미를 부여할 민חה. 북측이 현재의 교류·협력관계를 차기 정권에서도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미관계에 있어서는 북측이 대화를 통한 해결의지를 분명히 밝힌 만큼 최악의 대치국면은 일단 모면한 것 같다. 그렇다고 북한의 대화의지 표현이 북·미 긴장완화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핵프로그램의 폐기 등 가시적 조치를 요구한 미국이 이 정도 수준에 만족할 것 같지는 않다. 전문가들은 “미약한 수준의 합의가 조성됐을 뿐 북·미 대화는 이제 시작”이라고 평가한다.  
이와 관련, 이봉조 대변인은 “북측이 국제적 핵관련 합의 등에 대한 입장을 표시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말해 북한이 조만간 핵문제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24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북 핵문제에 대한 양국 대응책의 맞고민을 그림 계획이다.  
이용욱기자

# 개성공단에 南측 사무소 개설

## 장관급회담 합의내용

남북한은 23일 평양에서 끝난 8차 장관급 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을 통한 해결이란 합의와 함께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도 공동보도문에 담았다. 8개 항목의 보도문은 새 합의보다 밀린 속제에 치중해 DJ 대책정책의 마무리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연결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 경의선 철도·도로는 개성공단(산업)에 동해선은 금강산 지역(관광)에 연결시킨다며 구체적인 합의를 밝혔다.

개성공단의 12월 중 착공도 재차 확인했다. 개성과 관운군 일대 2천만평(공단 8백만평과 배후도시)에 들어설 공단에는 남측 사무소가 설치된다. 3백~4백여 개로 예상되는 입주업체의 출입이나 무자원의 보장하려는 조치다.

특히 이번 회담 기간 중 북측과 별도 합의를 통해 11월 중 개성공업지구법(북구법) 발표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건설에 힘이 붙게 됐다.

지난해 9월 5차 장관급 회담 때 합의

## 남북 장관급 회담 합의 내용

- ▶10월 23~26일 북한 태권도 시범단 서울 공연
- ▶26~30일 북한 경제시찰단 남한 방문
- ▶28~30일 임진강 공동 수방 대책 실무 협의(개성)
- ▶31일~11월 2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 ▶무점속(금강산) 관광
- ▶11월 해운 관계자 실무 접촉·금강산 육로 관광 실시
- ▶12월 개성공단 착공·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 ▶2003년 1월 중순 제9차 남북 장관급 회담(서울)

던 남북 해운 관계자 간 실무접촉도 다음달 중 금강산에서 열린다. 여기에서 2001년 6월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영해 무단 통과로 대두한 쌍방 민간선박의 상대방 영해 이용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남북 간 왕래가 증가 (올해 1만명 수준)한 데 부응해 철도·도로의 첫 개통 시점에 동행합의서를 채택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북한이 동해어장 일부를 남측에 제공 하는 문제도 곧 금강산에서 실무접촉을 통해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북한 어장 진출 문제를 놓고 우리 측 동해안 어

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와 고기를 다 잡으면 곤란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남한 내부의 조율이 먼저 필요한 실정이다.

당초 연해 한 차례 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는 방안이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산가족협의회 조속한 건설을 명문화하는 데 그쳤다. 오는 31일 금강산에서 열릴 적십자 실무접촉에서는 이산상봉 문제와 함께 6·25전쟁 중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생사·주소 확인 문제가 집중 논의된다.

9차 장관급 회담은 대선 이후인 내년 1월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했다. 이명종 기자 yilee@joongang.co.kr

## 해운·어업협력 본격 추진

앞으로 남북 간 해운·어업 분야에서 협력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회담에서 '민간선박의 상대측 영해 통과와 안전 운항 등'에 관해 포괄적인 합의를 한 데다 구체적인 협력 모색을 위한 남북 실무 접촉도 다음달 중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상대방 항만의 자유로운 이용 ▶상대방 항만시설 이용시 내국인 대우 및 안전 보장 ▶해난 사고 공동 대응 ▶남북한 운송의 국내 운송 간 주 통을 주로 북측과 논의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당장 TEU당(TEU는 20피트 컨테

이너 한개) 7백~8백달리인 인천-남포 항로의 운임이 4배달리대까지 내려가는 등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남북 사이에는 인천-남포, 부산-나진 등 두개 항로가 개설돼 있지만 취항 선박들은 중국·파나마 국적이며 교역량도 지난해 기준으로 8천5백27 TEU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걸림돌도 적지 않다. 북방한계선(NLL)의 자유로운 통과, 상대 국기를 내건 선박의 자유로운 입항 동주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먼저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해양부 관계자는 "신의주

와 개성공단이 개발되면 화물 운송을 위한 해운 분야 협력은 필수"라며 "군함과 달리 상선의 영해 통과 문제는 실무 접촉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산 분야에선 북한이 제안한 동해 어장의 공동 조업 실행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양부는 이 어장에서 주로 집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대·오징어·홍게 등에 대한 경제성 조사를 실시하고, 남북 어업협력 협회서 체결·남북 어업공동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북측이 제공하겠다고 제의한 동해 어장은 북한 땅에서 1백해리 떨어진 공해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홍병기 기자 klaatu@joongang.co.kr

# 核위기 줄이려 '교류 끈' 유지

## ■南北 공동보도문 보나

23일 새벽 평양에서 채택된 8차 장관급 회담의 공동보도문은 8개항 가운데 7개항이 철도·도로 연결 등 교류·협력을 위한 내용이다. 남북은 특히 공동보도문 서문에서 최근의 관계를 긍정 평가한 뒤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탄탄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공동보도문 문안만 보면 남북관계는 핵 파동 등 외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테세다.

그러나 공방이 심해보면 이번 회담의 교류·협력은 영해통과에 필요한 해운협약과 철도·도로 연결에 따른 동행합의서 채택을 위한 실무접촉 개시, 개성공단 12월 중 착공

## 국방장관회담·남북자문제는 언급없어

## 국제적 긴장국면 돌파구될지는 미지수

외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 이마저도 이미 합의했거나 논의해온 사안을 좀더 구체화한 데 불과하다. 남북은 오히려 7차 회담에서 이룬 시일 내에 개최기로 한 제2차 국방장관회담은 개최되지조차 할지 못했다. 북한의 일방적인 남측 안전 이후 '뜨거운 감자'가 된 현수 남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북측이 회담의 대부분을 핵 문제에 할애했으면서도 교류·협력을 강조한 것은, 남북관계 진전이 북한의 핵 개발계획 시안으로 아끼면 안보

위기의 완충 역할을 할 것이라는 공감 때문이다. 북측은 북미 관계가 개선된 가운데 남북관계의 끈이져 놓을 경우 북일관계 등 외교적 성과를 잃고, 내부 경제개혁 계획도 물거품이 될 부담을 안고 있었다. 남측도 경의·동해선 연결 공사 착공 등 남북관계의 성과를 최대한 살려 위기 및 햇볕정책에 탄력을 주고, 이를 통해 역으로 핵 위기 정세에 영향을 주겠다는 계산이 있었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은 1990년대 초반 북한의 영변 핵 시설로 인해 10

년 가까이 교류·협력을 단절해야 했던 전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때문에 공동보도문 1항에 핵 문제에 대해 '공동 노력'하고, '협력'한다는 문구가 들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북간 교류·협력에 핵 문제가 아끼면 국제적 긴장국면을 돌파할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북측은 공동보도문에 '핵'이라는 문구를 넣는 데 동의했지만, 이 문제가 남북회담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북측은 핵 개발 시인 경우에도 남측에 설명하지 않았다. 고려대 어제이문제연구소 김연철(金連喆) 연구교수는 "핵문제를 대외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남북간 교류협력 등 주변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북미관계가 지지부진하거나 대선을 앞둔 남한에 정국이 불안해질 경우 남북관계의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동준기자 dlee@hk.co.kr

남북장관급회담

北 核해명-포기약속 빠진 반쪽합의

정부는 8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17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북한의 핵 해명과 관련해 "각각에게 분담해야 할 몫을 충실히 수행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장세진(張世鎭) 통일부장관이 서울에서 발표한 이례적이지 않은 발언은 핵 해명 관련 국제사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주었다. 그러나 핵 해명 관련 국제사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주었다.

그러나 공동보도문에 담긴 문구는 "핵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핵 해명 관련 국제사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주었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 핵 문제가 이차 장관급회담 자리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핵 해명 관련 국제사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주었다.

▽합색전의 결과는? 북한이 한 장관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도 이번 장관급

회담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는 달성하지 못했다.

정 장관은 22일 북한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경우"가 있다면 미국이 무리하는 안보상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한 말을 상기시키며 "북한이 '합색관대담'에서 '합해'를 용의가 있다면"이라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갔다"고 경고했다.

"대화통해 해결" 원칙론에 그쳐 정부, 美설득할 '일때' 없어 난감

북측도 대북 불완전 문제 해결을 위한 고의성을 시사하는 공격적인 대응이라는 것이다. 또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카드로 활용돼 오랜 핵 문제를 남북간에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의미가 많지 않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오히려 북측이 방과외 삼국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화통해'라는 문구해결은 북측의 카드가 아니라 한국이나 미국이 내용을 카드리라는 점에서 그렇다. 제네바급의를 여긴 북한이 '대화'의 전체로 먼저 해야 함임을 재확인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일

이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회담을 마쳤다.

무엇이든 해법-정부 당국자는 23일 "북측이 대북 불완전 해결 의지를 분명히 한 것과 남북대화 차에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게 큰 성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일 합의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장관들은 남측 대표단이 미국을 설득할 만한 확실한

명분을 얻어내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과 아쉬움이 겹쳐 나타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의견을 교환할 것 같다. 하지만 그 정도의 원칙적 합의로는 조급해잡고 김주호(金周浩)의 중산 같은 강경책을 고려 중인 미국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핵 문제에 집중하는 데 국공포화 및 남북자 문제, 국방장관 회담까지 문제 등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도 별다른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김영삼기자 spear@donga.com 이종호기자 taylor55@donga.com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전문)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은 2002년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됐다. 회담에서 쌍방은 최근 남북관계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있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데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히면서 회담에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핵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가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2. 남과 북은 경제협력과 안정적인 상호교류 관계를 발전시키고

간다고 한다. 정부는 1차적으로 관련된 검토·도모를 개성공업지구, 동해선 철도·도로합 공강선 개발에 연관한다. 쌍방은 동해선 철도 연결공사를 빨리 추진하며, 남북은 강릉 방죽에로의 남측 구간 연결공사를 중단 없이 빨리 추진시킨다.

3.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 사업을 12월 중에 하는 문제와 건설과 관련된 실무적 문제들을 개선한다. 개성공단의 건설사업에 대한 남북의 해당 부문 사무소 설치하기로 했다.

4. 남과 북은 상호 민간단체들과 친선교류 증진사업과 안전공정

11월 중에 개성공단에 개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친선교류의 증진 및 상호교류에 관한 문제들을 시·지방 분담을 남북 철도·도로가 처음 연결되는 시기에 맞춰 협의하기로 했다.

6. 남과 북은 남북의 어린이들이 북측의 동해안지역의 일부를 이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해당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성공단에서 갖기로 했다.

7. 남과 북은 어선가족들의 급강한 민회조를 빨리 건설하고, 긴급시 신속할 수 있게 된 자들의 생사·구조를 확인하는 긴급차단체들의 사업을 적극 받아주기로 했다.

8. 남과 북은 제8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2002년 11월 중순에 서울에서 개최한다.

2002년 10월 22일 평양

장관급회담 후속 대응책 논의

정부는 23일 백사장에서 열리는 한미(韓美) 3국 정상회담 때 '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한다는 제8차 남북 장관급회담의 합의 결과를 반영하고 미일 양국의 이해를 구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A4면에 관련기사

정부는 23일 장세진(張世鎭) 통일부장관을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남북장관급 회담 평가 및 3국 정상회담 대응방향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이에 앞서 23일 새벽까지 진행된 평양 장관급회담에서 6대 회담 동안 6차례에 걸쳐 3건의 합의와 동해선 철도·도로의 조속한 연결 문제 등을 12월 각종 및 남북 사무소 설치 시기와 동해안장 업무 이양문제 합의 등 12개 항목을 합의했다.

윤승모기자 ysmo@donga.com

성동기기자 espr@donga.com

# ‘先핵포기’ 빠져 미완의 합의

## 남북장관급회담 비판론

힘겹게 타결된 이번 남북 장관급회담 공동 보도문을 우리측이 북한에 강력히 요구했던 선 핵포기 의사가 빠졌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개발 시인 패권을 너무 서둘러 방한하리란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북한의 평화적 핵개발 의사가 공식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번 합의로는 국제정세 긴장과 한반도 전체의 위기를 초월시키기에 너무나 미흡하다는

우려사항을 해결해나갈 의지가 있다”는 수준을 끌까지 고집했다.

그리면서 어느 정도까지 핵개발 프로그램이 진척됐는지, 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 등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우리측이 “핵문제 언급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번 장관급회담만 아니라 모든 기존 합의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받아들여져 북한은 그때서야 공동보도문에 “핵문제에 대해 서로가 대화를 통해 해결해나갈 것이다”는 조항을 받아들였다. 대화 의지를 과시했으면 일선단만



- 1 핵 문제 대화로 해결
- 2 김의선·동해선 참모, 노로 조기 진상
- 3 개성공단 건설착공문제 논의
- 4 다음달 해군함정서 채택 실무접촉
- 5 동맹관계서 채택 논의
- 6 북측 동해어장 이용문제 논의
- 7 적십자 회담시 국군보도 등의 생사·주소 확인사업
- 8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내년 1월 서울 개최

## 대화의지 확인불구 구체 해결방안 미흡 ‘핵문제는 南 배제’ 北 전략수정은 성과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대화를 통한 시대 해결이라는 추상적인 메시지만 담은 미성채어나마 남북 합의로 이끌어내려한 것은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는 미국과 북한의 정면 충돌을 방지하고 두 당사자들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내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측은 당초 북측에 핵개발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과 제재마침의 한반도 평화화 공동선언, 핵발전금지조약(NPT) 등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에는 핵개발 포기 의사를 밝히려는 것도 명확히 들어 있었다.

그러나 북측은 회담 이틀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공개한 통일부장관에게 전달한 “대화를 통해 미국이 제기한 안보상의

보통 한 개 아니냐는 식의 위험대도로 일관한 셈이다. 이같은 회담과정은 분석해보면 북한 지도부는 이번 회담을 타결한 시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고 ‘핵과 군사문제는 미국과 교유협력은 남측과 대화한다’는 기존 대외전략을 지속할 수 있었음을 판단하는 기대로 삼은 듯하다.

회담에서 얻을 성과라면 바로 이같은 북한의 대외 이중전략을 일부나마 수정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핵문제는 북·미간 협상의 전유물이었으나, 이번 합의로 인해 우리 정부도 이제부터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 직접 당사자로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북한의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는 점도 성과라면 성과다.

북한의 한반도 평화 지속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진정방지를 우선 목표로 삼은 우리의 대북 햇볕정책 기초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고민은 이같은 성과들이 하 나같이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만 담고 있을 뿐 눈앞에 놓인 북한의 핵위험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는 사실에 점약해 있다.

남강 이번 합의를 근거로 북한과 대화라고 미국을 설득해야 하지만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전망을 밝두명하기만 하다. 미국은 북한의 대화 의지 확인이 파국을 막는 원동장치는 한지언정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할 가능성이 크다. 24일로 예정된 한·미 외무장관회담과 26일의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신창호기자 procol@kmb.co.kr



# “교류·협력 계속 확대” 의지 배어나

■ 장관급회담 합의사항

부문별 점검

8차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을 보면, 지금 남북관계는 “국제관계의 문제들을 대외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적극 합의한다”는 것을 재확인함에 따라 새로운 대상을 였다. 그러나 남북의 장관급회담 이후의 교류협력을 지속 확대시키겠다는 의지가 함께 배어 있다. 남북관계가 경제적으로 건설과 남북관계의 제도화, 이르기까지 경제·문화·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상호협력할 수 있는 문턱까지 온 것이다.

특히 남북의 대외관계 전개 경향이 다른 차이를 2002년 11월 중순에 9차 장관급회담을 차.에서 일제로 합의한 것은, 북쪽이 남북의 경제교류와 무관하게 있으므로 교류협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다 것으로 볼 수 있다.

### 끊어진 동맹연결 '외대한 빨리'

“철도·도로 연결—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의 핵심이자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의 선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 회담에선 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철도·도로 연결 실무합의회의 기존 합의내용을 확인하고 남북의 장관급회담을 차.에서 합의하게 되었다. 이번 회담에서는 남북의 철도·도로 연결에 대해선 북측을 대변하는 북측 장관이 참석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새로운 접근 방법을 통해 남북 철도 연결사업이 빨리 추진되어,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이 빨리 추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북관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동맹합의 안대체력 가능성 커

“수령한-해운합의서 채택 합의= 동맹합의는 남북간에서 체결된 남북간 교류협력의 제도화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뜻이 깊다. 관망 속에서 해체되지는 여러 차례의 실무합의가 있었지만, 남북



외교교통부는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대강당에 주한 외교사절단을 불러 회담에서 일한 남북 장관급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각국 외교관들이 문해당 외교부 정복기회관의 실명을 기록하면서 주의깊게 듣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hani.co.kr

## 경제공동체 등 남북관계 '질적 발전' 합축 남 정권교체 무관하게 교류지속 '공식화'

은 이와 관련한 입장에도 대략적인 합의가 왔다. 동맹합의서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문제와 인종에 있다. 공동보도문에도 “철도·도로가 처음 연결되는 시기에 맞춰 합의하기로 한다고 돼 있다. 철도·도로 연결 공사 일정에 비추볼 때 언제 재차 합의가 가능이 높다.

예컨대에서 채택을 위한 합의 일정에 타협할 중 금강산에서 이는 것으로 일하게 밝혔다. 해운합의서의 포함 내용은 일단 민간사업, 즉 민간에 위임해 있다. 그러나 남북간에 채택을 위한 NLL과 관련한 중립과 논란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해운합의서가 채택되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다. 대.추진부가 지난해 마련한 남북

협력방안을 보면, 해운 당국자간 합의에 우선, 상대방 항만의 자유로운 이용, 내국인 대우, 남북한 운송의 국제화 등 간주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남북 해운협력이 본격화해 중국·파나마 등 외국 국적의 화물선박들이 국내 선사로 바뀔면 현재 ITB(700~800달러인 인천~남포 항로의 운임)을 400달러까지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전후남북자 문제 진전 없어

“이산가족= 남북은 금강산 이산가족 문화소 건설과 건설시기 조속 완료 수 있게 된 자립의 생사주소 확인하기로 한 지난해 4차 적십자회담의 합의내용을 재확인하고, 각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그

러나 전후 남북자 문제에 대한 민시적인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해당 가족관계 관련 단계들이 번민되고 있다.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남북은 ‘북극 포로와 남북자 문제’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려 했지만, 북측은 기존 합의대로 ‘행방불명자’로 분류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은 ‘전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라는 표현으로 전후 남북자 문제를 쉽게 다룰 것을 제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회담 관계자는 ‘이직 공식적으로는 정전상태인 만큼, ‘정전 시기’라는 합의 안에서 남북자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연대 이산가족 상황을 촉구했지만, 북측은 10월 31~11월2일 금강산에서 열린 5차 적십자회담에서 논의하며 미분 것으로 진해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이 회담에서 남북간 합의가 단번에 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어업협력 북 먼저 관심 표출

“어업협력= 남북이 이산지역 안 어업협력에 금강산에서 갖기로 합의한 동해안 공동어업 문제(2000년 12월 평양에서 열린 4차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이 먼저 제안했던 사안이다. 이번에도 북측이 김경 차원에서 제기했다. 북한은 당시 공동어업 수역으로 원산에서 동쪽으로 300km 남쪽 지역을 동해안공동어업지역으로 남쪽에 제안하는 조건으로 5년 동안 북측 수역에서의 공동어업을 허용한다는 제안이었다. 동해어업 어업협력에 현실화하면 본격적인 어업협력의 시발점이 된다. 군사적 충돌이 잦았던 시대 인공도 근해로 어업협력에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이재훈 손원재 기자 nomad@hani.co.kr

### ● 8차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요약

1. 남북은, 6·15공동선언 정신에 맞게 한반도 평화와 인종 보장 위해 공동 노력하며 현존해 미분한 모든 문제를 대화방법으로 해결토록 적극 합의.
2. 양국은 1차적으로 경의선 철도·도로를 개성공업단지에, 동해선 철도·도로를 금강산 지역에 연결, 동해선 철도 연결공사를 빨리 추진하며, 남측은 강릉 방항에 있어 남북구간 연결공사를 중단 없이 빨리 추진.
3. 개성공단 12월 착공문제와 건설 관련 실무 문제를 개성공단 건설심사위원회에서 토의. 공단이 건설되면 그 안에 남북 해당

- 부문 사무소 설치.
- 해운합의서 채택 위한 실무 접촉 11월 중 금강산에서 개최.
- 동맹합의서 채택 문제를 철도·도로가 처음 연결되는 시기에 맞춰 합의.
- 남북 어민의 북쪽 동해어장 일부 이용 문제와 관련한 실무접촉 이산 시일 안에 금강산에서 개최.
- 남북은 금강산문화소 빨리 건설. 건설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립 생사주소 확인하는 적십자단체 사업을 적극 지원.
- 2003년 1월 중순 서울에서 9차 장관급회담 개최.

연월일	주요 내용
10월23~27일	북측 내각총리 서방단 방문
20일부터	북측 내각총리 서방단 방문
28~30일	김정일 수석대변자 동맹합의서 채택(24일)
10월31~11월2일	5차 적십자회담(11월1~2일)
11월6~9일	남북 어민이 북쪽 동해어장 일부 이용 문제와 관련한 실무접촉
11월중	해운합의서 채택(11월1일)
11월중	남북구간 철도 연결공사 착공
11월말	남북구간 철도 연결공사 착공
12월중	개성공단 착공
동해안	공동어업 지역
2003년 1월 중순	9차 장관급회담

● 개성공단 건설 실무합의서는 25~27일 개최되었다. 다만 연기, 11월초에 개최 예정

장관급 회담 경제부문 합의내용

남북은 개성공단 조성, 12월 24일 개성공단 착공식, 개성공단 조성, 개성공단의 인적·물적자원의 안전 교류, 동해선 연결, 박차 합의

남북은 개성공단에 대한 합의에 합의하고, 12월 24일 개성공단에 착공식을 치를 것으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사항 중 하나로 합의했다.

개성공단 12월중 착공

◆개성공단 가시화

개성공단의 개발계획은 12월 24일 북측청와대에 합의된 합의사항이다. 북측은 개성공단의 개발계획을 12월 24일 북측청와대에 합의된 합의사항으로 합의했다.



현대건설이 개발계획중인 개성공단 조감도

북측은 개성공단에 대한 합의사항을 12월 24일 북측청와대에 합의된 합의사항으로 합의했다. 북측은 개성공단의 개발계획을 12월 24일 북측청와대에 합의된 합의사항으로 합의했다.

인적·물적자원의 안전 교류, 동해선 연결 박차 합의

남북은 개성공단에 대한 합의사항을 12월 24일 북측청와대에 합의된 합의사항으로 합의했다. 북측은 개성공단의 개발계획을 12월 24일 북측청와대에 합의된 합의사항으로 합의했다.

◆강철 인프라 구축
남북은 개성공단에 대한 합의사항을 12월 24일 북측청와대에 합의된 합의사항으로 합의했다. 북측은 개성공단의 개발계획을 12월 24일 북측청와대에 합의된 합의사항으로 합의했다.

남북은 개성공단에 대한 합의사항을 12월 24일 북측청와대에 합의된 합의사항으로 합의했다. 북측은 개성공단의 개발계획을 12월 24일 북측청와대에 합의된 합의사항으로 합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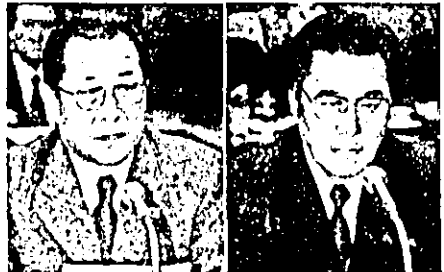
남북은 개성공단에 대한 합의사항을 12월 24일 북측청와대에 합의된 합의사항으로 합의했다. 북측은 개성공단의 개발계획을 12월 24일 북측청와대에 합의된 합의사항으로 합의했다.

이산가족·남북자문제 제자리걸음

남북은 이산가족 문제와 남북자문제에 대한 합의사항을 12월 24일 북측청와대에 합의된 합의사항으로 합의했다. 북측은 이산가족 문제와 남북자문제에 대한 합의사항을 12월 24일 북측청와대에 합의된 합의사항으로 합의했다.

남북은 이산가족 문제와 남북자문제에 대한 합의사항을 12월 24일 북측청와대에 합의된 합의사항으로 합의했다. 북측은 이산가족 문제와 남북자문제에 대한 합의사항을 12월 24일 북측청와대에 합의된 합의사항으로 합의했다.

남북은 이산가족 문제와 남북자문제에 대한 합의사항을 12월 24일 북측청와대에 합의된 합의사항으로 합의했다. 북측은 이산가족 문제와 남북자문제에 대한 합의사항을 12월 24일 북측청와대에 합의된 합의사항으로 합의했다.



남북은 방북회담 합의 23일 새벽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의 주요의제를 타결시켰다. 남북 정상회담 합의사항과 북측 김강성 당국에 합의된 합의사항을 합의했다. 합의사항은 합의했다.

‘대화 통한 평화적 해결’ 나라안팎 공감대 확산

장관급회담 해산의 의미
‘남·북’ 91년과 상당달라
북·진전된데도 표명 과제

남북은 개성공단에 대한 합의사항을 12월 24일 북측청와대에 합의된 합의사항으로 합의했다. 북측은 개성공단의 개발계획을 12월 24일 북측청와대에 합의된 합의사항으로 합의했다.

남북은 개성공단에 대한 합의사항을 12월 24일 북측청와대에 합의된 합의사항으로 합의했다. 북측은 개성공단의 개발계획을 12월 24일 북측청와대에 합의된 합의사항으로 합의했다.

남북은 개성공단에 대한 합의사항을 12월 24일 북측청와대에 합의된 합의사항으로 합의했다. 북측은 개성공단의 개발계획을 12월 24일 북측청와대에 합의된 합의사항으로 합의했다.

남북은 개성공단에 대한 합의사항을 12월 24일 북측청와대에 합의된 합의사항으로 합의했다. 북측은 개성공단의 개발계획을 12월 24일 북측청와대에 합의된 합의사항으로 합의했다.

# '核충돌' 위기 北·美 대화 주선

## ■ 장관급회담 성과·과제

"미국이 적대적 정책을 철회할 '왕의'가 있다면, 우리는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요한 '왕의'가 돼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진행된 제8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남북양측은 핵문제 해결의 '대과 해법'을 제시했다.

개성공단은 관광 시설 조성 등 후속 합의의 시급 필요에 미국의 반대에 부딪힌 조정은 이번 김대중(金大中) 남북회담장에 우리측 정세현(丁世顯) 통일부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다는 여진이 다에 돌아서 있다.

우리 정부는 정세현 장관이 "적대적 정책을 철회한다면 대화하겠다"는 입장에서 "정세현 왕의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의 핵확산을 위한 보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북측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 북·미 대화중개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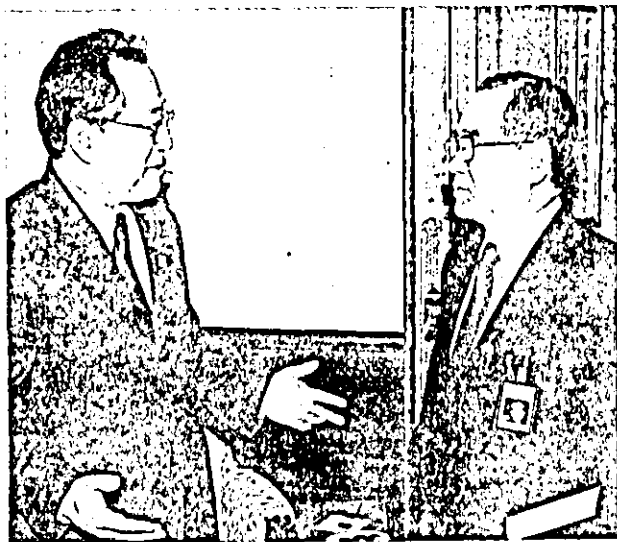
미국 이번 회담에서 북측의 핵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과 제네바 회담의 중추 역할을 맡아 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보지만 북측의 이같은 언사는 한반도 핵전쟁 상황의 국면 전환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측은 회담 내내 핵문제에 북·미간 문제임을 고수하다가, 제1차 '핵' 이란 단어를 놓고 대화 해법을 모색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핵을 둘러싼 북측과 국제사회의 긴장 구도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성식(李成植) 제5인군사 연구위원은 "남북협상 테이블에서 핵문제를 거론하고 대화는 한다는 입장만 밝힌 것은 남·북·미 대화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강화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측이 핵개발 사슬을 확연히 끊지, 미국이 시인한 이유가 될지까지 우리측에 설명받은지는 분명하지 않다. 정 장관은 "그 얘기는 안 했다." "남북적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했다. "이 명확한 언급을

## '核 대화 해결' 명문화... 美에 협상명분 제공 내년1월 서울서 회담... '차기'와도 협력 의지



23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주요 대안 후보들간의 북핵관련 김대중 회담 회담회기 시작되기에 앞서 정세현(왼쪽) 통일부장관과 임동원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특재팀기자 jaewoos@kdaily.com

회피했다. 그러나 "미국이 핵의 확산을 막는 자리에서 김대중 회담을 지원할 수 있는 제네바 합의(미국 관련) 발언은 지난 회담에서 무언가 생략된 것 같다"고 말해 정 장관과 김 상임위원들 간의 50년간 회담에서 북핵 핵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오갔음을 시사했다. 미국 이번 회담에 핵문제에 집중되긴 했으나 남북양측은 그동안 남북간 합의의 내실을 다지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또 내년 1월 중순쯤 9차 장관급 회담을 서울에서 갖자는 데도 합의했다. 이는 북측이 차기 정권과도 화해·협력 의지를 갖고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오는 12월 대만에 치러진 9차 장관급 회담은 차기 행정부의 의사가 반영된 회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kdaily.com

## ■ 정세현장관 문답

# "北, 적대풀면 美안보우려 해소 밝혀"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을 마친 정세현(丁世顯) 통일부장관은 회담에서 다루지 못한 23일 제네바 회담(23일)이나 서울에 도착했다.

정 장관은 회담의 성과에 대해 "북·미 대화에 대한 남북양측의 합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날 정 장관과의 회담이다."

●정치적으로 만족한다.  
문은 정치적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 핵문제 때문에 시간도 오래 끌리고 공동보도문 표현에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핵개발 시연, 차기 이란 정도까지 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핵 기술 진척과도 경쟁하는 데도 불만을 갖는 고위 인사들.

## 제네바합의 과거 언급됐은 北 진의와 다르게 전달된듯

●북측이 북·미간 관계를 바라보는 느낌은 어떤 것 같았다.

미국에 대해 예상외로 강한 실반을 표시하지는 않았다. 미국이 대북 경제정책을 철회할 '왕의'가 있다면 북한은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준비가 돼 있다고 '포박포박' 말해 시연에 임하던 듯한 느낌과 같다. 단순한 진급조건 제시는 아닌 것 같았다.

●핵문제에 미국이 실제 시인했는지, 왜 했는지

언급이 있었다. 그런 얘기는 없었다. 김대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핵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대중 부총리의 제네바합의 과거와 관련된 발언은 지난 회담에서 원가 생략된 것 같았다.

●앞으로의 대책은.  
이번 장관급 회담을 차기 대외대표회의 수반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상된 한·미 외무장관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등에서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북핵심기자 youngtan@kdaily.com

# 개성공단 12월 착공 '성과'

제8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남북은 핵문제 이외에 몇가지에서 합의할 예정이다. 북한 핵 문제에 논의할 감중하느라 뚜렷한 진전을 이룬 것은 없지만 개성공단 착공시기 확정, 동해어장 공동이용 등 의미있는 내용도 있다.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진전이 있는 것과 미진한 것은 무엇인지 분야별로 살펴본다.

## ■ 공단조성 사업·운영

남북이 개성공단 공사를 12월 중 착공기로 합의함에 따라 개성공단 조성사업에 남동향을 타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에 조민간 특구로 선포될 예정이어서 현대아산의 개성공단 투자유치 작업도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 어떻게 개발되나

지난 2000년 8월 현대아산이 합의한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약 2000여명의 투입, 개성 관문군 병역비 일원에 총 800만평의 공단과 1300만평의 배후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0년 말에는 공단 조성 부지에 대한 측량 및도 검토가 작업이 끝났다. 따라서 12월 중 착공할 경우 2년안에 100만평 규모의 시범단지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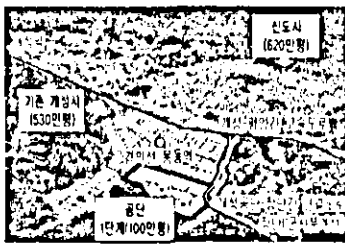
시범단지에 이어 산업단지 등 간해공사업 마무리하는 데는 9~10년에 소요될 전망이다.

현대아산은 국내 기업에 대상으로 1차 입주 희망 조사까지 받아놓은 상태다. 부산산업단지산업진흥조합과 한국삼육산업진흥회 등 3개 협회를 비롯해 50여 업체가 입주 희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은 조민간 특구로 선포될 예정이다. 그러나 사법·입법·행정권이 부여된 신의주 특구와는 달리 경제관련 행정권만 부여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관련 행정권만 부여된다 하더라도 특구법 자체에 현대아산의 투자유치권(50~70%)과 투자 5% 출금보장 조항 등이 명시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자유

## 100만평 시범단지 2년내 완공 현대아산 '관리위원회'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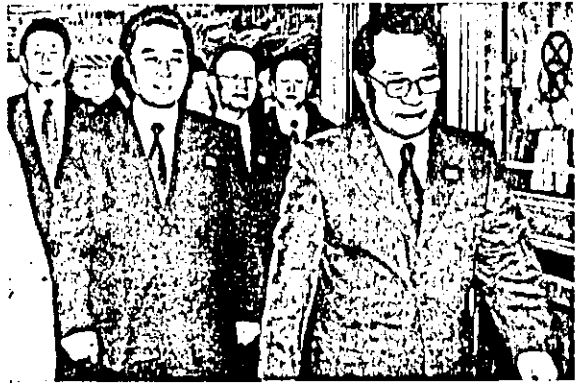


로운 기업합종을 보장받을 수 있다.

### 어떻게 운영되나

개성공단의 운영은 현대아산 주도로 구성되는 '관리위원회' 형태의 운영 기구에서 맡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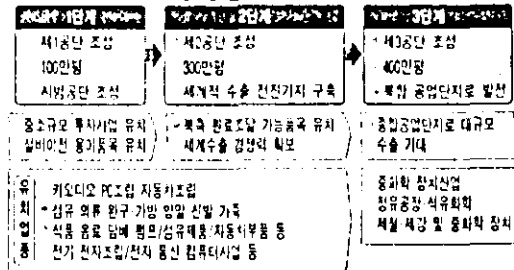
이 위원회는 기업정산과 통관 등 모든 공단업무를 취급하게 된다. 관리위원장은 현대아산에 한국인 중



23일 새벽 평양 인민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남북 정세현(오른쪽) 수석대표와 북측 김경성(왼쪽)이 공동보도문을 발표할 후 회담장을 나서고 있다.

◆평양 순원진기자 angle@kdaily.com

### 개성 공단개발 사업계획



에서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은 외국인 투자자, 특히 회교 들을 대상으로 한 신의주 특구와는 달 리 한국투자자들을 다그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청진특구도 세워 일련 자질을 유치함으로써 외국자본 유치의 3각축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대아산은 개성공단에 국내 기업들

을 우선적으로 유치해 연간 200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국토연구원 은 개성공단이 완공되면 북한은 17만명의 고용효과와 함께 210억달러(27조여 원)의 생산효과, 6억 6000만달러(8430 억원)의 소득효과를 누린 것으로 분석 했다.

◆김성근기자 sunjoon@kdaily.com

## ■ 수산·해운협력 어떻게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양측이 조민간 수산·해운협력에 대한 실무협력을 갖기로 합의에 따라 남북 수산·해운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북방협력선(NLL) 통과, 상대 국가를 내건 선박의 자유로운 입항 등 주권과 관련된 까다로운 사항이 적지 않다. 또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 수산·해운 협력관계가 실질적인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 관측된다.

### 수산협력

북측지역의 동해 어장 일부 사용하기로 한 데 따른 구체적인 협정·시가 범위 등에 합의 사항이다. 이 부분에 대

## 북측지역 동해어장 일부 사용하기로 선박, 상대 영해통과·안전운항 명시

한 협정이 진척될 경우 시해어장까지 협력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김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완화는 물론 연근해 어장의 어족자원 고갈에 따른 물량 확보에도 공헌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해운수산부는 동해 어장 가운데 관계상과 조업 용이성이 보장되는 어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로 하고 남북 수산자 일공동조사, 시합조업, 단순입어 등의 단계를 거쳐 수산협력을 확대해 나간

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어로합 동 보장, 안전조업 및 질서유지, 어업자 료 교환, 어업인 교류, 합영·합작사업 협의 등 위한 '남북어업공동위원회' 설치 등의 밑그림을 그려놓은 상태다. 또 중·장기적으로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개관사업지선, 가공공장 건설지선, 수 산자일 공동개발 등 수산기술 부문도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 해운협력

해운협력

공동보도문에 양측 민간선박들의 상호 영해통과와 안전운항 등이라고 명시함에 따라 구체적인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해양부는 그동안 북측 대륙의 개방된 항만의 자유 입·출항 ▲상대항 항만시설 이용시 내국인 내수 ▲해난사고 공동 대응 및 연락체계 확립 ▲남북한 운송의 국내 운송 간주 등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두었다.

해운협정의 골격은 외국과의 협정체 결을 기준으로 하되 남북간의 특수성을 감안해 남북 공동해운협력기구 설치, 국내 선박회사간 피단 경쟁방지를 위한 특별 관리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병철기자 bcjo@kdaily.com

경의·동해선 연결

경협·금강산 육로관광 조속추진 공감

경의선과 동해선의 상호도로 연결 문제는 제8차 남북관교협약이 동북도로를 20%에 자리잡고 있다. 12월 북측에게 관련 조항을 포함하면 상호도로 연결이 현재 남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현안이라는 점이다. 또한 '평양남해간 이 어를 직육 수선한다'는 문구까지 넣어서 협상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게 가장 중점을 두기로 했을

것이다. 실제로 경의선과 동해선의 조속한 연결은 제반 교통·관광·인도적 사업의 선결 과제다. 남북은 1차적으로 경의선을 개성 공업단지에, 동해선을 금강산 지역에 연결하기로 재확인했다. 이는 남북경협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개성공업단의 핵심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겠다는 뜻에 따라 금강산 육로관광

과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등 조속히 운영하겠다는 생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측은 다음달 과학적 데이터를 참고하는 개성공업단 방문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동해선 철도 연구조사에서 남북국간 강릉 방방 연구공사의 중단 없는 추진을 강조한 것은 동해선을 공적으로 하는 한반도통단철도(TTNR)와 사베리아철도(TSSR)의 연결 작업에 초점을 두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히고 있다. \*북측기자 younglan@kdaily.com

남북자 문제

'전쟁 행불자 생사·주소 확인 협조' 수준

남북자·국군포로 문제는 남북간 관공 회담에서 핵심제와 함께 주요 이슈로 떠올랐지만 남북은 '전쟁 시기 소실된 양 수 없게 된 생사·주소 확인(생사·주소 확인)'을 직접회담들의 시안을 적극 받아들여주기로 했다'고 합의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날 말 열린 제정인 제5차 남북 직담지회회담에서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및 첫 면회와

회장과 함께 최대외교로 부각될 전망이다. 그러나 남북은 '전쟁 당시 생사·주소 확인'을 '전쟁 당시 생사·주소 확인'으로 합의했다. 지난날 17년 북·미·영·일·중 등 6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1991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일련의 남북 문제를 시인하고, 북측이 중환까지 한 북한에 남한에 대해서도 같은 자세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남북이 지난 5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전

남한시 생물자 개년에는 60,70년대 남북 교류 중 전후 남북자 46만명 재향해 있다. 한쪽 관계자는 "북측이 우리 정부가 식량원 반출로 2만 7000여명의 송환을 요구하면 북한이 마약과 가짜 무역 허가를 갖"이라고 걱정했다. 그렇지만 최근 남북자가 독일의뢰 등 남북교류가 독일이 문제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함으로써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북측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만 안고 있다. \*김수경기자 crystal@kdaily.com

면회소 설치

금강산 면회소 건설 최소 4~5개월 소요

제8차 남북관교협약에는 오는 12월 중부터 금강산에서 열린 개성 남북직담지회회담에도 포함 되어 있다. 이산가족 문제가 걸림이 될 수 없을 것을 기대할 필요가 있다. 남북은 '이산가족들의 금강산 면회소를 빨리 건설하고 친척지식도 식을 할 수 있게 한 친척의 생사·주소 확인하는 직접회담들의 시안을 적극 받아들여주기로 했다'고 합의했

다. 지난 4차 직담지회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재확인하며 5차 직담지회담에 적 제부의 내용을 논의하고 장부식 차원에서 이를 선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남북에서 요구한 연내 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북측이 받아들여지 않은 데다 다음 상봉행사 역시 금강산면회소를 건설한 뒤로 하겠다는 의중이 생겼에 연결되는 지직도

있다.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 5차 직담지회담의 의제는 4. 금강산 면회소 설치·운영의 구체적인 방법 3. 첫 번째 시기와 방법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관계자는 "첫 번째 시기에 속감을 관두게 하고 있다. 금강산 면회소를 짓는데 최소 4~5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중경이라도 상봉행사가 갖지 않으면 면회소 건설을 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산가족들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측기자

2차 국방장관 회담

핵파문 진정후에나 열릴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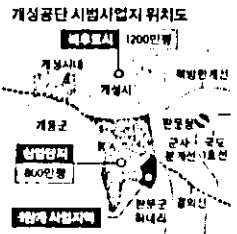
제2차 남북관교협약(이하)이 이달 말로 막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가 진정후에 개성회담 열릴 예정이다. 남북 양측은 제8차 남북관교협약에 합의한 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진전도 없었기에 보인다. 양측이 발표한 공동 보도문에는 '이산가족들의

개개 등을 포함한 군사적 긴장완화 부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문 당국은 2001년 제2차 남북관교협약에 이은 2차회담이 남북관계의 전환을 증명한다면 말이다. 그러나 합의가 없었기에 개성회담 열 것으로 전망해 왔다. 북측이 이번 회담에서는 최근 북서

진 북측문제에 대해 개성회담의 개성까지 진행되는 상황이었다면 남북관교에 이 문제해 대한 열연이 있었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남북국방장관 회담 재개에 관련, "일단 북측이 핵무기 사용에 차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흥진기자 redtron@kdaily.com

개성공단 2004년말 가동예상

12월 시범단지 착공합의 동해어장 공동이용 눈길



남북 양측이 18~22일 관공 회담에서 열린 제8차 남북관교협약(이하)에서 개성공단을 12월 중 착공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공단 조성이 금강산 육로 관광을 앞당길 전망이다. 또 개성도 수산업 분야에서도 남북간 협력이 급진전될 것으로 기대되는 분위기이다.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개성 공단군 면적의 1/2에 2000년 4월 2007억 원의 투자, 인구 4만 5000명을 수용하는 20~3000명 규모의 거주지역(2000명)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는 2차 시범단지 100만평(100만평)과 배후지인 2차 시범단지(200만평)에 대해 12월 중 착공을 확정된 뒤 본격적인 투자 유치에 나서며 2004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해어장 공동이용 업무 협정 체결을 통해 국외로 수출되는 수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31일에서는 또 다음 달 중 북측의 동해어장 업무 협정 체결을 통해 국외로 수출되는 수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성공단 운영은 현대이산 주도로 구성되는 '관리위원회' 형태의 운영기구에서 맡는다. 이 위원회는 기업 설립과 등록 등 모든 공단 업무를 취급한다. 북측은 개성공단의 합성회관 위해 조만간 공단

지역을 특구로 지정할 방안이 것으로 알려졌다. 육도연구원에 따르면 공단에 건설 가능하면 시설은 17만평의 교정교과와 함께 인공 210만평(약 27조원)의 정산교과와 60만 6000만 평(약 8000억)의 조속효과를 누릴 것으로 분석했다. 이란 장관과 31일에서는 또 다음 달 중 북측의 동해어장 업무 협정 체결을 통해 국외로 수출되는 수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성공단 운영은 현대이산 주도로 구성되는 '관리위원회' 형태의 운영기구에서 맡는다. 이 위원회는 기업 설립과 등록 등 모든 공단 업무를 취급한다. 북측은 개성공단의 합성회관 위해 조만간 공단

八面鏡

前주한미대사 訪北에 노면 견제협상 수장자도 동일. 북한 경제산란 차질, 무역 재고하해.

# '核해법' 한국중재役 인정 성과

## ■ 장관급회담 "대화 해결" 합의 의미

남북이 제3차 장관급회담에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으로 '대화'를 제시함으로써 당시국회 간 위기해소 방식에 관한 공동입장의 토대가 마련됐다. 직어도 분쟁의 존재에 관한 인식이 공유됐다는 점 역시 확인된 셈이다. 특히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나설 의향이 있음을 내비친 태도는 북한 핵개발을 문제시한 미국 발표 직후의 위기감에 비해 사태를 완화하는 토양새로 정리하고 있다.

## 北 대화의지 불구 전향적 자세 미흡 '美 적대포기' 조건도 앞길험난 예고

그러나 이 정도의 토대 위에서 위기 국면의 돌파구가 어떤 식으로 마련될 것인지 불투명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회담에서 드러난 북한의 입장이 우리 정부나 미국의 요구정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원시적 수준에 그친 데다 제네바 핵 합의 준수 약속 등을 깨고 북미간 주장이 판문점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 외교당국자는 23일 "핵 개발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한 북한 입장에서 미국을 설득하는 일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대화의지만을 표현 한 것이 향후 주변국 대응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다시 한번에 봐야"라고 신중한 시각을 드러냈다. 핵 문제를 남북외교와 관련된 점을 강조할 수 있으나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도 비슷한 맥락이다.

특히 향후 전방을 모두 비호해 만든다는 것은 북한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적대 정책을 철회하면"이라는 조건을 언명했다는 점이다. 이 태도가 이후 실제 상황의 변화 가능성을 유용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북한이 미국 특사인 제임스 영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와의 협상 때 핵 개발 계획을 시인하면서 내신 조건과 같다.

강종보도문에 명시된 핵 문제 조양만 보면 북한은 핵개발에서 연금한 '핵 개발 계획'을 시인도 부담도 하지 않았다. 남측 수석대표인 정재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은 이에 대해 "핵 개발 계획을 시인한 위치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해석대로라면 이번 회담은 앞으로 북미관계에서 정부의 역할에 긍정적 측면 보다는 부정적 측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북한이 이번 회담을 배제하려던 기포입장을 접고 남측에게 심의

협보에 중대 의미를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이 미국에 인정한 핵 개발 계획이 기정사실로 드러남으로써 미국의 '신 핵국가' 후 대화 원칙에 더 한 입이 실리는 쪽으로 사태가 전개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 경우 중대 역할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의 운신의 폭은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개성공단 착공 등 교류협력이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된 합의가 부정적 분위기에 싸여 실행의 담보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역시로 로스카모브에서 24, 26일에 각각 열리는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대화 의지를 전담급 예정이나 미국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또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포기할 이끌어내기 위한 남북 압박 공조의 수위가 어느정도일지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북한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 美, 공식논평 앓고 '北진의' 촉각

북한 핵 개발 문제를 대외로 표명했다는 남북 간의 합의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22일(현지시간) 나오지 않았다. 미 정부 관계자는 진화한 합의 내용을 파악한 뒤 미국의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며 논평을 유보했다.

하지만 이날 및 국무부의 전례를 따르면 미국의 입장을 유추하기에 충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리처드 비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한국의 핵개발 후속 단계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아니다"고 잘라 말

했다. 그는 이같은 입장은 북한이 핵 개발을 인정할 후 남북화에, 이산가족 회합,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을 대외로 이끄는 문제를 두고 중립적 논의의 결과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비우처 대변인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우리가 이미 북한에 말한 것에 대한 언급이 없이 대화를 말하는 것은 이 문제의 해결방식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북한이 스스로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폐지하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는 기본입장의

재론이다. 그는 "새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북한의 대화 제의에 대해서도 "우리

미국에는 한국의 핵개발정책에 대한 지지분쇄와 미국의 대북 대화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런 입장은 미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해제를 위한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동맹국의 입장을 경청하기보다는 미국을 피로도록 강요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50만 톤으로 핵전원 공유 공급을 언제든지 중지할

수 있다는 태도다. 북한이 1994년 제네바 핵 협의를 이끈 이상 미국도 그 의무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이 핵개발 포기 의사를 보이지 않을 경우 경수로 건설 지원 중단이라는 강수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워싱턴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대북관계에서 한걸음 물러나 있기를 사실상 강요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북한에 취할 조처의 강도는 26일 열리는 예시코 이태 경제협력체(APEC)에서의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고바로 움직일 드러낼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ni0101@hk.co.kr

## 先폐기 後대화 원칙고수 대북압박 강화나설 태세

가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남북장관회담의 결과에 대해 미국이 논평을 내놓는다 해도 이번처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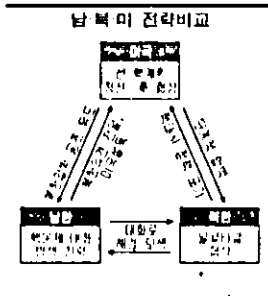
## 남북장관급회담 '核 대화해결' 합의

# '北·美대화' 돌파구 찾았다

북한이 2002년 10월 23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핵대화를 위한 핵문제 해결 전략의 원칙을 양측에 따라 북한 측사태가 북한 대남 정책에서 벗어난 것까지 내걸었다.

북한은 또 북핵이 북미간 대화의 새로운 관문이라고, 평양회담을 통해 대남정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엔 어떤 대화도 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1년 북·미 외교관계가 갈라져갈수록 양측이 국제사회에 서로 양면의 입장을



- ### 공동보도문 요약
1. 핵 등 모든 문제를 대화 방법으로 해결
  2.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적극 추진
    - 1차로 경의선은 개성역, 동해선은 금강산에 연결
  3. 개성공단 건설 12월 착공
    - 건설실무협의회서 협의, 남북사무소 설치
  4. 해운협에서 채택된 실무협약 11월 금강산에서 개최
  5. 통상협에서 채택된 문제들 남북 철도-도로가 처음 연결되는 시기에 합의
  6. 북측 동해어장 일부법 이용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 내 금강산 실무협약
  7. 이산가족 금강산 면회소 분리 건설
    - 건설시기 실용자생자수 확보
  8. 제9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2003년 1월 중순 시종 개최

시금 리호만위원 논의한다. 이는 26일로 예정된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 고이즈미 일본 총리간 3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의 대남 정책의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한·미 외무장관들은 스무살의 핵개발은 상상할 수 없다. 핵확산 사태를 관외적으로 해결한다는 두가지 원칙을 재확인한 뒤 한·미 양국 및 한·미·일 3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핵포기 상용 원조 방안을 공동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 이번 회담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양국이 91년 체결한 제재가 기본 원칙의 간헐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다. 제재가 철폐의 대목 경우도 원상 복구에 대한 무리 강요의 관에는 단호한 제재가 합의의 기본 유지하자는 것이다.

한편 부시 행정부 내부에서는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시연하는 제재가 기본 원칙을 거둔다는 방안이 이미 제재와 동시에 시행될수있어 미국도 대남 정책의 중추를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아 한·미간 합의의 관문이 주목된다.

김대중기자 kdyemk.co.kr  
윤성환기자 shyoon@mk.co.kr

## 韓·美외무 내일 회동 '先핵폐기' 조율 美정부 對北 햇볕정책 지지 재확인

외교관계가 갈라져갈수록 양측이 국제사회에 서로 양면의 입장을 내걸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포기할 수 없다는 강硬的 태도, 양국이 상충되지 않는 대화의 원칙을 밝혔다. 북한의 핵 개발의 최종목표는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았으며, 양국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에 대한 무리 강요의 관에는 단호한 제재가 합의의 기본 유지하자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위해 노력하면 국제사회의 중추를 담당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에는 양측이 동의할 수 있다"며

북한이 합의하는 원상복구 문제를 대조하고 있는 것이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내지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핵문제에 관련된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이해도 설명했다. 북한은 무산 미국이 대북 경제개방 포기해야만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미국은 원상복구 포기, 주 대남 포기를 하고 있다.

리처드 마우저 국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김에 브라질에서 "미국은 북한에 모든 문제들에 대해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얘기했다. "미국은 북한에 모든 문제들에 대해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얘기했다. "미국은 북한에 모든 문제들에 대해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얘기했다.

### ■ 강제연락 주요 합의내용

## 영해통과·공동漁場 마련 개성공단 12월착공 明示

이들 합의는 양측이 합의한 것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남정책의 원칙을 양측에 따라 북한 측사태가 북한 대남 정책에서 벗어난 것까지 내걸었다.

남북이 합의한, 평양과 도로로 조속 연결을 개성공단 착공과 더불어 스무살의 핵개발을 위한 핵문제 해결 전략의 원칙을 양측에 따라 북한 측사태가 북한 대남 정책에서 벗어난 것까지 내걸었다.

남북이 합의한, 평양과 도로로 조속 연결을 개성공단 착공과 더불어 스무살의 핵개발을 위한 핵문제 해결 전략의 원칙을 양측에 따라 북한 측사태가 북한 대남 정책에서 벗어난 것까지 내걸었다.

남북이 합의한, 평양과 도로로 조속 연결을 개성공단 착공과 더불어 스무살의 핵개발을 위한 핵문제 해결 전략의 원칙을 양측에 따라 북한 측사태가 북한 대남 정책에서 벗어난 것까지 내걸었다.

남북이 합의한, 평양과 도로로 조속 연결을 개성공단 착공과 더불어 스무살의 핵개발을 위한 핵문제 해결 전략의 원칙을 양측에 따라 북한 측사태가 북한 대남 정책에서 벗어난 것까지 내걸었다.

남북이 합의한, 평양과 도로로 조속 연결을 개성공단 착공과 더불어 스무살의 핵개발을 위한 핵문제 해결 전략의 원칙을 양측에 따라 북한 측사태가 북한 대남 정책에서 벗어난 것까지 내걸었다.

### 한반도 주변 일정

- 10월 23 26일 북 태조도시방안 서울 방문
- 10월 25일 한·미 외무장관회담(연시교)
- 10월 26일 한·미 일 3국 정상회담(연시교)
- 10월 26일 북 경제시찰단 서울 방문
- 10월 29일 북·일 수교협상(평양에서)
- 10월 29 30일 남북 육경간 수해방지 협의(개성)
- 10월 30일 남북 정선기 실무협약
- 11월 6일 남북 경제협력회의(평양)
- 11월 중 개성공단 건설 실무협약의 예정
- 11월 중 해운협에서 채택 실무협약 예정(금강산)
- 12월 중 개성공단 건설 착수
- 12월 중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예정

사실상으로도 양국의 첫 번째 합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화가 없었다"고 재확인했다.

북한은 강대국에 우리 정부는 이 연에는 미국 정부에게 대담하다. 리처드 마우저 국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김에 브라질에서 "미국은 북한에 모든 문제들에 대해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얘기했다. "미국은 북한에 모든 문제들에 대해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얘기했다.

### 남북 부문별 경제교류

구분	내용
남북 철도-도로 연결	·경의선 철도-도로는 개성공단 단지에 연결 ·동해선 철도-도로는 금강산지역 연결 ·양측 동해선 철도 연결공사 분리 추진
개성공단 건설	·남측의 해당 부분 건설 위해 사무소 설치 ·25일 예정된 개성공단 실무협약의 연기 ·남측측 영해 통과와 안전운행
해운협에서	·해안 사고 공동 대응 및 연락체계 확립 ·남북한 운송은 국내 운송 관주 ·안전운행과 물자수송
통상협에서	·남북 철도-도로 처음 연결되는 시기에 맞춰 합의
이산협력	·남측 어민, 북측의 동해어장 일부 이용 ·가까운 시일 내 금강산에서 실무협약

관계 남북 시에는 인접한, 북한은 1년 10월 26일 3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의 대남 정책의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남한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양국이 91년 체결한 제재가 기본 원칙의 간헐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다. 제재가 철폐의 대목 경우도 원상 복구에 대한 무리 강요의 관에는 단호한 제재가 합의의 기본 유지하자는 것이다.

한편 부시 행정부 내부에서는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시연하는 제재가 기본 원칙을 거둔다는 방안이 이미 제재와 동시에 시행될수있어 미국도 대남 정책의 중추를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아 한·미간 합의의 관문이 주목된다.

9월 6일 15일과 지난 6월 29일 발생한 사태로 인해 등 북방관계선(NL)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

김정은 남북 해군협약을 위해 해운협을 추진하게 된다. 상대방 해군의 자유로운 이동, 해안사고 공동 대응과 연락체계 확립, 남북한 운송의 국제 운송 관주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합의되었다.

核에 밀린 납북자 449명

제5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끝난 뒤 발표된 공동보도문에 전후(戰後) 납북자 문제에 대한 언급이 빠졌으므로 이 문제의 해결이 더욱 미뤄졌다.

이번 보도문에는 제7항에 "전쟁시기 소포를 갈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 확립"을 명시하고 있다. 이 내용은 지난달 월경산에서 열린 제4차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사항을 반복한 것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이병호(차관) 통일정책실장은 "전쟁시기 납북자를 조사하는 마당에 전후 납북자 449명도 포함하자고 요구했지만, 북측은 '전쟁시기부터 해결하고 전후시기는 다음에 하자' 더 미뤘다"고 밝혔다.

이제 대해 통일부 이병호(차관) 통일정책실장은 "전쟁시기 납북자를 조사하는 마당에 전후 납북자 449명도 포함하자고 요구했지만, 북측은 '전쟁시기부터 해결하고 전후시기는 다음에 하자' 더 미뤘다"고 밝혔다.

지난달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면서 국내 납북자 단체와 가족들은 대통령 연담 요구와 해상 시위 등을 통해 정부가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해왔다.

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장관 회담에서 북한에 장기간 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나 북측의 호응을 얻지 못한 것이다.

고수석 기자 sskem@joonggang.co.kr

한겨레

정세현 통일부장관 일문일답

“북 달라진 모습 확인했다”

“미, 적대정책 철회 용의면 북 인보문제 해소 메세지”



8차 장관급 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정세현 장관은 23일 서울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용의가 있다면 미국이 우려하는 안보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세지”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김정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평화’와 ‘준비’ 표현을 또 반복했었다”며 “미국에서 의미 분석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회담 관계자는 “북측이 ‘미국에 대한 적대정책 철회’가 아니라 ‘평화 용의’라는 표현을 쓴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을 평가한다면?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김 상임위원장이 핵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뭔가 진리된 입장을 갖고 얘기하는 것 같다.

—제네바 기밀합의 준수를 명문화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산언 등 4가지 국제법의 위반이라고 이야기했다. 북측이 협상을 위해 남겨놓은 것 같다.

—미국이 밝힌 강석주 북 외무상 제1부상의 ‘핵 개발 계획’ 시인 발언은 확인됐는가?

=미국이 위협적으로 나와서 우리(북)도 강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등 겁문을 비키가려는 듯한 인상이었다. (다른 관계자는 “미국 의 설명 내용과) 워싱턴이 조금 다르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핵 개발 계획’ 해체를 대회의 전제로 내걸고 있는데?

=그것은 점차 수위를 높이고 압박을 강화하려는 외교력이며, 미국도 압박과 대화를 병행할 것이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단지내 남쪽 상주기구 설치 경험 제도화단계 진입 의미

■ 눈길고는 '개성공단' 합의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특히 개성공단과 관련된 주목할 만한 합의가 이끌어냈다.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은 개성공단이 건설되면 그 안에 남쪽의 레크리움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남북이 당국간에 상주기구 설치할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측은 최근 개성공업지구 경제활동과 관련한 행정활동을 담당하는 관리운영기구의 구성을 현대이산쪽에 맡긴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기구는 어디까지나 북쪽 행정기구로서, 이번에 합의한 사무소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조명준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사무소는 개성공단에 머무는 남쪽 사람들의 출입과 체류, 무자활동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활동을 담당하는 남쪽 기구”라고 설명했다. 관리운영기구가 공단 내 경제활동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북쪽 행정기구라면, 사무소

는 공단에 머무는 남쪽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일종의 ‘임시기관’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사무소가 정식 정부기구로 설치될지는 확고하지 않았다. 조 국장은 “과거 사회주의권 등 미수교국과의 교류에서도 무역부지진총공사(코트라)가 정부기관을 대리해 지원 업무를 담당한 전례가 있다”며 “어떤 형식이 될지는 더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떤 형식이 되든, 상주기구 설치는 남북협력에 민간교류 차원을 넘어 법적 제도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입증하는 사례로 기록될 만하다.

이밖에도 남북은 12월 중에 공단 건설에 착공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또 북측은 11월 중 ‘개성공업지구법’을 발표할 계획임을 남쪽에 통보했다. 지난 8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회의의 ‘올해 안 착공’ 합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특구지정과 각종 시기를 분명하게 못박은 것이다.

손원재 기자 wonje@hani.co.kr



90시간의 다양한 협상 끝에 23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된 제9차 남북장관급 회담은 북한의 핵개발과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남북대화에서 경제협력과 핵문제를 분리시키는 북한의 '이중 이중 전략'으로 인해 '북미 체제비합의 및 한반도비핵화선언 준수' 등을 합의문에 양기하지 못하고 남북자 통제해결과 남북 국방장관회담 개최일정 등도 거론 수준에인 머물러 장관급회담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향후 남북관계 일정

- △북한 태권도 시범단 방문=23~26일(서울)
- △북한 경제시찰단 방문=10.26(서울)
- △동해어장 공유 실무접촉=비엔 시안내(금강산)
- △제5차 적십자 회담=10.31~11.2(금강산, 예정)
- △개성공단 실무협의회 1차회의=11월초(개성, 예정)
- △해운합의서 채택 실무접촉=11월중(금강산)
- △개성공단 건설착공=12월중(개성)
- △제9차 남북장관급 회담=2003.1(서울)

# ‘核’대응 미진… 經協합의 빛바래

## 남북장관급회담 평가

두리축이 호핑리강에서 강력히 제 제기한 핵문제에 관해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면 대화를 통해 해결할 용의가 있다"는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발언 수준을 넘지 못했다. 핵개발에 대한 진상 조사나 시정 조치에는 아예 접근하지도 못했다.

북한은 핵문제에 관한 한 '북미 분담 6자회담' 전략을 그대로 드러냈다. 핵은 미국, 경제는 남한

## 北 '경협·핵문제' 분리 이중전략 구사

### “대화해결 협력” 원론적 수준 못넘어

## 국방장관 회담-남북자 문제는 '빈손'

이런 철저한 분리정책을 구사했다. 북측은 남측이 근접하게 핵문제 해결 제기하면 시종일관 모호외로 입건했으며 당국에는 "소관사항이 아니다"며 회피하곤 했다.

북측의 이같은 태도는 군사신화 구축을 위한 남측의 국방장관회담 개최 요구에도 그대로 투영돼 일장조가 못잡았다. 심지어 인도관용 주는 것이 있

다면 공동보도문에 '남북이 핵문제 대화로 해결하는데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선언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북한이 미국과만 핵문제를 풀려는 시도에 다스킨의 제동장치는 뭉뚱 놀았다.

북한은 그 대신 △12월중 개성공단 건설착공 △해운합의서 및 분할합의서 채택합의 △공동경역로 남북경협 부문 합의에는 더 적극적으론 나섰다.

제9차 장관급회담을 2002년 1월 중순 개최기로 합의한 것도 일견 주목할 만하다. 12월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관계없이 차기 정부와

도 대화의 문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지만 두리축이 평안공항에 전세기를 대기시켜놓고 요구사항을 풀어주지 않으면 귀경하겠다는 영포를 때려놓음에도 불구하고 막판 북측에 굴러다니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상대에 대입된 격하게 협상이란 지적을 받을 만했다.

이번 장관급회담은 결국 '김반의 성공으로 평가받는 정도다. 나머지 절반은 한미일 공조로 분한 북한 언론에 착각과 남북관계 발전이란 프리즘을 통해 비쳐진 것으로 보인다.

7김기동기자 kildong@segye.com

# 국민일보

2002.10.24(목)

# 남북 “核 대화로 해결” 합의

## 장관급회담 8개항 공동보도문- 핵포기는 명시안해

남북한은 23일 새벽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제8차 장관급회담 3차 전체회의를 갖고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8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 발표했다. (권경사 4면)

남측 대변인인 이봉조 통일부 정책실장은 “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만큼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의미를 부여했으나, 북측은 핵개발 계획 포기과 재네바 합의의 즉각적 이행 등을 공동보도문에 명시하지는 남측 요구를 끝내 거

부해 향후 북·미·한·미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에서 전쟁, 종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6·25대 행방불명자)의 생사과 주소를 확인하는 적십자 단체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금강산 면화소를 빨리 가설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한 적십자사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남북 적십자회담을 일 것을 제안할 방침이다.

남북은 양측간에 해운합의서를 채택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11월 중 실무접촉을 갖기로 했다. 또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조속히 추진기로 하고 경의선·동해선이 처음 연결되는 시기에 맞춰 동해합의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개성공단 공사용 12월 중에 착수기로 하고, 개성공단에 남북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또 동해어장 이동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르면 시일 내 갖기로 했다. 한편 제9차 장관급회담을 내년 1월 중순 서울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신정호기자 procol@kmb.co.kr

장관급회담 뭉 남겼나

## 北核 평화적 해결 '실마리'

### 北 제네바합의 준수 언급없어 기대못미쳐

남북간 22일 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북측의 핵무기 개발행위의 준수 약속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남측 의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미국의 '선(先)핵재무개최선과, 후(後)협상' 의제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북·미간 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앞으로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서둘러 합의할 여지가 없다는 데도 한·미·일 장관회담 등 다자간 외교협상을 통해 북핵 해결을 관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남북 한발씩씩 양보 남측은 핵개발 회담에 대한 태도와 제제에 핵협약의 구속적인 이해 등을 모두 도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중괄 주장했다. 그러나 북측은 이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해 남측이 지극했다.

남북이 당초 합의에서 서로 양보 취향 불렀다. 대화를 통한 해결을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남측 대표인 정세현 통일부장관(왼쪽)이 23일 오전 북측 김영성 단장(오른쪽)의 배웅을 받으며 숙소인 고려호텔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에서 합의한 것은 양측 모두 회담 기간에 따른 부담감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무산 남측은 핵무기 개발 행위의 비공개 의무가 해제된 북측과의 관계 악화는 피해야 할 일관적이다.

북측도 핵무기 개발과 광물 채굴 고령은 산장에서 남측과의 관계까지 악화될 경우 가늠이 어려움에 비관 견제에 관용을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점양 남북이 오는 26일 이·대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협의를 통한 해결을 합의

한 것은 북측과 남측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에 반하는 입장이 아니었음으로 보인다. 북측이 핵무기 개발 행위에 대한 도발과 핵무기 개발 행위에 대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어 북·미·일 장관회담이 전례없는 긴박한 국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핵 프로그램의 우선 해결을 북·미·일 장관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삼고 있어 북·미·일 장관회담이 전례없는 긴박한 국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홍익성 기자  
yshome@hankyung.com

## 朝鮮日報

2002.10.24(목)

### 南北 공동보도문 <全文>

8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2년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됐다.

회담에서 양방은 최근 남북관계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공개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며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핵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김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건설이 동시에 빨리 진척되도록 장관급회담이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
  - 쌍방은 1차로 김의선 철도·도로를 개성공업단지에, 동해선 철도·도로를 금강산지역에 연결한다.
  - 쌍방은 동해선 철도 연결공사를 빨리 추진하며, 남측은 개성 방향에도 남측구간 연결공사를 중단 없이 빨리 추진시킨다.
3.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 착공을 12월 중에 하는 문제와 건설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개성공단건설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며, 개성공단이 건설되면 그 안에 남측의 해당 부문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쌍방 민간선박들의 상대측 영해 통과와 안전운항 등 해운협력에 관한 해운합의서 채택을 위한 관계자 실무접촉을 11월 중 금강산에서 갖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상대측의 인원 통행 및 물자 수송에 관한 통행합의서 채택 문제를 남북철도·도로가 처음 연결되는 시기에 맞춰 협의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남측의 어민들이 북측의 동해어장의 일부부 이용 하는 문제를 관련해 해당 실무접촉을 이르면 시일 내 금강산에서 갖기로 한다.
7.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금강산 면회소를 빨리 건설하고, 진성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급 확인하는 직 접자단체들의 사업을 적극 밀어주기로 한다.
8. 남과 북은 9차 장관급회담을 2003년 1월 중순 서울에서 개최한다.

## “美, 햇볕정책 입장 변화없어”

###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연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 여전히 햇볕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국무부 대변인이 22일 밝혔다.

바우처 대변인은 이날 밤에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이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두방들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방안을 중요하

게 꼽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우처는 26일 열리는 미·중 정상 회담과 26일부터 멕시코 고스 카보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두방들과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예정

이다. 한편 도널드 럼즈펠트 국방장관은 이날 밤에 브리핑에서 북한과 이라크의 분과 대응방안을 거듭 밝혔다. 워싱턴=고광성 특파원  
awanc@hankyung.com

### 공동보도문 요지

양방은 최근 남북관계가 6·15 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공개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며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공개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며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2. 남과 북은 김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건설이 동시에 빨리 진척되도록 장관급회담이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

한 것은 북측과 남측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에 반하는 입장이 아니었음으로 보인다. 북측이 핵무기 개발 행위에 대한 도발과 핵무기 개발 행위에 대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어 북·미·일 장관회담이 전례없는 긴박한 국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핵 프로그램의 우선 해결을 북·미·일 장관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삼고 있어 북·미·일 장관회담이 전례없는 긴박한 국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북·미간 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앞으로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서둘러 합의할 여지가 없다는 데도 한·미·일 장관회담 등 다자간 외교협상을 통해 북핵 해결을 관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남북 한발씩씩 양보 남측은 핵개발 회담에 대한 태도와 제제에 핵협약의 구속적인 이해 등을 모두 도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중괄 주장했다. 그러나 북측은 이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해 남측이 지극했다.

◆점양 남북이 오는 26일 이·대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협의를 통한 해결을 합의

한 것은 북측과 남측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에 반하는 입장이 아니었음으로 보인다. 북측이 핵무기 개발 행위에 대한 도발과 핵무기 개발 행위에 대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어 북·미·일 장관회담이 전례없는 긴박한 국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 남북 해운·수산협력 급물살

## 내달 실무접촉서 선박 영해통과 논의 북한 수역 우리어선 조업도 실현될듯

### 남북 장관급 회담서 합의

남북장관급 회담·수산협력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양측은 지난 19~22일 평양에서 열린 장관급회담에서 다음달 해운협력 및 수산협력 협정을 맺고 이르면 이달 내 남북 어선들이 북해 동해어장에서 조업하는 문제에 대해 실무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

○해운협력은 남북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해운협력의 큰 방향을 향한 민간기업의 상대적 영해통과와 영권운항 등이라고 명시. 다음달 실무회담에서 상세히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해운수산업은 지난해 남북 해운협력을 위해 4차례에 걸친 양면 자유 협조단 4차례의 양방향 이원시 대립의 대응 해안선과 공동대응 및 협력에 대한 ▲남북한 운송의 국내 운송 간주 등 구체적인 목표할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해운협력에 대해 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기업(NLL)의 자유로운 동태만 보장된다면 나머지 사항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영

### 남·북한간 해상수출입량

구분	남북		북한-남한	
	수출량	수입량	수출량	수입량
'94	7	131		
'95	281	346		
'96	148	187		
'97	361	250		
'98	306	162		
'99	781	203		
2000	547	156		
2001	508	239		

자료: 해양부 (단위:천톤)

해운과 북해 동해어장 등 해운 협력 실무접촉에서 긍정적으로 협력문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의선 동해안 협도(도로 연경로사)가 분리되고 육로를 통한 교류가 확대될 것도 해운협력의 이점이다. 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선의주·개항장만이 개방되면 화물운송을 위한 해운 분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군함과 달리 상선의 인체통과 문제는 외교·국방문제와 어느 정도 거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무접촉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 덧붙였다.

○수산협력에 분야에 대한 남북 합의가 이뤄지면 우리 어선의 북해 수역에 들어가 조업할 수 있게 된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수산 협력에 대해 구체적 실무논의를 갖기로 합의했으나 정해진 시기에 합의할지 합의할지가 최대의 걸림돌이 남아 협정수역의 긴장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해양부는 지난해 1월 남북 어업실무자회의의 조속 개최를 희망한다는 북한 수산청의 제안에 따라 남북간 수산협력 방안을 마련해왔다. 북한이 제안하는 수역 가운데 경제성과 조업용 어선이 보장되는 어장을 우선 확보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남북 수산자원 공동조사→시험조업→단순어업 등의 단계로 가서 수산협력을 추진해볼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산물 냉동·생장 시설 개발 및 가공공장 건설차관, 수산자원 공동개발 등 수산기술 협력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수산협력 방안을 명시한 '남북어업협력사업' 체결하고 어업활동 보장, 안전조업 및 질서유지, 어업자료 교환, 어업인 교류, 합법·합법적인 협의를 위한 '남북어업공동위원회' 설치 등의 협의도 고려할 예정이다.

임용재기자 jahn@sed.co.kr

# '北核개발' 확대해석 했을까?

북한이 개성시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핵 개발계획 때문에 대미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강연(金春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겸한 정세진(丁世珍) 통일부 장관이 이날 초 북미회담 내용의 전달과정 상의 의문점을 제기해 주목된다.

정 장관은 23일 어남 사담에 귀환한 후 기자회견에 "북한 김지수(金知洙) 외무성 제1부서의 제네바회담(파기 관련) 발언은 전달과정에서 잘못 전달되거나 생략된 것"이라고 밝혀 핵 개발 때문에 회담에 대한 의구심을 표시했다. 정 장관은 이어 김연남 상임위원장이 핵 개발 계획 시연에 대해 "제네바에서 미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고압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 핵 개발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적 입장이 아니다"라고 비켜갔지만, 북한 핵개발 계획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회담 관계자도 "북측의 태도로 볼 때 미국이 핵 문제의 시달리움을 확대 해석했다"며, 어느 정도 회담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 등의 언급을 종합하면, 북한은 핵 개발계획을 회담에서 우회적으로 핵 개발계획을 인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내부 협상단의 시각은 북한에 핵 개발계획을 기정사실화하고 장성대응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과

## 김영남과 면담했던 丁 통일장관 "北발언 전달과정 오류 가능성" 제기 핵기정사실화 美와 시각달라 주목

일본의 시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김미경조를 통해 북한 핵 개발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는 방침과도 차이가 있어 자칫 정부 내 이견이나 불협화음으로 비칠 소지마저 있다.

정부 내에서는 "핵 문제 대화 해

결"이라는 합의할 도출한 이번 장관급 회담에 대해 엇갈린 평가들 내놓고 있다. 통일부는 "북측에 핵 관련 제반 협정 준수 여부를 강도 높게 촉구했고, 이는 공동보도문에 반영돼 있다"고 평가한 반면, 외교부 단국자는 "핵 문제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로는 북한이 핵 개발을 시인하고 개선의지를 보였는지 알 수 없다"고 평가했다.

사실 이번 회담의 공동보도문에는 남북이 요구한 핵 관련 내용이 일괄 반영되지 않았다. 북측은 회담에서 남북이 핵 문제가 언급되지 않으면 협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압박하자 덕분에 수비부의 훈련을 받아 미지못에 '핵 문제'라는 문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회담 관계자는 핵 문제에 대한 북측의 반응을 묻자 "공동보도문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동준기자 dlee@hk.co.kr

###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8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쌍방은 최근 남북관계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좋게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며 남측은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핵 문제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합의하기로 한다.

2. 강의신과 동해선 철도도로 건설이 동시에 빨리 추진되도록 하고 1차적으로 강의신을 개성공업지구에, 동해선을 남강산 지역에 연결한다.

3. 개성공단 건설을 12월 중에 착공하고 실무적인 문제를 개성공단 실무협의 과정에서 논의한다. 개성공단이 건설되면 그 안에 남측의 해당부문 사무소를 설치한다.

4. 영해공과와 인민운양 등 해운업에서 채택을 위한 실무협의를 11월 중 금강산에서 갖는다.

5. 남북철도·도로가 처음 연결되는 시기에 맞추어 인민운양 및 철저수송에 관한 동행협의서 채택문제를 협의한다.

6. 남측의 여민들이 북측 동해어장의 일부를 이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실무협의를 이월 시월 내에 갖는다.

7. 여민 가족들의 금강산 민회소설 빨리 건설하고,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확인과는 직접자 단체들의 사업을 적극 밀어주기로 한다.

8. 제9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2003년 1월 중순 서울에서 개최한다.

## 한국일보

2002.10.24(목)

## 대한매일

2002.10.24(목)

### 남북공동보도문 전문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2년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됐다.

회담에서 쌍방은 최근 남북관계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좋게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며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핵 문제들 비롯한 모든 문제들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합의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강의신과 동해선 철도·도로 건설이 동시에 빨리 추진되도록 장관급 회담이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 쌍방은 1차적으로 강의신 철도·도로를 개성공업지구에, 동해선 철도·도로를 금강산 지역에 연결한다. 쌍방은 동해선 철도인 김강산역 빨리 추진하며, 남측은 강릉 방면에도 남측 구간 연결 공사를 중단없이 빨리 추진시킨다.

3.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착공을 12월 중에 하는 문제와 건설과 관련한 실무

적 문제들을 개성공단 건설실무협의회의에서 토의하기로 하며, 개성공단이 건설되면 그 안에 남측의 해당 부문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쌍방 민간선박들의 상대적 영해공과와 인민운양 등 해운업에 관한 해운업에서 채택을 위한 관계자 실무협의를 11월 중에 금강산에서 갖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상대측의 인민운양 및 철저수송에 관한 동행협의서 채택 문제를 남북철도·도로가 처음 연결되는 시기에 맞춰 협의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남측의 여민들이 북측의 동해어장의 일부를 이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해당 실무협의를 빠른 시일내에 금강산에서 갖기로 한다.

7. 남과 북은 여민가족들의 금강산 민회소설 빨리 건설하고,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확인과는 직접자 단체들의 사업을 적극 밀어주기로 한다.

8. 남과 북은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3년 1월 중순에 서울에서 개최한다.

### “대화해결 약속 큰 진전 核포기 명시 없어 미흡” 해외 언론 반응

【해】 AP, AFP통신, BBC, CNN 등 세계 주요 외신들은 23일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핵 문제와 대화로 풀어나가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 발표 사실을 타진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BBC와 CNN은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며 핵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들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는 남북 양측의 공동보도문을 읽고 대화로써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로 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BBC는 “핵 개발 계획이 한국민과 국제사회에 깊은 우려를 일으킨다는 남측

의 의견을 북한이 경청한 것은 중요하며 합의문은 긍정적인 일보를 내딛는 것”이라는 김세연 통일부 장관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CNN은 그러나 합의문을 통해 북한이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하고 미국, 한국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서약을 존중하기로 명확히 약속하지는 않았음을 지적했다.

AP통신은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회담에서의 합의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는 한국측 입장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등 관계국 정상들에게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AP 통신 역시 북한이 IAEA 등과의 협의를 준수한다는 명시적 약속을 합의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김영남 독대 후 核논의 급진전

예정보다 하루갈 남거 밤엔 현상들에 겨우합 의남이 끊어내긴 했지만 23일 새벽 서울로 돌아 온 남북 수석대표 정세인(丁世恩) 통일부장관의 얼굴에는 환기가 넘쳤다. 남방으로 떠나기전 의 어두웠던 얼굴과 대조를 이뤘다.

남북 대표들은 첫 회의를 연인 20일 오전부터 '인문담(人文談)' 하듯 차분한 신경전을 벌였다. 정 장관은 남쪽에 베풀어 "하늘이 내려앉아 있다. 마음이 두렵다."면서 북의 심의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북측 김정성 단장은 "서풍이 불듯, 비가 오든 우의 갈 길을 갔다."면서 맞받았다.

이번 회담에서 하나의 변수였던 것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정 장관의 50분 단회회담이었다. 지난 21일 밤 북측이 전격적으로 "고려연사 연담"을 요청하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서지는 것 아니다."는 예상도 나왔다.

하지만 권력시열 2위이며 대외관계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위원장과의 만남도 의미가 깊었다.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난장군 격이며 출국이 늦어지자, 잠강 순안공항에서 대기하던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23일 새벽 고려호텔에 들러 북측을 대접받으며 쉬고있다. \*중앙 순환기자 angle@daily.com

다. 이 자리에서 북측은 심의있는 태도를 보여 비 남북간 입장을 어느 정도 조율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22일에는 남측이 "북한 핵 관련 내용을 보도 문에 넣지 않으면 서울로 돌아가겠다."는 압박 상형합과 북측에 한 뒤 진내없이 수석대표 단

독집속만 네 차례와 실무접촉 수차례가 이어지며 23일 새벽에 겨우 전회회담을 갖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이로써 한겨웠던 3박 5일, 80시간의 마라톤 회담을 끝낼 수 있었다.

~ 박홍삼기자

## 중앙일보

2002.10.24(목)

온라인 일민마당

### 北 핵개발 파문 해법은-

## "비핵화 확인때까지 對北지원 말걸" "편가름은 금물... 남북이 머리 맞대야"

북한이 수년 전부터 비밀리에 핵개발 계획을 진행했다고 사인에 파문이 일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2년)과 미국과의 제네바 합의(1994년) 이후에도 핵개발을 계속한 것이다. 더구나 최근 북한은 신의주 경제특구를 선포하고 부산아시아게임에 대규모의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는 등 개방 의지를 보이던 참이어서 그 충격은 더 크다. 그러나 난항이었던 제8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23일 새벽 가까스로 타결돼 "북한 핵 문제를 비롯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기"고 명문화하면서 핵문제를 둘러싼 파문을 한 고리할 남기는 듯하다.

중앙일보 인터넷 포털사이트(www.join.s.com)에서 최근 북한에 핵개발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을 추려본다.

유선 네티즌들은 여론을 보듯 북한을 비난했다. 'naver'에는 "북한이 비핵화 선언과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계속 핵개발 계획을 진행하는 것으로 미국 언론에 의해 자체를 증수할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냐"고 했다.

ID 'ecoman'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일본도 핵을 보유할 리분이 생기고, 여기에

중국의 경제까지 개해하면 중국에는 다시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에 빠진다"며 "결국 핵은 우리의 안보를 겨냥한 것이므로 북한에 핵 보유는 물론 개발 자체를 지지해야 한다"고 꼬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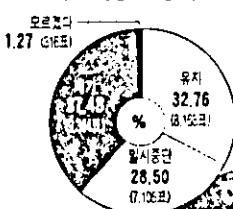
이런 정서는 핵개발정책의 공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paulok'는 "지금까지 대북 유화책이라고 했던 핵개발정책의 결과가 한반도에 핵위협을 증폭시킨 것이었느냐"며 "북한에서 핵포기 등 비핵화에 대한 명쾌한 답을 들을 때까지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wan12'도 "북한에 대화와 개방으로 나오게 잘못을 시정하기 전에는 대북사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했다.

반면 북한에 태도 변화에 주목한 네티즌도 있었다. 'yogeebae'는 "북한이 큰 파문이 예상되는지도 불구하고 부정한 하급과기와 달리 핵개발을 시인하고 장관급회담에서 대화의지를 보인 것은 핵개발을 위해 이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게 아니겠느냐"고 추론했다. 'bitros'도 "한반도 주변 정세도 고려할 때 핵무기 개발은 북한으로서도 군사적 실익이 없다"며

### 온라인 여론조사

Q 북한이 제네바합의와 정부의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해왔음이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햇볕정책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 24,307명 참가, 2002년 10월 19~22일 조사



\* 이 온라인 표의 결과는 본 설문조사에 참가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본 설문과 결과는 일반 인터넷 사용자나 일반인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 카드를 이용해 경제지원 등을 요구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김재열씨는 "핵개발을 시인했을 때에 장관급회담에서 어떤 사과나 개발 방지 약속이 없었는데 북한의 태도가 변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반박했다.

한편 'wavegon'은 "북한이 내삼이라는 게 우리 쪽의 국론분열일 수도 있다"며 "북한문제만 나오면 북한으로 치달는 건가름은 이제 그만하고 냉정하게 북한문제를 직시하자"고 적었다. 또 ID '48747'은 "주변국과의 협상도 필요하지만 한반도 핵 문제에 관한 해결의 열쇠는 결국 남북 사이에 있다"며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남북 모두 진취적인 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김동선 기자 kds@joonhwan.com

# “北지원금 核개발 쓰였나”

## 국회 상임위 의혹 추궁

23일 국회 예결위·운영위·통일외교  
홍상위·법사위 등에선 북한의 핵개발  
논의가 잇따랐다. 특히 북한에 지원  
된 돈이 핵개발에 사용됐을 의혹에 대  
해 파상동세가 깊어졌다.

◇“청와대는 왜 몰랐나”=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 운영위에 나온 박지연  
(李智元)청와대 비서실장을 로너로 물  
었다. 이주영(李柱榮)의원은 “금강산  
관광대가 4억달러, 비밀지원금 4억달  
러, 민간지원 2억달러 등을 합치면 원  
심분리기 가격 10억달러와 맞아떨어진  
다”며 “그게 아니면 1년 수출총액이 6  
억달러인 북한이 어떻게 10억달러를  
충당하느냐”라고 따졌다.

홍의원은 “1999년 북한의 핵개발 협  
보가 있었고, 2000년 6월에 남북 정상  
회담이 있었는데 왜 정상회담에선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  
다. 또 “미국인인 협리는 하는데 왜 우  
리는 안했느냐. 만약 몰라서였다면 국  
장을 공개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규태(李圭泰)·이원형(李源亨) 의  
원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사찰  
을 받아줄때까지 대북지원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실장은 “6·15 정상회담 때도 핵은  
제거돼야 한다고 문건으로 제출했고,  
지난 4월 임동원(林東源)특사도 핵은  
제거를 거론했다”며 맞섰다.

한실장은 “북한이 카스탄에서 우  
라늄 농축 원심분리기를 도입했는지

미국도 확인하지 못했고, 북한이 원심  
분리기 1천개를 구입했다는 것도 사실  
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99년  
입수돼 미국에 준 핵개발 협보들 청와  
대가 모르는 게 말이 되느냐”는 추궁에  
대해선 “협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정  
부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의원도 가세=민주당 한승  
희(韓承熙)의원은 법사위에서 “북한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한 것은 충격”이라  
며 “국무회의에서 6·15 공동선언을 근  
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할 용의가 없느냐”고 김정길(金正吉)  
법무부 장관을 물아세웠다.

통외홍위에선 한나라당 박원중(朴元  
重)의원이 “핵개발을 시인한 뒤 첫번째  
접촉에서 나온 공동보도문은 실망스럽  
기 막이 없고, 핵개발에 연루부안 중  
점이 됐다”며 남북 장관급 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정세현(丁世顯)통일부 장관을  
물아세웠다.

민주당 박상천(朴尙天)의원은 “다면  
하게 대화로 해결한다고 하기보다 권  
화적 해결이란 문구를 쓰는 전략적 사  
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통일외위에서 남북협력  
기금에서 지원되는 금강산 관광 경비  
보조금 2백억원의 전액 삭감을 주장해  
민주당 측과 마찰을 빚었다. 양당은 결  
국 1백99억원을 여유자금 운영항목으  
로 전환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남북협  
력기금은 정부 승인만으로 전용이 가  
능하다.

서승욱·김성탁 기자  
sswook@joongang.co.kr

# 南北교류협력 풍성한 성과

## 장관급회담 평가·추진 전망

이는 남북장관급회담은 교류협력 사업  
부흥이라는 국상한 성과를 얻었다. 향후  
남북자 문제 해결에는 이합치한 것으로  
요약된다. 남북관계는 보다 상호신뢰 고  
유를 위한 안목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전개  
된 결과로 이끌어나갈 것. 북측이 경제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남북자 문제가 이  
산가족 문제는 담보 상태에 머물러가 따  
문이다.

남북은 우선 경제안과 동해안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개척협력을  
한 이산가족 교류 등  
협력이 첫 연결점은 시  
기에 맞춰 상대측 인  
의 협력 및 참가 수  
수

## 남북자·이산가족문제는 의미있는 합의 도출못해

에 관한 통행합의서 채택 문제를 합의  
로 엮었다. 이는 철도 도로와 기계적 연결  
이 이어 곧바로 양측 통자와 인원의 통행  
문제를 논의해 실질적인 교류를 진행시키  
겠다는 뜻이다.

이번 합의는 철도 도로 연결과 연관  
있는 개성공단 조성이나 금강산 관광 합  
성화 문제, 최근 러시아가 적극성을 보이  
고 있는 남북중간철도(TKR)와 사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 사업의 탄력을 줌  
것으로 여상된다.

민간신뢰의 상대측 이해 통과를 위한  
해운합의서 채택 문제를 위한 실무접촉을  
다음달 중이 갖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이는 북한 선박의 잇따른 영해 침범으로

인한 남북 및 남한내 시비불 등초적으로  
해결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뜻이며,  
지난 6월29일 발생한 서해교전 등 해상  
군사 충돌의 위험을 완화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또 이번 시일 안에 남북 어린이들  
이 교류 문화어망 일부할 수 있는  
특 실무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들은 2002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이 특  
일 배원관로서 처음으로 언급했던 남북경  
직공동체 건설 구상을 한단계 전진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남북자 단체들이 강하게 요구해  
온 전후 남북자 성상  
확인 문제 등에 대해  
는 의미있는 합의를 보  
지 못했다.

남북한 당국은 또 전  
시 형용자 성상과 주소  
확인을 위한 직상자단체들의 사상을 적극  
기관키로 합의했지만 이는 이미 지난 개  
4차 남북직상자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진  
내용을 반복한 것이다. 금강산 권회소도  
속히 건설하기로 의지를 표명했지만 구체  
적인 문제는 이달말쯤 열릴 예정인 제5차  
직상자회담으로 넘겨지게 됐다.

남북 양측은 이번 합의를 토대로 철도  
도로 연결이나 개성공단 건설 등을 논의  
하기 위한 접촉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핵 과문에도 불구하고 남북 교류는 지속  
돼야 한다는 것에 양측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간 사업은 핵 문제의 반사이  
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김의구기자 egkim@kmb.co.kr

# '남북 장관회담 합의' 후속책 착수

## 정부 '핵 해결'등 8개항 실행안 강구

정부는 최근 불기진 북한 '핵 개발 계획'과 관련해 8차 장관급 회담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3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이은 등 후속 대책을 집중 협의했다. 정부는 이번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미국 등 관련국들에게 적극적으로 실행해나갈 계획이다.

▶관련기사 3·4면

김부 고위 관계자는 "남북의 이번 협의로 정부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보편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호소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났

다"며 "26일 멕시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동맹국들과의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며 평화적 해결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오후 주한 외교사절들을 초청로 정부중앙청사로 불려 이번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김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핵 개발 계획과 관련해 "북한이 사인하고 협상의지를 발견 이상 대화를 통한 해결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정부 관계자는 "남북간 합의사항인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핵 문제에 관한

확실한 언질이 없는 것은 문제"라며 "관련국을 실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아래 기간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미-일외무장관 회담에서는 공동발표와 공동선언을 통해 북한 핵 개발의 즉각 폐기와 평화적 해결에 대한 원칙을 천명할 것"이라며 "이후 한-미-일 남북경제조각강북그룹(트릭) 회의 등에서 구체적 단계적 대응방안을 계속 협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남북은 23일 새벽 평양 인민문화공원에서 8차 장관급 회담 3차 전체회의를 열어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핵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 방법으로 해결

토록 적극 협력하고, 12위 중 개선공단 건설 착공과 공단 건설 뒤 남북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또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의 조속한 연결 △해운협에서·몽골협에서 채택을 위한 관련 실무협의를 개최 △남북 여인의 북쪽 농해이간 이용 △쌍방 격심자 단체들의 금강산민회소 조기 신치의 '진정시기 소식을 알 수 있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 확인 사업 적극 지원 △2003년 1위 중순 9차 장관급 회담 서울 개최 등 모두 8개 항의 합의사항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채택·발표했다.

류재훈 이세훈 기자 nomad@hani.co.kr

### 북 방송 장관회담 긍정평가

북한 <중앙방송>은 23일 "제8차 남북 장관회담에서 쌍방은 건지한 협의를 통하여 중요한 합의를 보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신

# "남북자 소극대처 아쉽다"

## 장관급회담 각계반응

## 北핵문제 대화해결 합의엔 안도

## '햇볕정책'에 현안 가려져 실망

23일 오전 평양에서 타결된 남북장관급회담의 공동보도문 내용을 접한 시민들은 일단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과외로 치달지 않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로 가닥이 잡힌데 대해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남북자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한데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천호 중앙대학교 수석교재 교수는 "남북이 한반도의 평화·안전 보장을 위한 공동노력, 핵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의 대화를 통한 해결 등에 합의한 것은 6·15선언의 이행진도상

한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면서도 "북-미간 인식과 입장차이가 큰 만큼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사원 김정화(27·여)씨도 "남북이 '대화'라는 대원칙에 합의한 만큼 '제네바 기본합의'에 충실한 문제 해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협상태도와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진지한 검토 작업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최우영(31) 남북자가족협의회 회장은 "6·25전쟁

당시 행방불명자의 생사와 주소 확인하는 데는 합의가 도출됐지만 현안이 되고 있는 남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제복소리를 내지 못했다"며 "정부가 핵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바람에 또다시 실기(失機)를 하고 만 셈"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기홍(41)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도 "정부의 '햇볕정책'이 일방적 대북유화정책으로 전략한 상황에서 협상단의 일방적 양보와 구경하는 듯한 모습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한신태기자 larchie@segye.com





사 설 · 칼 럼



## 북한 핵개발 '시인'과 한반도 미래

### 한겨레

2002.10.18(금)

### 사설

북한이 핵 개발을 시인했다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발표는 매우 놀라운 일이다. 두 나라 정부의 발표와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북한은 핵 활동을 동결하기로 한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 이후 우리는 농축방식이라는 새로운 핵 개발을 시도해 온 점을 시인했다고 한다. 제임스 캘리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이담 초 평양을 방문해 북한 외무성 강석주 제1부상과의 이튿날 회담에서 북한은 미국 쪽이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자 핵 개발 사실을 시인했다는 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의 줄거리다.

#### 정확한 실제 파악이 선결 과제

북한이 과연 언제부터 우리는 농축방식을 통해 핵을 개발해 왔는지, 그런 기술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정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따워 어느 것 하나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선부름에 단과 감정에 휘둘린 대응은 오히려 사태를 걷잡을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휘몰아갈 뿐 아니라 근본적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는 일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힘으로 몰아세우는 위협과 협박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특히 우려하는 점은 군사적 일방주의를 보여온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도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압박 정책을 적용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정부가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이번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것은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다.

북한 핵 개발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남북 대화통로뿐 비롯한 모든 통로를 동원해야 한다. 정확한 사실과 진의를 알아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새로운 핵 개발 시도와 관련하여 나온 정보 중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 중앙정보국이 지난 1월에 발표한 것이다. 북한이 지난해 하반기에도 핵 개발에 쓸 수 있는 기술을 얻기 위해 세계 여러 곳에서 계속 노력했다는 정보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 내용과 수준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 부시의 압박과 북한의 승부수

북한이 핵 개발을 시인했다면 그 의도와 배경 역시 온갖 의문과 궁금증을 더하게 한다. 94년 제네바 기본합의 이후의 핵 개발은 핵 활동을 동결하겠다는 기본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경수로 건설과 연 50만톤의 대북·중유 제공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이 왜 이처럼 엄청난 손실을 각오하면서까지 핵 개발을 시인했는지 분명하지 않다. 만약 그런 큰 손실까지 각오하고 시인했다면 어떤 의도와 전략에서 그랬는지 의문과 궁금증을 더욱 깊게 할 뿐이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등장 이후 미국이 보여온 군사적 압박주의와 힘으로 몰아붙이는 대북 강경론의 맥락에서 한반

도 문제, 특히 북한 문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특히 부시 행정부 출범 뒤 자신들의 안보에 대한 우려를 심각하게 해 왔다. 클린턴 행정부 임기 끝무렵에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하고,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이 거의 성사단계에 이른 점과 비교한다면 부시 행정부의 대북 압박과 봉쇄정책은 극명한 대조를 보여 왔다. 곧 풀릴 것 같았던 대북 경제제재와 테러국 지정 해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전면에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북-미 관계는 특히 북한이 최근 보여온 여러가지 변화와 개혁 노력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 게 사실이다. 북한은 신의주 특구와 자본주의 요소의 과감한 도입 등을 통해 경제개혁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외부 투자를 간절하게 원해 왔던 것이다. 심지어 일본 식민지시대 '배상문제'를 '경제협력' 문제로 양보하고, 일본인 납치사실까지 인정해 사과할 정도로 북-일 관계 개선에 힘을 기울여 온 이유는 경제개혁을 위해 외부 자본이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와 테러국 지정은 외국 자본의 유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 왔다. 북한으로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미국의 대북한 고압·봉쇄·압박 정책을 푸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핵 개발 시인'이라는 메가톤급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닌가 하는 분석도 가능하다.

####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 필요

북한이 의도했던 하지 않았든 제임스 캘리 미국 차관보에게 밝혔다는 '핵 개발 시인'은 이미 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문제' 전체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대 전환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제는 어떤 형식으로건 핵 문제 등 북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빅딜이 아니고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시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런 상황은 엄청난 도전인 동시에 북한 문제를 일거에 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남과 북이 지혜를 모아야 하며, 미국은 압박과 위협이 아닌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국내에서는 벌써부터 수구·보수세력들이 북한 핵 개발이 마치 햇볕정책의 걸과인 것처럼 이를 몰아세우고 있다.

그러나 햇볕정책을 통해 지금과 같은 평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북한 핵 개발 시인'이라는 큰 충격은 한반도에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위기를 불러왔을 것이다. 오히려 그동안 미려된 여러 대북 창구를 통해 우리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고, 핵 개발 포기 등 북한이 미땅히 해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전을 앞두고 민족 문제를 정치·정당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 세력들의 노력도 크게 견제해야 한다. 지금은 지혜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노력이 절실한 때다.

## 사실

### 北 핵개발은 위험한 도박이다

— 대화로 모든 문제 풀어야

북한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핵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시인한 것은 참으로 우리를 경악하게 한다. 미국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성명은 "북한 관계자들이 핵 개발 계획을 시인했으며, 제네바 핵동결 협정이 무효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북의 핵개발 추진 사실은 남북 화해·협력 등 향후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기류도 급랭시킬 것으로 보여 크게 우려된다.

북한이 이번에 시인한 핵개발 프로그램은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로 그동안 문제되어 왔던 플루토늄 재처리할 통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아직 구체적인 핵개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적어도 지금까지 원자로를 돌린 뒤 나온 폐 연료봉을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연변 원자로가 아닌 새로운 의혹 시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1991년 미국과 체결한 제네바 핵협정을 통해 핵 개발을 완전 동결하고 국제 핵사찰을 받을 것을 약속했다.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을 주축으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경수로로 건설해주고, 중유도 제공해주기로 했던 것이다. 경수로 건설 진척 정도와 북한 핵개발 투명성 검증 단계가 톱니바퀴처럼 짜여진 북·미간 제네바 핵기본합의는 그동안 경수로 공사 지연을 싸고 북·미간에 잦은 마찰을 빚어왔다. 이번 북측의 핵개발 시인으로 제네바 협정은 자칫 파기될 위험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지금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은 21.48%의 공진율을 보이고 있는 등 당초 계획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네바 핵 합의가 깨져서는 안 되며, 경수로 건설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이 핵개발을 전면 중단하고, 동시에 완전히 폐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제네바 핵협정은 물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고, 국제 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핵 사찰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핵 투명성을 확실하게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그동안 틈틈이 미국의 핵 개발 우려에

대해 '얼도당토 않은' 모략종상이라고 몰아세우며 철저히 부인을 해오다 이번에 무슨 연유로 핵개발 사실을 시인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미국이 제시한 확실한 증거 때문에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는지, 아니면 미측의 의혹 제기를 계기로 차제에 모든 사실을 털어 놓고, 경제난 해결 등 근본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진 것인지 불확실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시인한 이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제네바 핵 협정도 이미 깨진 것이거나,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 등의 이관사판식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북한 스스로를 위해서도 안 되지만,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옳은 자세가 아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국제 사회의 우리를 사는 것은 사실이나 많은 전문가들은 핵 무기화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단계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핵 개발뿐만 아니라 미사일 수출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 모든 문제를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북 핵개발 문제는 한·미·일 3국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화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찾아야 한다. 오는 25일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또 19일 평양에서 예정된 제 8차 남북장관급회담은 예정대로 개최되어야 한다.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이 주역제로 되어 있지만 이 기회에 우리의 핵개발 반대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남북간에는 이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천명했으므로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화해를 실천하고 신뢰의 기반을 구축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한·미간에 정보를 확실하게 공유하는 것이다. 또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일본 외무성이 밝힌 북한과의 이 문제에 관한 대화 방침을 환영한다. 정부 당국은 핵개발 문제와 포용정책은 별개라는 인식의 바탕 위에서 냉철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

## 社說

### 北 核문제 평화적 타결을

북한이 미국에 대해 농축 우라늄을 사용한 비밀 핵무기 개발계획을 시인함으로써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파문을 던지고 있다. 사실이라면 이는 당장 94년 북미 제네바 협정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남북한 간에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동안 문제시돼 왔던 플루토늄 재처리를 통한 핵무기 개발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북한이 영변 이외에 또 새로운 핵 시설을 별도로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이달 초 방북한 제임스 켈리 미 대통령특사가 몇 가지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자 이같이 시인했다고 한다. 그리고 더 이상 핵확산방지협정(NPT)체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한다. 이에 미국은 "북한과 더 이상 협상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나타냄으로써 한반도 정세가 예측할 수 없는 격속 속에 빠져들고 있는 느낌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막아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이 문제를 푸는데 있어 우방국과의 철저한 공조와 함께 대북 정책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냉철한 시대판단이 요구된다. 우선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시인한 관련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더 정밀 확인해야 한다. 혹 북한이 미국특사와의 논쟁 중에 '공갈음'으로 내뱉었을 가능성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과연 대세를 역류하면서까지 핵무기 개발을 강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곧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맞부딪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내일 열리는 장관급 회담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핵 문제 해결 없이는 북한의 생존도, 나아가 한반도의 안정도 불가능한 일임을 북한이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한국경제

2002.10.18(금)



## 사설

### 북한 핵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갖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한·미 양국이 동시에 발표했다.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외신들도 줄을 잇고 있다. 지난 94년의 제네바 합의와 그에 이은 비핵선언(94년11월, 북한 핵동결 선언)에 정면 배치되는 행위임은 물론이다. 한마디로 놀라운 일이며 지극히 우려스런 사태 전개다.

더구나 우리의 대북 화해정책에 대한 중대한 배신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북한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그동안 과연 어떤 정보관단에 기초해 대북 정책을 펴왔는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 남북간,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중대한 위기를 조성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북한은 미국의 핵개발 의혹 제기에 대해 "근거없는 궤변"이라거나 "미국의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허구요 낚초"라는 공식 입장을 되풀이해왔던 터다. 그러나 이란 초 제임스 켈리 특사와 협상하는 자리에서 결국 이를 시인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핵 문제는 남북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 문제가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국제적 긴장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지금으로서는 예측조차 쉽지 않다.

한국 정부는 지난 8년여 동안 북한의 핵 개발 포기 선언을 신뢰하는 바탕 위에서 김수로 건설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대북 지원 사업들을 펴왔다. 특히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본격적인 화해 협력 정책을 펴왔던 게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북한 핵 문제가 더욱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돌연 시인한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이 무조건 포기·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은 더이상 감조할 필요도 없는 지상의 명제다. 북한 당국은 이번이야말로 분명하고도 믿을 만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 핵무기를 협상 도구화하는 것이 더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고서야 경제개혁과 개방도 가능하다는 점을 북한 당국은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다른 무엇보다 국민을 안심시킬 의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미·일 3자의 확고한 공조를 통해 이번 만큼은 북핵 문제에 대한 확실한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길이다.

社說

분노도 표시 못하는 '햇볕정부'

북한이 또 우리의 뒤푹수를 쳤다. 겉으로는 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보내는 등 변화한 모습으로 우리를 환상에 빠지게 하고 속으로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니 그 충격과 내신감은 그야말로 매가문급이다. 정부는 6·15정상회담과 그 후의 '성과'를 강조해 왔지만 핵개발이 현존하는 병역한 위협으로 드러남으로써 북한 정권의 본질에 진히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제 북한 정권의 진심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해졌다. 햇볕 정책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북한의 무서운 의도에 대처할 때다.

북한의 핵개발 시인으로 한반도 시계는 94년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기존방식이 아니라 농축우라늄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핵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니 오히려 상황은 악화됐다. 북한의 핵개발은 당장 제네바협약의 위반이다. 핵개발을 동결하는 대가로 북한에 건설 중인 경수로와 미국이 담당하는 중유 공급의 존립 근거가 무너진 것이다.

그런데도 어제 발표한 정부 성명에는 북한에 대한 분노나 비난은커녕 그 흔한 유감조차 담겨 있지 않다. 미국부도 북한이 제네바협약,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협정,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는데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로 작심한 듯 성명은 온건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이달 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해결책을 논의하고 기존의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할 방침이지만 이처럼 미온적인 자세로 어떻게 북한의 마음을 돌리겠다는 것인가.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모르는가. 북한의 피상적 변화에 홀린 정부 햇볕정책 추종자들에게 우리는 나라를 맡기고 있다.

북한이 중대한 약속위반을 한만큼 정부는 햇볕정책의 미망(迷妄)에서 벗어나 북한에 대한 생각과 자세를 바꿔야 한다. 미국의 뒤만 따를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북한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핵 포기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북한의 핵은 북-미 문제 이전에 남북문제가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 고위관계자마저 미국이 북한에 제시한 핵개발 증거의 내용을 모른다는 사실도 심각하다.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면 한미 공조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며 정부가 알고 있는데도 숨기고 있다면 국민을 속이는 심각한 일이다. 정부의 태도를 지켜보겠다.

매일경제

社說

'햇볕'의 답이 핵 개발인가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갖고 있다고 미국 측이 시인했다는 것은 보통 충격적인 일이 아니다. 미국의 끊임없는 의심에도 불구하고 핵개발 사실을 부인해 왔던 북한이 이달 초 방북한 켈리 미국 특사에게 핵 개발 사실을 밝혔다고 하는 것은 최근의 양국간 협상 재개 노력을 일시에 뒤집는 것과 같다.

좀더 구체적 사실이 밝혀져야겠지만 당장 94년 제네바 협정에서 합의한 핵 확산 금지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말한다.

실제로 북한은 켈리 특사에게 제네바 협정을 더 이상 준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제껏 4년여 햇볕정책의 기초 하에 남북간 긴장완화와 각종 교류확대를 도모해 왔던 우리로서는 허를 찔린 셈이나 마찬가지다.

북-미대화나 북-일대화 등을 통해 북한이 그동안 개방·수교의사를 표명한 것도 결국 근본적인 변화없이 겉시늬에 그친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상대방에게 생존의 위협이 되는 군사적 행동에는 아무런 변화없이 인적·경제교류 등을 확대한들 누가 북한이 진정 변했다고 믿겠는가.

정부는 일차적으로 한·미·일 공조를 통해 명백한 진상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한

다. 또 기존의 남북간 대화경로를 통해 북측에 문제점을 제기할 방침을 정했다. 북한이 과거와 달리 핵 의혹을 시인한 것 자체가 해결의 실마리가 엿보인다는 정부 내 시각이 있으나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90년대 초에 핵을 무기로 버림급 전술을 택했던 북한과 제네바협정을 이끌어낸 대가가 어떠한지를 기억한다면 더욱 그렇다.

현재로서는 무엇보다도 한·미·일 공조체제를 공고히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북한이 수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현재 어느 정도 핵 개발이 진전돼 있고 앞으로 어떤 새로운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수집되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이 수립돼야 할 일이다.

그러잖아도 미국이 지목한 3대 '악의 축'에 포함된 북한이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급랭 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다.

그에 따라 우리가 어떤 피해를 겪지는 상상할 필요조차도 없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햇볕'에 매달려 문제의 본질을 소홀히하지 않아야 한다.

또 해결과정을 국제사회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불안이 조성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北核문제 평화적 타결을

북한이 미국에 대해 농축 우라늄을 사용한 비밀 핵무기 개발계획을 시인함으로써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파문을 던지고 있다. 사실이라면 이는 단정 94년 북미 제네바 협정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남북한 간에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동안 문제시돼 왔던 플루토늄 재처리를 통한 핵무기 개발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북한이 영변 이외에 또 새로운 핵 시설을 별도로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이달 초 방북한 제임스 켈리 미 대통령특사가 몇 가지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자 이같이 시인했다고 한다. 그리고 더 이상 핵확산방지협정(NPT)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한다. 이에 미국은 "북한과 더 이상 협상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나타냄으로써 한반도 정세가 예측할 수 없는 격랑 속에 빠져들고 있는 느낌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막아야 한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이 문제를 풀는데 있어 우방국과의 친지한 공조와 함께 대북 정책에 반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냉철한 시태판단이 요구된다. 우선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시인한 관련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더 정밀 확인해야 한다. 즉 북한이 미국특사와의 논쟁 중에 '공갈용'으로 내뱉었을 가능성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과연 대세를 여유하면서까지 핵무기 개발을 강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곧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맞부딪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내일 열리는 정관계 회담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소중한 기회가 돼야 할 것이다. 핵 문제 해결 없이는 북한의 생존도, 나아가 한반도의 안정도 불가능한 일임을 북한이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울경제

2002.10.18(금)

한반도에 다시 '핵격랑'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나 어렵사리 화해분위기에 접어든 한반도에 또다시 핵 기류가 조성되자니 않을 까 우려된다. 미국은 어제(17일) 백악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이달 초 평양을 방문한 켈리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에게 핵무기 개발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발표하고 "이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1994년 제네바 기본협의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정부의 '햇볕 정책'에도 지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칭, 대북 강경책을 펴 온 부시 행정부로서는 대북 압박의 빌미가 생긴 셈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진척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 핵은 이번엔 표면화됐다 뿐이지 오래 전부터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외국의 정보기관들 가운데는 이미 개발을 끝내고 실전단계까지 들어 간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북한이 켈리 차관보에게 개발계획을 시인한 것은 미국이 각종 증거를 제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에서 보듯 북한이 숨기는 자세 일변도에서 벗어나 '자진 시인'으로 타라진 모습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여운을 남기고 있다. 문제는 핵에 대한 미국의 강경입장을 고려할 때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을 수용할 것인가의 여부다. 이를 거부할 경우 지난 1994년과 같은 북 핵 위기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로서는 큰 충격이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후 줄곧 추진해 온 '햇볕 정책'도 풍파를 맞게 됐다. 그렇지 않아도 대북 비밀지원설로 궁지에 몰려 있는 정부로서는 엄청난 대 타격이다. 며칠 전 폐막된 부산 아시안게임의 참가나 50만 감군 설 등으로 화해무드에 짓어 있는 국민정세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수도 있다. 북한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개혁·개방을 내걸고 경제특구까지 지정해가며 경제난 타개를 위해 전력을 쏟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진퇴양난이다. 당장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건설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미국은 물론이지만 일본도 이를 묵과할 리 없다. 신의주 특구의 앞날도 어두워질 것이다.

결국 선택은 북한에 달렸다. 현재의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핵사찰을 받을 수밖에 방법이 없다. 국제사회에서도 테러 지원국이라는 오명을 씻어야 한다. 정부도 북 핵에 관련한 미국·일본 등과의 공조를 통해 사찰을 수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北 '核 기만'이 몰고온 한반도 위기

朝鮮日報

2002.10.18(금)

社說

북한이 지난 수년간 비밀리에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 왔다는 것은 충격 그 자체다. 최근 몇 년 동안 북한 김정일 정권이 보여준 평화의 미소 뒤편에는 비밀 핵개발이라는 어마어마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김정일을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전제하고서 북한 지원에 앞장서온 현 정권의 햇볕정책 역시 북한이 스스로 비밀 핵무기개발 추진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중대한 시련에 직면하게 됐다.

북한의 비밀 핵개발은 한편의 대(大) 기만극이다. 김정일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에서부터 지난 9월 고이즈미 일본총리 방북에 이르기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국제 핵협약 준수란 다짐한 바 있다.

북한은 1992년 한반도 비핵선언과 94년 제네바 미·북 합의 등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당사자다. 그런데 막상 평양을 방문한 미국특사가 농축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증거'들을 제시하자, 기우로 역정을 내며 앞으로는 국제 핵협약에 위배되지 않겠다고 강변했다고 한다.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다.

지금 북한이 취한 태도는 화를 내고 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기만 행위에 대해 한·미·일과 국제사회에 사과하고 단

장 핵개발 계획을 중단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들의 핵무기 개발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필수적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자청(自請)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최근 북한이 시도하고 있는 경제개혁·개발 조치가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 자칫하면 북한체제의 지탱력까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이 문제가 한반도 안보위기로 발전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북한의 비밀 핵개발이 확인됨에 따라 검수로 건설과 대북 중유제공 등을 담은 제네바 합의 자체가 붕괴할 위기에 처해 있다. 북한이 과거처럼 위기조장을 통한 실리(實利) 획득이라는 '벼랑끝 전술'에 매달린다면 결국 부시 미국정부와 충돌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한반도는 엄청난 안보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미·일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대북정책 전체를 일시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 핵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북한이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핵무기를 문제 개발하는 것이 확인된 상태에서 대북 경제협력은 윤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일단 한·미·일 정부가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택하기로 한 이상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걸연한 공조체제로 북한 핵 위협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 북 핵개발 당장 중단하라

국민일보

2002.10.18(금)

사설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해왔다고 시인한 것은 엄청난 충격이다.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혹일 따름이었다. 하지만 그 의혹이 현실로 확인된 지금 무엇보다 북한이 개발해온 핵무기의 1차적 공격 대상이 남한일 수 있음을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하다.

북한은 핵무기개발 개발함으로써 진정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는가. 그렇다면 그런 오산이 없다. 오히려 자멸을 재촉할 뿐이다. 최근의 이라크 사태가 단적으로 이를 보여준다. 또 핵무기 개발계획을 드러냄으로써 경제적으로 좀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는 의도라 해도 마찬가지다. 그 같은 벼랑끝 전술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다. 대북 강경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조지 W 부시 미국 정부에는 특히 그렇다. 따라서 북한은 즉각 핵무기 개발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그것만이 북한은 물론 민족 전체에 미칠지도 모를 재앙을 막는 길이다.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인한 저의를 놓고 이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희망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시인한 뒤 핵무기

와 미사일, 재래식 군비 등 미국의 핵심 관심사와 대북 체제 보장, 경제 제재 해제 등을 일괄 타결하는 '빅 탱'을 미국에 제의했다는 보도도 있다. 그러나 일방적인 낙관은 급할이다. 우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제네바 북·미 합의 이후 추진돼왔다는 것은 중대한 합의 위반인 만큼 당장 제네바 합의가 파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한반도에 '제2의 핵위기'가 타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미국은 일단 '현 상황의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에 관한 한 북한과 협상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진해졌다. 그런 만큼 정부로서는 북한에 대한 핵무기 개발계획 중단 촉구와 함께 미국에 대해서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설득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됐다. 앞으로 남북 장관급회담 및 한·미·일 3국 정상회담 등을 통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햇볕정책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흔들림 없이 지속되는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끝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 것은 국민이 보기에 그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고 효과에도 의문을 던지기에 충분하다. 적어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햇볕정책은 변화되는 게 옳다.



## 북한 핵개발 충격과 파장

### 社 說

북한이 이달 초 방북한 제임스 캘리 미국 대통령 특사에게 농축 우라늄을 사용한 비밀 핵무기 개발계획을 시인한 것은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 한미 양국이 17일 이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앞으로 파장이 더욱 우려된다. 이에 대한 북한의 공식입장 친밀이 없는 만큼 사실확인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핵개발 계획을 시인한 것은 혁명적 반상의 내부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특히 핵개발의 포기를 전제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의 비밀 핵무기 개발은 1994년 북-미 핵합의 사항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안고 있다. 제네바 핵합의 자체가 파기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거센 반발과 함께 최악의 강경대응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높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입장을 고려할 때 자칫 1994년과 같은 최악의 한반도 위기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일 수교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물론 한반도 정세 전반에 부정적 파장을 일으킬 것이 우려된다.

특히 북한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남북관계의 불신과 핵위험을 증폭시켰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

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했다는 점에서 배신행위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하면서 반핵협정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고 한 것도 이윤배반이다.

현 정부가 안보를 전제로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가운데서 북의 핵무기 개발이 계속됐다는 것은 충격적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 대북정책의 허점이 노출됐다는 점에서 국민적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진상을 국제사회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미·일 3국의 공조를 통해 북한 핵의혹을 완전히払拭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실태가 명백한 만큼 대화를 통해 북한을 설득하여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제 북한 핵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북한은 핵문제 해결의 존립이 걸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명제로 인식한다면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북한은 민족 전체의 생존을 담보하고 있는 반민족·반통일적 핵무기 개발은 즉각 포기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의 핵 위험을 제거하는 현실적 방법이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첩경이 되기 때문이다.

### 世界日報

2002.10.18(금)

## 경향신문

2002.10.18(금)

### 사설

## 北 핵개발 포기해야

북한이 이달 초 평양 북·미회담에서 북·미 제네바 합의를 위반하면서 핵개발을 추진해왔다고 시인한 사실이 어제 발표됐다. 최근 북한이 잇달아 긍정적인 대내외 정책변화를 추구,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마당에 다른 한편에서 그와 배치되는 행동을 했다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핵개발은 용납될 수 없다. 남북한 및 미국 등 당사자들간 오랫동안 여러차례 합의하고 확인해왔던 비핵화를 꺾으로써 북한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이 다시 고립과 궁핍의 시기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하루 빨리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핵개발을 해왔는지 스스로 진상을 밝히고 완전 폐기한 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아야 한다. 대미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바람잡이 전술을 쓸 생각이라면 즉각 포기해야 한다.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나 한국 정부를 그런 낡은 전술로 속일 수 있는 때는 지나갔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북한의 핵개발 시인이 대결보다 일괄타결에 의한 북·미 현안 대화협을 유인하기 위한 방편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평양회담 이후에도 북한은 대화해결 원칙을 견지했고, 미국도 일단 대화로 핵개발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당사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이번 사태가 전화위복이 되어 북·미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핵미사일, 재래식 무기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은 북한체제 보장 및 대북 경제제재 해제로 일괄타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남북대화 단절로 한반도 운명을 미국의 손에 넘겨주었던 1994년 북핵 위기때의 뼈아픈 교훈을 되새겨 남북 장관급회담 등 기존 남북대화 채널을 활용, 북한을 설득하고 북·미대화를 적극 중재해야 한다. 그리고, 이달 말 멕시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방안을 주도적으로 마련, 핵개발을 둘러싼 한반도 위기에 적극 대처하기 바란다.

사설

뒤통수 맞은 햇볕정책

북한이 이달 초 반복했던 미 정부 특사에게 핵 개발 계획을 추진 중임을 '시인'했다. 어쩌서 이런 시인이 가능했을까. 두개의 유추가 가능하다. 하나는 북한이 은밀히 숨겨 추진했던 계획이 미국의 정보망에 길러 꼼짝없이 시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를 풀기 위한 마지막 숨겨둔 카드로 일괄 타결을 위한 전략적 시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관점이다. 아직은 그 어느 쪽임을 단정하지 못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북한이 대남 유화전술을 피면서 안으로는 핵 개발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는 사실이 우리를 분노케 한다. 또 핵 개발 자체가 무엇보다 우리의 안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북한 핵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국이나 국제 핵사찰 기구에만 맡길 수 없는 우리 안보의 문제가 돼 버렸다.

북한은 지난달 평양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탈 인정하는 등 한낱 생색내는 약속을 했지만 한국인 납치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어 우리를 분노케 한 바 있다. 이번엔 한민족 모두를 위협하는 핵 개발 계획조차 숨겨

오다 사실 자체를 인정한 것은 '화해와 협력'의 실질적 동반자인 한국을 침지하 무시한 행태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 계획 시인에도 불구하고 핵 촉이 일괄 타결이라는 방식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가려는 대화 의지의 표현일 수 있다는 식의 인이한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미국 정부는 사태를 평화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북한 핵 의욕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는 북측 기대에 쉽게 응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미국은 눈앞에 닥친 이라크 공격 문제, 알 카에다와의 반테러 전쟁을 감안해 시간을 벌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엄중한 처리에 나설 것이다.

북한이 1994년 제네바 핵동결 합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비관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북 핵 관련 정보를 미국과 공유하면서 북핵 추진의 실제 파악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북핵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생존의 문제로 닦쳐왔다.

한국시론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임스 랜라 미 국무장관에 대한 사권보장 특사 파견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랜라는 북한의 비핵 핵개발 프로그램의 증거를 제시하고 교차적으로 이의 제기할 것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핵개발 프로그램은 사실임으로 미국에 대해서도 사실임을 구사해, 오기만 보였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미국을 당혹과 곤경의 상태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이제까지 핵문제와 관련하여 이 같은 대담한 접근법을 구사해 온 나라가 없었다. 대남부 핵개발 사실은 확인되면서 관련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사립 핵시설, 그리고 원자력 이용이라고 명분을 지어 시인해 왔어도 드러났다. 이렇듯 북한은 '방사성'이 오기만 하면 나오는 방화벽이 아니다.

美 압박이 北 핵카드 키위

이번 랜라의 방문에서 볼듯이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문제는 미국의 대북 압

박 외교의 부활적 진압이다. 핵무기는 방탄능력을 갖고 있다. 그것은 핵무기 자체가 갖는 엄청난 상황 능력에서 비롯된다. 핵무기를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경제가 못되는 이것은 엄청난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게 된다. 북한의 이 지렛대를 잡는

부시의 오만, 김정일의 오기

해 내외국 이해를 받은 것이 1994년의 제네바 북미 합의의 결과로 드러났다. 당시의 경우와는 상황판단의 조율이 되어 영의 상태에서 있었다. 당시 북한의 핵문제도 미국 스스로의 오만함이 기원이며, 그에 대한 대가를 치렀던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은 북한을 끌어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북한의 핵개발을 더욱 가속화 시킨다. 결국 북한의 핵개발 계획이 기원된 것만 더욱 키워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당시

만 내외국도 북한 핵문제에 참가하고 북한 핵개발의 진척을 이해하고 진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축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핵문제, 일괄 타결과 인적이 없으면 카루지 말이 아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원천 핵확산금지조약 가입이 없었기 때문에 '모호한 단계'로 인한 경우 핵개발을 원이 하고 효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이럴 때 관여가 위태로운 때로는 무시되고 축소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실감적인 현상들은 가시적인 양면하게 추진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일 수가 없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지 못했다. 무조건 북한의 핵개발을

시도 북한측의 반응을 보면 양면적 외교를 구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에 맞서 북한은 핵 보유성 상태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핵개발 자체를 시인하는 '핵' 고백 진술을 구사함으로써 미국을 당혹에 빠뜨려 버렸다. 북한의 이러한 원리 조처로 미국은 스스로 분신 복을 상당히 좁게 만들게 되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인했다는 사실은 북한의 핵개발 과정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핵개발을 완성했다는지에 대한 의문을 자아내면서 그들의 핵개발 효율성을 한층 더 낮게 하였다.

한반도 핵위기 재인 안뒤에

미국은 이해 북한 핵개발이나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대한 군사적 고려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즉 북한을 핵 보유국에 올리는 위치에 두려움과 협성을 추구한 것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 자체가 이미 이러한 것은 군사적 공격을 신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핵 개발 자체도 안일 관할 수 없는 것이 북한 핵개발의 고인이 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오만'과 김정일의 '오기'가 가장 큰 원인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핵개발 진척에 대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 개발을 스스로 선언하고 있다. 이는 '98년 제1차 6자 회담의 성명서와 1999년 제2차 6자 회담의 성명서와 비교하면 분명히 다른 것이다. 그러나 1998년 이후 남북 및 북-미, 북-미간 대화의 여야 진영을 깨닫는 것이 어렵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갈 것인가이다. 우리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북한의 핵 개발을 지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저지르는 과정 자체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저해하는 안 된다라는 게 본래이다.

외교적 노력 더욱 절실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나 국민은 98년 상황과는 달리 우리의 외교적 역량이 대단히 중요해졌다. 힘을 연방을 필요로 있다. 98년에는 우리와 북-미 차에서 외교적 역량을 잘 이사가 작았다. 우선 98년 후반 대선 직전 김대중-클린턴 2차 회담을 통해 남북간의 모든 대화 채널을 열어졌고, 이에 따라 98년 들어 핵 협상의 주도권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다. 북한의 핵 개발 선언으로 미국 정부는 한반도 남북과 대화하기 힘든 상황이 돼 버렸다. 이 정부는 북한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고 발표했지만 주류는 이렇듯 강경과 압박정책은 군사적 선택과 유사한 것은 대단한 값이 없는데 두고 있다고 보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바에 따라 단계이 다르기까지 북한에 대해 이리 가시도록

시론

윤영관 서울대 교수·국제정치학



정부, 美와 함께 北核 저지를

세계 외교적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중요 관심도 이제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마저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 의회에서 나오고 있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도 위기에 봉착했다.

결국 미국과 북한간의 대치점으로 생긴 외교적 공백을 우리 정부가 때워 나가면서 시간을 벌고, 미국과 북한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적극적인 관화외교를 주도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려있는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남북경협 문제이다. 우선 오늘 한국에 도착하는 제임스 캐리 미 특사는 아

마도 북한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남북간에 진행되고 있는 경협사업의 중단을 요구할지 모른다. 이 점에 대해 정부는 대단히 현명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만약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경협을 중단하게 되면 남북간의 모든 대화 채널은 끊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미국에 이어 한국마저도 북한과의 외교적 영향력 행사에 차질이 단 겹되는 것을 의미한다.

2~3년 동안 포용정책을 통해 얻어 온 대북 대화 채널을 허우아침에 포기할 경우 북한문제는 98년과 마찬가지로 국난적 실력행사로 무는 방향으로 싹쓸 다가서게 될 것이다. 이는 북한 문제의 외교를 통해 삼켰다는 미국 스스로의

입장에도 반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남북경협(北南經協)이 먼저 그렸는지 모르지 않는 한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우리 정부는 북한에 특 사를 파견해 핵 문제를 남북간의 비핵 화 공조선인 6-15 정상회담의 양자적 틀 안에서 협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다자기구 차원에서는 별도로 남북 양자 차원에서 교섭을 시작하면서 이점 중에 미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조치를 확보하고, 또 북한에 대한 미국의 보상을 강경적으로 유도해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는 미국과 북한 양쪽의 제반을 살펴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국 미국과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협 중단엔 신중해야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외교적 역할 할 필요가 있는 외부적 여건은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 미국도 이라크전, 반 테러전에 북한까지 추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일본도 대북 관계 개선의 의지가 상당하고 국제여론도 우리 정부의 주도적 관화외교를 지지할 것이다.

아마도 가장 힘든 장애물은 북미 이 나라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대안주류들은 민족의 생각이 강된 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유혹을 뿌리치고 국 통통일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대한매일

美, 北에 무슨 증거 보였나

미국 국무부 제임스 캐리 차관보가 무슨 증거를 들이냈기에 북한 외무성 강석주 제1부상이 핵개발을 시인한 것일까. 또 우리 정부는 사전에 그 증거를 마춤으로부터 전달을 받았을까. 받았다면 그 시기는 언제였을까. 미 국무부가 17일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진행시키았음을 시인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을 때 열린 회견을 스치고 간 의원들이다.

핵개발을 시인한 강석주 제1부상이라면 북한의 핵개발금지조약(NPT) 탈퇴로 조성된 1991년 한반도 핵위기가 당시 미 국무부 갈무치 핵대사의 협상파트너로 국제사회에 잘 알려진 인물이다. 핵문제 잘 가지고 고 김일성 주석의 지휘 아래 '내항할 진술'을 구사해 온 북 외무성의 실세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민간장에서 만나 인사를 했더니 "반갑다."고 스스럼없이 말을 건네며 손을 내밀던 그에게서 숙련된 외교관의 면모를 읽을 수 있었다. 그런 그가 내비(對美) 협상장구인 김계관 부상이 첫날 부인한 것을 뒤엎었으니, 딱 떨어지 증거가 아니고서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北核은 우리생존과 직결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된 의혹들이 의심을 사고 흘러나오는 것은 지난 1986년 이후이다. 모두 추측과 분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다 드디어 지난날

립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밝히기에 이룬 것이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불확실한 사소한 문제가 아니어서 고개를 가우뚱했던 게 사실이다. 여세 립즈펠드 장관은 또다시 정보파트의 명가라면서 북한이 1~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거의 확실히 찬 그의 발언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나 이러한 정보에 관해 한-미간 공조가 공식적으로 이뤄진 흔적은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캐리 차관보가 강석주 제1부상에게 들이댄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정황조차도 포착되지 않는다. 외교가여는 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후 미국과 파키스탄의 관계가 급진전되면서 파키스탄이 몇해전 우라늄 농축기술 학지의 입북 사실을 확인해 줬다는니, 또 U2기 및 인공위성을 통해 입수한 핵시설 영상정보를 확보했다는니, 북한의 한 무역회사가 1999년 우라늄 농축 기술장비인 가스원심분리기 부속품을 일본회사에 주문했다가 미국에 들 쫓아 난 것이라는니, 갖가지 설들이 난 무하나 모두 추측일 뿐이다. 또 미국은 한달 가까이 보안유지에만 신경을 썼을 뻔, 북한과 회담 걸음을 우리쪽에 짐작

하게 설명한 것 같지도 않다. 캐리 차관보가 먼저 중국을 거쳐 오늘 다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이 이렇다 방문한다.

韓·美 기본정보 공유해야

현재 한·미 두나라는 철저한 공조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멕시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중인 오는 26일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하니 지켜 볼 일이지만, 공조의 기초는 현실 인식의 일치이다. 인식에 차이가 있으면 정책결정 과정에서 불협화음과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믿음이 없으면 사상누각(沙上樓閣)이다. 책임있는 자리의 고위 당국자가 '미국이 농축 우라늄과 관련된 증거를 들이 대니까, 북한이 시인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는 수준의 정보 공유가 되어서는 인식 차이를 극복할 수 없다. 우리 사회 일각의 반미 흐름도 미국의 이러한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정보 수집 경로가 알려질까봐 수집한 증거를 모두 다 공개하지 않고 또 급급 내보내 압력을 강화하는 것이 협상전략의 기초임을 의외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도 한·미 두나라는 기본적인 정보에서 정확한 사실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 그래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yangbak@kdaily.com

대한포럼

양승헌 논설위원



社說

북한 핵개발 제대로 따져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전 세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핵폐기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고 유럽연합(EU)은 김수로 사임 중단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본도 29일 재개되는 수교협상에서 수교의 전제로 북한에 핵개발 중지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북한의 핵무장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것이며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가 속속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분위기가 91년 북핵 위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으나 그때와 달리 남북한이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오늘날부터 평양에서 시작되는 남북 장관급회담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바로 그런 배경 때문이다. 미국과의 공조도 필요하지만 정부는 먼저 북한과 대면하는 기회부터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무엇보다 북한에 우리와 세계의 우려를 전하고 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야 한다. 핵개발의 정확한 실상과 의도,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장이 언급했다는 '더 강력한 무기'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추궁도 요구된다. 미국이 일단 평화적 해결 방침을 세운 것은 다행이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북한의 적절한 화답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고분고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대표단은 경우에 따라서는 피행도 불사한다는 굳은 결의로 화답에 임해야 할 것이다. 북핵 문제는 우리의 운명과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장관급 회담의 실패에 연인해 소홀히 할 일이 아니다.

·만약에 하나 정부가 어떻게 지나가려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시해도밤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정부가 유약한 대응으로 일관해 스스로 정한 원칙조차 지키지 못한 진례를 국민은 잘 기억하고 있다.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것만을 제대로 내디딜 것인지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世界日報

2002.10.19(토)

社說

단호한 결의 北측에 알려야

북한 핵문제 촉발로 우려됐던 제8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예정대로 오늘부터 평양에서 열리게 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8차회담은 북한 핵개발 문제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견인하는 의미도 함께 하고 있어 매우 중요성을 갖고 있다.

우리는 어제 본란을 통해 북한 핵개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평화적 해법을 촉구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8차 장관급회담은 무엇보다 북한 핵문제가 최대 의제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북한의 비밀 핵무기개발은 한반도 평화보장과 남북관계 개선에 최우선 해결과제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북한 핵개발에 대한 즉각적 중단과 함께 국제 핵사찰을 통한 투명성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 계획이 사실로 드러남으로써 정부의 대북정책도 전면적 재검토가 요청된다.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으로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의 한계와 허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만큼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대북지원은 중단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8차장관급 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와 기존의 남북교류협력의 연계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회담 결과에 관계없이 기존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고집은 국민의사를 무시한 독선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번 북한 핵문제를 계기로 현 정부의 인본적 지원과 원칙없는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심각한 회의론이 일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더욱 안된다. 정부가 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생산적 성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책무가 부여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 北 核문제와 장관급회담

사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인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자세가 미흡하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원칙 아래 오늘 열리는 남북 장관급회담을 비롯한 모든 접촉 계단을 통해 북한에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남북 교류 협력은 이와 연계시키지 않고 계속 병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평화적 문제 해결 원칙은 당연하다 해도 교류 협력을 인계하지 않겠다는 입장 천명은 너무 성급하다.

이는 현 상황에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북지원과 직결되는 교류와 협력을 계속할 경우 국민적 지지를 부릴 게 뻔하다. 것처럼 비현실적인 대처방침은, 그렇지 않아도 일련의 대남 유희 제스처 뒤편에서 핵무기 개발 문제 개발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뒤봉수들 맞았다'고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국민을 더욱 자극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중단까지 포함해 교류 협력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단정히 밝혔어야 옳다.

우리가 누차 지적해왔지만 이제까지 정부의 태도 자세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당당하리만큼 단호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북한의 잘못이나 사리에 맞지 않는 행태에는 이쯤 당당히 지적하고 단호하게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데 오히려 늘 북한에 끌려다니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남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합의하고도 핵무기 개발 꾸준히 개발해온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입증하지 않는가.

북한도 원전공사나 금강산 관광, 스포츠 등 비롯한 민간 교류 등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남북 협력사업이 발전적인 남북관계 확충을 위해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도록 하는 일은 이 모든 사업에 우선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지금까지 조성된 남북관계를 한순간에 뒤집어엎는 것은 물론 한반도에 대재앙을 초래해 민족 전체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폭발력을 지닌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만큼은 분명하게 정부가 북한에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즉각 핵발전계획을 폐기하고 대북 교류 협력을 중단하라는 우리 사회 일각의 주장은 무리라고 해도 앞으로 필요하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켜야 한다. 당장 남북 장관급회담부터 정부의 단호한 모습을 기대한다.

## 국민일보

2002.10.19(토)

# 朝鮮日報

2002.10.19(토)

## 社 說

### 이렇게 당하고도 '北核 낙관론'인가

북한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해 왔다고 스스로 발표한 데 대한 현 정부의 인식과 대응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가 과연 일관되게도 견인한 원칙을 갖고 있는지가 분명치 않다. 그저 '핵 개발 불용(不용)'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미·일 공조 강화'라는 수사(修辭)만 들려올 뿐이다.

현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사실을 최소한 보류 전, 핵리미특사의 방북 전에 미국으로부터 몸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공개된 지금에는 당연히 정부의 준비된 상황 인식과 대응책이 제시돼야 할 것인데도 국민들은 외교부 차관보의 실무적 설명 외에는 달리 속시원한 이야기를 듣지 못해 답답해 하고 있다.

국민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자체를 강력히 규탄하기보다는 북한의 의도를 해석하는 데 더 신경을 쓰면서 애써 사태를 낙관적으로 이해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점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의 입에서 "북측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평가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 게다가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핵개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을 때인 지난 9일에도 "우리 정부가 북한의 변화할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당하면서도 아직도 북한 정권의 '선의(善意)'를 믿는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번 사태로 현 정부의 '햇볕'이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냈음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문제 해법을 햇볕식 접근에서만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사태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미국과의 흥정거리로 삼거나 나아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한반도 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될 것이다.

현 정부가 과연 북한의 핵 개발을 지지할 단호하고 무조건 의지가 있는지의 여부는 우선 19일 열리는 남북 장관급회담에 임하는 자세에서 드러날 것이다.

## ◀ 사 설 ▶

### ‘당장 전쟁에 들어가야 한다’니

북한이 핵 개발을 시인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 지난 15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국가안보회의에서 '당장 전쟁에 들어가야 한다'는 초강경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미국의 공식 견해를 보면 대화를 통한 해결이 전쟁 불사론보다 크게 우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초강경 발언이 나왔다는 사실은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이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참석하고,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중앙정보국장 안보보좌관 등 미국 외교 안보탑의 최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자리다. 그 자리에서 전쟁 불사론이 나왔다는 게 예사롭지 않다. 시대 전전에 따라, 그리고 지금껏 미국이 보여온 군사적 일방주의를 보면 인제는 다시 튀겨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바로 제2의 한국전쟁을 의미하며, 그것은 남과 북에 상상을 초월하는 인명손실과 파괴를 가져온다. 1994년 북한 핵위기 때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인 게리 렉 장군은 한국에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남쪽의 사망자 수가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여기에는 17기의 원자로 가운데 하나만 폭격당해도 엄청난 방사능 피해가 따르기 마련이다.

미국의 일부 인사들이 이 엄청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전쟁불사를 외친다는 것은 한반도 사람들의 생명을 그들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의 세계전략을 위해 다른 나라의 희생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극도의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전쟁 불사론을 비롯하여 한반도에 또다시 대결과 위기를 부추기는 그 어떤 힘의 논리도 반대한다. 모든 문제는 마땅히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하며, 그렇게 풀지 못할 이유도 없다. 그러기 위해 북한도 대화와 협상에 적극 동참하고, 재네바 기본합의와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등을 위반한 핵 개발은 포기해야 한다.

# 중앙일보

2002.10.19(토)

## 사 설

### 북핵 對美 조율이 급하다

북핵(北核)문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서울에 다시 왔다. 북한의 핵 개발 '시인' 이후 우리 정부는 관련 부처 간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했고 국회에서 논란도 겪었다. 이미 정부는 켈리 특사 방북 직후 북측과의 대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또 문제됐던 북핵 정보는 우리 정부도 사전에 감지하고 있었다는 게 정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북핵 대응이 아직도 미온적이고 어정쩡해 보인다.

북핵 대응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미국과의 정보 공조와 대책 조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 정부 부처 간이라도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임동원 특보의 합구령으로 통일부 장관도 북핵 사실을 몰랐다면 대북정책이 바로 설 수 없다. 한편 미국에도 추가 정보, 간접적 이나마 관련 있는 정보들을 충실하게 넘겨주도록 요구해야 마땅하다. 이 정부의 한·미 정책 조율이 원만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런 만큼 미국도 정보 공유에 인색했다. 이제 한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동시에 동북아 안보에 영

향을 미칠 새로운 상황이 불거진 만큼 미국도 정보 공유에 성실성을 보여야 한다.

그 다음, 우리 정부는 현실에 맞게 손질한 대북관계의 그림을 가지고 미국과 마주 앉아야 한다. "핵과 경협·교류를 연계시키지 않고 병행 추진한다"는 입장도 원칙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핵법 논리가 훼손될까 우려해 형식적으로 대처하거나 대화와 협상만을 지나치게 앞세워선 안된다. 북한에 대해 선(先)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대응자세를 염두에 두고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끝으로, 적어도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생겨난 한·미 동맹관계의 균열을 봉합하고 우방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과정에서 우리 입지를 넓혀가기 위해 명심할 일이다. 새로운 상황에 호들갑 떨기보다 다음 정부의 과제로 넘기게 될 북핵 처리에 일관성을 남기겠다는 자세로 우방과 지속적으로 대화해야 한다.

사설

## ‘북핵’문제 분명히 제기해야

북한은 핵개발이 자금의 휴전선 지뢰제거작업이나 부산아시아게임 응원단 파견과 공존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북한은 한반도를 핵이 없는 땅으로 만들자는 수많은 약속과 순한 화해·협력의 다짐, 이를 위해 남북이 손아부는 모든 노력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는가. 핵개발을 시인하면서 어느날 갑자기 한반도에 위기를 조성한 북한에 대해 국민들이 묻고 싶은 말들이다.

마침 오늘부터 평양에서 남북 장관급회담이 열린다. 정부는 단호하게 북한에 물을 것은 묻고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 북한에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고 북한과의 대화를 주저하는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를 설득해 북·미 회담을 성사시킨 대가가 핵개발이아이어 했는지.

북한은 핵개발이 남북관계와 상관없는 대미협상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단 북·일 정상회담에서 “핵은 북·미간의 문제”라고 발언했다는 보도에서 그런 인식이 엿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과 핵보유는 곧 한반도 안보를 직접 위협하고 동북

아 안정과 평화를 뒤흔드는 교란요인이 아닐 수 없다. 북·미협상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한반도를 핵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는 무모한 발상도 문제이다.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핵카드를 버리도록 북측에 요구해야 한다.

정부는 대신 북한이 신뢰에 바탕을 두고 대외관계를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진전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예측불허의 비합리적 행동이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가져다줄지 몰라도 결국은 불신을 쌓고 관계를 악화시켜 불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을 문제삼지만, 그 원인의 적지않은 부분은 북한이 스스로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 추진한다면 대북 제재를 포함한 다각적이며 국제적인 대응책이 모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경수로 공사나 대북 경유 제공 문제 등도 근본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 정부는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존을 위해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 북한에 분명하게 진탄해야 할 것이다.

### 한국일보

2002.10.19(토)

## 社說

### 햇볕정책, 융통성 요구된다

한마디로 뒤봉수를 얻어맞은 기분이다. 북한의 핵개발 시인은 남북관계 개선을 염원하던 우리 국민에게 찬물을 끼얹었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지도자가 2년 전 평양에서 포용하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놀라운 뉴스를 세롭게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정부는 다가올 사태를 냉혹히 바라보며 대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 공개는 미국과의 일관 협상용 카드라는 등 이전인수식 해석에 너무 기대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문제해결의 중추의 역할을 할 미국은 협의자가 시인하면 그를 인정하고 대처하는 사회이다. 앞으로 미국의 핵 문제 대응은 여기서 시작된다고 보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남북 비핵화 선언, 북미 제네바 합의 및 핵화산금지 조약을 통해 핵을 안 것이므로 이미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그런데도 이를 깨고 있다. 김 대통령은 이 위약시대에 뒤조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에 우리의 배신감을 분명히 전해야 할 것이다. 햇볕정책도 북한의 구체적 긴장완화 조치를 요청하고 유도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정부가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풀겠다면 협상력을 더더욱 다듬어야 한다.

다음으로 부시정부의 의도를 잘 읽어야 한다. 미국은 지금 후세인 축출 전쟁이 급진무다. 그래서 미국은 평화적 해결을 말하고, 또 북한 핵 문제를 지역국가가 대처할 기회라고 분위기를 잡고 있다. 그렇다고 그냥 났기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큰 긴장을 예상해야 한다.

우리는 곧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차기 대통령에 지워진 집이다. 따라서 김 대통령은 주요 후보를 동시에 불러 이 위기상황을 허심탄회하게 읽어주고 협의해야 한다. 김 대통령의 생키해야 할 일은 차기 정부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다.

時論



李東勳

제임스 벨리 미국 대통령 특사의 방북을 통해 새로이 제기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그 자체가 충격적인 일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을 비밀리에 계속하는 북한의 이중성에 대한 우려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벨리 특사의 이번 방북을 통해 그 이중성이 사실로 확인된 것일 뿐이다. 그보다 충격적인 것은 이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한이한 자세이다.

‘조약’‘합의’‘선언’ 모두 팽개치

1994년 10월의 미-북 제네바 합의의 대전제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중결’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같은 대전제가 파괴되었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됐다. 북한이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핵

무기 개발을 계속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미국이 들어내자 북한은 이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한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제네바 합의는 원래 주로 북한이 핵연강속도라는 원칙과 재처리시설을 아예 합류로써 북한을 개발하는 것을 주로 다룬 것이었다. 이 때문에 제네바 합의에서 미국은 재처리 이후의 핵폐기물의 존재를 밝히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제네바 합의 이후에는 이

같은 총리가 반복했을 때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관한 국제조약과 합의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북-일 ‘평양선언’에 명시했었다.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제 북한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북한을 상대하는 모든 나라들, 그리고 국제사회 앞에 던져진 큰 의문이다. “검증 없이 는 결코 믿을 수 있는 상대”라는 대명제가 거듭 재확인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대중(金大中) 정부는 북한에

북민들은 현혹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는 사비비 논리일 뿐이다. 진정한 평화는 필요하나만 전쟁을 무릅쓰고라도 지켜내려는 의지가 있을 때 지켜진다는 것을 고급의 역사가 말해 준다. 평화도 평화 나름인 것이다. 사비비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대화급 통한 해결’도 그 정도를 지키지 않는다. 북한의 이중성이 이렇게 입증된 상황에서는 정부는 북한에 대해 보다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마땅하다.

새 北核에도 여전히 ‘햇볕’인가

합의의 하선을 이용해 합류로써 북한이 아닌 우리나라를 개발해 왔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 이로써 제네바 합의는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더구나 제네바 합의가 요구하는 IAEA 특별사찰은 그 1차적 목적에 “1994년 북한이 핵물질과 핵연료 내용에 관해 IAEA에 신고한 내용의 정확성을 규명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밝혀진 내용은 북한이 1994년에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윈 부합적인 것”임을 북한이 “시인했다”는 것이다. IAEA의 대북 특별사찰은 더 이상 ‘필요’ 그 자체가 없어진 것이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로써 북한의 ‘말’이 신뢰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이다. 한 달 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핵확산금지조약(NPT)”과 제네바 합의,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계속’ 준수하라”고 주문하는 것으로 내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조약’과 ‘합의’ 및 ‘선언’을 따지고 위헌성이나 법치하에 밝힌 마당에 위헌한 상대에게 “계속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더구나 이 정부는 북한이 “핵개발 사실을 시인한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유엔의 의사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일종의 “해명(解明)”을 앞세워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협하면서 그동안의 대북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고 있다. “북한의 일본을 반대하기 위해서 더 도와주어야 한다”는 논리로 논할 수도 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가 위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선 그럴듯한 말로

對北사업 전면중단 불사해야

정부는 북한에 대해 핵무기 개발 포기과 함께 그것을 ‘검증’할 것에 임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같은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지금 진행 중인 대북 경수로 사업, 금강산 관광 사업, 강의산-동해선 철도-도로 건설 공사, 대외 식량-비료 지원, 개성공단 건설 등 일체의 대북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결의할 표명해야 한다. 물론 대화는 계속해야 한다. 진정한 회담을 계속 열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계속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정부가 말하는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이 된다. 북한이 이에 반발한다면 그것은 북한이 ‘대화를 통한 해결’ 의향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 될 것이다.

/영지대 초경수

※본문(本報)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매일

2002.10.19(토)

시론



金泰宇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인한 것이나 미국이 이런 사실을 전세계에 폭로(?)한 것은 결코 예상외의 아니다. 그래서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부시 대통령이 친밀한 미국의 선한 보살핌이 내려질수록 핵무기 개발을 상무가 개발국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감자로 하고 있다는 겁에서. 그리고 미국이 북공-이러크 등을 ‘북양국’이며 ‘테러지원체’이자 ‘핵개발국’으로 지목하고 엄제적 압박을 가해 왔다는 겁에서 이번 사태는 감심지가 없다.

北미사일 문제도 도마위로

우선 미국은 이번에 북한의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대해 강압을 내걸고 말겠다는 겁에 차 있는 것 같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이 대량생산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에 정면으로 상충되는 것이라는 겁을 놓을 수 있어 감조해왔다. 이와 함께 파키스탄의

미사일과 핵핵 사이의 커넥션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해 왔다. 파키스탄이 실험발사한 가우라 미사일(사거리 1500km)이 북한의 로동미사일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밝혀진

공은 이제 北韓으로

후 북한이 파키스탄에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우리나라 농속 기술과 시설을 받았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지 않았던가. 파키스탄은 고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하는 핵폭탄을 만들어 1998년 핵실험에 성공한 경우이며,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플루토늄을 원료로 하는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붐로가 붐과인 상대였다.

그래서 북한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시도한다면 우리나라 쪽이 원공산이 있다는 지적은 있었을 것이다. 북한의 우라늄탄 프로그램은 핵확산 문

제를 아니라 미사일 확산과 관련해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공산이 크며, 북한이 거세게 저항할 경우 한반도에는 핵과 미사일 위기가 한꺼번에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물론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했다는 사실은 다른 해석을 가능케 한다. 즉 미국과의 일괄타협을 희망하기 때문에 순순히 자백(?)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일본과의 수교협상을 위해 일본인 납치를 시인한 것과 비슷한 맥락일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이 선제공격 개발을 도입하고 핵태세검토사(NTR)에서 필요하면 선제 핵공격도 가할 수 있다고 친밀한 만큼 강력해지고 있

공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엄청난 파장을 세울하면서도 뒷전에서 가늠할 상상무기나 만드는 북한에 대해 언제까지나 북분 체해야 하는가. 한미공조 문제가 간단치 않다.

美 대외 군사전략 의식한듯

미국이 핵분해할 공개하고 나선 것에는 그것 말고도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 대해서는 실을 바늘 허리에 매는 식으로 대북 수교를 서두르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일 수 있지. 한국에는 보다 현실적인 대북 인식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을 수도 있다. 남한의 대선이 임박한 시기에 한박웃음을 치으면서 다가오는 북한의 정치적 속내에 대해 일침을 가하는 의미도 남긴 것은지 보인다.

어쨌든 공은 보내서 북한 코트로 넘어갔다. 사회주의 경제체제 유지와 자본주의적 경제개혁의 갈림길에서 분부림처운 북한, 대량살상무기 포기과 반대급부물 지출할해은 북한, 정권 유지의 위한 직렬한 수준의 긴장 유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대남 회어 사이에서 고심해은 북한이지만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든 결단을 내리야 한다.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본문 기고·취입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사설

### 北核과 경협 공존 안된다

북한의 농축 우라늄 핵문제가 새로 제기되면서 우리는 북한의 이중성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북한이 '민족은 하나' '6·15 공동선언의 정신 이행'을 줄곧 강조하면서 핵폭탄을 개발해 왔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다. 핵개발 목적이 실령 대미(對美)협상의 지렛대용이라는 선의의 해석이 맞는다 하더라도 결국 남쪽을 핵위협을 불모로 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더구나 북의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위해 우리가 갖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시기에 북은 우리의 등에 꽃을 비수(匕首)를 준비했다.

북한의 핵개발 추진에 대한 사과와 포기라는 길잡이 없는 한 대북 지원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우리의 안위가 걸린 핵문제의 해결 없이 경협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남북 장관급 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출발하면서 "핵문제를 풀면서 화해·협력은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핵문제와 경협은 공존할 수 없는 상극관계다. 더욱이 북이 핵개발을 자인한 시점에서 그 실효를 따지고 사과를 받아 내야 할 자리에 참석하는 주무장관이 핵문제와 경협은 별개라는 원칙까지 표명하고 간다면 따질 것도, 사과를 받아낼 생각도 없다는 속셈을 다 드러낸 꼴이다. 안보와 햇볕이 번개이듯 핵과 경협은 도저히 연계될 수 없는 상극이다. 이 상극을 동시에 끌고가겠다는 발상은 핵문제에 대한 이 정부의 너무나 안일한 대응을 뜻하는 것이다.

북핵 문제에 관한 한 그나마 우리가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경제지원이다. 경제지원은 대북 협상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게 됐다. 그 유일한 수단을 회담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이런 식의 대북 자세로 어떻게 북핵을 우리의 입장에서 풀이할 수 있겠는가. 회담과 대화 창구는 열어 놓되 "북핵이 있는 한 경협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천명을 대통령이 나서서 해야 한다.

# 朝鮮日報

## 社說

### '제네바 파기' 代價 치르게 해야

어제 8주년을 맞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97년 제네바 핵 합의는 현재 사실상 파기된 상태다. 지난 8년간 북한 핵문제는 물론 미·북관계를 규율해온 제네바 합의가 파산 상태에 이른 책임은 두말할 나위 없이 북한에 있다.

북한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꾀해 온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사실상 합의의 틀이 무너지버린 것이다. 할인 파월 미국 국무장관이 "제네바 합의가 파기됐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아직 한·미 정부는 물론 북한도 제네바 합의의 파기를 공식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제네바 합의 파기의 순서와 방법, 그리고 그 이후(以後)의 상황에 대한 전략을 고민할 때다.

이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 파기의 책임이 북측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라는 합의의 근본을 위반한 책임을 입증하 분야야 하는 것이다. 북한이 비밀 핵개발

활동 및 합의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그 전모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관련 핵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일각에서 벌써부터 '북한 비밀 핵개발과 미·북관계' 등을 한데 묶은 일괄협상을 주장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는 북한이 갈 곳을 지지르고도, 돌아갈 때는 빌(罰) 대신 상(賞)을 갖고 가는 약속을 되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네바 합의를 대체할 '새로운 틀'은 그 다음 단계에서 타워된 문제다. 제네바 합의는 북한의 합의 준수 여부를 검증할 장치가 없다는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었고,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미래로 미루버린 안이한 협상이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제네바 이후 체제'는 이 같은 치명적 결함들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그러나 지금 단계는 북한이 비밀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 한·미·일 등의 외교력을 집중할 때다.

社說

北核, 한-미 시각차 심각하다

최근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식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비치고 있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긴밀한 한미(韓美) 공조를 통해 확보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두 나라간에 확인한 시각차가 존재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북-미(北-美) 제네바 기본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단호하다. 지난 주말에 방한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도 "북한과의 협상이 시작되려면 북한이 먼저 핵개발 프로그램을 청산해야 한다"고申明했다. 1994년 이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원칙이 되어온 제네바 기본합의를 북한이 먼저 위반했고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보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이 같은 내용은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기이하게 이거실

정도로 너무도 차분한 모습이다.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 시인 사상을 '북한이 대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부터가 미국 입장과는 천양지차다. 이 같은 인식차가 당면한 핵위기를 다개하는 방법론상의 차이로 이어진까 걱정스럽다.

정부는 또 북한의 새로운 핵개발 계획을 8월에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이를 감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앞에서는 남쪽의 따뜻한 '햇볕'을 받으면서 뒤에서는 비밀리에 핵개발을 도모해온 북한에 대해 우리 정부가 꾸짖기보다 이해하고 동정하려고 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

물론 이 시점에서 정부와 북한과 대화를 갖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대화'는 북한에 대해 핵무기 포기를 촉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북한의 위협에 제대로 대처하면서 한미간의 대북 시각차를 좁혀가는 길이다. 아울러 북한도 이제 남측이 제공하던 온정주의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현실인식을 가질 때가 됐다.

社說

'核공조'나 '햇볕'이나 선택해야

북한의 비밀핵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지금 김대중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이 현 정부를 최소한이나마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출발은 대북 핵포기 압박을 높이고 있는 미국 주도의 국제공조와 기왕의 대북사업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대북 핵 국제공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김 대통령 스스로가 이제 남북관계에서 역사적 업적을 남기겠다는 집착과 망상(妄想)을 포기하고, 당장 현실로 닥친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 안보위기로 번지기 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국민과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한다.

이미 미국 정부는 북한과 맺은 94년 제네바 핵합의 파기를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고, 서울에 온 켈리 차관보 역시 "동맹국과 우방들이 대북관계에서 핵문제를 다루주길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핵'과 '경제지원'을 연계하라는 요구다. 그런데 정작 최대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한국정부는 북한 핵문제와는

별개로 기존의 대북 경의선 물자 제공이나 비료지원 등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비밀 핵프로그램이 공개됨으로써 현 정권의 대북정책은 사실상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그 뿌리부터 위협하는 북한 핵문제가 등장한 이상 다른 분야의 남북관계라는 것도 당분간 별 의미가 없어진 상태다.

그런데도 기존의 대북사업에 집착하는 현 정부의 태도는 대체 무엇인가. 대북지원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무슨 사연이라도 정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적 우려나 분노, 국제공조 등은 아랑곳하지 않는 현정부의 아집 때문인지 단답할 뿐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 방법이 성공을 거두려면 그야말로 똘똘 뭉친 공조와, 이를 통한 대북안락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국제공조를 주도해야 할 한국정부가 '판전'을 부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 핵문제는 바로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대사안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사설

### 北核 앞에 정파 없다

북한 핵문제는 정파의 입장을 뛰어 넘어 공동 대응해야 하는 긴급 과제다. 정부와 정계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 사태를 정리하는 한편 확고한 국론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불안감도 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실 때문에 아직껏 회담을 확정짓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과 다수 야당 대표차 간의 진지한 논의를 위해 단독회담을 요구한 점은 수긍이 간다. 대선을 두달도 안남긴 민감한 시기에 아직 정당 모양새도 안갖춘 후보들과 한자리에 앉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청와대가 상대와 의견 조율 중 미리 6자회담 운운한 것 또한 신중치 못한 처사다. 그러나李후보 측도 사태의 중차대함을 감안해 형식에 지나치게 구애받지 않아야 한다.

지금 자리 모양새나 따질 만큼 한가한 때가 아니다. 민족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다. 또 핵문제란 단기간에 끝난 사안이 아니다. 평화적 해결을 위해선 시간과 전략

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대선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핵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단호한 입장 천명을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특히 金대통령의 정확한 상황 설명이 있어야 한다. 정책 오관이나 대응 과실이 있었다면 은폐하고 변명할 게 아니라 진솔하게 사과하는 동시에 극복방안을 더뎌 강구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이미 8월 중 북핵 진상을 알면서도 쉬쉬하며 헛법정책을 기조로 한 대북 전략에 연연했던 배경 등은 우선적으로 밝히야 할 부분이다. 헛법정책 의미 퇴색을 우려해 또 다른 은폐와 왜곡을 궁리한다면 헛법정책 전체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모두가 대선을 의식한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허심탄회하게 논의에 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견제불안 해소를 위한 초당적 협력과 공정선거를 위한 합의도가 높을 수 있다. 국익과 국가 장래를 최우선하는 게 자신의 이익과 장래와 합치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국민일보

2002.10.21(월)

## 사설

### 北核, 국민적 합의 필요하다

북한의 핵 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관련 당사국 간에 긴박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의 핵 개발 시인과 관련, 북측이 국제 사회와 맺은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국가 및 국제 사회와 적극 대화하고 남북한 만한 조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앞서 서울을 방문한 제임스 캐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와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핵 개발 포기를 위해 한·미·일 3국을 포함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개국은 오는 26일 멕시코에서 열리는 정상 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은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등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적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내적인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들 간의 회담개최에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와 관련,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후보 및 김몽준 이현동 의원측과 접촉한 결과 면담 방법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며 "면담

방법은 대체로 함께 만나는 방향으로 합의될 것 같다"고 말해 6자회담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박대변인은 또 회담 일자는 23일쯤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6자회담방식에 대해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을 요구했던 한나라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회담 방식이 어떻게 결론내려질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갖는 시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회담 방식에 연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 보인다.

북핵 문제에 대한 대처 방식을 놓고 현재 국내에서는 상당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기존의 남북 교류를 지속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데 반해 한나라당은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경수로 사업과 금강산 관광 중단을 포함한 대북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정치지도자들이 강력한 입장을 떠나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찾아내는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는 북핵 문제뿐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불안한 경우를 보이고 있는 경제문제, 대통령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르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통해 초당적 협력 방안을 이끌어 내기를 당부한다.

사설

## ‘북핵’문제 냉정한 대처를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위기가 절정에 이를 때까지 좀처럼 타협하지 않는 북한과 위협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고 천명한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 간 ‘위험한 대립’을 불러올 수 있는 폭발성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북·미간에는 위기를 관리할 대화채널도 없다. 그러나 모든 조건이 1993~94년처럼 나쁜 상황은 아니다. 핵개발이 계획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데다 현재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 장관급회담처럼 남북 간, 북·일 간 핵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할 장이 열려 있다. 재일조선인총연합 기관지 조선신보가 어제 북핵 개발 시인을 ‘대결청산의 새로운 시작’으로 삼자고 주장한 데서 감지되듯 북한도 대결을 원치 않는 분위기가.

실부턴 나쁜통에 안주하는 것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비판적으로만 볼 필요도 없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국들이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문제 해결의 길은 열려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관련 당사국들은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냉정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주목되는 것은 부시 행정부 내에서 북한 반응이 나오기에 앞서 경수로 건설과 대북 중유제공 중단 등 감경과 의 목소리가 미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부시 행정부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번 사태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결정적이다. 미국이 행동에 앞서 신중한 자세를 보여야 할 이유다.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한국의 해결방안을 지원하고, 한국과 함께 발을 맞춰 대응해나간다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이 직접 대북 교섭을 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면 굳이 피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한·미·일 3국뿐 아니라, 중국 및 최근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러시아도 적극 나서야 한다. 북한에 대한 입장과 관심이 각각 다르겠지만, 이번 만큼은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 북한이 핵포기 외에 대안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 대한매일

2002.10.21(월)

사설

## 남북 교류협력은 지속해야

20일 평양에서 열린 제8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남측은 최근 불거진 북한의 비밀 핵개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듣기만 했으며, 21일 2차 회의에서 어떤 반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우리는 이미 핵 개발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북한은 제네바 핵 합의는 물론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할 바 있다. 북한이 시인한 핵 개발 프로그램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중단,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북측은 남북 간에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실천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남측에 대해 분명한 핵 개발 포기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측은 말로만 핵 포기를 선언할 것이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로부터 확실한 검증을 받았다는 실천 약속까지 뒷받쳐야 한다.

뉴욕 타임스 등에 따르면 부시 미국 행정부는 1994년 북한과 체결한 제네바 핵 기본 협의를 파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19일 반한했던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한재로서는’ 제네바 합의의 무효화를 결

정하지 않았다는 언급과는 다소 배치되나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우리는 여기서 제네바 핵 합의가 비록 북·미 간에 이뤄진 협정이기는 하나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의 주력 추진체가 한국인 만큼 한·미 양국의 사전 협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아울러 일본 등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회원국간의 충분한 사전 협의도 거쳐야 할 것이다.

남북간 교류 협력은 북한의 핵개발 시인 파문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할지 모른다. 하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핵 개발 중지와 국제 사찰에 즉각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산가족 상봉, 철도·도로의 연결 등 남북간에 합의된 기존의 교류협력 사업을 당장 중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대북 쌀, 비료 지원 등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북한의 태도에 따라 핵 포기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대북 경제제재 조치 등이 국제적으로 논의될 수도 있겠으나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정부가 대북 선동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社 說

‘청와대 회담’은 열려야 한다

북한 핵문제는 결코 정쟁(政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중대한 현안이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과 대선후보들이 북핵문제를 비롯한 대북정책 전반과 경제 등 국가현안을 놓고 초당적 논의를 하기 위해 회담을 갖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회담형식을 놓고 장과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유감이다. 청와대측은 김 대통령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민주당 노무현 후보, 국민통합 21의 정몽준 의원, 이한동 의원, 민노당 권영길 후보 등과 ‘6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다자회담은 의미가 없다”며 부정적이다. ‘6자회담’을 통해 모양 갖추기에만 신경을 쓰는 청와대나 ‘단독 회담’만을 고집하는 한나라당이나 잘한 일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회담참석범위를

너무 확대하는 것은 무리다. 이 후보뿐 아니라 주요 대선후보들도 반대할 것이다. 그렇다고 후보별로 번갈아가며 단독회담을 갖는 것도 김 대통령의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현 대선구도의 3파전을 형성하고 있는 이·노·정 후보들, 합력 회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핵문제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만큼은 대선과 연관지어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선 안된다. 형식은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4자회담이든 5자회담이든, 아니면 단독회담이든 성사되어야 한다. 청와대와 각당 대선후보측이 좀더 실현가능한 방안을 찾기 바란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체면과 형식에 얽매었다면 호된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제네바 핵합의 파기라니

미국이 1994년 체결된 북-미 제네바핵합의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욕타임스신문 보도는 매우 충격적이다. 한국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하지만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미국의 대북 핵문제 대응전략이 강경기조로 선화하면 햇볕정책과 북-일교섭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부시 행정부의 제네바핵합의 파기결정이 사실이라면 한국과 일본 등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대북강수로 사업이 중단되고 강수로 완공 때까지 매년 50만 t 씩 지원되는 중유공급도 끊기게 된다. 미국은 북한이 제네바핵합의 파기를 이유로 양민핵시설에 보관된 핵물질을 꺼내려 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 계획이라고 한다. 참으로 우려되는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이 핵개발계획을 동결하는 대신 지방

측이 북한의 대체에너지개발을 지원키로 한 제네바핵합의는 한반도의 전쟁방지를 위한 장치다. 북한의 속셈이 무엇이든 핵개발계획 시인으로 이 안전장치가 쓸모없게 될 위기를 맞은 것은 유감천만이다. 북한은 이제 핵개발을 놓고 미국과 흥정을 벌일 처지가 못된다. 신속한 핵개발 포기선언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북한의 핵개발 시인 이후에도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강조해온 부시 행정부가 일반적으로 제네바핵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 사뭇 다르다. 정부는 한-미-일 3국정상회담에서 제네바핵합의 지속과 한반도 위기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무모한 퍼주기’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며 갖가지 대북지원을 하고도 정작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 사설

### 북한 핵, 포괄적 해결 시도해야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한 뒤 미국은 우선 외교적 압력을 모두 동원하여 북한의 핵개발을 지지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제임스 캐리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지난주말 한국을 방문하여 이런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 핵개발 지지 움직임에서 한가지 결정적인 결함을 보게 된다. 그것은 '핵문제'에만 초점을 맞춰 문제를 풀려는 단선적인 접근방식이다. 1990년대 초에 발생한 북한 핵위기 때도 그랬지만 북한 핵문제는 단순히 핵이라는 측면에서만 풀 수 없는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크게 연세에 있는 북한이 안보위협과 미국의 대북 고압·봉쇄에 맞서는 거의 유일한 선택이라고 여기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물론 핵개발이라는 북한의 선택은 제네바 기본합의와 남북 비핵화공동선언 등의 명백한 위반이며 북한은 이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접근방식이 바

뀌어야 한다. 특히 조지 부시 행정부 출범 뒤 보여온 군사적 압박주의 등 합외 외교는 북한 정권에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핵문제를 비롯한 '북한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있어야 한다. 핵 문제만 따로 떼어서 해결할 수 없다. 평화협정과 신뢰구축, 군축 등을 통한 안보문제 해결, 대북 경제제재와 테러국 지정 해제 등을 통한 경제협력과 국교 정상화 등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구실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런데도 국내 수구언론과 보수 정치인들이 무조건 햇볕정책 때리기에 나서면서 대북 강경론을 주문하는 것은 무책임하기 그 지없는 행태다. 미국 정부도 일방적인 압력행사 과정에서, 그리고 일부 강경파 인사들의 '전쟁불사' 언급으로 한반도에 또다시 위기가 높아질 경우 한국 내 반미감정이 위험수준으로 폭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한국일보

## 社說

### 북핵, 빠른 초정파적 대응을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과 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만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만남의 형식과 회동 건과가 가지울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 국민에 대한 의무다. 국민들은 갑자기 들려져 나온 북한의 핵개발 계획 때문에 불안해 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치권이 정확한 정보도 없이 한부로 쏟아내는 이진인수거 발언도 일조를 하고 있다.

우리는 김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24일 이전에 이 같은 회동이 이뤄지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김 대통령이 귀국해서 APEC에서의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재 회동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같은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유해 불필요한 논쟁을 막아야 한다. 그러자면 머리를 자주 맞대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김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이 맞닥뜨려야 할 중요

한 중 하나인 북한 핵문제에 대해 후보들과 상의해야 한다. 후보들에게 정무기 파악한 북한 핵개발 계획의 정확한 실상을 설명한 뒤, 대북 정책에 대한 조언을 구해야 한다. 후보들은 자신이 집권한다는 전제 아래,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6·15 남북 정상회담 후 정치권의 대화 부족으로 인한 남남갈등의 확대 재생산 과정을 지켜보았다. 남북문제 해결에 국민적 인제감 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실감했다. 또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 초기 북한의 기습적인 핵화산금지조약(NPT) 탈퇴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해 조성된 안보 위기상황도 체험한 바 있다. 김 대통령은 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고, 후보진영과 정치권도 남북문제만큼은 초정파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기분을 지켜야 할 것이다.

김경원 칼럼



북한에 대해 최근 많은 사람들이 '속지나' 했지만 '익시나'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햇볕 정책'이라는 북한에 대한 일종의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우리가 선의로 대해주면 북한은 반드시 회개와 개방의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믿고 지난 몇년 동안 북한 돕기 노력에 모든 열정을 기울여 왔는데 북한은 이들 북한을 돕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헐리 특사에게,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 사업을 계속해 왔다고 호고하다시피 했다.

진실적 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다이빙은 진보였다. 미국이 이라크 문제로 북한에 대해 어떤 강경한 제재도 취하지 한들 순간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김정일이 최근에 보여준 개방을 지지하는 듯한 제스처의 효과가 아직 사라지기 전에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시인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반응을 완화시키려고 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한가지 분명하지 않은 점은 북한이 자신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시인한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런 지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하더라도 확증은 없다. 그런데 북한을 제외한 모든 다른 나라들은 "평화적인 해결"을 말하고 있다. 어느 정도 북한이 핵탄탄 이인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 반응 약화 의도

미국이 '평화적 해결'을 말하는 것은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현실적인 옵션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평화적 해결을 말하는 것은 다분히 레토릭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일본은 다른 어떤 옵션도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의도적이긴 아니긴 한반도의 지정학적 균형 문제에 깊숙하게 개재해 있다.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중국이 그만큼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와 평화를 동시에 성취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셈

이다. 정책은 희망만으로는 안된다. 바람을 현실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이다. 평화적 해결은 전쟁이라는 정책수단을 적용하지 않고도 핵무기 확산 방지라는 목표를 현실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정책 수단으로서 전쟁과 평화 중 서로 배타적인 대안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전쟁은 정치 외교적 수단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평화적 수단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는 외교적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군사적 수단의 동원 가능성이 협상의 과정과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평화적 해결을 부르짖는다 해도 군사적 수단의 동원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평화적 해결의 이중적 의미는 우선 북한이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지금 미국이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고 해서 전쟁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평화적 해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군사적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에 없는 시대가 벌어지게 된다. 이 점은 우리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너무 쉽게 평화를 말하는 경향이 있다. 냉정하게 한 번 하고 항구한 평화가 보장되는 것처럼 떠돌고 맹진 사교만 안하면 모든 갈등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큰소리치곤 한다.

타결 안되면 군사수단 불리

평화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복잡인 이해관계와 불확실한 합의 균형 사이에 비교적 안정된 방식식을 찾아내야 한다. 특히 이번에는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무시하고 세계를 속여온 사실 때문에 앞으로 어떤 합의점에 도달한다 해도 확인 체제에 대한 작업이 엄청나게 어려울 것이다. 다만 93~94년에 비하면 북한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크게 증대됐기 때문에 한·미·일, 그리고 중국·유럽이 공동보조만 유지한다면 북한도 핵무기의 비확산 체제를 위협했을 때 치러야 하는 대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대실업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사회과학원 원장·고려대 석좌교수

경향신문

데스크 칼럼



김철웅 국제부장

북핵위기와 이라크

북한이 비핵 해결 프로그램의 존재를 미국에 시인함으로써 한반도 위기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를 계기로 1994년의 북한 핵위기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어떤 면에서 2002년 한반도 위기의 수위는 8년 전의 그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도 있다. 94년의 북핵 위기는 북한이 핵개발을 하리란다는 의혹 차원에서 출발, 결국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임박직전까지 갔다. 북한은 미국과 역사상 좁디좁게 한 번 의논한 93년 3월 핵 확산금지조약(NPT)을 전격 합의했고, 94년 3월 19일 특사교섭을 위한 관공침 남침상무자 회의에서 북핵 백영수 단장은 '서울 봄바다 발언'을 터뜨렸다.

북한의 사찰기부도 속박된 핵의혹과 휴전선 긴장 고조 등으로 판타지는 본격 군사작전 준비에 나섰다. 페트리엇 미사일이 4월 중순 부산에 도착했고, 남은 교포와 협기실 신애 여과처 협기부대가 대대적으로 집단 리더 시스템과 단원이 보강됐다. 비밀리에 지상군 병력 약 1,000명이 증강됐다. 6급 재입스레이

니 주한 미국대사는 가족을 미국으로 귀국시켰다. 클린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패리 국방장관 등으로부터 한반도 전쟁 발발시 최초 90일 동안 미군 5만2천명과 한국군 49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북한에서도 막대한 희생자가 나올 것이란 보고를 받았다. 전비는 6백10억달러로 추산됐다. 취임한 지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클린턴 행정부에 이같은 비극적 상황은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다. 결국 94년 핵위기는 그해 6월 커다란 대통령의 방북 중재 노력 등에 힘입어 10월 제네바 기본합의로 종식됐다.

당시 이런 상황들은 한국정부가 사실상 배제한 가운데 진행됐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 존 오버도퍼의 책과 전직 대공원의 '무용담' 등을 통해 몇 년 후야 알려졌다. 한국인들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새로운 북핵 파문은 북한이 '자기 없으로' 그 존재를 시인함으로써 비롯됐다. 더욱 상황이 나쁜 것은 94년 핵위기는 온건한 클린턴 행정부 때였지만 이번에는 어느때보다 호전적인 부시 공화정권 앞의

상황인 사실이다. 그러나 그 때와 비교해 긍정적인 요소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이번 파문의 해결에 한국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 및 일본·중국·러시아 등과의 공조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마련돼 있다는 점이다. 이들 주변국은 사태를 주시하며 북한과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에서는 94년 봄바다 발언 당시 일부계층의 사재기와 같은 혼란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굳건한 햇볕정책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거세지지는 했지만 전례처럼 국외의 히스테리 상대까지 오지는 않은 것 같다.

미국이 사태의 평화적 해결로 가닥을 잡은 것 또한 주목된다. 부시 행정부가 9·11 테러를 기점으로 드러내는 호전성에 비추어 북한의 '북한무비' 상 고백 앞에서 처음부터 군사적 해결 가능성을 배제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마감시한은 없다"고 밝힌 것은 다소 의외다.

물론 미국의 평화적 해결방안은 이라크 등 2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기 합당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다. 미국은 이라크와 북한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라크 다음을 북한으로 보는 사람도 많다. 구체적으로 보수적인 월 스트리트 자본 같은 신문은 앞으로 6개월 내지 1년 정도면 사담 후세인이 권좌에서 사라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정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명연에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이 말하는 대 북한 평화노선은 어디까지나 '세계전략 운용의 우선순위에 따른 것으로 후세인 손보기가 끝난 후 북한도 마찬가지로 문명이 되지 말란 보장이 없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라크 침공을 위한 정치작업을 착착 진행하면서 이라크에 수항하기 힘든 조건을 내걸고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에도 역시 선 핵개발 폐기, 후 협상을 고집한다. 이 강자의 논리로 가득찬 미국이 언제 태도를 돌변해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불고 읊지 않 수 없다. 북한의 핵개발은 막아야 한다. 동시에 미국의 진공공작들이 한반도 평화의 중요 위협해려 임을 알아야 한다.

북한 핵개발과 평화 공존

열린세상

홍순영 전 외교부장관



이데올로기가 다른 두 국가간의 평화공존이 얼마나 힘든 과제인가를 이번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시인으로 거듭 확인하게 된다. 북한은 절망도움이 아니고 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제조하겠다는 핵개발 계획을 시인하였으나 제네바합의나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도 불구하고 핵 야심을 버린 일이 없다는 '고백'이 된다. 참으로 우리를 숙연하게 하는 고백이다.

북한은 남북간의 공존 그리고 "우리끼리 민족주의"를 외치면서 사상은 핵위협 그리고 미국을 상대로 한 용기를 끊임없이 입두에 두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북한은 평화공존을 남북간의 진정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인가. 개혁·개방에 시오는 위함요인들을 역내적으로 막으려 한 것인가.

핵능력 측정도구 될 수 없어

북한은 평화공존, 개방과 개혁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면서도 그 방법과 속도도 관한 확신과 청사진이 없이 주저하면서 움직여 왔다. 우리의 핵발전책에 초조하며 교섭의 협력이 분야별로 시작되었고 김정일 위원장이 외부 인사들을 더 자주 만나고 북한 전체가 외부 세계에 더 노출되고 있었다. 그러나 평양은 이러한 노출을 불안해 한 듯 보여진다.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아직도 주체사상, 정통사회주의 선군정치 등의 기본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들과 시장경제원칙의 수용을 어떻게 결합 맞추는가를 두고 아직도 고

민하고 있는 듯 보인다. 북한은 개혁·개방, 간단히 말하여 시장경제의 원칙을 전국가각 차원에서 수용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이것이, 대내적으로 경제발전의 길이이고 대외적으로 평화공존을 과시하기 위한 길이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 진정한 개혁은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법이다. 이것을 속임수 없이 하여야 한다. 러시아와 중국의 선례를 심도있게 연구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은 세상이 변전시대와는 달리 공존의 시대로 그리고 정보화의 시대, 세계경제화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음을 체득하여야 한다.

중국이 공산주의 동지국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은 시장경제 공동체의 큰 바다 속에 떠있는 외로운 계획경제국가가 되어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 북한을 또한 핵논쟁을 흥정의 도구로 삼을 수 없으며 이것을 도구로 하여 바탕장 건설을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대량파괴무기 미확산 그리고 대테러전쟁은 세계 공동체의 규범이 되고 있다. 북한의 핵 능력을 중국도 러시아도 변호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를 배격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 오늘날 세계에서 혼자 살 수 있는 나라, 완전한 주체사상은 실 자리가 없음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

나는 북한이 핵 야심을 포기하고 모든 핵 관련 시설을 해체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사찰 수용을 선언할 것임을 기대한다. 남아공이 일찍이 핵 능력을 스스로 해체한 선례가 있다. 북한은 지역공동체 나아가서 세계공동체와 상대하여 도발하고 생존할 능력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핵야심 포기 남아공 배워야

이미 공약하고 일부 시작한 평화공존의 약속에 충실하여야 한다. 평화공존 약속을 공동적으로 공식적으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 평화공존은 상호경계하며 경계하면서 있는 것이지만 그 근저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으므로 가능한 것이다. 북한은 이번의 핵개발 프로그램 시인으로 평화공존의 근저를 흔들 것이다. 북한에 대한 최대의 고백은 "만일 수 없는 나라", "예측할 수 없는 나라"라는 호칭임을 북한이 알아야 한다.

평화공존은 전쟁이 있기까지는 우리의 대북정책의 근간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평화는 소중한 것이며 전쟁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러한 평화공존의 이성과 목표가 이용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길에서 북한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북한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서나 세계경제 변화에서나 세상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평양의 길이 있는 고인, 그리고 입을 대다 보는 큰 경향이 있기때문에 평화의 이름으로 기대한다.

시론

'1994년'과 다른 이유

金正日 '통근 양보-결단'해야

부시정부에게 이번 북한의 핵개발 시인은 외교적 위기가자 외교적 성과가 될 것이다. 대테러전의 연장선이 이라크-인도네시아-북한으로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우선 과제가 늘어났으며, 이라크전에 대한 집중력이 다소 분산된다는 '사실이 위기가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적 합의를 깨고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시인한 것은 부시의 약의 측 규정과 중세적인 외교노선의 정당성을 입증해 준다는 점에서 외교적 성과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이번 사태를 우선 외교채널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로 천명했다. 한-미-일 공조는 물론 중-러-영-불 등 핵보유강국들과 우선 협의를 해나갔다는 것이다. 이는 이라크전에 집중하기 위한 시간범기 성격이 짙다. 그 이후에는 보다 엄중한 상황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미국정부가 제네바합의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도 있

다. 한편 과거 93~94년 당시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우방국으로서보다는 핵무기보유국의 편에 서서 행동했다. 미국의 입장에 동조했던 것이다. 이미 EU도 북한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본과의 수교회담도 북핵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조건만 중지될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야심적으로 추진하는 신의주 경제특구를 비롯한 경제재건 조치들도 좌절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또한 그 효력을 잃고 남북관계는 차갑게 식어갈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외교적 실책이 해소될, 같은 오직 '통근 양보와 결단'뿐이다. 그것만이 다시금 꺼져갈 남북관계에 실낱 같은 희망을 줄 것이다. /한양대학교수·북한학

○한편 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에 다시 깊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북한이 스스로 1994년 제네바합의 이후에도 우라늄농축을 통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시인했기 때문이다. 이는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한반도 비핵화선언,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항, 그리고 특히 제네바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초래할 과정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데 있다. 1993~94년의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 보는 정부와 일부 전문가의 관측은 정확하지 못한 사태파악으로 생각된다. 본연한 차이는 당시에는 북한이 평화적인 핵연구로서 핵무기와는 무관하다고 반발했던 반면에, 이번에는 북한이 이미 핵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시인했다는 데 있다. 즉 그때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핵사찰이 우선적인 과제였던 까닭에 협상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미 시인한 후에는 협상은 불가능하다. 핵개발시실을 해체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접근방법이 없다. 19일 제차 반대한 미국의 권리 차관보도 "북한이 과거의 핵계획을 만

지 참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미 국무부도 핵무기는 절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수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다.

北 핵개발시인은 자충수

이 사실은 북한의 시인 의도가 무엇이건 간에 결과적으로 외교적 자충수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시인의도가 미국과의 협상을, 미국의 관심 전이, 대북지원 확대를 위한 도박, 부인전략에서 시인전략으로의 외교적 패턴의 전환, 대외외지의 천명 등으로 해석들을 하지만 북한에게는 지나치게 위험하고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결과를 초래할 것임이 분명하다. 결과론적으로 북한이 자발적으로 유관시실을 해체하고 IAEA의 보다 강화된 사찰을 받아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의 일방적인 굴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 스스로도 선택하기 어렵다. 설사 미국과 새로운 합의에 도달한다 해도 그것은 북한에 불리한 무조건적이며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검증조항이 포함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음을  
신설 시연장에 따라 19대선 중에 이어  
모다시 한반도에 핵위협이 조성되고  
있다. 북한이 핵개발 의지와 역량을  
공언한 것은 전례가 없는 데다가 지금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  
심각한 딜레마에 처해 있다.

北요구 협상대상 안돼

여기서 북한측 의도는 분명하다. 핵  
카드를 또다시 손에 쥘수록 경제 안전보장과  
경제적 보상을 최대한 확보해 보자는  
것이다. 이렇듯 북측의 태도는 앞으로  
사태가 전개될지는 물론 지켜봐야 하겠  
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다. 우선  
94년 당시의 북한의 핵개발이 의욕 수  
준이었는데 비해 지금은 그것이 이에  
기정사실화돼 버렸다는 문제가 심각이  
다른 점이 있고, 분위기도 대(對)이라  
크전을 앞두고 있는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호라소리 이따리 갈 상황이 아  
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도박의 실패  
여부에 따라 남북한과 미국 모두 심로  
일정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입대  
의 위기국면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실험  
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  
A) 안전협정, 그리고 제네바 핵합의문  
및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모두를 한꺼  
번에 파기한 '불관국가'의 '외의 속'입  
을 이번엔 스스로 입증했다는 사실이다.

시론

남주홍 경기대 교수·국제정치학



北에 당당히 할말 하라

지난 4년10개월 동안 김대중(金大中)  
정부는 북핵 및 미사일 문제는 미·북간  
의 한안으로서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니라  
는 태도를 취해왔고, 심지어 "북핵 문제  
는 없다"며 사실상 북핵을 언급을 두둔  
하는 듯한 언행도 서슴지 않았다. 그  
러서 핵 정보를 미국으로부터 사전에 입수  
하고도 핵이 북한의 비위를 건드림과  
노심조사였고, 이런 아예 노골적인 핵  
공방에 직면했음에도 오히려 북측의 '내  
회'만 부각시키려고 노력하는 실로  
황당한 자기 기만의 모습을 보이고 있  
다. 이 모두 햇볕정책 때문이다.

전략적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엄밀히  
분석해보면 지금 북한의 협상을 통해  
국면타개할 원하고 있다기보다는 협박

을 통해 심리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  
즉 정상적인 외교협상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를 위협함으로써 미국과 당국을 요구하  
는 고도로 위협한 심리전을 펼치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의 핵 문제가 국가안보와 최대 현안임  
을 인식하고 철저한 위기관리 차원의  
한미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남북대화과 대북교류 협력사업도 반드시  
핵 문제와 연계해 추진해야 하며 현  
재와 같은 '핵 따로'식 점진분리 대응  
방법으로는 오히려 북측의 대미협상 입  
지만 강화시켜주어 한미공조를 위태롭  
게 할 수 있다.

북한이 제네바 협의를 포기한 이

상 권수로 건설사업의 유망은 절망적  
하고 급감할만큼은 인정 중인데도 한다.  
김의실 및 동해안 연경도 원광군 상로  
우리와 김중우의 임력에 군사적 신뢰  
무축이 반영되지 않은 한 시련도 작고  
해야 한다. "그렇다면 전쟁을 하지는  
것이다"며 이 정부가 또 국민에게 겁을  
줄지 모으나 진정한 정부라면 적국 그  
김정은 북한측에 해야 한다. 만약 북  
이 남북대화에서 핵문제를 다루기를 거  
부한다면 회담의 결렬도 불가할 수 있  
어 이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정부 위기관리 능력 보여야

총합적으로 판단할 때 앞으로의 전  
망은 대단히 어둡고 불확실하다. 테러  
외의 전쟁 연장선에서 북한의 핵 위협  
에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의 비폭 외  
교적 해결이지만 견고 비탈을 시도할  
리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네바 합의  
문을 '비제의 핵복합사'라고 했던 김중  
일 북한 국방위원장 역시 체제유지와  
동일의 수단이라고 주장한 핵카드를  
계 포기할 리 만무하며, 김정일을 '중  
근 심용주의자'로 치켜세워 온 이 정부  
가 과연 대미 공조를 제대로 할 수 있을  
지도 걱정스럽다.

본격적 위기는 지금부터인데 정작  
정부의 위기관리 의지와 능력이 의심스  
러운, 그야말로 안락의 위기상황이 다  
가오고 있다. 국민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이다.

한국경제

2002.10.21(월)

시론



趙明哲

KIEP 연구위원·서경원성대 교수

북한의 핵개발계획 시인은 우리에게  
충격과 미련에 대한 불확실성을 주고  
있다. 그 동안 북한국민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생각하며 동포애를 갖  
고 불상 양면으로 지냈었던 국민이기  
에, 북한이 변할 수 있다면 기꺼이 합  
수 있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충격과 배  
신감이 더욱 크다.

대북정책 근본 흔들러

이러한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내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일흔을  
박'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만큼 적  
분자는 민족의 사활이 걸린 일이고, 대  
북정책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 내외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  
하여 전개되는 주장은 두 가지다. 하

나는 전쟁 치를 각오로 핵개발을 위해  
모든 재재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  
이다. 다른 하나는 전쟁만큼 피한다는  
견제하여 가능한 평화적 수단을 동원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금의 상황은 이 두 가지 입장이 첨  
예하게 대립되는 느낌이다. 그런데 현  
재 벌어지는 논쟁들에서 몇가지 기본  
적인 것들이 결여돼 있음을 느낀다.  
북한의 핵문제는 대단히 위험스럽고  
사급하며 끝까지 해결해야 할 사안이  
다. 따라서 우리 내부의 일치된 입장  
경리는 문제해결의 요체다.

첫째, 우리의 대북 우월성은 시장주

어다 한다. 그런데 지금 그 우월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 정당과 집단마다  
구심을 자처하고, 개인마다 자기의 성  
향에 따라 사회가 움직일 것을 강요하  
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자의  
성향이 아닌 모두의 주장과 이해가 어  
우러진 합의에 기초해 움직일 수 있는  
구심점을 잡는 것이 급선무다. 그리  
고 위기 상황인 만큼 그 구심점은 정부  
여야 한다. 정부만큼 통치권과 정보력  
및 정통성을 가진 집단이나 정당이 있  
겠는가.

셋째, 위기일수록 사회가 일치성을  
갖고 그 구심점이 정부여야 한다. 정

히 해야 한다.  
넷째, 우리 모두의 대북인식이 현실  
적 합리적 민족적이어야 한다. 우리가  
상대하는 북한은 비민주적 정권인 동  
시에 우리가 동포라고 생각하는 사람  
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

내부 일체성부터 확립

우리가 북한에 대해 다량 이양을 보  
일 수 없는 이유가 북한정권의 비민주  
성과 이종성에 있다면, 강경책을 쓸 수  
없는 이유는 피해의 대부분이 우리와  
북한 국민들이 보게 된다는 결과의 가  
혹성에 있다.

그리고 북한 국민들이 김정일 정권  
에 대해 내면적으로 반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북한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  
실은 일체성으로 보기가 '따라서 우리  
를 더욱 어렵게 한다.

누구라도 모순되는 두 측면을 최소  
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물러도, 그  
렇지 않다면 남의 의견을 신중히 들어  
주면서 각자의 논리를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  
리 국민 모두 상호 이해의 노력을 우리  
의 일체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  
한 초석이다.

이번 만큼은 우리 사회가 울려지  
고 일체성을 보이면서 북한의 핵개  
발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m.cho@kiep.go.kr

이 글의 내용은 편집의 편집방향  
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核개발 대처 단호히

의에 기반해서 일으켜 세운 튼튼한 경  
제력과 자유와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세은 제도의 장점에 있다. 또 공소연  
무집서하게 보이더라도 국가와 국민의  
공동 이익과 관련해서는 단결하는 사  
회의 일치성에 있다. 미국인들이 정당  
을 지지하는 것도 다르고 상향도 가지  
각박하지만, 일이 터지면 대통령과 정  
부를 중심으로 동치는 모습에서 우리  
는 미국의 힘을 보고 있다. 그런데 우  
리는 정말 위급한 일이 터졌는데도 모  
히려 울어지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  
가.

둘째, 사회가 움직이면 구심점이 있

부는 각 정당과 사회집단 및 각각 다른  
성향의 사람들의 입장을 수용하고 조  
화될 이루어 낼 수 있는 마음과 노력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과거의 정책과 상황에 얽매지 않  
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보수도 이합할  
수 있고 진보도 이합할 수 있는 정책 제  
시로 사회를 일치시키려는 자세를 가  
져야 한다.

그러서 모든통치자들에게는 회담의 경  
우 개개도 같은음을 인식해 하고, 강경  
론자들과는 회담이 아닌 경우 공화  
적 선택도 가능함을 이·한계 함으로  
서 사회 구심점으로의 기능을 충실

## 北核정보 왜 쉬쉬했나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 관련 첩보를 3년 전 포착하고도 이를 비밀로 부쳐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북핵 개발 첩보를 미국에 제공하고 그 후 미국과 정보 공조를 통해 북핵 개발 추진 상황을 추적해 오면서 비공개로 일관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 안보에 관한 중대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 정부가 대북문제에 대해 일체 비밀주의를 고수한다면 햇볕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정부가 당시 북핵 개발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공문화하지 않은 것은 너무 안이한 대처였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남북 화해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을 우려했는지 모르지만 안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에 관련

첩보를 제공하고 정보 협력 체제를 유지했다고 하나, 북한의 핵개발계획이 사실로 드러난 후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 미국이 지난 8월 북한의 핵개발계획을 통보할 때까지 핵문제의 중대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핵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개발 준비단계라는 설과 함께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너무 등한시해 왔다는 데 있다. 북한의 주장대로 핵문제를 북미간의 문제로 치부했다는 것은 결정적인 실패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북한의 핵 피해를 입게 될 대상은 우리 국민인데도 이를 외면함으로써 오늘날 돌이킬 수 없는 난관을 빚게 된 책임을 깨달아야 한다.

社 說

世界日報

2002.10.22(화)

## 北은 '핵포기' 분명히 밝혀라

북한 핵문제가 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남측은 8차 장관급회담을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영남(金永南)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남측 대표단에게 "미국이 적대정책을 포기하면 대화를 통해 핵우려 사항을 해소할 준비가 돼 있다"고 원론적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핵 파문 이후 북한 고위 인사의 첫 반응이라는 점에서 볼 때 매우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라고 하겠다.

북한은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핵문제 해결 방안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개발계획은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포용정책을 악용한 배신행위이기 때문이다. 북한 핵무기 개발은 7천만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평화적·비인도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북한이 핵문제를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하겠다는 반상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북한은 남북간의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을 우선 존중하고 북미 핵합의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만이 북한의 생존이 보장될 수 있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에 관한 한 원칙적이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북미 핵합의를 위반한 국제사건일 뿐만 아니라 현정부가 1998년 이후 5년 가까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북포용정책의 파국을 조성하고 있는 만큼 단호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 사설

### ‘핵합의 파기’와 국제공조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문이 채택된 지 어제로 8년을 맞았다. 정상적 상황이라면 당사자들간에 기념행사라도 가졌을 법한 날이다. 북한 핵개발로 촉발된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안정을 위한 기본적 질서로서 나름의 기능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불행하게도 당사자들이 파기를 거론할 만큼 제네바 합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이미 제네바 합의 무효화를 선언했고, 풀린 파콰 미 국무장관도 그제 합의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발언을 했다.

만약 제네바 합의가 파기된다면 북한은 핵동결 의무로부터, 한·미·일·유럽연합은 대북 경수로 공급 및 중유제공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것은 북한이 언제라도 원자로를 가동, 플루토늄을 추출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시계는 다시 폭발 직전의 8년 전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당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등으로 위기를 조장, 협상카드로 삼았고 남한 역시 1993년 ‘남바다’ 발언을 의도

적으로 공개, 여론을 자극한 바 있다.

미국은 한국과 함께 탄스피리트 훈련을 재개, 한반도를 전시 동원상태로 돌아갔다. 상대를 자극하는 이런 행동은 결국 “1994년 상반기 내내 전쟁준비로 시간을 보냈다”는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의 최근 증언처럼 일축 즉박의 상황을 조성했다. 그런데도 과거 교훈을 잊고 최근 국내 입각에서는 남북 교류·협력 전면중단을, 미국 내에서는 대북 경수로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대응조치를 취해야 할 만큼 다양한 상황은 아니다. 대화로 풀이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 어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일단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에 동의했다. 이것이 8년 전 상황과 다른 점이다. 미국은 일방적인 행동의 유혹을 버리고 한·일 등 관련국과 공동보조를 취하기 바란다. 금주말 예정된 미·중, 한·미·일 3국 정상회담, 북·일 수교협상이 그 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 중앙일보

2002.10.22(화)

## 사설

### 北의 ‘非核化 선언’ 위반 어쩔 것인가

미 정부가 북·미 기본합의의 파기를 결정했다는 보도의 진위 파악을 위해 소동을 겪었다. 하지만 일본을 방문 중인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합의 파기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미국의 최종 입장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 개발 사실을 인정하고 기본합의의 무효를 먼저 언급한 만큼 양측 합의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것이 미 정부의 생각이다. 문제는 기본합의 파기 논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세에 있다. 한마디로 지나치게 안이하다.

북핵과 관련, 미국 내 분위기가 기본합의 파기 가능성으로 번져가는 와중에 우리 쪽은 그럴 리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물론 미국은 북핵 대응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포함한 유관국들과 협의할 것이다. 또 대안없이 기본합의 파기에 따를 부담을 떠안는 상황도 피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국보다 한가로운 자세로 임한다

면 국민의 불안은 더 커질 것이다.

또 정부가 핵 문제 해결과 경협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워싱턴과 국제 사회의 강경 분위기에 둔감한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북·미 기본합의의 파기와 수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1991년 남북간에 합의한 ‘비핵화 공동선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북한의 핵 개발 시인으로 북·미 기본합의는 물론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94년 북·미 기본합의의 성사 과정에서 북한의 ‘과거 핵’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 간 비핵화 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이 훼손됐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비핵화 공동선언을 새로운 환경에서 재조명해 보는 작업은 북핵 문제 해결뿐 아니라 향후 한반도 문제 논의 과정에서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사설

위기의 제네바 합의와 대북 강경론

핵개발 동결 등 북한 핵문제를 관리해온 제네바 기본합의가 파기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은 핵개발을 스스로 시인함으로써 핵개발 동결을 약속한 기본합의를 깨뜨리게 되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연 50만의 중유제품 거부 뜻을 비치는 등 제네바 기본 합의의 파기를 공언하기에 이르렀다.

제네바 합의가 이처럼 파기 위기에 놓인 데는 북한과 미국의 책임이 두루 크다. 북한은 '핵개발 시인'으로 기본합의의 약속을 깨뜨렸으며, 부시 미국 행정부는 기본합의에서 약속한 대북 경제제재 완화와 국교 정상화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모는 등 봉쇄와 압박정책을 강화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미국내 강경파 인사들과 국내 보수 정치인들, 수구언론들의 행태는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미국내 강경파 인사들은 북한이 이라크보다 오히려 더 위험하며 군사력 사용 불사를 주장하고 있고, 국내 보수 정치인들과 수구언론들은 위기와 대결을

부추기는 감경한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

바로 이러한 강경 목소리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미국의 목소리와 영향력을 크게 확대시켜 우리 민족 문제가 미국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다. 우리는 1990년대 초 북한 핵위기 때 미국과 주도에 질질 끌려다니던 초라하고 참담한 한국 정부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에서 한국이 미국에 더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당당하게 주도적인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햇볕정책을 폐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휘몰아 오는 국내외 강경파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북한과의 적극적인 전면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의 목소리로 주장할 때 미국도 이를 무시하고 '전쟁남사관'을 쫓 수는 없을 것이다. 이산이 아닌 감정에 매달려 무모하게 대북 강경론을 외치고 있는 국내 보수 정치인들과 수구언론의 변성을 촉구한다.

社說

北核, 국제 공조 통한 대응을

북핵 사태가 초미의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름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오늘 길나는 제8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도 북한이 아직까지 핵개발 계획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무엇보다 북핵의 진심 확인을 위해 한국 미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국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북한이 어느 단계까지 핵개발을 진행시키고 새로운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방법 이후 새롭게 밝혀진 게 없어 공동 대응은 그만큼 중요하다.

미국은 핵무기 개발계획 동결을 규정한 제네바합의 위반을 들어 협상 파기조차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묶어두는 제네바합의가 없어진다면 그후 발생할 진공상태에 대해 앞날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파기 여부를 생각하기 전에 여타 다각적인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앞으로 북한이 핵개발 동결의 대가로 받고 있는 김수로 건설이나 중유 지원 등에 대해 지속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또 한 차례 북사 방북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형태로 대응하느냐 하는 점이다. 북핵 진상과외과 사후대책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데 과연 우리가 여기에 제대로 부응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민족의 생존과 직결된 핵 문제를 놓고도 정치권의 이해에 따라 각각 해석을 달리한다면 우리의 입장 집리는 자칫 때를 놓치기 쉬울 것 같다. 적어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만은 초당파적으로 힘과 지혜를 합쳐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대선 후보들과의 6자회담에서 초당적 협력방안이 나오기를 바란다.

북핵으로 인한 불안상태가 오래간다면 국민들의 임상적 불안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투자자들이 우리 경제를 외면할 수도 있는 일이다.

다행히 미국 일본 등 관련국가들도 국제공조 체제에 동의하고 있고 때마침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회담에서 정상들이 북핵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니 일단 해결의 실마리를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의 대인을 마련하는 건 너무도 시급한 과제다.

매일경제

2002.10.22(화)

社說

단순첩보는 대응 안해도 되나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맨 처음 포착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다. 국방부는 지난 18일의 비공개 국회 국방위에서 "1999년 초 북한이 농축 우라늄 생산장비 14개에서 구입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보고했다. 군 당국의 실명에 의하면 이후 국방부는 불상의 관행대로 미국측에 이 첩보를 알려줬고 미국은 이를 추적한 끝에 증거를 확인하고 지난 8월 우리 정부에 알려줬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입수한 것은 정보라고도 할 수 없는 '단순첩보'였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말은 "그렇기 때문에 방위할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북한에 대해 이래리저래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들린다. 실사 단순첩보여서 북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해도 지난 3년 동안 우리 정보기관이 한 일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보수

집을 위한 장비나 능력에서 미국이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미국측에 의존하는 것 외에 우리는 자체적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는 말인가.

소위 단순첩보가 입수됐다는 그 즈음,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와 함께 망명한 김덕홍씨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플루토늄 대신 우라늄을 이용해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군 당국이 입수한 단순첩보에다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떤 정보기관이라도 쉽게 지나칠 일은 아니었다.

결과론적으로 따진다고 억울해 할 게 아니라, 우리 정보기관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해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행정부의 햇볕정책 아래 정보기관들이 혹 정치적 선입견을 갖고 일을 한 것은 아닌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제네바 협정 파기 간주 이후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의 '제네바 협정 파기 간주' 발언은 북한 핵문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음을 말한다. 파월 장관에 앞서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도 부시 행정부의 고위소사들을 인용, 미정부가 제네바 협정 파기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아직 아무 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며 "한·미·일 등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위문적 입장을 피폭이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이미 제임스 캐리 특사에게 제네바 협정이 무효화(nullify)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이 협정의 유효성은 이래 저래 어렵게 됐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미국이 제네바 협정 파기를 주장하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기조

로 볼 때 반일의 시대에 대한 대비는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제네바 협정 파기가 가져올 가지적 조치는 미국이 북한에 제공하고 있는 연 50만분의 중유를 계속 공급할지 여부와 공사가 진행중인 한반도 에너지개발가금(KEDO)의 강수로 사업을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미국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제네바 협정 파기가 최종 결정된 게 아니어서 두 사업을 계속되는 게 좋다. 미국은 10월분 중유를 신적했으며, 내년 상반기 예산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KEDO 결장은 미국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및 유럽연합(EU)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

우리는 차제에 제네바 협의를 내채하거나 보완한 새로운 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우선 비핵화 협상이라는 모험주의를 버리고 합리적인 태도를 보아야 한다.

社說

政府 도대체 왜 이러나

북한 핵무기 문제를 다루는 현 정부의 자세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애써 사대를 축소 해석하려는 경향과 마치 북한 정권을 대변하는 듯한 언행을 보이는가 하면, 시골리 김철(金철) 지속방침을 친명했다. 게다가 한·미 간에는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북한이 강요하는 핵문제의 '민족공조'에는 단호한 거부 의사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우선 놀라운 사실은 현 정부가 북한의 비밀 핵무기 개발추진 사실을 3년 전에 포착해 관련 정보를 미국에 제공했으면서도 정작 우리 내부적으로는 아무런 대비책 마련도 없이 태연히 북한지원에 몰두해 온 점이다. 현 정부가 그토록 금강산 관광을 살려 북한 정권에 현금지원을 하려 애썼던 것도 핵개발 의혹을 알고 있을 때었으니 어안이 병빙할 뿐이다.

대북 현금지원이 군사비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현 정부는 앞장서서 이를 일축하면서 북한을 변호해 왔다.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감추는 데 남북한 정권이 공조해 왔다고 해

도 과인이 아닌 셈이다. 이제 북한의 신토로 핵무기 개발 사실이 명백해졌음에도 현 정부가 계속 대북 지원과 경협을 신실불가침으로 이기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이 지속되고, 경의선 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북한으로 넘어가고 있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현 정부가 북한의 '민족공조' 요구에 호응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현 정부는 대신 북한 핵 문제를 북한의 주장대로 미·북 간 문제로 생각하고, 오히려 미국을 신적하리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옛그제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북측 단장이 핵문제를 놓고 사과논의 "우리 민족끼리 손을 더 굳게 잡고" 운운한 것은 한국 국민을 함으로 우습게 보고 모독한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 대표들은 일각(一喝)은 고사하고, 함께 식사하고 관광을 다니니 도대체 이 정부가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社說

北核첩보 숨기고 지원했다니

심방 그리고 또 심방이다. 인제까지 이 정권의 숨기기 와 거짓말에 분노해야 하는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진 지난주 정부는 제임스 켈리 미국 대북특사의 방북 당시 북한측의 시인으로 핵 개발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교부상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올 8월부터 북한의 농축우라늄 개발을 알고 있었다고 신토해 거짓말은 하루 만에 들쭉났다. 어제 다시 본보의 보도로 정부가 이미 99년에 북한의 핵개발 첩보를 포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거짓말이 시리즈로 계속되고 있으나 정부가 더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지 모른다는 의심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요약하면 지난 3년이 동안 북한은 핵개발을 추진했고 정부는 원천치도 모른 채하며 대북 지원을 계속했다는 얘기가 된다. 북한이 핵개발을 시연했는데도 정부가 협상 가능성을 기원하며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북한의 도발과 약속위반에 대해 포용적이었던 이유,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 정권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은 배경도 짐작할 수 있다.

정부는 누가 무슨 의도로 사실 은폐를 주도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햇볕정책의 입안자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그런 감정을 내렸는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정책 집행자들이 숨기기에 나섰는지 설명해야 한다. 책임 규명 없이 핵문제를 다루다가는 또 무슨 무리수가 나올지 알 수 없다. 임기말 이 정권의 대북정책 동질을 요구 하고 싶은 심정이다.

중요 첩보와 정보를 일일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북한의 심각한 약속위반을 알았다면 시정하게 하고 상응한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를 밝혀야 하는 것이다. 김연남(金永南)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1일 "미국이 자대정책을 철회할 용의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 우리사황을 해소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핵문제에서 남관을 제쳐놓겠다는 뜻을 보인 것도 정부가 자초한 것은 아닌가.



## 정과 초월한 청와대 회담 돼야

김대중 대통령과 대선 후보들과의 회동이 우여곡절 끝에 23일 이뤄지게 됐다. 북한의 핵파장을 고려하면 대통령과 대선 후보들간의 의견교환이나 인식조율은 한시가 급한 문제다. 대선구도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만남의 형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회동이 무산됐다면, 국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대통령과 이회창 후보의 1대1 면담을 고집했던 한나라당이 유인한 자세를 보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회담은 대선을 두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의 핵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지는 만남이다. 국민들의 이복이 집중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대선 가도에서 불거진 북한의 핵 문제는 한반도의 안정과 민족의 생존과도 직결된 중요한 문제다. 정파를 떠나 진지한 논의와 공평의 인식을 도출하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다.

행여 선거를 의식해, 6명의 후보자가 각자의 주장만

제기하고 상대방의 지적은 무시하는 자세를 보이거나, 일방적인 정치 공세의 장으로 활용한다면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김 대통령도 북 핵문제를 둘러싼 지금의 긴박한 국제 상황과 정부의 대응 방침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것은 솔직하게 구하는 자세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선거기간 동안에도 정파를 떠나 초당적인 협조의 활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아울러 각 후보가 이번 만남에서 안보문제를 대선 선진 도구로 활용하지 말자는 인식을 도출해주시기를 기대한다. 가혹이나 어려운 안보 환경속에 안보문제를 정경화한다면, 정치 불안만 가중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 대승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후보들이 네거티브 전략을 자제하고, 공명선거를 위해 함께 노력하라는 다짐도 보여주길 당부한다.



## 北 '안보 우려 해소' 실행해야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계획을 시인한 북한이 뒷새가 지나도록 계속 침묵하고 있다. 파월 미 국무장관이 '사실상 제네바 기본합의 파기' 등 경고를 거듭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이다. 기껏이 제 평양에서 장관급회담 우리측 대표인 정세현 통일부장관을 면담한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용의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 안보상의 우려 사항을 해소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원론적인 언급을 했을 뿐이다. 또 북한 평양방송이 미국측에 '제네바 합의의 성심 이행'을 촉구한 것이 고작이다.

물론 김수로 건설공사의 지연 등 제네바 기본합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고, 또 '약의 축' 발언에서 보다 시피 부사 행진부 출범 이후 북한을 적대시한 미국의 대북관정책에도 전혀 변화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이는 쌍방 책임에 따른 기술적 지연이며, 북한에 대한 의심이었을 뿐으로 제네바 기본합의의 파기로 까지 해석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봐야 한다. 오늘 핵 위기의 근본 원인은 북한이 핵개발을 기도

한 데 있으며, 따라서 북한이 먼저 스스로 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북한은 무엇보다 현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과거와 같은 백담을 위한 '배달 끝 진술'을 엄두에 뒀다면 이는 오산이다. 지칫 북한이 그동안 보여온 신의주 특구와 같은 변혁의 노력은 물론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기류도 모두 끊겨갈까 될 판이다. 아직 미국이 제네바 기본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18일엔 당초 미국이 지원하기로 한 중유가 복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평화적 해결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결지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북한이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소 방법'을 밝히야 한다. 그것은 핵 포기할 선언하는 것이다. 그 다음 국제원자력기구(AEA)의 시설 허용 같은 추가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불신을 조금씩 털어내고, 북 체제의 안전보장도 확보해나가는 것이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이외에는 해법이 없다고 본다.

서울경제

2002.10.22(화)

제네바합의 '파기' 안되도록

북한의 핵무기개발 시안에 대해 미국장부가 지난 94년 체결된 북미 제네바합의의 파기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미국이 제네바합의의 파기를 공식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파기선언으로 비화할 위험성도 없지 않다.

제네바합의가 파기될 경우 미국은 우선 대북경수요건설사업 지원 및 중유 공급을 중단하고 우방들에게도 지원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외교적·군사적 압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미국의 압력에 대해 북한이 대검직 자세를 취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에 위기적 상황이 조성된 우려가 크다.

그러나 이라크에 대해서는 무력을 행사할 대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는 평화적 방법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는 등 대화 용의를 밝히고 있어 일단 안도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치명적 정책을 취하는 것은 북한을 이라크와 동시에 군사적 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 시안 속에 협상의지가 있는지를 시간을 두고 확인하겠다는 의도라고 하겠다.

북한이 핵무기개발 사실을 시인한 배경이 분명치 않은 가운데 북한측은 미국측에 대해 진재검거를 하지 않을 것과 북미 평화협정 체결, 미국의 북한 경제제재 용인 등 3대 선결과제를 제시하고 핵문제와 3대 과제의 일관타격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21일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석 중인 남측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면 북측도 핵문제에 대한 대화해결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도 경제제재 용인 조건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의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북한의 경제는 살아나기 힘들다. 자유기업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되기 어렵고 북한산 제품의 세계시장 수출 또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개발 시안을 일관타격의 현상카드로 쓰려고 한다면 화살이 썩어 준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원자에너지기구(IAEA)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핵사찰을 수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핵개발 사수를 풀어놓은 스펀지같은 핵폐기 의지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북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시안을 통해 관련된 행정부의 제네바합의가 실패한 진색이 입증됐다고 보고 있다. 미국장부는 검증절차가 없는 무무의측만으로는 북한과의 대화에 응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도 보다 투명하게 핵무병성의 확보를 북한에 촉구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에 집착하는 한 남북을 맺을 수 없다는 점과, 최근 북한이 위한 일련의 개방적 조치들도 의미를 잃는다는 점을 명세해야 한다.

世界日報

2002.10.23(수)

北核 해결없이 '대화-협력' 없다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제8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공동보도문에 핵문제를 명시하는 것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회담 일정도 변경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장관급회담은 핵개발 파문 이전에 예정돼 있었던 것이지만, 북한 핵문제가 더진 이상 이 문제를 타결짓지 않고 끝날 수는 없는 일이다.

북한은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장 핵개발계획의 진상을 밝히고 제네바 합의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을 위반한 데 대해 분명한 사과를 해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계획은 이를 대미 일관타격 협상에 활용하려는 그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 민족의 안위와 생존이 걸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파국을 초래한다면 한반도는 폐허로 변하고 남북한 모두의 공멸(共滅)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대화로 풀겠다"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발언 정도로 끝내려는 것은 진전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공동보도문에 핵개발계획의 폐기가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 남북한 대화-협력을 지향하는 6·15 남북공동선언마저 폐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미국이 '선(先)핵계획 포기-후(後)대화' 입장을 고수하고,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북일 정상화 교섭과 경험 및 대북 경수로 지원을 지렛대로 핵 포기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남북채널을 유지하면서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 남북간 신뢰관계를 위해서는 핵문제가 한반도 문제임을 인정해야 한다. 북측의 냉정한 현실인식과 현명한 대처를 당부한다.

社說



2002.10.22(화)

시론



諸成鎭

20일 열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은 핵무기 개발계획 동결을 규정...

美강경입장 지지 '미지수'

지금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이 현재와 미래의 핵동맹을 약속한 제네바...

강구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미국의 입장과 논리 해결방=제대...

제네바합의 파기된다면

제네바합의는 양반에 소재한 5MW 흑연강속 원자로에서의 핵...

사실을 드러내 놓고 미-북간의 협상의제로 삼아 김정일체제의 인간성...

그런 점에서 미국이 제네바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북한은 물론 햇볕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반을 지속할 경우 대북 지원을 수단으로 하는 햇볕정책의 효용성과 타당성은 근본적인 도전받...

經協 속도조절등 우회책울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정부는 북한이 핵개발 사실을 시인한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둘째, 남북...

/중앙대교수·국제법

○본면 기고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앙일보

2002.10.22(화)

시론



朴顯宇 國政대 초빙교수 전 국방부 차관

지난 10일 초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방안을 발표한 제임스 웨일 미국부 차관보에게 북한측이 그들의 핵개발 계획을 시인했다는 보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남북한은 1992년 '반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핵실험 위험을 제거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北 핵개발 포기 가능한가

미국과 별도로 합의한 '제네바 핵합의'를 통해 모든 핵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발전 원자로 2기를 공급받기로 하여 현재 북한 내에서 경수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북한의 공개적인 핵개발 계획 시인이나 "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는 등의 연동을 북한이 지금까지 핵문제와 관련, 한국이나 미국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행한 합의 약속 선언 등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지인한 격이 된다.

본질이 안바뀐 북한정권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대북 경제지원 협력-경수로 제공-금강산 관광 등 모든 것이 결국 북한의 비밀 핵개발 계획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주는 형국이었던 말인가.

이러한 이번 북한의 핵개발 계획 시인은 우리의 대북 정책 추진환경에 상당한 변동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선 북한의 핵개발 시인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 핵개발 실패를 방어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양해와 지원을 도모하는 것이...

가, 아니면 새로운 차원의 '핵 카드'를 구사하면서 체제유지와 신뢰회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비합리적 진공의 반복인가. 이도 저도 아니라면 단순히 무모한 공경인가. 무엇이 진실인지는 두고봐야겠지만 분명 해 보이는 것은 북한 정권의 본질적 속성이 변하지 않는 한 과거의 진실을 말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산 길을 도모한다는 가설(假設)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첫째, 이번 북한의 핵개발 시인은 놀랄 일도 아니고 참안에 믿어야 할 일도 아니라 인신과 자제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이 '반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나 '제네바 핵합의'를 통해 그들이 비밀리에 추진하던 핵무기 개발 계획을 완전히 포기했다거나 또는 포기하려다 말아본 일이 없다. 단지 북한의 핵개발 실패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왔을 뿐이다. 이제 북한이 재정으로 핵개발 계획을 시인하고 나선 이번 우리 정부는 관련국들과 협력해 북한 핵개발 계획의 전면적 공개와 폐기를 강력히 촉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협력도...

기할 것으로 본다.

둘째, 북한 핵문제의 관외적 해결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이 스스로 시인한 핵개발을 포기하거나 없애야 달려 있다. 현재 한-미 양국 정부는 모두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북한 스스로의 핵무기 개발 포기를 상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對北지원·협력과 연계물

따라서 앞으로의 모든 대북한 지원 및 협력 문제는 북한의 핵 개발 상황상 무기 폐기 문제와 직접 연계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다. 또 반드시 연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난 6월 북한의 기술공적으로 발생한 서해교전과 그 후 그들이 보여준 부산 아시아경기 참가 등 여러가지 대남 유희 제스처는 북한 대남정책의 회색(和靑) 양면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따라서 앞으로 대북 정책은 회에 뒤러를 추진하되 일의 도반사태에 걸리지 대비해야 할 것이다. 북한체제의 무법성과 상호주의 원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The Straits Times

스트레이츠 타임스 21일자

북한이 대규모 핵무기 개발계획을 여러해 동안 추진해 왔다는 놀라운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아시아와 세계는 최악의 시기에 또 하나의 위기사태를 맞았다.

북한이 그 같은 계획을 통해 핵무기 생산에 성공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또 더욱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이 같은 복측 시안으로 인해 미국과 우방국들은 대북경협과 원조회담을 중단하는 도리밖에 없다.

부시 행정부는 "이번 상황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군사적 대응은 논의이다. 미국이 이라크의 정권교체와 더불어 북한과의 전선을 새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다.

또한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무장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 상당한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 도쿄가

韓-美-日 北核포기압력 공조 강화

있다는 북한측 주장이 위협적으로 들리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 정부의 일부 관리들은 북한의 핵실험 사실을 탐지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는 북한이 핵개발 계획으로 무기를 생산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적어도 2개의 플루토늄 핵폭탄을 비밀리에 생산했다고 주장한다.

어느쪽이 진실이든지, 경향이 1994년 미국과 체결한 제네바 핵개발 동결 합의를 위반할 것은 분명하다. 북한은 이 제네바 협정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했다"고 미국 관리들에게 냉정하게 통보했다.

외교 경로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국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는 이번주 멕시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담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별도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계획 포기를 설득하기 위한 3국 공조가 마무리될 것이다.

그러나 3국이 직면한 주된 문제는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렛대가 없다는 점이다.

/정리=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ve.com

世界日報

2002.10.22(화)

경향신문

2002.10.22(화)



서동만  
삼지대 교수  
정치학

시론

진상 아리송한 北核 위기

**미** 국 부시 정부가 북한이 핵 개발을 시인했다고 발표한 이후 한반도에 다시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언론들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무수한 사실들을 앞다퉛 보도함에 따라 이같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부시 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 계획에 대해 정확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 기존, 플루토늄 추출 방식과는 다른 우라늄 농축 계획이란 보도가 있지만 어떠한 성격의 것인가가 중요하다. 다음으로 의혹을 제기한 이상 핵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정도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무기가 이전 단계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실행 단계인지, 그야말로 의도만 있다는 말인지도 불분명하다. 북한도 허무맹랑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부시 정부가 핵리 검사 방식에서 이루어진 비공개 회담 내용을 비공개로 알린 이상 복측도 있는 그대로 이를 공개하는 데 따른 외교적 부담은 없어졌다. 핵 개발 계획을 시

인했다면 무엇을 시인한 것인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미 국무부 설명 발표 이후 제네바 기본협약의 유지 여부가 초점이 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미국이 제네바 합의를 폐기하기로 결정하고 북측에 중유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과연 미 국무장관은 북측이 핵리 투사의 방식 제네바 합의가 무효화되었음을 통보했다고만 밝히고 있다. 북·미 양측은 공식적으로 제네바 합의 파기를 선언하지 않은 채 과거의 주제를 서로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도 이대식 차관보의 성명을 통해 제네바 합의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당우적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평양에서 북·미 간에 오고 간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북측의 시인 여부 맞지 않게 주목되는 것이 그 해결방안이다. 부시 정부는 핵리 방식 통과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데 10여일을 끌고 있었다. 결국과가 연연에 돌리면서 부러부러 상

을 발표했다는 보도가 있다. 이것도 북측이 핵 개발을 시인했다는 사실만을 지적하고 있지, 북측이 제시했는지도 모르는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핵 개발 시인이란 엄청난 사실에 대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만을 제시한 것은 이라크 전쟁으로 양면 전선을 전개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도 지금까지 부시 정부가 해 온 강경 발언에 비추어 볼 때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북측이 대담한 해결방안도 동시에 제안한 것 아니냐는 보도가 일정한 신빙성을 갖게 된다.

**미** 국 국무부 설명에서 나타나는 사실과 대응방안 사이의 상반성은 북측이 했는지 모르는 시인 내용과 해법 사이의 양면성과 직결되어 있다. 물론 북측은 미 국무부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의 원상 회복, 북·일 정상회담에서의 남북 문제 정면 돌파, 내부 경제개혁 및 신의주 특별구 계획 등에서 보듯이

북측의 대내외 자세는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립을 지초할 처지가 아니며 그같은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핵 문제와 관련한 국제 협력을 북·일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바 있다. 북한이 그렇게 공을 들인, 북·일 정상회담을 며칠 후에 뒤엎는 식으로 대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재 미국과 처한 상황이나 그동안의 대북정책에서 볼 때 미국은 대북 일률수단 이외에 적절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기는 기화하고 있다. 한국이 시대 해결에 나서서타협할 수 있는 시점이다. 1993년 한반도 핵 위기 시에는 이번엔 노벨평화상을 받은 카터 전 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끌어내며 해결의 실마리를 닦았다. 북한만이 고립되어 있던 93년과는 달리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러시아·일본의 협력 관계도 열려 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산중잡지 모르는 한 상황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이를 마무리하고 사태를 전환시킬 수 있는 길이다.

# 北核, 냉정한 분석을

“미국이 우리나라(북한)의 핵개발 계획이 존재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을 계기로 조선(한)반도의 안전보장, 평화문제가 커다란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 국무성이 선포하는 언론보도를 뒤늦게 발표한 이 핵개발 계획의 진위를 확인하기에는 아직도 정보가 부족하다.

최근의 조선반도 정세의 추이 및 이 문제와 관련된 일련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그것이 조선반도의 정세가 완화와 평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언론들이 핵개발 계획을 충격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속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미·일·남조선(한국) 당국의 거동이다. 언론들의 열거와는 달리 당국자들의 행보는 냉정하다.

**미** 백악관 대변인이 17일 “우리는 명확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한 것이나 남측 당국이 대화의 방법, 명확적 해결을 주장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일본 당국은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기 이전에 그런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10월 말의 조·일회담을 예정대로 개최할 것을 거듭 밝히고 있다. 지난 시기 같으면 일체의 대화가 중단되고 제재 소리가 요란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양상이 판이하게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상은 재일본 총련 기관지 ‘조선선보’가 21일 발표한 ‘북 핵개발 시인’ 사태에 대한 논평기사의 일부다. 지난 17일 미 정부가 ‘북 핵개발 시인’을 발표한 이래 북한측은 일체의 공식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속내를 알 수 있는 것은 조선선보가 지난 17일과 21일에 발표한 2편의 논평기사뿐이다.

이 논평기사를 깊게 인용한 것은 북한측의 입장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네바 합의는 1994년 체결 이후 한 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

해온 주요한 버팀목이었다. 이 합의가 파탄의 위기에 직면했다면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측의 주장을 공평하게 들어야 한다.

**콜** 린 괴블 미 국무장관은 20일 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측의 ‘핵개발 시인’으로 제네바 합의는 사실상 파기됐다고 선언했다. 반면 조선선보의 이 논평기사는 현 부시 행정부가 전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으로부터 대북 적대정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제네바 합의는 철회 특사 발족 이전에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북 핵개발 시인’ 발표 이후 이 문제는 한반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각 언론들은 갖가지 추측기사를 내놓는가 하면 신문의 입장에 따라 북한에 대한 압박, 또는 냉정한 대응 등을 주문하고 있다. 예컨대 중앙일보 21일자 사설은 ‘북핵과 경제 공존은 안된다’고 주장한 반면 대한매일은 ‘남북 교류협력은 지속돼야’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겨레가 ‘한국 정부의 적국적이고 효과적인 구실’이라 ‘북한 핵, 포괄적 해결 시도해야’라고 지적한 데 반해 동아와 조선 등은 미국과의 공조 하에 강력한 대북 압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해결책’을 제시하기에 앞서 지난 7월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던 동북아의 해빙기류가 칼리 특사의 발족 이후 돌연 긴장과 대립으로 급변한 것의 원 배경과 의미 등을 친절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다. 미국의 ‘의도’와 북한의 ‘계산’을 알게 해주는 깊이있는 분석기사가 절실한 때다.



1994년 10월 체결된 제네바합의가 8월을 맞이할 즈음에 북한이 비핵 핵개발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한반도에 새로운 위기가 감돌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제네바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이 합의의 강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항이 되었으며 대가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제네바합의는 북한이 모든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는 대가로 미국이 정치·경제 개편, 경제 협력, 군사위협 중단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문건이다. 이 합의의 핵심사항은 합검도 실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수로사업이다. 1000MW급 경수로 2기를 지어주는 이 사업은 애초 2003년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해 엄청난 불신과 의의를 갖고 있고, 국제의무법 위반한 국가에 보상하는 전임 클린턴 행정부식 문제해결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둘째, 9·11 테러 이후 불양국가의 대안상설무기 개발 저지가 테러 전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경수로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졌다. 테러지원국이고 핵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않은 북한이 경수로를 핵개발이나 테러용으로 이용가능한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셋째, 지난 10여년간 경수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실적인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 북측의 무리한 입찰인상 요구로 북한 인력이 침수되고 우즈베키스탄 인력을 투입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 흔들리는 경수로사업

북-미 합의의 부진과 정치적 영향 등으로 인해 지연돼 왔다. 올 여름에 본 공사에 착수해서 2009년에 끝날 예정으로 있지만 이는 정치, 군사적으로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경우에 그런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부시 행정부의 처지에서 볼 때, 대통령이 합의속으로 지목한 북한에 첨단 원자력 기술과 발전소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한 명분을 찾기 어려운 일이다. 북한이 핵개발 시인은 미국 내에서 경수로사업을 반대해

온 인사들의 압력을 강화함으로써, 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하려 발전소로 대체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이 미국 행정부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의 핵개발 의혹으로 두 차례나 총력을 치던 미국으로서 앞으로 북한에서 원자력의 뿌리를 뽑아내려 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북한이 핵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더라도 케토가 경수로사업을 지속시키겠다는 다른 여러 지원을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경수로사업을 두고서는 그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사업에 무관심한 입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 조선에 왔기 때문이다. 우선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는 김정일 정권에 대

한 안사들의 압력을 강화함으로써, 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하려 발전소로 대체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이 미국 행정부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의 핵개발 의혹으로 두 차례나 총력을 치던 미국으로서 앞으로 북한에서 원자력의 뿌리를 뽑아내려 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북한이 핵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더라도 케토가 경수로사업을 지속시키겠다는 다른 여러 지원을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한 상황에서 이상의 문제점들을 고려한다면 경수로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부터 총체적으로 재검토하고, 행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의 손익계산과 강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수로사업의 지속’이라는 정책적 타당에서 벗어나서 이 사업의 대외외적 환경변화를 깊이 인식하고, 다양한 상황전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 글로벌 포커스



이 남주  
성경회대 교수

# 북한 핵문제와 중국의 역할

북한 핵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중국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북한이 북사로 파견되었던 제임스 웹스가 지난 17일 주변국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첫 번째로 방문한 것도 중국이었다. 웹스가 중국과의 회담을 마친 후 워싱턴의 한 세칭지는 중국과의 대화가 유망하고 생산적이었다며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 미국의 관심을 같이할 것을 믿는다는 기대를 표명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금 중국의 입장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지정학적 특성, 대립강대국(WMD) 확산 방지에 대한 미국과의 입장 차이,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서의 중국 역할 등 제반 문제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핵개발 포기할 준비는 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중국은 북한이 동북아시아 지역 의 안정력을 재현하는 방책책으로서의 역

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즉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이 중국의 경제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무리하면서, 한편으로는 한반도 문제가 미국의 일방적인 의도대로 관철되는 것을 내성 강하게 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용아 보이고 김정은 체제를 급격히 약화시키는 것에 내색하는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북-미 사이의 긴장이 다소 고조되더라도 북한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미 사이에 걸린 'WMD의 확산 방지'에 대한 입장 차이도 문제다. 중국은 핵화

하고 "이는 짐을 재확인했다. 이 같은 긴박한 차이는 중국으로 하여금 WMD 확산 방지와 관련한 미국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또 하나, 중국 또한 핵-미사일 기술 확산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예전 북한과 파키스탄의 미사일 개발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정황이 강하게 추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웹 37에 도 조지 테넷 비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중국 러시아 북한을 WMD 제조국으로 확산 국가로 지목했다.

이들 의견의 뜻 중국은 지난 17일 외교부 대변인의 설명과 차이나 대외국의 논쟁을 통해 핵 등 WMD의 확산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통제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아무튼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한 구체적인 강행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은 중국으로선 난처한 입장에 몰릴 것이다.

특히 중국의 압력에 쉽게 굴복할 나라가 아니라는 점도 문제다. 더욱이 최근 신의주 핵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미장은 중국이 남방 북한의 발전에 도움을 제공하기 어렵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북한은 1991년 핵위기에 때루니 핵을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카드도 사용해 왔는데,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위험을 포기하는 대가로 대농을 '마법한 당근'이 없는 것이다.

다만 중국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과 미국의 중립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북-미 간의 중개자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기대는 북-미 간에 진정으로 관계개선을 위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만약 어느 한쪽이라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시대를 차리고 있다면 중국도 한국만큼 심각한 외교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중국의 고민이다.

## 국민일보

2002.10.22(화)

### 세상만사



김 상 운  
논설위원

"남은 의회에서 무기는 어느 한 쪽의 의지가 강해 면에 공요하는 수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만드지 불리할 잠재된 기인 지양이 없다. 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험, 그 자체가 무기다. 남 참대만이 그 무기가 존재하며 잠재된 것이 아니라 믿는 면에서 그렇다"

초강대국 미국의 무기 문제 개발에 참여하는 조지 웹스라고 스티븐의 말이다. 이기에서 북한의 핵무기에 핵 놓여있는 시작이다.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를 둘러싸고 이미 장난이 됐던 나 한동안 미국에 있다는 나, 혹은 개발능력이 있는지 없지는 않았으나 무성했지만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는 존재가 없었다.

이런 적어도 생각해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북핵분과 '한반도 핵위기가' 나온만큼 이 위험은 현실적이었다. 이런 상황을 북한이 핵무

70년대에, 또 러시아와 파키스탄이 무성 동맹연구소의 나탈리아 파르하비 선임연구원 80년대 말에 북한 의 핵무기 개발이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 카수 시도를 놓고 의견이 다른 것은 그 당시에 대한 분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도대체 북한은 무엇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것일까. 대다수는 보수적인 보통 통풍과 "북한 강권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혹은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지만 오히려 북한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지도 모를 핵무기가 무성하게 어떻게 북한 강권을 생존시킬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

파르하비와 연구원은 이에 대한 답을 다섯 가지로 간주라 제시한다. 첫째, 핵무기는 노동된 공적에 대한 가장 위력 있고 값비싼 경쟁력 수단이다. 또 핵무기 위협은 북한의 사회주의 의회분 기반의 외부의 간섭도 막아준다. 둘째, 일방적인 핵공포로부터 간섭을 둘러싸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입담 가능성을 차단하고 그들을 권력에 더욱 충성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

셋째, 아마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핵무기는 국제 사회, 특히 미국으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인양' 수 있게 만드는 최후의 협상수단이 될 수 있다. 넷째, 경제적-심리적 요인으로서 러시아와 중국까지 포함해 사회주의가 급속히 붕괴하는 국제적 조류에 분노를 느끼는 감입성과 경쟁열망은 그 같은 입력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과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김부지의 공용원 특정한 허위성이 작용했다. 즉 김부지가 다스리는 '위대한 나라'로서 북한의 위상을 미국 눈앞에 있는 수단으로 핵무기 개발한 것이었다.

이 정도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동기는 대충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그 직접적인 북핵이 미국일 수 없었던 지명하다. 만에 하나 북한이 위협을 상행에 옮기 핵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이 남아갈 곳은 어디인가. 남연이다. 결국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남연을 '핵 쉼보'로 삼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이 '방백'이라고도 인식하는 위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아말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이유다.

# 북한, 무엇을 노리나

기 개발을 처음으로 시인한 지라도 마찬가지다. 증거를 내보이지 않았고 그 위치 달라짐(해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로 보유하려는 것보다는 핵무기로 이용하려는 게 북한 핵무기 개발의 '실질'일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무조건 추진해온 것으로 분석한다. 그런데도 북한이 총대 모으던 대외적 모인 이유는 내비 입장에 대비한 '전략적 이점'을 노렸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전 프루나 북한 특파원 알렉산더 클라프코프스키는 북한이 그림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행동과 비합리적이고 때로는 자살행위로 보이는' 강경의 착수해나갈 수 있는 제비로 핵무기를 위협하려 했다'고 설명한다.

다만 북한이 언제부터 핵무기 개발에 나섰는지는 분명치 않다. 관련 주체 소련 내각관원으로 북한에서 있던 동안 근무하고 지난 4까지 5년간 러시아 대사관 직원 발레리 네디코프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 교수는

Going nuclear in North Korea

북한의 핵개발

North Korea is not only belligerent, reclusive and brutally repressive, it also has (according to the regime itself) gone nuclear. The White House announced late Wednesday that North Korea acknowledged earlier this month it has been secretly pursuing a major nuclear-weapons program for several years.

North Korea made the hair-raising remarks to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James Kelly, during his visit to the capital, Pyongyang, from Oct. 3-5. Mr. Kelly confronted North Korean officials with U.S. intelligence indicating the regime was conducting a secret project.

The officials initially denied North Korea was developing such a project. But the following day, they defiantly said North Korea had been developing a nuclear program, adding cryptically that they had "more powerful things" as well, hinting, apparently, at a chemical and biological arsenal.

During his State of the Union address in the wake of September 11, Mr. Bush characterized North Korea as forming part of an "axis of evil," along with Iraq and Iran. The regime's confessed nuclear capability gives that characterization a more alarming resonance.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by North Korea is a clear violation of the 1994 Agreed Framework, by which the regime pledged to halt its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in exchange for two light-water reactors and fuel to run them, funded primarily by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North Korea's recent admission indicates that the much-heralded 1994 agreement was ill conceived. North Korea's promises and diplomatic exchanges with the Clinton administration belie a treachery which could endanger global security.

The revelation also delegitimizes claims that the Bush administration's tougher posturing toward North Korea undermined nonproliferation efforts. Clearly, those efforts had failed long ago.

North Korea has long been known to sell its military wares to dangerous elements, potentially hostile to America. North Korea is "the world's foremost peddler of ballistic missile-related equipment, components, materials, and technical expertise," said Undersecretary of State John Bolton in South Korea in September, adding that the regime had exported missile technology to Iran, Syria and Libya. Its potential to sell nuclear exports makes its weapons-peddling a much more serious concern.

North Korea is apparently unwilling to allow any kind of weapons inspections. With America facing multiple global threats, the White House is weighing its options. (FRL)

북한은 호전적이고 폐쇄적이며 잔혹하게 압제적인 뿐만 아니라 (북한정권 자체에 따르면) 핵무기를 개발중이다. 백악관이 수요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몇 년 동안 대규모 핵무기 개발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해 온 사실을 이번달 초에 인정했다.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10월3일부터 5일까지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은 동관용 시늬하게 만드는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켈리 차관보는 북한 정권이 비밀 계획을 추진중인 사실을 보여주는 미국 정부의 정보집 북한 정부 관리들에게 제시했다.

북한 관리들은 처음에는 자국이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다음날 그들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그들은 북한이 "더욱 강력한 무기도 개발하고 있다고 애매하게 덧붙였다. 이는 화학무기와 생물학무기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9·11테러 사태 후 행한 양원 합동 연설에서 북한이 이라크, 이란과 더불어 "악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그 생각을 표명했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 능력을 갖고 있다고 고백함으로써 그 같은 성격 규정은 더욱 경악할 만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1994년 제네바 합의의 기본점을 분명히 위반한 행위다. 이 합의에 따라 북한은 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을 중단한다고 약속했다. 그 대가로 미국, 일본, 한국이 주축이 되어 자금을 지원하고 북한에 강수로 원자로 2기를 건설해 주기로 했다.

북한의 최근 사실 인정은 연례에 달리 보도된 94년 합의의 반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의 약속과 관련된 행정부와의 외교협상이 세계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패싹행위였다는 것을 드러냈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 공개는 또한,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핵확산금지 노력은 저해한다는 주장에 정당성이 있음을 입증한다. 그러한 노력이 오래 전에 실패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북한은 오래 전부터 위험한 분자를 특히 미국에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분자들에게 무기 및 관매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세계에서 탄도 미사일 관련 장비, 부품, 물감, 기술" 가장 많이 판매하는 나라라고 존 볼튼 미국 국무부 차관이 지난 9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말했다. 볼튼 차관보는 또 북한 정권이 이란, 시리아, 리비아에 미사일 기술을 수출했다고 덧붙였다. 핵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북한의 잠재력은 이 나라의 무기 판매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더욱 키운다.

북한은 모든 종류의 무기사찰을 원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여러가지 위협에 직면해 있고, 가운데 백악관은 신변 방위를 저우감하고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bwo@scgvr.com

- △confront: 대결할 용의이다
△cryptical: 애매한
△herald: 발표하다
△belie: 거짓임을 폭로하다

경향신문

2002.10.22(화)

인사이드 킵드

부시 악의 축 '차별대우' 논란

'이라크와 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위험한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인 사설이 공개된 이후 미국에서 엄밀 제기는 질문이다.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이라크에 대해서 전면적 무장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군사력을 사용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등 온건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분위기는 북한이 이라크보다 더 미국에 위협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조비그뉴 브래들리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20일 CNN의 일요대담 프로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혹과 1백만명 규모의 군대, 그리고 미사일을 예로 들면서 "(군사적) 능력 면에서 북한이 이라크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도 이에 동조했다.

보브 그랜 상원 정보위원장(민주)은 이날 CBS에 출연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잠겨진 미사일 개발을 지적하면서 "규모면에서 북한이 이라크보다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북한 핵무기 개발에 근접해 있는 상태지만 이라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미사일 기술도 북한이 이라크보다 앞서 있다는 데 근거

하고 있다. 이들은 이 둘 근거로 북한을 이라크와 같은 동일한 정책으로 다룰 것을 행정부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부시 행정부의 설명은 위협 정도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없이 두 나라의 차이점 때문에 대응정책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이날 CBS와의 회견에서 이라크와 북한의 차이점으로 주한 미군의 억제력, 한국과의 동맹관계 그리고 최근 북한의 개발 움직임 등을 들면서 "두 개의 상황이 모두 위험하지만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의 무퀘이트 침공, 유엔 안보리 결의안 불이행 등을 북한과의 차이점으로 들고 있다.

그렇지만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이라크에 대한 차별대응을 합리화하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이유들은 공화당 강경파는 물론 민주당 일부 비관론자층을 설득시키는 데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가 차별대우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미국 의회 최우선 순위가 중동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식육 때문에 이라크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것은 한국이 북핵문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워싱턴 / 이승철특파원 kc@k.yunghyang.com

社說

북한, 핵 입장 빨리 밝혀야

북한이 핵개발 계획의 존재를 시인했음이 공개된 지 일주일이나 돼지만 아직 책임 있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장관급 회담 참석자 방북한 장제현 통일부 장관이 김일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오랫동안 만났지만, 북한은 평壤로보도 등에서 핵개발 계획 파문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꺼렸다. 김 위원장은 장 장관에게 "북한도 최근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입장표명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철회할 용의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 인보상 우리를 해소할 준비가 돼 있다"는 하나 마나 한 수리가 고작이다.

북한이 핵 키트에 세계의 지원과 감시의 장외의 반응을 견고 했음을 잘 알면서 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물론, 북한 핵 문제를 지식층은 전 세계는 북한이 무슨 이유로 갑작스럽게 핵개발 계획의 존재를 시

인했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 북한은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단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북한은 북일 정상회담에서 급기사돼 있던 일방인 남측 문제를 더감하게 시인했다. 핵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못 밝힐 이유가 없다고 본다. 제임스 캐리 특사는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외간관" 접근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도 미국과 일관타간척의 박판을 원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외간관 접근과 박판이 성립하자마자 이에 상응하는 과정이 추방해야 한다.

북한은 현재 상인이 해리산 금지조약(NPT)을 기속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할 원상으로 제어를 받았던 원인의 관여해나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부시 행정부의 "북한 핵 개발을 다룬다" 국제관계가 북핵의 지능이 아니라 생산 원재료 공급 원가공사가 없다. 북한 핵 문제의 시기를 정하고 제정해 있다.

대한매일

2002.10.23(수)



북핵 끝까지 평화적 해법으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어제 "북한의 핵 개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우리는 부시 대통령의 말에 진심으로 동의하고 진폭 지지한다. 축지는 "북한에 무장해제해야 한다는 것을 납득시킬 기회"라고 한 그의 발언에 미국 정부의 분위기가 들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유엔 총회에서 이라크에 핵 포기를 요구하면서 "평화를 원하니만"이란 전제를 강조했던 부시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평화적"이란 말을 이치랍 정언(定言)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주목돼야 한다. 미국내에서는 이라크보다 오히려 북핵 문제를 무려 해결해야 한다는 강경파 발언도 작지 않았는데, 부시 대통령은 지난주에 이어 평화적 해결 방침을 재연명한 것이다.

우리는 부시 대통령의 이 두번째 평화 발언이 논의와 속고 끝에 나온 재확인으로 원담하면서 발언 속에 신중적인 변형이 실정되어 있기를 기대한다. 평화적 문제 해결을 대화 상대로서 상대방의 연정과 대화를 통한 해결 도출 기대가 전제되어 있다. 그러므로 미국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가 이기고 비발리에 핵개발에 나선 언급을 보다 넓은 시야에서 찾아보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국제평생을 위해서"라고 주한 미대사는 말했다지만, "미국이 먼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합의를 했다."는 진기 시인 당시의 북한 발언을 역시 평가로 여기기만은 안 된다. 북한은 미국이 선제공격 포기 선언, 외교관계 개선 및 경제지원의 실제화 등에서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고 평가한 것이다.

북한의 이런 기대는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열망적인 것일 수 있다. 이 감이할 미만, 태도하기 앞서 아 해리라는 태도를 지닌 때 미국의 "평화적" 해결 발언은 진실성을 띠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네바 합의 파기 등과 관련, 미국 정부가 관련 여러 나라와의 협의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한국민은 북한 핵의 긴장적 및 심각한 위험 측면에서 제네바의 당사자이며, 제네바 합의의 무효화된 북한 김소로친한 세력의 태도문을 무릅쓰고 있다. 평화적 해결을 대화 합의의 수고를 요구한다.

社說

北韓, 핵 포기가 먼저다

핵문제에 대해 북한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를 분노케 하는 일이다. 미국이 먼저 대북(對北) 기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요지의 김영남(金永南)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요구도 그렇다. 도대체 북한 지도부는 국제 분위기에 민감성을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너무나도 분명한 얘기지만 이번 사태는 북한이 먼저 일체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 해결될 수 있다. 제네바 합의를 위반해 비밀리에 핵개발을 도모해 온 당사자가 위반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야만 북-미간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먼저 핵 포기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은 삼득력이 있다.

북한이 맞고 있는 미국의 '경제시 정책'만 해도 그렇다. 적대정책이란 상호관계에 의한 것이자 일방적인 것일 수 없다. 북-미간 적대관계는 누구의 잘못으로 비롯됐는지 자명한 일이다. 그동안 북한이 취해 온 신뢰성 없는 행동, 즉 반복되어 온 '핵 위협' 같은 일이 문제의

근원임을 깨달아야 한다.

제8차 남북강령회담에서 핵개발 파문에 대해 문서로 남기자는 남측의 요구를 북한이 끝내 거부한 것도 신랄스러운 일이다. 핵문제는 북-미간 현안이면서 동시에 92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구체화된 남북문제이기도 하다. 강령하면 민족 공조를 내세우는 북한이 핵문제를 예의 '동맹방담(同盟防範)' 전략으로 풀겠다는 저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북한은 김자해시(結者解之)의 자세로 이번 사태의 해결에 나서야 한다. 현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등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김수로 인상을 갖가지 대북 지원을 해왔다. 북한이 먼저 그 조건을 풀었다면 국제사회가 지원을 중단하고 경제제재를 하더라도 할 말이 없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북한의 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커진다. 신탁을 해야 하는 북한 지도부의 이념적 신랄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한겨레

사설

북한 핵문제와 대화의 중요성

북한의 2인자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정세현 통일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소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으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도 평양에서 열린 제8차 남북 강령금 회담에서 파악된 북한의 뜻을 미국에 건네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협조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는 북한과 미국 등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단순한 중재자 역할을 넘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북한 문제가 우리 민족의 문제일 뿐더러 제네바 기밀합의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로 갈수록 강령에서 언급된 선제 전담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움직임도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은 제네바 기밀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할 위치에 놓여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최근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뜻이 있다는 점을 밝힌 것과, 북한 지도부에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심각한 우려를 직접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령금 회담이라는 남북 대화 통로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1990년대 초 북한 핵위기 때처럼 북한과의 대화 통로가 닫혀 있으면 오해와 불신이 더욱 증폭되고, 위기와 대결의식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쓸 수 없게 때문에 지극적으로 문제를 풀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위기일수록 대화 통로를 넓혀주는 햇볕정책이 더욱 중요한 깨달음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국내 일부 김지인들이 대북지원 목적 등 강령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민족의 미래를 떠나 보지 못한 채 대선을 앞두고 보수정당을 의식한 불합리한 이해만을 좇는 단편적이라 할 수 없다.

# 北, 핵우려 말보다 실천을

북북은 오늘 새벽 평양에서 북한 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한다는 원칙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예정된 회담종료 시간을 넘기며 밤늦도록 논의를 벌인 끝에 나온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의 결과물이다. 북한이 회담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원칙적 입장이나 핵문제에 관한 남북공동의 합의를 도출하려 노력한 점은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지금 원칙론에 만족할 상황이 아니다. 세계는 북핵개발 시인후 처음으로 북한의 해빙과 핵문제해결 구상을 듣는 자리가 된 이 회담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좀 더 분명하게 제네바합의 이행의사를 밝혔어야 했다. "최근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왜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는가.

북북은 이번 주말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물론 북한이 평가받을 만한 더 진전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기다려볼 만하

다. 그러나 명백한 대도변화 없이 시간끌기로 나간다고 해서 북한에 유리한 상황이 오지는 않는다. 핵을 매개로 한·미·일 3개국을 시정하러 한다면 이는 위험한 발상이다. 3개국이나 북한에 핵포기 외에 또다른 대안은 없다.

그런데 북한의 현실인식은 여전히 안이하다. 북한이 한때 공동보도문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핵문제의 원인임을 명시하지고 주장한 것이나, '민족공조론'을 들고 나온 것이 그런 예이다. 비핵화에 관한 한 남북한과 국제사회간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남북이 힘을 합쳐 먼저 핵문제로 첨거진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려 나서는 게 순리이다.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상정한 원칙과 원칙적인 대응방안을 갖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 국민들에게 배움되거나 눈치보기로 삼기해 자칫 사태를 악화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통해 북한의 제네바 합의 복귀를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 국민일보

2002.10.23(수)

## 경제시평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하여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분위기가 다시 싸늘해지고 있다. 곧 돌아오는 7월 11일의 경제관리 개선조치, 신의주 특별행정구 신설, 북·일 관계개선, 경제개선과 동맹연, 연경공사, 개성공단 개발 등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소위 신사고(新思考)의 관점에서 개혁과 개방을 위한 걸음을 시작하는 듯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물론 1990년대부터 시작된 극심한 경제난을 어떻게든 타개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의중에서 북한당국이 제네바 합의를 무시하고 그동안 핵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에 내린 내외적인 압박을 약화시켜 북한이 야심적으로 밀고간 신의주 특구를 비롯한 개혁 개방정책의 성공에 전념을 꾀하는 셈이다. 과연 북한이 진정성 있는 개방정책의 진정성을 의도할 것인가?

북한이 최우선의 중점을 두는 것은 경제 유지다. 현재 북한의 경제 유지에 가장 위급이 되는 것은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이며 이 경제난은 바로 체제 자체의 침만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이다. 급한 불을 끄는 경제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조치를 선택하였다. 하나는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신의주 특별행정구 설치이다.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엄격한 계획경제를 그대로 밀고 나가자는 경제관리 강화로 수 있으며 체

제 유지 자체도 어렵다는 인식 아래서 취해진 내부적 개혁조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 조치를 통하여 가격과 임금급 대폭 인상하였으며 가격 감정도 생산원가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시장 가격과 국내 수급 요인들도 감안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번만 아니라 생산에 있어 기업들의 자율성도 강화시켰으며 부분적인 하지만 원·부자제를 포

그것을 시장경제지역으로 대외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중국 정부가 북한에 의하여 일방적인 압박 특구정권을 구상함으로써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으나 북한이 발표한 신의주 특구기본법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내·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담고 있다.

경제특구는 말 그대로 경제자유지역을 위하여 다른 지역과는 상

하면 다른 기본으로 하여 북한지역 내 여러 곳에 경제특구를 설치함으로써 성장엔진을 계속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신의주 특구가 성장하여 북한 경제가 회복하기 위한 기폭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남한을 포함한 외국기업들이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무지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고 이를 시인하였다는 것은 위와 같은 내부적 개혁조치와 대외적 개방조치의 성공조건들과 분명히 모순되는 행동이다. 그러나 1994년의 대북 핵사찰과 동에서처럼 북한은 또 한 번의 핵개발 계획을 통하여 미국 등 주변국가로부터 '대북한 경제봉쇄의 지속한 해제와 특구개발 지원 등 경제와 이득을 '보급자' 한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실효를 있게 될까.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과 미국만이 관련된 문제가 아니며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우려하는 문제이다. 핵개발 문제를 주변의 관련국들과 일괄 다뤄함으로써 신의주 특구 개발을 포함한 북한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어떤 전략적 이유로 핵개발 프로그램을 유지해 왔고 또 이를 시인하였는지 그 속뜻을 아직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다. 북한이 하는 이윤이슬엔 계급이 낯설다.

# 북한경제와 핵 개발

합한 생산수단의 기업간 거래도 허용하였다.

요약하자면 체제 유지를 위하여 계획경제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시장경제적 요소 도입하는 정도 수용한다는 것이다. 개혁 경제의 근간인 배급제도가 붕괴된 상황에서 이를 수 없는 선택이긴 하지만 북한경제의 외벽에 어느 정도 도용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당초의 예상을 뒤엎는 방향을 담은 것으로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세계각국 주목을 받았다. 신의주 특구의 신포는 북한지역 일부일 때에



신 동 현  
연세대 교수·경제학

이한 대외개방적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무지, 특히 외국인 무지할 용이하게 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보려는 목적으로 선택되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경제특구를 잘 활용하여 경제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당국은 신의주 특구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들이 중국과는 달리 이른바 사회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독자적인 북한식 경제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제특구들 모델로 하고 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신의주 특구가 성공



월드워치



강병태 편집국 부국장

국제 조약이나 협정은 세계 각국 사이의 힘의 관계와 어긋난다면...

남의 편을 한 겨우기할 위한 변론 핑기에 불과하다. 본질과 무관할 뿐 아니라...

일본레프트-카라에는 외교사의 고전 '유법 외교사' 서문에 이렇게 썼다. 국제협정의 본질에 관한 이런 규정에 수긍한다면...

남의 편을 한 겨우기할 위한 변론 핑기에 불과하다.

제네바 합의를 낳은 1990년대 초반에 비해, 이번 북한 핵 논쟁은 남북간에 훨씬 이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북한 핵과 변화의 대세

요하지 않는 데서 세력이 가져 온 변화일 일관한다.

90년대초에는 북한의 핵개발이 참아 아득 닮기 아니라 인본 불만때문이라는 진단에 귀 기울이는 데만도 오래 걸렸다.

여기에 우리 사회는 한편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유희계를 일예 올리는 건 꺼져

강조한 때문인지 '우리 사회의 반응은 온건하다. 그러나 미국이 제네바 합의에 충실하게 북한의 고립 탈출을 돕지 않고 오히려 최대의 압박으로 공지에 떨어진 사실을 외면하는 것은 여전히이다.

한반도 현상동결 지연 우려

지금 우리 사회에 절실한 것은 사내의 본질을 바로 보고, 북한뿐 아니라 미국의 의도 또한 냉정하게 헤아리는 것이다.

90년대 북한 핵 사태가 냉전 종식 직후 한반도 정세 변화를 동급한 사실로 기억해야 한다.

bikang@hk.co.kr

東亞日報

2002.10.23(수)

평양발(發) 핵개발 소식은 세계를 뒤집어 놓을 만큼 위력적인 것이다. 미국의 주도 하에 거의 인정되어 가던 세계의 핵잠수艇을 동동치게 만들었고...

핵카드 내세워 미와 협상 의도

미국도 탐욕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극심한 경기침체의 위기와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대테러 전쟁을 힘겹게 수행하고 있는 바탕에 더져 나온 이 새로운 정점을 원만하게 해결하기가 바깥기 때문이다.

수요프리즘

송호근 서울대 교수·사회학



'햇볕'만 쬐고 달아난 북한

줄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 엄청난 시간을 북한이 순순히 자백한 이유는 무엇일까. 90년대 초반 핵사찰 때처럼 끝까지 부인하고 은폐해서 시간을 벌 수도 있었을 터인데...

이제는 발언의 의도가 분명치 않지만, 반자는 그것이 북한 외교정책의 대전환을 알리는 공식 선언으로 읽고 있다.

있다. 남북과의 평화로운 관계 유지 속에서 청강국가의 이미지를 환회시킬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안전하고 수지 맞는 전략은 없었을 것이다.

북한의 북한선언에 가장 심심한 것은 청강 한국 정부다. 국내의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힘을 들여왔건 그

본질을 하더라도 변하지 않은 북한 당국이 내내 과감할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전면 대결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공식 발표를 했지만, '햇볕' 공포가 재현될까 두려워하는 국민들 뒤편에 난지였다.

北 '이중전략' 맞설 대책 있는가

햇볕정책은 포괄적 성격의 민-노순한 정책임에 반해, 북한은 항상 '이중 전략'을 구사해왔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세계적 문제'임을 자인한 전략 선회는 일을 오히려 고갈된 한국과의 대결을 끝내고 미국과 친대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특파원 리포트

국기연 <워싱턴특파원>



합의에 대한 입장을 계속 엮었다. 바우치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나 "과일 장관이 한 얘기를 그대로 고수하겠다"고 응수했다.

반면 NSC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제네바 합의는 무효화됐고 제네바 합의에 따른 우리의 의무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곧 김수로 전 설과 대북 전용 제품 등을 중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워싱턴에서 북핵 문제를 취재하는 기자들은 미국 정부에 내놓은 공식 입장과 핵심 단국자들의 얘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기자들은 북핵과 합의가 계속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 브리핑에서 한 기자는 "과일 장관이 한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지 말라"며 제네바

kkuk@segye.com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진 뒤 워싱턴에서 이 문제를 취재하는 미국과 외국 기자들은 미국이 북미 제네바 합의를 어떻게 합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욕 타임스의 도쿄 특파원 출신으로 현재 백악관을 출입하는 데이비드 샌거 기사는 20일 "미국이 제네바 합의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치고 나갔다. 켈리 과일 국무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 보좌관은 이날 ABC방송 등과의 회견을 통해 "제네바 합의가 무효화됐다"고 이 보도를 뒷받침해줬다.

그러나 대북 특사로 활동한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1일(현지시간) 일본에서 "이것이 최종 판단하지 않았다"며 한걸음 물러섰다.

주말을 지내고 월요일인 21일 날이 밝자 워싱턴 상주기자들은 미국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동선서주했다. 백악

관의 에리 켈리에서, 대변인은 이날 낮 12시15분에, 국가안보회의(NSC)의 고위 관계자 3명은 낮 12시32분에 워싱턴기자센터에서, 국무부의 리처드 바우치 대변인은 오후 1시22분 각각

헛갈리는 '제네바합의 파기'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에 나섰다.

켈리에서 백악관 대변인은 "과일 장관이 북한측에서 제네바 합의가 파기됐다고 발표한 사실을 향한 것"이라며 "우리의 입장을 동맹국과 합의가 계속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 브리핑에서 한 기자는 "과일 장관이 한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지 말라"며 제네바

金永熙 대기자의 투데이



부시 정부가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욕 타임스 보도는 성공했다. 뉴욕 타임스 기사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북한 핵 대책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했다. 그러나 워싱턴 고위층의 핵심 멤버인 대변인 안보보좌관 콘돌리자 라이스는 방송 인터뷰에서 외교적인 수단을 통한 문제해결에 자신감을 보였다.

라이스는 북한의 경제적인 도입을 벗어나야 하는 현실이 북한에 대한 접근수단이 되어 준다고 말했다. 핵무기를 취득하며 경제적인 고립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그의 말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파고 핵 개발을 강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현실론이다.

라이스가 거둔 한 다른 압력수단은 북한 핵의 위협을 받는 나라가 많다는 사실이다. 제네바 합의가 북-미 간의 합의지만 한국-일본-중국-러시아가 그 합의에 이

북한 핵 대화로 풀리는가

해결 잡고 있어 그들의 집단압력은 북한에 효과적인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무장관 켈리 과일도 같은 날 같은 말을 했다. 부시 대통령이 아무리 독불장군 같다고 해도 한-중-일-러시아 수뇌들과의 회담을 눈앞에 두고 동북아시아 안보의 사람이 걸린 문제를 단독으로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개발 강행하면 고립 자초

광강 폭격사도 라이스가 밝힌 북한 핵의 외교적인 대응 노력에 대항되는 선공이나 온 것은 주목할 만하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委員長(金永熙)이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도 "최근의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전제하고,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철회할 용의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 안보상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문재평 대표로 겸직하는 김대중의 구두 메시지라 김영남-정세현-김대중(金大宇) 대통령 부부를 통해 부시에게 전달될 가능성은 높게 평가할 수 있겠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평화적으로 무장 해제시킬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인가. 부시는 북한의 고백이 미국과 동북아

시아 지역 국가들이 공동으로 북한의 위협협탄(Serious) 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김정일(金正日)에게 무장해제(Disarm)를 해야 한다는 것을 납득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부시는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문맥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부시가 말하는 무장해제는 핵-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생산-배치-수출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시는 이미 잘 알려진 미국의 입장을 가장 직접적인 기회에 강력하게 천명한 것이다. 북한과의 새로운 핵 협상은 제네바 합의를 넘어 대량살상무기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경고를 던졌다. 그것은 당연하다. 북한도 그 정도는 각오하고 핵무기 개발을 고백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고백해버린 북한의 입장은 오히려 추가분할 수도 있다. 더 속일 것이 없다. 라이스의 발언이 아니라도 우리는 북한의 경제적인 동기에 서 인본은 물론이고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를 강요하는 것을 본다. 다만 부시 정부의 북한 협선이 너무 크다. 그래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공격적인 고백으로 북-미 대화에 큰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만으로도 보인다.

부시가 텍사스와 멕시코에서 한국-중국-일본-러시아 수뇌들과 가질 정상회담이 큰 고비다. 김대중의 두 어깨에 큰 짐이 실렸다. 일단 그에게 국화와 여권의 초당적인 지지를 모아줄 필요가 있다. 북한 핵에 관한 정보의 은폐 문제는 별도로 따지자.

제네바 합의가 파기되면 경우로 계획도 죽어야 한다. 김수로가 죽고 미국의 대북 전용(燃油)지원이 중단되면 북한은 핵 개발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술가분해친 북한의 입장

북한이 핵 개발을 재개하면 이르면 두 달 안에 핵탄두 몇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남북대화로 진행하기 어렵다. 한반도에 관한 한 나쁜(Easy) 평화는 좋은(Good) 전쟁보다 낫다.

문제해결의 대전제는 북한의 핵 포기다. 그것을 위해서는 한국과 4강의 공조가 필요하다. 다섯이나 공조의 힘 안에서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의 포기까지를 확인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포기까지를 선언한다면 수평-보안된 형태라도 제네바 합의가 살고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은 크게 개선되고 부시가 말하는 북한의 평화적인 무장해제의 속도 업되지 않을까.

대한매일

2002.10.23(수)

●글로벌 시각

北 '핵개발 시인'은 체제 재정비 신호



마크스 놀랜드  
미국재정경제부 수석연구원  
북대통령 경제자문위원

북한이 국제 협정을 위반하고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한 것이 밝혀지자 국제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러나 최근의 다른 징향을 볼 때 북한의 이같은 시인은 변세기 만에 처음 시도하는 전략적인 체제 재정비의 조짐일 수 있다. 또 모순적이지만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점검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은 그동안 필요하다면 무력을 이용해서라도 한국에 사회주의를 심으려 노력해왔다. 그러한 전략 때문에 북한은 유전산 인공을 중심으로 100만 무장병력을 배치, 한국에 대해 항상 공격태세를 취해왔다.

하지만 수십년 지속된 북한의 경제체제와는 반대로 한국은 성장을 지속하며 미국과 동맹을 유지해왔고 북한이 원하는 통일외의 꿈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전락했다.

북한의 두가지 선택권

지금 북한은 두 가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시간에 밀리고 민세가 전략상 유리하게 변화하기를 바라는 것이 그 하나고, 다른 하나는 그동안 북한이 역사의 잘못된 쪽에 서왔다는 인식 아래 패배를 인정하고 통치체제의 전략적 목표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두번째를 선택할 경우, 북한은 경제적 변혁을 한 가지 목표로 삼을 수 있다. 북한 지도층은 권력 수단을 통제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 이 능력을 이용해 지난 4개월 동안 공언해 온 개혁을 실시, 그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반도뿐 아니라 전세계에 위협이 되는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전경역제라는 양면성을 띠 수 있다. 그러나 재래무기의 대량 배치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사실 북한은 이달 들어 최대 50만의 병력을 감축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신호를 내보냈다. 무장해제는 병력이 다른 곳에 이용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북한은 거대한 노동집약적 산업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미시일이 아니다더라도 노동집약적 산업은 상당한 이득을 낼 수 있는 분야다. 경제개혁을 통해 무장해제를 이끌어 낸다면 한반도에 평화를 불러올 수 있다.

1994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경수로 건설 사업에 지원하기로 했던 제네바 합의는 파기됐다. 경수로 건설 프로그램은 에너지와 인프라 건설의 즉각적인 자원을 원하는 북한의 실질적 필요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북한이 별다른 관심을 나타내지 않은 것은 놀랄 만한 일도 아니다.

국제사회와 협상 여지남아

이런 상황에서 군사적 대응은 할 수 없지만 협상의 여지는 있다. 세계는 북한 영년 핵시설에 저장된 핵연료의 제거 및 무기 프로그램의 제한을 원한다. 또한 북한의 재래식 무기도 제거되길 원한다.

한편 북한은 재래식 무기의 부분적인 무장해제 및 후방배치에 들어가는 비용과 실질적인 원조를 원한다. 이처럼 다양한 측면을 갖는 협상에서 모든 나라들이 똑같은 우선순위를 둘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이 현명한 행동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에 재기할 바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재래전력의 후방배치에 대해서는 남한과 중거리 미사일은 일본과, 장거리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는 미국과 각각 협상을 할 수 있다.

세계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나 미사일을 수출하지 않는 한 이 정도 선에서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라크와 달리 북한은 50년 동안 중대한 무력도발을 취하지도 않았고 20년 동안 테러에 연루되지도 않았다. 무장해제, 재래식 무기의 재배치, 경제개혁 등은 결과적으로 북한 체제의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재검사가 될 수 있다.

한반도에 유난히 소신한 가을비림이 보이고 있다. 한반도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시인하면서 예측불허의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분위기다. 세계는 북한의 진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강대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의 불안정성은 급속히 증가해왔다. 그 중심에 북한이 있다. 신의주를 목표로 지장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보인 난폭성은 많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중국 정부가 양빈(楊斌) 특구행정장관을 비리혐의로 연행하면서 북한의 신의주 특구는 출병도 하기 전에 파초 위기에 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북한의 리더십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북한이 앞

보를 감회하는 모습을 뚜렷이 보였다. 사실 고이즈미 총리의 북한방문은 여러모로 미국에는 답답지 않은 것이었다.

조급증 아닌, 신중한 대처들

미국이 대량살상무기를 기권하며 북한을 한창 압박하던 때에 북한을 방문한 것이 그렇다. 미국은 또 북일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것을 주문했으나 일본은 남북 일본인 문제에 치중하는 자세를 보여줬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일본을 견제하는 목소리들이 끊임 없이 흘러나왔다. 일부 외신에서는 일본의 평화주의를 경계하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반도 정세는 눈에 보이지



田天實

협상카드 미리 내보여서야

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리더십이 알권력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한반도 주변 불안정성 가중

북한이 남북협상이 한창 진행되는 국면에서 서해상에서 우리 해군 함정에 난데 없이 포격을 가해 격침시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필사적인 개방의 몸부림과 함께 격렬한 반동의 움직임도 연달아 나타나고 있다. 결국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시인한 배경도 식연하다.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이끌거나 현안을 일괄타결하기 위한 협상용어라는 해석이 그럴 듯하지만 북한에 군부 강경파의 입김이 짙은 것은 모른다. 문제는 이로써 미국이 이라크문제를 정리하고 난 다음 전력을 북한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점이다.

일본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고이즈미 총리로서는 한-미-일 총리는 북한방문을 전후해서 미국의 신경을 거스르고 독자정

는 없지만 크게 요동치고 있는 셈이다. 기존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사실 중국과 북한이 신의주 특구문제를 과잉몰입을 내고 미국과 일본이 북한문제를 놓고 불협화음을 노골시키고 있는 것은 예상하지 않은 현상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상들이 전세계적으로 미국에 대한 도전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현재 이라크 공격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다. 때문에 일정한 기간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장악력은 눈에 띄게 떨어질 수도 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앞으로 핵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의 협거투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핵문제는 어느 쪽도 쉽게 안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북한으로서는 강건한 걸림 문제이고 미국으로서는 생계적대 정략과 각결된 문제다. 제2의 한위기에 대비해야 할 때다. 복잡한 상황 전개에 비해 우리의 움직임은 조금 단약해 보인다. 상대방의 선의에 의존하고 너무 일찍 협상카드를 내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국재부차장

시평



김연철  
고려대 이세이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와 북한의 조바심이 마침내 충돌했다. 북한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고 본다. 북-미 관계 개선은 경제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는 북한의 처지에서 필연적 문제다.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 감축을 비롯한 양보할 생각이지만, 미국은 일방적인 북한의 항복을 요구했다. 북한은 마치 김영삼 정부 시기의 '남해안' 발언처럼 맞받아쳤다. 안다까운 것은 북한이 상대를 잘못 꼽았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한테 그런 방법은 안 통한다. 미국은 북한이 새로운 핵 개발

연에 대한 대략도 없이 일방적으로 핵사찰을 강요해 왔다. 또한 선제 핵 공격 대상에 북한을 포함시킨 것은 제네바 합의 정신을 위반한 것이다. 제네바 합의가 북한의 핵 무병상을 밝히는 데 미흡하다면 제네바 합의 이행의 개선을 진지하게 재협상하면 된다. 그런데, 왜 미국은 북한의 협상사실을 무시하고, 포괄협상의 필요성을 거부하며, 제네바 합의체계를 실질적으로 중지시키려 하는가?

핵 문제는 한반도 정세의 구도를 바꿀 것이다. 수교회담에 나서는 일본 정부의 상대적 자율성은

1904년 전쟁위기 때도 그랬지만,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단기적으로 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성격을 오만했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은 한반도 정세의 복잡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당분간 누가 갑쟁이인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 마주보고 달릴 것이다.

죽어나는 것은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것은 갑쟁이로서가 아니며, 힘이 없어 서도 아니다. 전쟁을 피하는 것이 모든 선택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도 그렇다. 4년 전쟁위기 당시보다 우리 경제는 더욱 개방되었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비중도 높아졌다. 교착 국면이 장기화되고 위기가 고조되면, 겨우 빠져 나온 경제위기 국면이 다시 타칠 수 있다. 끔찍한 일이다. 그런데도 일부 냉전수구세력들은 대한민국의 국력이 무엇인지 모른 채, 미국 강경파의 목소리를 중계하고 있다. 포용정책의 외교적 맥락이 해지하지 못하고, 이런 역사적 시기에도 국내 정치용 대북정책 비난을 일삼는 정치세력도 있다.

외교에는 국력이 있다. 각 나라의 국력이 다르기 때문에, 현안의 우선순위가 다르고, 해결 방법도 다르다. 부시 행정부는 국내 정치적 맥락에서 이라크와는 다른 전략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만, 대한민국은 국가선전 차원에서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오늘 김대중 대통령과 대선 후보들이 만난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의 대표가 되고자 한다면, 대북 정책의 국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핵문제와 대북정책의 국적

계획을 시인했다고 해석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네바 합의 파기를 돌먹이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사태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다. 북한의 발언을 핵 개발 시인으로 난정짓기 이전에, 최소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북한은 미국과의 포괄협상을 원한다. 과거 핵이든, 새로운 핵이든 북한으로 하여금 그것을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첫번째 명제다. 북한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새로운 핵 개발 시도를 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제네바 합의 위반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 역시 제네바 합의를 성실히 이행한 것은 아니다. 미국은 겉수로 간담 지

좁히고 있다. 남북대화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 그리고 남북대화와 북-일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뒷전에 앉아 있던 부시 행정부의 강경파가 주도권을 장악했다.

한반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부시 행정부는 그럴 자신의 말처럼 불린던 행정부와 다르다. 북한 역시 미국과의 관계 개선 없이는 생존이 보장될 수 없을 것 같고 있다. 북한은 짐작한 심정으로 마지막 승부를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은 그들이 최근 보여준 적극적 평화 공세를 포기하고, 배관 급 전술로 전환하지는 않았다. 북한이 명백히 협상사실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배관 급으로 몰지 말라.

사설

남북 장관급 회담과 청와대 6자 회동

북한 핵 개발 시인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평양에서 열린 제8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남과 북이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어제 청와대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만나 북한 핵문제에 초당적인 대처를 하기로 약속했다. 이처럼 북한 핵문제에 남북이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또한 국내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히면서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물론, 북한이 장관급 회담에서 핵문제 해결에 더 구체적인 약속을 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북한은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와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스스로 파기한 것에 대해 더 분명한 설명과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했다. 그래야 진정으로 남북이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할 길이 트이게 된다. 그러나 이런 문제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고 핵문제는 미국과의 문제라며 남한과 도의하는 것조차 피해온 북한이 이를 의제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남북의 주도적인 문제 해결 가능성을 보게 된다.

청와대에서 열린 6자 회동도 모처럼 국민에게 작은 불빛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대선을 앞두고 사사건건 날카롭게 정략적 대립을 보여온 각 정당 지도자들이 만나 서로 다른 처방을 내놓기는 했지만 초당적 협력을 하기로 한 점은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동안 여러차례 강조했듯이 북한 핵문제는 우리 민족이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 지금 단계에서 적극적인 해법을 위한 첫 물꼬는 북한이 터야 한다. 제네바 기본합의와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를 우선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핵 개발 포기가 있어야 한다. 이를 출발점으로 '북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푸는 해법이 나올 수 있으며, 여기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몫을 맡을 수 있다.

사설

## ‘평양합의’, 북핵해법 단초로

제8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북한 핵문제를 속 시원히 풀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 첫째, 북한이 북·미간의 문제라며 남북회담에서 거론하는 것조차 꺼렸던 핵문제를 놓고 남한과 마주앉아 논의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둘째, 12월중 개성공단 착공 및 북측 동해어장 이용 등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새로운 합의를 도출, 남북 교류·협력의 지속·강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북한이 ‘대화를 통한 해결’을 빈말로서가 아니라, 진지한 고려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의 과거 금기에 집착하지 않는 실용주의적 자세는 일단 핵문제 해결의 큰 흐름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평양 컨센서스’가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주요 대통령 예비후보들은 어제 청와대에서 만나 세부적 대응방안에 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고, 핵문제로 한반도에 위기가 조성되어서는 안되며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도 처음으로 ‘평화적 해결’을 공식언명하는 등 한·미·일 3개국뿐 아니라 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도 ‘평양 컨센서스’를 공유하고 있다.

남북한은 문제해결의 심마리가 될 이런 흐름을 놓쳐서는 안된다. 국내외적으로 대응조치에 강은론이 존재하고 해결의 우선순위가 엇갈리지만, 이런 차이에 집착해 그 차이를 확대재생산하기보다 이런 흐름을 구체적인 해법을 도출해내는 동력으로 삼는 데 힘써야 한다. 그렇지 않고 1993~94년 북핵위기 때 남북한,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 협력하기보다 이견을 내세우고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강요한다면 평화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이번 합의로 핵문제 해결의 중재자, 조정자로서 새로운 위상을 획득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핵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

## 한국일보

2002.10.24(목)

## 社說

### 북핵 평화적 해결의 진일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이 공개된 후 조성된 위기감이 북미 두 당사국의 대화 의지로 일단 누그러지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북한은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비록 선언적이기는 하나 대화의지를 표명했고, 부시 미 대통령도 평화적 해결의지를 밝혔다. 물론 두 당사국의 속내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화와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다.

남북 장관급 회담이 핵 문제의 대화해결 원칙을 공동발표문에 포함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우선 핵문제를 한국정부와 거론하기를 거부했던 북한이 태도를 바꿨다는 것이 변화다. 이는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원하고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며, 또한 한국 정부의 비준을 고려한 전략적 변화로 볼 수 있다. 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한국 대표단에게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철회할 의지가 있다면 북한도 핵 문제를 협상할 의지가 있다”고 말한 것도 여운이 있는 신호이다. 평양 장관급 회담

은 핵 문제 이전에 예정된 것이지만, 이 회담을 통해 한국이 북한의 의도를 나름대로 파악하게 된 것은 과거와 달리 진전된 양상이다.

미국 정부도 평화적 해결방법을 원하는 것이 확실하다. 부시 대통령은 파문이 터지고난 후 일주일만에 “김정일 위원장으로 하여금 평화를 위해 핵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는데 우방과 협조해 대처하겠다”고 발언을 열었다. 미국 정부가 불탄 국무차관과 캘리 차관보를 유럽과 아시아에 보내 김종직 인 협의를 했고, 또 APEC 정상회의와 미·중 정상회의는 사태해결의 심마리를 만드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대화와 협상이 쉬운 일이 아님은 지난 8년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 핵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인계된 불이익이 분명해져야 한다. 한·미·일의 공조와 주변국가의 협력이 무엇보다 결실한 시점이다.

사설

核문제 미봉한 장관급회담

제8차 남북 장관급회담 경과를 놓고 일단 긍정적일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북한도 대화할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동의함으로써 북·미 간 가파른 대치 상대가 다소 누그러지게 됐다는 점과 남북 협상 테이블에 핵문제가 올려짐으로써 남한이 북한 핵문제에서 인정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그 이유다. 이 같은 평가는 일면 수긍할 만하다. 또 핵문제 외에 기존 남북협력사업의 실천과 확대를 위한 여러 협의가 도출된 것도 그 나름대로 고무적이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가장 시급한 과제에 관한 한 장관급회담의 결과는 기본적으로 실망스럽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사인한 뒤 처음 남북한이 마주 앉은 자리임을 감안하더라도 그렇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비추어 핵무기 개발에 따른 북한의 시퍼나 유감 표명을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사전 확인을 포함한 북한의 해명이 담겼어야 한다.

이같이 제네바 협의를 위한 전 대 협상 입장 표명과 앞으로라도 협의를 준수할 것인지에 대한 북한측 방침도 틀어 있어야 한다. 비록 북·미 간에 이루어진 것이긴 해도 제네바 협의는 그 결과로서 남한이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에 주적으로 참여하는 등 남한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협의 위반에 대한 미국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동맹국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공언한 데 따라 남한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남한이 북한 핵문제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공허한 것은 아닌지 회의할 느끼게 한다.

사실 북한이 대화 해결 원칙에 합의했다는 것도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북한 처지에서 현실적으로 그 외에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해도 먼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해야만 협상할 수 있다는 미국의 방침과 정권의 생존을 놓고 이탄바 '빅 딜', 곧 일관타결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북한의 입장이 맞설 경우 긴장이 완화되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 정도만 가지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 핵 이외의 협력사업에서 진전을 이룩했다고 남북관계는 나빠져서도 안 된다. 남북 협력사업은 북한의 핵문제 전개 상황에 따라 언제는 뒤집힐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핵문제와 관련한 남북관계의 현재를 인정한다 해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더욱 강력하게 북한을 밀어붙여야 한다.

사설

초당적인 對北경고 메시지

김대중 대통령과 대선 예비후보들의 청와대 간담회는 북한 핵개발을 '우리 생존이 걸린 절박한 문제'로 자리매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사회 일각에선 북한과 미국 간 기(氣)싸움, 승부꼭질 게임으로 바라보는 기류가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민족 공멸(共滅)의 무기를 만드는 배신의 행태를 꾸짖기는커녕 햇볕정책이 험클어질까 걱정하는 안이함도 드러났다. 그런데 간담회에서 핵개발을 놓고 '즉각 포기' '절대 용납 못해' 같은 인식과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 것은 사회 일부의 그런 한심한 분위기를 씻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이다.

무엇보다 간담회 내용이 북한 김정일 정권에 보내는 남한 정치지도자들의 초당적인 경고 메시지라는 측면이 있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후보들의 구체적 해법엔 차이가 있지만 핵 프로그램은 좌시할 수 없다는 우리 국민의 단호한 의지를 담았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돋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핵개발에 대해 우리 국민의 분노와 우려가 정과를 따질 것 없이 위험 수위를 넘었음을 직시해야 한다. DJ 정권도 간담회를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는 유력한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간담회에서 '핵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지원 동결' '진정한 대화 상대자인지 의구심' '교류 속도 재검토' 주장이 나온 점을 북측에 실감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식'이어야 한다는 대선 주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은 당연하다. 한반도 위기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평화적 해법의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는 데 초당적인 협력과 지혜가 계속 필요하다. 이를 위해 DJ정부는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를 햇볕 쪽이 아닌 북핵 해결에 맞춰야 한다. 대화체널을 적극 가동하면서도 특정 대북 지원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전략적인 접근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대선 주자들도 북핵 문제를 대선의 정략적 이익으로 써먹어서 안된다.

## 사설

### 북핵 청와대 회동 정파 초월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대선 후보들은 어제 가진 청와대 회동에서 북한 핵문제를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한다. 후보들간 '대북 현금지원 중단', '남북대화 불로 유지' 등 대북 교섭협력 방법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으나 큰 틀에서는 정파를 초월한 합의를 도출해냈다. 우리는 이번 회동의 의미를 높게 평가하며, 이들의 공동의식을 지지한다. 더구나 어제 새벽 제8차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이 어렵사리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고 합의한 뒤였어서 이날 회동 결과는 더욱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인 중대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는 모습부터가 핵문제로 불안해 하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또 김 대통령과 장담 지도자들 간 청와대 회담이 계속된 징검다리 의해 2년 남게 일리 지 북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4개월여 기간 동안 초당적인 협조의 힘을 구축하는 건기를 마련했다

는 침도 압의 못지않은 중요한 성과로 여겨진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게 확실하므로 대북정책의 연속성 및 정보공유라는 측면에서도 나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이렇듯 이번 회동은 많은 정치적 합의를 지니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현 정부가 이러한 취지를 계속 살려나가기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후보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이 기간중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 등을 설명하는 자리도 다시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듯하다.

또한 이번 장관급회담에서는 이리올 속에서도 김의 선·동해선 연결 조기 공사, 12월 중 개성공단 착공, 동태어장 공동 이용 등의 합의도 도출했다. 핵문제 출중로 어느 정도 차질이 예상되지만, 남북 교섭협력 사업은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볼 때 후보군은 이 집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한다.

## 世界日報

## 社說

### 北核, 공조체제 강화해야

북한의 핵개발 파문이 확산되면서 제네바 합의의 폐기론까지 나오는 긴박한 상황에서 남북이 제8차 장관급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키로 노력한다'는 원칙적 합의에 그친 것은 가대에 훨씬 미흡한 수준이다.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미 대화에 의한 평화적 해결 방침을 언명한 터라 북한의 해명과 사과, 재네바합의 이행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야 했다.

북한이 핵개발 문제에 대해 '주변사태에 대한 안보적 우려사항'이란 추상적 표현을 고집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핵문제를 명시하는 데 합의한 것은 일단 성과라고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는 미국과의 문제라며 남한을 배제해온 북한의 이같은 태도변화는 핵문제를 남북문제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합의한 개성공단 사업과 철도-육로 연결사업 등 남북간의 여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핵문제의 해결이 선행과제다. 오는 26일 멕시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위기 대응책을 논의하기 전까지 북측은 보다 진전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대중 대통령이 23일 대통령후보들과 간담회를 갖고 북핵 위기 해결방안을 논의한 것은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평가한다. 미중유의 안보위기에 직면해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은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다. 정부는 북측에 대해 핵개발의 진상 확인을 계속 촉구하는 한편 미·일·중·러 등 주변국들과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다간 문제 해결의 타이밍을 잃을 우려가 있을 뿐더러 북한을 자칫 오관케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社說

北核에도 '당근' 주자는 政權

김대중 대통령과 현 정권에 단도직입으로 물었다. 북한이 핵(核)을 개발하더라도 대북 지원과 협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보는가. 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보해야 할 쪽은 북한보다는 미국이라고 내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남북 장관급회담의 공동발표문과 김 대통령이 대선 예비 후보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입장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공동발표문은 북한 핵에 대해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원론적인 한 마디를 언급하고 난 뒤 나머지는 대부분 견의선과 동해선 연결, 개성공단 착공 같은 경험 추진 일정으로 채워져 있다.

북한 핵개발로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의 기존 질서가 근본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 데도 대북 지원 성격의 경험은 오히려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범죄 행위'에 벌은커녕 상을 주거나 아니면 핵 위협에 벌써 무릎을 꿇은 격이다.

'대화에 의한 핵문제의 해결' 원칙도 북한이 요구하면 했지만, 우리가 그토록 애걸하듯이 매달린 것은

아니었다.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에는 우라늄 농축시설의 보유 금지가 명백히 규정돼 있고 이걸 깨버린 것은 북한인데 왜 우리가 먼저 '대화'를 구걸해야 하며, 그런 대화가 실효성이 있겠는가? 나아가 대화로 해결하도록 '남북이 적극 협력한다'는 표현이 미국 등을 상대로 남핵이 '공조'한다는 의미로 해석된 여지는 없는지도 의문이다.

남북 공동발표문과 때맞춰 김 대통령이 진젠은 물론 대북 경제 제재 가능성까지 배제한 채 오로지 '대화'만을 북핵(北核) 해결의 방법이라고 강조한 데서 현 정권의 생각은 더욱 분명해진다. 우리 스스로 서둘러 모든 수단을 공개적으로 포기한 뒤 북한과 무슨 대화를 어떻게 해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인가.

김 대통령과 현 정부의 태도는 결국 북한에 대해 추가 요구를 들어주는 방법으로 핵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북한의 의도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社說

정부의 북핵대응에 분노한다

북핵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석연치 않다. 북한에 대한 태도와 정부 내 움직임 모두가 그렇다.

정부가 어제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얻어낸 북핵 관련 합의는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졸작이다.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는 함성한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보고 우리 대표단이 그들의 표현대로 '북한을 압박했다'고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국민의 심각한 우려를 담아내지 못한 것은 물론 '북측의 구체적인 해명과 제네바 합의 준수 약속을 놓자'던 정부의 요구도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그 정도 결과라면 차라리 회담장을 박차고 나왔어야 옳다. 제네바 합의와 한반도 비핵화선언까지 헛신짜 버리듯 뺨개친 북한을 어떻게 이처럼 부드러운 어휘로 속박할 수 있던 말인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유감표시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핵포기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시인했는데도 지금까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한번도 열리지 않은 것도 납득할 수 없다. NSC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과 군사정책, 국내 정책을 다루는 헌법기관이다. 북핵 문제는 누가 봐도 NSC에서 즉각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다.

북한의 핵개발에 관한 정보와 첩보를 입수하고도 쉬쉬하던 정부가 이제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북한을 향해서는 화를 내는 시늉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치 손발이 척척 맞는 '쇼'를 보는 느낌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국제적 현안이 됐는데도 NSC를 소집하지 않은 이유를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그런 의혹 때문에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김 대통령과 대선 후보 5인의 간담회도 국민의 눈에는 '모양내기'에 불과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북핵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국민의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깊어진 불신은 곧 분노로 이어질 것이다.



## 북핵 사태, 초당 협력 지속을

긴장감이 고조되던 북핵 사태가 대화를 통한 해결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단호하게 북핵의 확실한 핵 협정 준수 이행을 요구했던 미국도 한 발자국 물러서 평화적으로 다룰 수 있음을 시사한 데다 마침 어제 끝난 제8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도 대화의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공동 해결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반도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핵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대선주자 5인간에 북핵 문제를 포함한 국가안보에 대해 '6자 회담'을 했다는 사실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후보군의 만남은 무엇보다 북핵 사태에 대한 초당적 필요성을 감지권이 깨닫고 이를 대외에 알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들로서는 사심상 국경을 책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이들의 만남 자체만 놓고도 매우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북핵이나 국가안보 문제가 대선 경선을 통해 당리당락에 약탈할 소지가 있을까 우려하고 있던 터에 이 같은 모습은 더욱 그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북핵 문제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안전판 판단이 설 때까지는 일관성있게 이런 만남이 지속돼야만 할 것이다.

어제 만남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각 대선 후보들은 북핵 문제의 중대성과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내부에서 이토록 한 목소리가 나와야만 남북대화나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입장을 그만큼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어제 회담에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놓고 일부 이견이 있었다고 하나 이는 시간을 두고 차차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갈 문제라고 여겨진다. 그러기 위해서도 정부는 필요한 정보들 제때에 각 후보들에게 제공해야 마땅하다. 그리되면 국가적 해결방안은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으로 믿는다.

북핵 문제는 한국 미국 일본 등 국제공조체 통해 풀어나간다는 게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인 만큼 우리 입장이 사전에 내부 조율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어제의 '6자회담' 정신이 대선이 임박해지더라도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란다. 과연 어느 후보가 국익을 해치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 매일경제

2002.10.24(목)

## 북핵 '대화해결' 합의만으론 미흡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을 마치면서 양측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공동보도문에 명시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동안 북·미협상에 국한시켰던 핵문제를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논의함으로써 남북간 대화의 의제로 공식화했다는 것은 북측의 진일보한 자세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북한의 핵개발 시인 파문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남측의 불신을 씻어주기에는 턱없이 미흡한 수준이란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교류협력을 원한다면 최소한 최근의 핵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과 제네바 기본합의를 비롯한 국제규약의 즉각적인 이행 등에 대한 의지와 해법을 보다 분명한 밝혀야 했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앞으로 북한이 이 문제를 순기롭게 풀어나가리라고 믿지만 그 전제는 이미 국제사회에 천명한 핵개발 포기에 대한 실천의지를 분명히 재확인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으며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기본입장을 누차 밝힌바 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등

우방국들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지세한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 시인과 관련한 사태에 대해 아직도 이렇다 할 입장표명을 하지 않으면서 '대화로 해결'한다는 지극히 일관적인 방법론에 동의한 것을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 사태를 낙관하는 우(誤)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미국도 대화를 통한 해결방법에 대해 이견이 없는 만큼 북한 핵문제 해결에 우리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멕시코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앞서 오는 27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북핵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공조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3일 김대중 대통령과 대법원후보 5명이 청와대에서 회동, 한 목소리로 북한의 선핵 포기를 요구하고 이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도 그런 점에서력 다행스런 일이다.

핵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는 한 남북간의 여러가지 합의사항도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번 핵문제 대화합의를 한반도 평화정착의 새로운 전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치정 관단과 적극적인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 한국경제

2002.10.24(목)

## 사설

사설

이런 北核합의 왜 했나

북한의 핵개발 계획에 관한 제8차 남북 장관급 회담의 합의문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북측으로부터 핵 의혹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듣고 북·미 간 제네바 기...

우선 "남과 북이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는 합의문은 모호하기 짝이 없다. 이 문장만 보면 핵문제가 어느...

있다. 더군다나 북측은 방송을 통해 제네바 기본합의서의 준수를 미국에 거듭 촉구하고 있는데도 우리 대표단은 북에 그 이행을 약속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런 기이한 합의를 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오는 26일 멕시코에서 열린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에서 북핵이 대화를 통해 해결할 의지를 보였다고 미국측 설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선(先)핵개발 폐기, 후(後)인관타결의 해결방식을 갖고 있는 미국이 우리의 두투등수리식 해결방안에 응할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대화를 통한 해결이 기본 원칙이나 그 전제는 선 핵개발 폐기라는 게 미국뿐 아니라 우리의 입장이기도 하다. 문제는 또 있다. 북측이 이런 모호한 합의문을 핵의혹 해결 과정에서 '피난처'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북·미 간 접촉용으로 나설 때 '대화를 통한 인관타결'이 오히려 북의 입장을 감회시키는 장에폭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朝鮮日報

太平洋



朴斗植

부시 대통령은 북한 비밀 핵 개발에 대해 '정신이 반짝 들게 하는(sobering) 소식'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국제문제에 관한 한 단어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는 백악관 전문가들이 그 많은 표현을 놓아 두고 이 말을 사용하게 한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북한의 실체를 새삼 실감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웬지 이 표현에 담긴 어감이 뻔뻔치 않다.

核비밀 눈감고 평화에 취해

그런 "우리는 하나"라는 구호가 주는 수사리(修辞力)에 취해 비인간 '평화의 꿈' 속에서 보낸 지난 몇 년간의 한반도 상황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이다. 사해교전으로 명사들이 숨진 사건도,

200만이 넘는 중무장 병력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숭박하는 경장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경고나 보고도, 모두 애써 외면에 온 세상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부시의 말이 북한 정권의 실체를 직시하지 않으려 했던 한국에 대한 경고이자 일침(一針)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북한 핵위기를 일리는 경보음이 울린 것은 어제오늘의 일 아니다. 김대중 정부도 인정한 것처럼 아비 한·미 당국

위기는는 역설적 상황에 치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에 가장 너그러웠던 DJ의 유산이 햇볕정책도, 금강산관광이나 경의선 연결 사업도 아닌 핵위기가 된 것은 기막힌 아이러니인 셈이다.

김 대통령을 포함한 현 정부 고위관리들은 종종 "이제 북한의 개화·개방은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을 걷는다"라는 말로 기정사실화했다. 실제 그렇다는 것보다는 그들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었다. 지금 답장은 햇볕정책에 대

냉엄한 세계다.

이미 미국과 북한은 냉정한 게임에 들어간 상태다. 북한 스스로 비밀 핵 개발을 공개하면서 모든 현안의 인관타결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과 '큰 판'을 벌여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부시 미국 정부도 북한 핵문제를 다시 부시시키면서 한국과 일본의 대북 리시탈 동시에 견제하고 미국의 구상 속에서 한반도 상황을 끌고갈 수 있는 연속력을 발휘하게 됐다.

감상 앞세우다 큰禍 없어야

한국에 새 대통령이 들어서고 이라크 사태가 정리되는 내년 봄부터 한반도는 본격적인 미·북 핵게임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그 상황을 타개할 우리 내부의 준비다. 그 출발은 DJ 재임 5년 동안 만연했던 감상적·낭만적 대북관을 탈어내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미국이나 다른 한반도 주변 강국을 원망하거나, 거창한 민족우선의 구호에만 매달려서는 북한 핵게임을 풀어나갈 수 없다. 상대는 철저한 계산과 전략 속에서 움직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북한 핵위기를 통해 세도운 참의 남북 관계가 만들 수 있는 범상의 진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그 어려운 과제가 차기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에게 던지지 않다. /는실위원

'햇볕 迷夢'을 깨운 기상나팔

사이에는 3년 전부터 우리들 농축을 통한 북한의 비밀 핵 개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세계적 차원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을 개신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정부와 일부 통일지상주의자들이 이런 현실에는 감은 채 평화무드 연출에만 매달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나 통일이 가능할 리 만무하다. 오히려 더 큰 화(禍)로 이어질 뿐이다.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김대중 정부로부터 이어받은 북한 관련 유산(遺産) 1호가 북한 핵

한 국내외적인 비관어 있지만, 남북관계에서 진정한 역사적 족적을 남겨 놓으면 결국 차기 대통령이나 다음 정부도 'DJ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장만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결국 북한 비밀 핵 개발 소식은 지난 5년 동안 한반도에 드리웠던 몽환(夢幻)적 상태를 일깨우는 현실세계의 기상나팔인 셈이다. 그리고 한반도는 10년 만에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대한 국제정치 무대로 복귀했다. 그곳은 국가간 이해관계가 직접 충돌하고 때론 제로섬(Zero-sum)의 법칙이 지배하며, 작은 감상이 큰 화로 이어지는

시론

있치락 뒤치락하면서 진봉 끝에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장관급 회담 공동보도문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이번 장관급회담 진양은 어느 때보다 불투명했다. 최근 북한이 수년 전부터 추진해온 핵개발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한반도는 급랭 상황에 빠지려는 듯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단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중요한 북측의 담판을 끌어내는 데 일단 성공했다. 즉, 남북한은 "핵분재를 대외로 해결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북한 핵분재 해결을 위한 구체적 담판은 이끌어 낼 수 없었지만 북한이 '핵분재'와 이와 관련한 남측의 역할 자체를 인정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핵분재를 비롯한 군사안보 문제는 남한측과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측과의 문제

우리편이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장관급회담은 북한에게 나름대로의 중요성을 피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핵카드'로 經協압박 막아야

북한은 이번 장관급회담이 무산되어 한 후 남북한간의 경제적 교류협력이 중단 또는 단절되는 것을 심히 우려한 것처럼 보인다. 북한은 남한이 이번 핵문제를

핵심쟁점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와 관련한 남한의 우려를 최소화함으로써 이 회담이 과국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다.

우선 북한은 남측대표단장과 그들의 권력시열 2인자이자 방북상 국가대표적인 김인남과의 만남을 우선했다. 여기에서 김영남은 이번 핵문제에 대해 '대화를 통한 해결'이



鄭永泰

北의 이중적태도 경계를

— 평양 장관급회담이 남긴 것

인 만큼 남북한간의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주장은 남북기본합의시 체결 당시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고수해왔다. 여기에서 북한의 대남관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집세를 엿볼 수 있다.

南韓 협상대상 인정 진일보

물론 북한이 핵분재를 남한과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남한측 역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에 더하여 북한은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크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남한과의 관계중단 또는 냉각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동시에 암시하고 있다.

지난 7월1일 새로운 경제조치 이후 북한은 나름대로 경제발전의 추구를 왔으나 문제는 이를 지탱해줄 자본이다. 중국 또는 러시아로부터 자본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 더군다나 시방세계로부터의 자본유입은 핵개발 시인 이후 더욱 약화된 것이 뻔하다. 남아있는 것은

리는 기본입장을 설명하고 남측의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이중적 태도에 여전히 경계의 시선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제까지 북한은 경험은 남한과 핵은 미국과 각각 분리 대응하는 전략을 펴온 이상 이번 합의가 얼마나 지속될지 의문스럽다. 북한은 평양회담에서 핵문제보다는 개성공단 개설과 철도-도로연결에 더 전진공공하지 않았던가.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향후 북한은 미국의 대북위협 일변도 자세에서 대화지세로 바꾸게 하면서 동시에 남한과의 경제협력 및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편으로 그들의 '핵카드'를 적극 이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리는 지속적인 남북대화 와 한·미·일 공조체제를 조화롭게 활용하여 북한의 핵문제가 극단적으로 치달지 않도록 하는 데 모든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면 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포기 관련 사실은 이미 전  
면도 주변국을 물론 긴 세계에 알려져  
가운데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깊다고  
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정부의 대응 자세가 주목을 받고 있는  
때에 정치 제왕의 당사자인 한국 정부  
의 태도가 상당히 미묘적이고 보호하며  
별로 위기감을 갖고 있지 않은 듯 비쳐  
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北 "대화 용의" 상투적 수단

그동안 한반도 대북 인식의 근본적  
차이 때문에 대북 공조는 공허한 말뿐  
이었고 실질적 대응도 있을 수 없었다.  
한미공조를 기적으로 한 국제 공조만이  
효과적 대응책이 될 수 있는 이번 사태  
를 맞이해서도, 그 인식차이는 이전과나  
상하 격조처럼 없앨 수 없다. 미국  
정부의 평화적 사태 해결 의사 표명에  
우리 정부가 즉각적인 공감과 환영을  
표시했지만 여기서 평화적 해결이라는  
은 전개를 해결 수단으로 삼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것이 곧 대화용 용의 해법을  
의미한다고 보고 그 대화를 위해 지금  
까지 해 온 온갖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  
는 등 문제 해결의 방법과 접근 방식에  
있어 근본적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더  
욱 북한의 핵개발 시안을 대외적으로  
표현하려고 미화하며 유화적 대응을 보  
이는 것은 자칫 국제적 대응 능력이 위  
수도 있다.

시론

최동진

인제대 석좌교수·전 경수로기학단장



核포기 없인 지원 없다

이번 평양에서의 장관급 회담에 임해  
우리 대표단이 핵문제를 제기하기는 했  
으나 북한이 우리만큼이나 이를 심각하  
게 받아들였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  
무도 없다. 지금까지의 협력 지원사업  
의 지속 문제도 함께 협의했으므로 오하  
리 북한으로서는 그 쪽이 무거운 등 것  
이 남았을 것이다. 또한 우리 대표단을  
집중된 북한의 김연남은 미국이 적대시  
장책을 철회할 용의가 있다면 대화를 쫓  
한 문제 해결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  
는 바, 이것은 북한이 오랫동안 저기온  
상투적 수단을 되풀이했을 뿐이다.  
한미 공조가 반드시 미국 입장만을 수  
중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  
한이 제1차 협의를 포함한 모든 핵 관

한 협정을 위반해 핵개발 프로그램을 진  
행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먼저 이 프  
그램을 즉각 가시적으로 폐기해야만 협  
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미국 입장이 설  
득력이 있다. 따라서 그러한 입장을 토  
대로 튼튼한 한미 공조를 하루빨리 복원  
하고 나아가 폭 넓은 국제 공조를 형성  
해 단호한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이 사태의 평화적 해결의 길이다.  
흔히들 이번 사태를 1993년 북한의 핵  
확산금지조약(NPT) 탈퇴시의 충격과  
비교하는데 사실 이번 사태는 그때보다  
몇 배 더 심각하다. 무엇보다도 그 당시  
에는 북한의 핵 개발이 진척 생산을 위한  
연자력 발전 시설 건설이라는 명분이 있  
었다(이후 내용으로는 핵 발전 과정에

서 생산되는 핵무기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번 사태는 아무런 명분이  
없는 핵개발 직접 제조 과정 그 자체가  
며 불량국가, '악의 축'임을 자인한 것  
이다. 1993년 당시 문제의 핵심은 북한  
이 원자력 평화 이용에 따른 국제원자  
력기구(AEA)의 사할을 거부하고 NP  
T를 탈퇴한 데 있었다. 당시의 관련국  
입장도 지금과는 달랐다. IAEA 재소  
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  
했으나 사할을 촉구하는 미온적 수준에  
그쳤고, 재제수단이 수반될 수 있는 보  
다 강력한 결의안은 중국의 거부 입장  
때문에 추진되지 못했다.

'先폐기-後협상' 국제 공조를

그러나 지금은 북한에 대해 단호한  
국제적 재제도 실현시킬 수 있는 공감  
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중국도  
북한의 노골적 핵무기 개발이 불고 올  
수 있는 등락이 및 국제 안보적 파장을  
갈 인식하고 있으며 1993년과 달리 EU  
도 이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김정일사국으로서 직접 당사자가 되어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국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북한이 확실하  
고 가시적으로 이를 포기하고 앞으로  
제1차 협의 및 어떠한 핵 관련 협정도  
위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대북 지원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 중요 언론들의 지적이다.

시론

北核은 협상 대상 아니다



李東根  
명지대  
초빙교수

새로운 불기분북한 핵문제에 관심을  
있던 제1차 장관급 회담이 31일 새벽  
에 끝났다. 그러나 회담에서 김연남은  
는 담담하고 우호한 태도였다. 남북은  
이번에 채택한 공동보도문 10항에서 매우  
호호한 표현으로 핵문제를 언급하는 데  
"성공"했다.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  
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적극 협력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것을 가지고  
"대화에 의한 핵문제 해결을 우리가 주도  
한다"는 의미로 "대박"을 내세우고 있  
다. 그러나 이번 공동보도문에서 언급된  
"대화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  
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시안이 권고되  
고 있다.  
이 표현은 21일 북의 김연남(金永南) 최  
고인민위원 겸 상임위원과 뒤의 장제현(張  
濟顯) 통일부 장관의 10월 21일 자리에 있  
었던 김연남의 발언에 기초하고 있다. 김

연남의 발언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용의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었다. 이번  
장관급 회담의 타결 결과와 이 견해를 전  
전하는 정부의 움직임은 가지고 보면 김대  
중(金大中) 대통령은 아마도 오는 20일 예  
시노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북시 미국 대표단에게 북한  
핵문제의 '대화에 의한 해결'을 유예해 미국  
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설득  
하겠다는 생각임을 시사해 준다.

표현 애매한 공동보도문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말하는 "미국  
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가 무엇을 뜻하  
는 것이다. 북한이 말하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는 (중)한미군을 합수시  
제나 북한에 대한 비핵화와 후호적 군대  
로 입부와 정의를 바꾸고 2002년 10월 24  
키는 가운데 미국과 북한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이로써 1953년의 정전협정을 대  
체할까(2)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이에 기초  
한 한-미 안보유대, 그리고 이에 따른 한-미  
연립사령부 등 연합작전 체제 및 "장기  
계획 5027" 등을 폐지하고 2002년 10월 24  
미-북 간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을 의미한

다. 요컨대 1963년 휴전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막아온 안보의 기둥인 전쟁억  
제력과 그 상징을 재기하라는 것이다.  
이 같은 약속 의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가 우리를 담담하고 우호하게 만든  
다. 도대체 지금은 북측 의도를 읽지 못하  
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읽으면서도 다른  
생각이 있어서 모르는 채 하는 것인가. 중  
문 이라크와 북한을 동시에 군사적으로 상  
대하기가 험거운 미국이 담담한 외교적 대  
응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  
나 미국의 외교적 대응은 "핵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단호한 입장 아래 '외  
교 및 경제재제'를 내용으로 하는 압박의  
교로 북한을 고립화시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핵문제에  
도 접근하고 협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및 이산가족 면회와 북한어장 개방 등에  
관해 많은 합의를 도출했다고 천진하고 있  
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의문이 있다. 핵  
문제 해결 없이 이들 합의들이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는지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  
에 대해서는 핵발진책에 연연하는 현 정부  
가 남는 임가 중한 남북대화에서 무엇을  
합의하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대화와 같이 북이 군사

적 폭력에 전향할 수 있는 현금지원에 대  
해서는 끝이 없는 시련을 보내면서 그 밖  
의 대북사업에 대해서도 최소한 속도조절  
을 촉구하리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게 되면 한-미 차이가 한-미-일 간  
의 대북정책 공조에 균열이 생기리라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 같은 균열이 표면화  
되는 것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는 또 한  
차례 반미경쟁이 촉발되고 증폭될 가능  
성이 있다.

북한의 노림수 경계해야

또 그렇게 되면 일부 정치세력이 이득  
대한 정국에 이용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없  
지 않다. 대선 기간 중 핵해 문제 해결은  
쟁거된 가운데 대외적으로 한-미-일 대  
북정책 공조의 균열과 대내적으로 국민들  
안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수 있는 것이  
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이야말로 북한의  
노림수인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핵포기는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  
다. 북한은 무조건 핵개발을 포기해야 하  
고 북한이 말하는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  
의 철회" 문제는 그 뒤에 대화를 통해 해결  
해야 한다.

2002.10.24(목)



이경형 칼럼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 "명확적인 무장 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22일 새벽에 급한 자칭 남북장관급회담은 핵 문제를 대외로 해결한다는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북한의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을 막고, 각방각색의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어떻게 핵 개발과 보유를 포기했는가를 보면 지금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나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주변 안보상황 인정때문

1993년 3월 11일에 1차 시리아공리동맹을 그토록 자랑으로 여겼던 알리 해리 알 바우니가 자민 폐기 결과를 공표했고, 이듬해인 94년 8월 국제원자력기

구(IAEA)가 핵사찰로 이란 공화국의 핵연입으로 핵 관련적 사찰로 인정받았다. 아무런 조건 없이 스스로 핵 능력을 폐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고압으로부터 탈피하고 국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70년대 초반부터 핵개발에 착수한 남아공은 핵 포기를 결심할 때까지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우라늄 원자탄과 워리어 미사일 6개의 핵무기를 보유했다. 남아공은 핵 포기를 결정했으며, 포

아리라 한정적인 핵 역지력을 필요로 했고, 따라서 핵 전략도 상전 시용 전략 이라기보다는 미국 등 대국의 분할 조정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던 것이다. 우리가 남아공 사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은 우선 특정국의 핵 포기 문제는 안전보장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핵 포기 선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 체제의 안전에

다. 이런 점을 되돌아 볼 때, 일방적인 대북 압박 조치나 북한이 수용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핵 감시가 반드시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한다.

### 한국의 중재역할 중요

그렇다고 북한이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당시처럼 핵 카드를 또다시 구사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북한에 대해 핵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 '비핵화' 협상에서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한 미국'과 함께 북한이 미국에 절망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기술적으로는 맞지 않는 강·중 정책이 될지는 몰라도 한국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과 일본의 협력을 통해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성공하게 중유 제품을 중단하거나 경수로 건설을 철회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해법이 아니다.

북한은 남북 평화체제 구축의 형식을 통하든, 안 통하든 간에 그들의 안전보장과 외부의 투자가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잘 고려하면 북핵해법의 묘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 논설위원실장 kHie@kday.com

## '남아공'식 북핵 해법

당초 왜 핵을 개발하려 했던 것인가. 핵 포기 배경은 오랜 흑백 인종차별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 비등과 지속적인 국제 제재로 인한 남아공 경제의 악화였다. 그러나 더 실질적인 이유는 소련이 붕괴되고 나미비아 독립으로 앙골라 내전이 종식되어 5만명에 이르던 쿠바군이 철수하는 등 주변 안보 상황이 안정되었기 때문이다.

남아공이 처음 핵개발에 착수한 동기는 연군 앙골라 사태로 소련의 지원 아래 쿠바군이 진입하는 등 안보가 위협받던 데서 비롯됐다. 당시 남아공으로서는 유사시 외부의 원조를 기대하지

대한 살머리할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북한은 미국이 '불량 국가' '악의 축' 운운하는 '적대적 행위'를 철회할 경우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다.

또 하나는 국제 제재 문제다. 남아공의 핵 포기는 장기간에 걸친 국제 제재의 누적된 효과인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국제적 고압을 강화할 초기 제재 단계에서는 오히려 핵개발을 가속화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남아공의 핵 개발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당해왔지만, 남아공이 스스로 핵 시설을 비밀 때까지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

2002.10.24(목)

## 해 외 논 단

### 에드워드 팀퍼레이크 "높은 흥의 부상" 저자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해 볼 만한 일과 있다. 북한의 김정일 총재가 10월 22일 그의 핵무기 계획을 90년대 초반 1차 시리아공리동맹의 1993년 3월 11일 위안 사실을 죽여냈다.

###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할때

우리는 그들이 미국의 히로시마 원폭 제조 방식과 유사한 농축 우라늄 생산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농축우라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모순이다. 그러나 그 계획도 없는 것이 아니다.

최근 밝혀진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몇몇 주요 산업사회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 그 인식들은 북핵과 90년대 시리아공리동맹의 1993년 3월 11일 위안 사실을 죽여냈다. 유사시 외부의 원조를 기대하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그 합의를 진보했던 클린턴 행정부 인사들과 북핵 매달린 유럽과 미국 국가부장관이다.

북한의 핵개발에 관해서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후반에 북한의 김정일 한 차는 일본에게 무장하는 대신 자폭을 택했다. 일본 본토는 일본과 대만 러시아 남북한의 여선들로 가득하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장을 한 자폭 협정을 여선으로 가장해 일본의 항구로 들어보내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반면 일본 고베(新加) 갑작스레 핵폭발로 파괴된다면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의심할 여지없이 일본은 비밀리에 핵개발을 진척하게 검토할 것이다. 핵개발을 한 일본은 이 차의 선반에 걸서 우리에 이겨낼 것이다.

그 다음의 '최악의 상황'은 북한의 핵수출 가능성이다. 우리는 이미 북한이 최초의 이란과 파키스탄에 미사일을 판매했음을 알고 있다. 만약 북한이 핵탄두를 생산

## 北核문제의 해법

해 낼 수 있게 되면 그들이 리비아를 포함해 어떤 '악의 축' 국가에 위협한 핵미사일 시스템을 판매할지라도 전혀 막을 방법이 없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국에 대한 위협이다. 98년 북한은 3단계 미사일을 일본 상공으로 발사했고 그 3단계가 해외에 아주 가까이 떨어졌다. 우리는 그들의 미사일 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왔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가.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의 경우에 이것은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한 지지 논의를 강화시켜 줄 것이다. 특히 최근에 요격성능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한으로 중국에 관한 문제이다. 미국이 가진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최소한 90년대 중반 이후, 그리고 어쩌면 91년 합의 직후부터 미국과의 핵협정을 위반해 왔다. 미국 정보기관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중국 정보기관은

그에 관해 전혀 알았는가. 알고도 고의로 사실을 숨긴 것은 아닌가. 중국은 다수의 대외정보기관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중국의 KC에 해당하는 국가보안부와 군사정보부기인 인민해방군 제2국이다. 북한 정권의 군국화(軍國化) 속성과 본체의 신각상 이번 일은 중국군 제2국의 책임일 것이다.

### 北의 위협행위 시어 막아야

중국의 뒷마당에 있는 북한 지도층은 중국과 북한이 협공과 치아의 관계라고 말했다. 중국군 제2국은 북한의 동향을 살펴 경제를 베이징의 지도부에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

중국과 국제적 존경을 받고자 한다면 김정일(江正日)과 그의 후계자들은 그 존경을 상응하는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북한이 이 타국에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미국이 아닌 중국의 책임이다. /워싱턴 타임스 정리=권희철 한리대 겸임교수

